

● 2010년도 KINU KOREA-JAPAN 민간전략대화 및 국제적 공동연구

북한의 정치·경제와 한·일 전략적 공조

배정호 편

북한의 정치·경제와 한·일 전략적 공조

배정호 편

북한의 정치·경제와 한·일 전략적 공조

인 쇄 2010년 12월
발 행 2010년 12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국제관계연구센터

등 록 제2-2361호 (97.4.23)
주 소 (142-728)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27 (팩시밀리) 901-2543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주)예원기획 (02-745-8090)
인 쇄 처 (주)예원기획

비매품

© 통일연구원, 2010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 매장: 734-6818 · 사무실: 394-0337

북한의 정치·경제와 한·일 전략적 공조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서 문



통일연구원은 1991년 설립 이래 약 19년 동안 일본과의 정책 교류를 전개해 왔는데, 2008년 이명박 정부의 등장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한·일 정책 교류의 장(場)’을 동경에서 펼쳤다.

2008년, 2009년에 개최된 『제1회 한·일 정책포럼』, 『제2회 한·일 정책포럼』에는 학계, 언론계 등 한반도 관련 일본인 전문가들이 참가하였고, 일본 여야의 국회의원들도 참가하여 축하연설, 기조연설 등을 해주었다.

2010년의 『제3회 한·일 정책포럼』은 북한의 최고인민회의(6.7)에서 로동당 대표자회의 소집이 9월 중순으로 공고되었기 때문에 9월 29일에 개최되었다. 우연히도 『제3회 한·일 정책포럼』은 북한 조선로동당 대표자회(9.28)의 바로 다음날 “북한의 정치·경제 현황과 한·일정책협력”을 주제로 동경에서 개최되었다.

한국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김정은의 후계자 등장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제3회 한·일 정책포럼』에는 발표, 토론 등에 공식적으로 참가하는 전문가 이외에도 많은 일본의 관계 전문가들이 참가하였다.

본 연구서는 『제3회 한·일 정책포럼』에서 발표된 논문들을 재편집한 것이다. 따라서, 게이오 대학의 이소자키 아츠히토 교수의 논문 “북한 로동자 대표자회의 개최와 김정은 후계구도의 공식화”처럼, 재집필된 것도 있고, 통일연구원 김규륜 박사의 논문 “성숙한 세계국가와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상”처럼 새롭게 추가된 것도 있다.

제1회 및 제2회의 『한·일 정책포럼』에 이어 『제3회 한·일 정책포럼』도 기획한 본인의 입장에서는 본 연구서가 일본 전문가들이 북한의 실상,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아울러 한국의 전문가, 독자들이 일본의 북한 인식, 대북정책 등을 이해하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그리고, 본인은 이 자리를 빌려 한·일관계의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한·일 정책포럼』의 성공적 개최에 헌신적인 도움을 주신 나가노 신이치로(永野慎一郎) 다이토분카대학(大東文化大學) 교수님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다.

통일연구원 국제관계연구센터 소장 **배 정 호**

목차

서문	i
I.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통일구상	1
• 배정호 (통일연구원 국제관계연구센터 소장)	
II. 성숙한 세계국가와 『한반도 신 평화구상』	19
• 김규륜 (통일연구원 남북협력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III. 북한 노동당 대표자회의 개최와 김정은 후계구도의 공식화	43
• 이소사키 아츠히토(磯崎敦仁) (게이오대학 전임강사)	
IV. 화폐개혁 이후 북한의 경제동향과 전망	77
• 최수영 (통일연구원 기획조정실장)	

V. 북한의 핵개발과 일본의 대응.....	101
• 다케사다 히데시(武貞秀士) (일본방위연구소 총괄연구원)	
VI. 한·일국교정상화와 북·일관계 재고: 대북정책을 둘러싼 한·일협력의 가능성.....	127
• 기미야 타다시(木宮正史) (도쿄대학 교수)	
VII. 중국의 대북정책과 중·북관계.....	149
• 이기현 (통일연구원 국제관계연구센터 부연구위원)	
최근 발간자료 안내	331

표·그림 목차

〈표 I-1〉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체계	4
〈표 I-2〉 「민족공동체통일방안」(1994)의 핵심내용 및 특징	15
〈표 I-3〉 「3대 공동체 통일구상」의 주요 내용	16
〈표 IV-1〉 시장환율과 쌀 가격 추이	88
〈표 VI-1〉 한·일국교정상화와 북·일국교정상화에 대한 평가의 비뚤어진 구조	135
〈그림 V-1〉 북한 탄도미사일의 사정거리	126
〈그림 V-2〉 북한에 의한 미사일 발사 상황	126

目次

I. 李明博政権の対北朝鮮政策と統一構想……………169

- ・ 裴廷鎬 (統一研究院 国際関係研究Center 所長)

II. 成熟した世界国家と朝鮮半島の新たな平和構想……………187

- ・ 金圭倫 (統一研究院 南北協力研究Center 先任研究委員)

III. 党代表者会の開催と金正恩の公式化……………211

- ・ 磯崎敦仁 (慶応義塾大学専任講師)

IV. 北朝鮮における通貨改革後の濟動向と展望……………249

- ・ 崔壽永 (統一研究院 企劃調整室長)

目次

V. 北朝鮮の核ミサイル開発と日本の対応……………275

- 武貞秀士（防衛研究所統括研究官）

VI. 「日韓国交正常化と日朝関係」再考：

対北朝鮮政策をめぐる日韓協力の可能性……………297

- 木宮正史（東京大学教授）

VII. 中国の対北朝鮮政策と中朝関係……………317

- 李基鉉（統一研究院 國際關係研究Center 副研究委員）

表・圖目次

〈表 I-1〉「相生共栄」の北朝鮮政策の体系……………	172
〈表 I-2〉「民族共同体統一案」(1994)の中心内容及びその特徴 ……	184
〈表 I-3〉三大共同体統一構想の主な内容……………	185
〈表 IV-1〉市場為替レートとコメの価格の推移……………	260
〈表 VI-1〉日韓国交正常化と日朝国交正常化とのねじれの構造……………	304
〈圖 V-1〉北朝鮮の弾道ミサイルの射程……………	294
〈圖 V-2〉北朝鮮によるのミサイル 發射狀況……………	294

I.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통일구상

배정호
(통일연구원 국제관계연구센터 소장)

1. 지난 정부의 대북정책의 교훈

- 지난 대북정책은 남북 간의 경제교류, 사회·문화교류 등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음.
- 그러나 지난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태도 변화를 낙관적으로 기대한 나머지, 북한의 체제수호와 핵보유 전략, 대남 통일전선전략과 민족공조전술 등을 간과하였음.
- 이에 따라, 남북관계는 미사일 시험발사, 핵실험 등에 의해 일거에 경색되는 상황에 종종 직면하였음.
 - 즉, 남북관계는 언제, 어떤 사건에 의해 경색되고, 냉각되며, 악화될지 모르는 불확실성·불안정성 등이 내포된, 신뢰가 매우 취약한 관계였음.

2.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이명박 정부는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과 「비핵·개방·3000」을 바탕으로 「한반도 신 평화구상」과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을 추진하고 있음.

가.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과 「비핵·개방·3000」

-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표 I-1>과 같은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임.
- 「비핵·개방·3000」은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의 개념 안에서 전개

되는 구체적인 추진 전략임.

- 북한의 핵폐기 결단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하면서 남북한 공동 번영의 길을 추구하는 전략
 - 북한의 핵폐기 진전 상황에 따라 한국은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의 경제재건 및 주민생활의 개선을 위한 경제·교육·재정·인프라·생활향상 등 5대 분야에 포괄적 패키지 형태의 지원을 제공하는 전략

● 표 | -1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체계

비전	실용과 생산성에 기초한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이루어 한반도 평화통일의 실질적 토대를 확충하는 것	
목표	평화 공동체	○ 북한의 핵문제 해결과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를 통해 한반도에서 새로운 평화구조를 창출하는 것
	경제 공동체	○ 남북경제협력은 한국의 일방적 지원 중심에서 탈피하여 쌍방향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협력이 이루어져야 함. ○ 경제협력 사업은 ▲북핵 진전 ▲경제적 타당성 ▲재정부담 ▲국민적 합의 등 4원칙에 입각하여 추진함.
	행복 공동체	○ 남북분단은 남북 주민 모두의 행복을 제약해 왔음. ○ 남북관계의 발전 노력은 분단과 냉전의 아픔을 치유하는 것 ○ 남북 7천만 민족의 행복 추구 ○ 남북 간의 인도적 현안 해결, 남북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추진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용과 생산성 ○ 원칙에 철저, 유연한 접근 ○ 국민적 합의 ○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의 조화
추진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정성 있는 남북대화 ○ 한반도 평화정착 ○ 상생과 호혜의 남북경협 ○ 사회·문화 교류의 활성화 ○ 인도적 문제해결

나. 「한반도 신 평화구상」과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

-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의 8·15경축사에서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포괄적 구상으로써 「한반도 신 평화구상」을 제시함.
-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9월 21일(현지시간) 뉴욕에서 「한반도 신 평화구상」의 연장선에서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포기하는 것이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북한 핵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추구하는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을 공식 제안함.

(1) 「한반도 신 평화구상」

- 「한반도 신 평화구상」은 「비핵·개방·3000」을 근간으로 하고 있음.
- 「한반도 신 평화구상」은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정치·군사적 신뢰를 구축하며, 남북한의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것인데, 주요 내용은

I
II
III
IV
V
VI
VII

다음과 같음.

- 첫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
- 둘째,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의 실행
- 셋째,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남북 고위급 회의 설치
- 넷째, 경제·교육·재정·인프라·생활향상 등 5대 프로젝트 추진
- 다섯째, 남북 간 재래식 무기 감축 논의

(2)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

- ‘그랜드 바겐’은 북한 핵 프로그램의 일부분에 대해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과거의 접근과는 달리, 북한 핵문제를 ‘북한 문제’라는 큰 틀에서 접근, ‘포괄적인 일괄타결’을 추구하는 제안이라고 할 수 있음.
- 아울러 ‘그랜드 바겐’은 북한의 핵개발 중지에도 역점을 둔 접근이 아니라, 협상의 최종목표인 ‘불가역적(irreversible) 비핵화’를 상정한 북한 핵폐기로 바로 들어가자는 근본적인 제안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랜드 바겐’의 주요 내용
 - ①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포기 결단을 확실히 보여주는 핵프로그램의 핵심 부분이 폐기되면, 북한에 대해 확실한 안전보장과 국제 지원을 본격화함.
 - 구체적 요소는 5개국 간 협의를 통해 결정
 - ② 북한 핵폐기의 종착점에 대한 명확한 합의를 토대로 한·미·일·중·러 5개국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행동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추진함.

□ ‘그랜드 바겐’의 전략적 의의

- ① 미·북 대화를 통해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려는 북한의 전략적 의도 차단
 - 북한은 핵문제를 미·북 간의 문제로만 간주하며, 한국을 배제하려고 하고 있음.
 - 게다가, 북한은 미·북 양자대화를 통해 핵보유국 지위의 확보를 추구하고 있음.
 - 이명박 대통령은 이와 같은 북한의 전략적 의도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고, 아울러, 북한 핵을 더 이상 미·북 양자만의 의제로 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함.
 - 즉, 한국 정부도 장관급 이상의 고위급 회담에서 북한 핵문제를 핵심의제로 다룰 것이며,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역할을 추구하고자 한다는 것임.
 - ‘그랜드 바겐’ 제안은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려는 북한의 전략적 의도 차단’,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한국의 단호한 의지 및 적극적 노력’ 등과 같은 전략적 의의가 있음.
- ② ‘살라미 전술(salami tactic)’의 한계 극복과 근원적 처방 추구
 - ‘살라미 전술’은 흥정 대상을 여러 조각으로 나눠 야금야금 실수를 챙기는 전술임.
 - 즉, 북한이 단계별로 행동을 보이면 그때마다 조금씩 보상을 해주는 전술
 - 이와 같은 ‘살라미 전술’에 의한 북한 핵문제의 해결 접근은 부분적 성과만 거두었을 뿐,
 - 북한의 ‘벼랑끝 전술’에 의해 ‘위기→협상→합의→파기’의 전개 과정이 되풀이되는 가운데 본질적 해결에는 한계를 나타내었음.

- 북한은 중유 지원,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 등 반대급부를 챙기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핵폐기를 뒤로 미룬 채 두 차례의 핵 실험을 감행하였음.
 - 즉, 한·미·일·중·러 5자는 시간과 비용만 소모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그랜드 바겐’ 제안은 ‘살라미 전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근원적 처방의 추구를 천명한 것에 전략적 의의가 있음.

3. 북한의 전략적 대응

가.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북한의 전략적 거부

- 북한은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과 「비핵·개방·3000」 구상을 보수 정권의 강경정책이라고 비난하면서, 성급하게 일방적으로 대화를 중단하고 강경조치를 취하며 거부감을 나타냄.
 - 2008.2.25: 이명박 정부 출범
 - 2008.3.29: 모든 남북 당국 간 대화 중단 및 접촉 거부
 - 2008.4.1: 이명박 대통령의 실명을 직접 거명하며 비난하기 시작
- 북한의 전략적 거부 의도
 - 대남전략 차원에서 남-남갈등을 유도하여 이명박 정부가 대북 정책을 유화정책으로 전환하도록 하기 위함.
 - 남북관계의 불안에 따른 한반도의 긴장 상황을 야기시킴으로써, 한국 국내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둘러싼 이념적 분열, 국론 분열 등이 조장되도록 유도하고, 그와 같은 분열과

비판적 분위기로 인해 이명박 정부가 대북정책을 유화정책으로 전환하도록 하기 위함.

- 북한과 중국의 전략적 공조
- 『6·15 공동선언』(2000)과 『10·4 정상선언』(2007)의 이행에 따른 경제적 지원을 일방적으로 요구
- 북한은 핵보유국을 지향하면서, 동시에 한국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의 확보를 추구

- 북한은 김대중 정부의 출범 초기, 노무현 정부의 출범 초기에도 비난 하였지만,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난 및 거부감은 소위 ‘기 싸움’ 이상임.

나. 대남 전략적 접근

- 강경 → 유화 → 강경

(1) 북한의 강경조치

- 2008.7.11: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 발생
- 2009.3.30: 북한은 개성공단 한국 근로자 억류
- 2009.4.5: 북한은 함경북도 무수단리 소재 발사장에서 장거리 로켓 발사
- 2009.5.25: 북한 제2차 핵실험 강행

I

II

III

IV

V

VI

VII

(2) 북한의 유화적 접근

- 2009년 7월에 접어들면서 북한의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8월에 접어들면서 북한의 대남 유화적 접근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함.
 - 2009년 7월의 경우, 이명박 대통령의 실명 거론 횟수가 2009년 5~6월 대비 약 30% 감소하였고,
 - 동년 8월 23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참배를 위해 서울에 온 북한 조문단이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한 이후에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 사라지기 시작함.
 - 남북정상회담의 성사와 준비과정에서 한국의 경제지원을 얻기 위한 전술적 변화

(3) 북한의 강온 ‘Two-Track’ 접근 전략

- 2010년에 접어들면서 북한은 강온 ‘Two-Track’으로 접근

(가) 유화적 접근

- 북한은 신년 사설(2010.1.1)에서 “북남대화, 관계개선”을 강조함.
- 북한은 외무성 성명(1.11) 및 담화(1.18)를 통하여,
 - △UN의 제재 해제를 6자회담 귀의 전제조건으로,
 - △미·북 적대관계 해소 및 평화협정 체결을 6자회담의 선결의제로 제시
 - △북한의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금강산·개성관광 재개회담’을 제의함(1.14)
- 북한 적십자회: “옥수수 1만 톤 받겠다”고 연락함(1.15)

- 북한이 남북 해외공단 합동시찰 평가회의를 수용함(1.19)
- 남북 당국자 간 개성공단 현안 협의(1.19~21)
 - 한국 정부: 3통(통행, 통신, 통관) 문제를 집중 제기
 - * 개성공단: 남측 117개 기업 가동, 북한 근로자 4만여 명

(나) 강경 접근

□ 천안함 사건 이전

- 북한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1.15)을 통해 한국의 일부 언론의 ‘북한 급변사태 대비계획’ 보도(1.13)와 관련,
 - “보복성전”을 거론하며, 한반도 관련 모든 협상에서 남측 당국을 제외할 것을 협박함.
- 북한군 총참모부는 대변인 성명(1.24)을 통하여 김태영 국방장관의 “북한 핵공격 시 선제타격” 발언에 대해
 -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6.25의 참변이 되풀이 될지도 모른다”고 협박함.
- 북한 백령도 인근 북방한계선(NLL)의 북한 쪽 해상 해안포 100여 발 이상 발사(2010.1월 중순)
- 천안함 기습 공격(2010.3.26)
- 북한 당국은 금강산 남측 부동산 자산의 동결, 물수 강행(2010.4.13)

□ 천안함 사건 이후, 북한의 대남 비방

- 오극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담화문 발표(5.20, 3방송)
 - 천안함 침몰사건을 “미국과 일본, 남한이 우리를 고립·압살하려고 꾸며낸 모략”이라고 주장

I
II
III
IV
V
VI
VII

-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사 군사논평원, 천안함 사건의 ‘날조설’ 주장(5.26,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조국전선, ‘남조선 인민들에게 보내는 공개편지’ 발표(5.29,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 중앙위원회는 ‘남조선 인민들에게 보내는 공개편지’의 발표를 통하여 이명박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역적패당을 단호히 심판해야 한다”고 선동
- 조국전선 중앙위원회는 공개편지에서 “곧 진행되는 지방자치 재선거는 지방권력을 쟁탈하기 위한 여야 사이의 단순한 표싸움이 아니라, ‘평화냐 전쟁이냐,’ ‘민주냐 파쇼냐’하는 심각한 정치적 대결”이라며 “이명박 패당에게 주는 표는 ‘전쟁의 표’이고 ‘파쇼독재의 표’”라고 역설함.
- 평양 10만 군중대회 개최(5.30, 조선중앙방송)
 - ‘국제 민군 합동 조사단’의 『천안함 침몰사건 조사결과』를 다시 ‘모략극’이라고 주장하고, 남한 정부를 거칠게 비난함.

4. 이명박 정부의 3대 통일구상

가. 천안함 사건에 의한 대북 대응 조치

- 이명박 대통령은 ‘5.24 천안함 대국민 담화’에서 천안함 공격에 대한 북한의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대북 대응 조치를 발표함.
- 대북 대응 조치의 핵심 내용

- 북한 선박에 대한 남한 해상 교통로 봉쇄
 - 남북 교역·교류 중단
 - 북한 도발에 대한 적극적 억제 원칙 견지
 - 천안함 사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 등
-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개성공단에서의 한국 근로자 억류, 북한 그대로의 2차 핵실험 감행 등 북한이 지속적으로 남북관계를 훼손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영유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인도적 지원은 계속 해왔고, 향후에도 계속할 것임.
- 대한적십자사는 북한의 요청에 따라 쌀 5,000톤과 시멘트·라면·의약품 등 수해 구호물자를 보낼 것을 결정(8.13), 실행함.
- 북한: 한국 정부에 대해 극렬한 비방과 위협을 계속함.
 - 조선중앙방송(8.14): 이명박 대통령을 “역적패당”으로 비난
 - 조선중앙방송(8.16): 이명박 대통령을 “역도”, 한국 정부를 “괴뢰”로 지칭하며 비난

나. 「3대 공동체 통일구상」

-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주어진 분단 상황의 관리를 넘어서 평화통일을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을 역설하면서 ‘평화경제·민족’의 3대 공동체 개념을 구체적 통일 구상으로 제시함.

(1) 배경

- 젊은 세대의 통일에 대한 꿈과 비전, 의지 등 증강

- 일부 젊은 세대는 ‘독일통일과 막대한 통일비용’에 대한 인식 때문에 ‘통일’보다 ‘분단체제 아래의 불안정 평화공존’을 선호함.

□ 통일담론의 활성화

- 분단관리 및 평화공존에 역점을 둔 지난 정부의 대북정책의 한계에 대한 반성
 - 북한의 경제와 식량 문제 악화,
 - 북한의 핵개발 및 핵보유국 추구,
 - 김정일의 건강 이상과 세습 후계체제 문제 등
- 불안정한 평화공존의 분단 상황을 극복하여 통일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
 - 정책목표를 분단관리 및 평화공존에서 통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주장 제기
- 선진화를 통해 한국의 발전을 추구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이고,
 - 통일은 이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과제라는 인식의 확산

□ 소극적 분단관리에서 적극적 통일준비로 전환

- 정책목표를 ‘분단관리 및 평화공존’에서 ‘통일’로 전환
 - 통일에 대비한 인적, 물질, 정책적 역량의 강화
- ‘통일세’는 통일을 위한 재원조달의 본격적 준비
 - 통일기금의 본격적 준비

□ 통일추진 구상을 현실에 맞게 체계화

- 초당적 협의와 국민적 합의에 의해 『민족공동체통일방안』(1994)이

만들어진 후,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의 통일방안으로 계승됨.

● 표 | -2 「민족공동체통일방안」(1994)의 핵심내용 및 특징

- ① 통일철학: 자유민주주의
- ② 통일의 접근 시각: 민족공동체 건설을 통하여 통일국가 건설
 - 경제공동체, 사회·문화공동체, 정치공동체의 건설을 통하여 '1민족 1국가 1정부'의 통일국가 건설
 - 경제공동체와 사회문화공동체는 기능적으로 상호작용
- ③ 3단계통일방안: 점진적·단계적 접근
 - 「화해·협력단계」→「남북연합단계」→「통일국가단계」

-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계승하되, 변화된 대내외 정세와 남북 관계 상황을 반영하여 발전을 추구
 -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평화정착이 가장 시급한 최우선적 과제
 - 「화해·협력단계」의 추진에서 필요한 행동계획을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의 실현 방안으로 구체화
- 평화통일을 위한 과제를 구체화
 - 평화·경제·민족공동체는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3대 과제

- I
- II
- III
- IV
- V
- VI
- VII

(2) 주요 내용 및 특징

표 1-3 「3대 공동체 통일구상」의 주요 내용

<p>평화 공동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의 실질적 평화정착 실현 ○ 전략: ‘그랜드 바겐’, 「한반도 신평화구상」
<p>경제 공동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남북한 경제의 상호의존 증대와 경제통합 촉진 - 국제사회와의 협조를 통해 북한 경제개발 지원 ○ 전략: 「비핵·개방·3000」 프로젝트의 본격 가동과 더불어 경제·교육·재정·인프라·생활향상 등 5대 프로젝트 추진
<p>민족 공동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제반 분야의 동질성 회복, 한민족 전체의 존엄과 기본 권 보장, 한민족 전체의 삶의 질 향상 ○ 전략: 제도 통합과 가치 통합의 병행

-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민족공동체는 단계적 선후관계가 아니라 상호 중첩적으로 진행됨.
 -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민족공동체는 기능적으로 상호작용 하면서 시너지 효과 창출

- 현시점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정착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므로, 평화공동체의 건설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함.
 - 지난 정부의 대북정책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듯이, 남북관계는 경제교류, 사회·문화교류에 상당한 성과가 있어도, 정치·군사차원의 신뢰구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는 ‘사상누각(沙上樓閣)’이 될 수 있음.

- 남북관계는 미사일 시험발사, 핵실험 등에 의해 일거에 경색 되는 상황에 종종 직면
- 한반도의 비핵화는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필수적 요소

(3) 통일비용

- 통일비용은 ▲통일의 시기와 통일방안 ▲남북 통합과제의 범위와 수준 ▲비용지출 기간의 산정 등에 따라 큰 편차가 있음.
- 통일비용 계산에서 분단비용, 통일편익 등을 고려해야 함.
 - 순수한 통일비용 = 총통일비용 - 분단비용 - 통일편익
- 통일 후, 시간이 지나면서 통일비용은 감소하고, 통일편익은 증가함.
 - 통일비용은 북한 개발비용이므로, 시간이 지나면서 북한 투자 비용이 됨.
 - 통일은 한반도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제공함.

Ⅱ. 성숙한 세계국가와 「한반도 신 평화구상」

김규륜
(통일연구원 남북협력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1. 서론

- 이명박 정부는 ‘성숙한 세계국가의 달성’을 한국 외교안보의 비전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한 다양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 『한반도 신 평화구상』은 이명박 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한반도 통일과 대북정책을 미래지향적 차원에서 달성할 사안을 제시하고 있음.
-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의 복잡성과 북한의 불안정성은 한국으로 하여금 새로운 평화구상을 제시하여 한반도의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음.
- 본 논문은 『한반도 신 평화구상』을 실천하기 위한 추진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2. 성숙한 세계국가

- 이명박 정부는 출범과 더불어 외교정책의 근간을 성숙한 세계국가로 설정하고 다양한 국정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청와대가 발행한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의 비전과 전략』 책자에서는 ‘성숙한 세계국가의 달성’을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 비전으로 명시하고 있음.
 - ‘성숙한 세계국가 달성’을 위한 핵심가치로 정의와 평화, 공동번영, 세계주의를 설정하였으며,
 - 실천원칙은 국민통합, 실용적 성과, 국제협력을 바탕으로 한 창조적 실용주의로 설정하였음.

I

II

III

IV

V

VI

VII

- ‘성숙한 세계국가의 달성’을 위해서 ①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② 협력 네트워크 외교, ③ 포괄적 실리외교, ④ 미래지향적 선진 안보체제 등 4대 분야의 전략의 수행을 제시하고 있음.
- 4대 분야에 대한 아래와 같은 중점과제의 수행을 제시하고 있음.
 - 첫째,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운영과 관련, 한반도 비핵·평화 구조 공고화, 남북 경제공동체 기반조성, 남북 사회·문화 공동체 기반 조성, 인도적 협력증진 등 중점과제의 실천을 제시
 - 둘째, 협력 네트워크 외교 수립과 관련, 21세기 한·미 전략동맹 구축, 주요국 관계 강화, 동북아시아 협력체제 구축,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등 중점과제를 제시
 - 셋째, 포괄적 실리외교 수행과 관련, 에너지 협력외교 강화, FTA 체결 다변화, 기여외교 확대, 재외국민 보호 및 재외동포 활동지원 등 중점과제를 명시
 - 넷째, 미래지향적 선진 안보체제 수립과 관련, 선진 안보능력 확충, 국방경영 효율화, 대외 군사협력 확대, 포괄안보 분야 역량 구비 등 과제를 제시
-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 비전 중에서 「한반도 신 평화구상」과 관련이 있는 것은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운영을 위한 과제로서 제시된 한반도 비핵·평화 구조의 공고화이며,
 - 이의 내용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청와대는 “남북 군사관계는 불안한 평화상태”에 있으며, “평화의 기본적 조건인 군사적 신뢰에 관한 진전이 가장 미흡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음.
 - “북한 핵문제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통일을 가로막는 가장

근본적인 군사위협”이라고 간주하고 있음.

- 따라서, 한국은 북한의 군사위협에 철저한 국방 대비태세를 구축해 나가는 동시에,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설득하는 한편 6자회담을 통한 국제공조를 통해 북한 핵프로그램의 신고, 검증, 폐기 과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음.

○ 2008년에 제시된 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의하면, ‘성숙한 세계 국가 수립’의 목적하에 4개의 전략을 제시하고 있음.

-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조 구축, ▲국익을 우선하면서 세계에 기여하는 실용외교 구사, ▲굳건한 선진안보체제의 구축, ▲품격 있고 존중받는 국가의 건설 등이며,
-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조 구축 관련, 5대 과제를 명시하고 있는바,
 - 첫째 과제는 북핵 폐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서, ① 「9·19 공동성명」의 전면적 이행을 위한 6자회담 추진, ② 비핵화 2단계 완료 및 3단계 진입·이행 관련 한·미·일·중·러 간 협력 강화, ③ 북핵 폐기에 중점을 둔 6자회담과 남북관계의 상호 추동적 진전, ④ 북핵문제 진전을 위한 국내적 관심 및 국제사회의 지지 획득 노력 확대 등 세부적 실천사항을 2012년 하반기까지 완료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음.
 - 둘째 과제는 「비핵·개방·3000」 구상의 추진으로서, ① 범정부 추진기 확대 등을 통해 5대 분야(경제·재정·인프라 교육·생활향상) 별 세부 사업 추진방안을 2009년 하반기까지 마련하고, ② 북핵문제 진전 등에 따라 대북협의를 거쳐 5대 분야 사업을 2012년 하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음.

- 셋째, 한·미관계를 새로운 환경에 맞추어 발전시키는 과제와 관련, ① 이명박 정부 첫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2008년 상반기에 완료하고, ② 한·미동맹 미래비전 수립 원칙 합의를 2008년 상반기에 완료하였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으며, ③ 한·미 FTA 조기 비준 노력과 ④ 대학생 연수취업 프로그램 출범을 2009년 상반기까지 달성하겠다는 점을 적시하고 있음. 한편, 2012년 하반기까지 달성해야 할 실천사항으로써, 한·미관계 발전의 틀 공고화, 한·미동맹 미래비전 구체화, 고위급 전략대화 개최, 주한미군기지 이전 정책협의회 운영을 제시하고 있음.
 - 넷째 과제로써 남북 간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 다섯째 과제로써 신 아시아 협력외교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음.
- 위와 같은 한국 정부의 공식적 입장 표명에 의한 외교안보 비전과 전략 및 과제의 제시는 현재 한국의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바, 성숙한 세계국가의 달성을 위해서 「한반도 신 평화구상」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으로 적시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음.

3. 「한반도 신 평화구상」

- 이명박 대통령의 제64주년 광복절 경축사(2009.8.15)에서, 「한반도 신 평화구상」 실현이 이명박 정부의 정책목표로서 재차 제시되었음.
-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8월 15일에 ‘광복의 빛, 더 큰 대한민국’의

제하에 행한 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메시지를 “이제는 대화해야 할 때”라는 소재목하에 다음과 같은 부분을 밝히고 있음.

- 남북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길을 찾았으면 한다는 전제하에 『한반도 신 평화구상』을 추진할 것을 천명한 것이며,
- 첫째, “북한 경제를 발전시키고 북한 주민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국제협력 프로그램을 적극 실행”하는 것을 제시
- 둘째,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고위급 회의를 설치”할 것을 제안
- 셋째, “관련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경제·교육·재정·인프라·생활향상 분야에 걸친 대북 5대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을 제시
- 넷째,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강조
- 다섯째, “남북한 재래식 무기의 감축”에 대한 논의 제안

가. 『한반도 신 평화구상』의 이론적 토대

- 이명박 정부는 상기한 바와 같이 ‘성숙한 세계국가의 달성’을 한국 외교안보의 비전으로 삼고 있는바, 한반도의 평화정착은 한국의 외교안보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토대의 역할을 한다고 간주할 수 있음.
 - 한반도의 평화 상태는 소극적 평화의 범주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는바,
 - 남한과 북한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각각의 국가를 한반도의 남쪽과 북쪽에 건설한 이후 대치상태에서 1950년 6월 25일에 북한의 남침으로 인해서 동족상잔의 전쟁을 치른 바 있으며,

I

II

III

IV

V

VI

VII

- 6·25전쟁을 종결하는 상황에서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을 통해서 정전체제로 돌입한 상황에 있음.
 - 북한은 최근의 천안함 사건을 포함해서 끊임없는 도발을 지속하였으며, 휴전선을 둘러싸고 남한과 북한의 대치상태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한반도에서는 지난 60여 년간 본격적 전쟁이 발발하지는 않았지만 불안정한 상태의 정전체제에 의해서 평화가 유지되고 있는 것임.
 -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북한은 북방한계선(NLL)을 둘러싼 도발을 계속함으로써 한반도가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상기시키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더해서 북한은 1980년대 말의 냉전의 해체 및 사회주의권 붕괴라는 위기상황을 맞이해서 본격화한 핵무기 개발을 지속하고 있음.
 - 사실상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한반도의 안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사안일 뿐만 아니라 동북아지역의 안보 상황을 불안정하게 하는 주요한 사안임.
- 이와 관련, 한반도의 불안정한 평화 상태를 공고한 평화 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한 다양한 합의와 제안이 있었음.
 - 1990년대 초반에 진행된 남한과 북한 사이의 기본합의서 체결과정에서의 평화에 대한 논의와 합의는 다음과 같음.
 - 1991년 12월 13일 합의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서문에서는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

- 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한다는 내용을 적시하고 있으며,
- 기본합의서의 제1장 남북화해 부분의 제5조에서는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 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 정전협정을 준수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이와 같은 기본합의서의 내용이 현실화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한반도의 평화를 공고하게 해야 한다는 점에 남한과 북한이 합의하였다는 것도 엄연한 사실임.
- 남한과 북한 간 합의에 적시된 사항 이외에도 한반도의 평화를 공고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주로 제도적 접근을 둘러싸고 전문가들 사이에 많은 논의가 있었음.
-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남한과 북한 간 합의를 통해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고, 이를 주변국들이 보장하는 형태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가 있었음.
 - 예를 들면, 남한과 북한 간 평화협정을 우선시하는 전문가들의 논의로서 남한과 북한이 일련의 협상을 거쳐서 평화협정을 조인한 후, 미국과 중국이 보장하는 ‘2+2’ 방식 또는 미·중·일·러가 보장하는 ‘2+4’ 방식 등에 대한 논의가 대표적인 것임.
 - 이와 같은 논의에 따라 북한 핵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남·북·미·중 4자회담이 개최된 바도 있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미·중·일·러 6자회담의 구성 역시 이같은 논의가 뒷받침하고 있는 것임.

- 북한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구성된 6자회담에서는 남·북·미·중·일·러 6개국이 북한 핵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다자 간 안보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이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 바 있음.¹
 - 6자회담 참여국들은 한반도의 안정이 동북아시아 안정의 중요한 요소인 동시에 동북아시아에서의 다자 간 안보협력이 한반도의 안정과 북한 핵문제의 근원적 해결의 일환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2005년 9월 19일 합의한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에서 “6자는 동북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공약”하였으며,
 -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다”는 점을 명시하였으며.
 - 또한, “6자는 동북아시아에서의 안보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과 수단을 모색하기로 합의”하였음.

- 이와 같은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합의와 제안은 남북한 간 협상 또는 동북아 주요국과 남북한을 포함하는 국제적 협상 과정에서 도출된 것이기도 하며, 전문가들은 제도주의적 입장을 근간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한 것임.

- 다른 한편, 인류사회의 역사적 진행과정에서 국가 간 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항구히 하기 위한 이론적 논의가 많이 진행되었음.
 - 이와 관련, 평화 이론의 선구자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갈통

¹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 (베이징, 2005.9.19).

(Johan Galtung)은 그의 논문 “폭력, 평화, 평화연구(Violence, Peace, and Peace Research)”에서 전쟁이나 테러와 같은 ‘직접 폭력’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가난, 사회불안, 부정의, 불평등, 정치적 탄압, 기아와 질병의 반복에 대한 ‘구조적 폭력’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음.

- 갈통은 전쟁과 평화라는 전통적인 이분법을 탈피하여 전쟁도 없고 평화도 없는 상태가 세계적 현실을 더 잘 반영하고 있다고 간주하고,
- “단지 전쟁이 없다는 의미의 평화”를 ‘소극적 평화’로 정의하고, 간접적 혹은 구조적 폭력이 없는 상태를 ‘적극적 평화’로 정의하였음.²

○ 이상과 같은 논의를 재정리 및 종합하여 『한반도 신 평화구상』의 이론적 토대를 모색한다면,

- 우선적으로 『한반도 신 평화구상』은 군사·안보적 측면뿐만이 아니라 경제적 측면까지 고려한 틀 위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과,
- 인류문명의 근원을 위협할 수 있는 핵무기의 개발 또는 사용이 근본적으로 불허되는 원칙에 따라 구성되어야 할 것이며,
- 이를 위해서는 인류역사상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지고 검증되어진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것이 중요함.

○ 필자와 공동 연구진이 집필한 『신 평화 구상 실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 책자에서는, 『한반도 신 평화구상』의 이론적 토대는 민주평화론(Democratic Peace), 시장경제평화론(Market Economy Peace),

²- Johan Galtung, “Violence, Peace, and Peace Research,”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6, No. 3 (1969).

I
II
III
IV
V
VI
VII

비핵화 평화론(Nuclear Free Peace)의 3대 축에 의해서 뒷받침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음.

- 민주평화론의 주된 명제는 “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민주주의 국가들은 이익의 상호 충돌을 비민주주의 국가들에 비교해서 무력의 위협이나 사용 없이 해결한다는 신념과 경험에 기초함. 따라서 민주주의 확산이 국제안보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남한과 북한이 민주주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의 기반이 된다는 것임.
- 시장경제평화론은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에 기초한 자본주의의 발전이 평화를 항구화한다는 주장으로,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은 전쟁이 아닌 다른 방식을 통한 분쟁과 갈등 해결을 모색한다는 점에 착안하고 있음.
- 비핵화 평화론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제시한 “핵무기 없는 세계(Nuclear-Free World)”라는 주창에서도 나와 있듯이 핵무기는 인류를 공멸시킬 수 있는 파괴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핵무기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에 기초하고 있음. 사실상 한반도에서도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하면서 핵무기 개발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한반도 평화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평화의 요소가 매우 중요함.

나. 「한반도 신 평화구상」의 추진목표

- 「한반도 신 평화구상」을 추진하는 궁극적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를 항구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① 비핵·평화, ② 개방·개혁, ③ 개발·협력, ④ 통합·통일 등 4대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1) 비핵·평화

- 「한반도 신 평화구상」이 추구하는 기본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항구적으로 견지하는 것임.
 - 북한의 핵 보유는 한반도 내에서 불가역적인 군사적 불균형을 초래하여 군사적 갈등과 위협을 고조시킴.
 -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지 않는 한 한반도의 평화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함.

- 완전한 비핵화만이 진정한 의미의 한반도 평화를 담보함.
 - 불가역적인 군사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임.
 -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은 군비통제 및 군비감축은 무의미함.
 - 진정한 의미의 한반도 평화가 완성되기 위한 초석이 군사적 긴장 완화인 만큼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를 견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의 비핵화가 완전히 달성되어야 함.

- 북한의 비핵화와 함께 재래식 무기의 감축은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데 또 다른 모멘텀이 될 것임.

- 비핵·평화는 북핵 폐기를 통한 평화, 즉 ‘비핵화 평화’와 이를 넘어 남북관계의 구조적 갈등요인이 제거된 ‘적극적 평화’라는 새로운 평화구상이 추구하는 새로운 평화개념에 기반을 두는 것임.

(2) 개혁·개방

- 북한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전반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혁과 개방이 필수적임.
 - 북한의 경제 상황은 현재의 경제체제를 고수하는 한 개선될 여지가 없음.
 - 북한 경제의 실패는 산업부문 전반에 걸친 마이너스 성장과 생산체제의 붕괴의 악순환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나타난 경제체제 자체의 실패임.
 - 공급 부족과 생산성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북한 경제의 회생은 요원함.

- 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북한 정부의 자발적이고 혁신적인 개혁과 개방정책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함.
 - 이미 많은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개혁과 개방을 통해 극심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였음.
 -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정책의 개혁이 무엇보다 시급함.

- 세계 경제체제로의 편입은 북한 경제의 개혁을 동반하는 만큼 경제 문제 해결의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음.
 - 북한의 개방이란 결국 국제사회로의 편입을 의미함.
 - 미국 및 일본과의 수교를 통한 세계체제로의 편입 없이 폐쇄체제를 유지한 채 북한의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이는 단순한 경제적 개방을 넘어 미·북관계 및 북·일관계의 정상

화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방을 포괄하는 것임.

- 북한의 비핵화와 개방을 통한 북한의 국제사회 편입은 북한체제의 붕괴 위험을 줄여주는 순기능을 할 것임.

- ‘개혁·개방’은 ‘개발·협력’과 더불어 자유에 기반을 둔 자본주의 발전이 평화를 촉진하고 전쟁을 억제한다는 시장경제평화론과, 국제사회의 신뢰와 협력 속에 한반도에서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추구한다는 의미에서 『한반도 신 평화구상』의 평화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한 목표임.

(3) 개발·협력

- 단순한 경제위기 극복을 넘어 북한 경제의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경제 및 사회 전반에 대한 개발 프로그램이 필요함.
 -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 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사회개발 프로그램이 필요함.
 -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생활환경 개선 프로그램은 물론, 개혁과 개방의 시대에 맞는 각종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도 시급한 사안임.
- 북한 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남북협력, 국제협력, 남북협력과 국제협력 간의 연계는 필수적임.
 - 다양한 북한 개발 프로그램을 특정 주체 혼자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

I
II
III
IV
V
VI
VII

- 프로그램의 개발, 자본의 확충, 프로그램 교육 및 실시 과정에서 각각의 역량을 최적화할 수 있는 조합을 찾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함.
- 남북한, 국제사회 간의 협력은 물론, 개발 프로그램 사업 간의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북한 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임.

(4) 통합·통일

- 「한반도 신 평화구상」이 추구하는 평화는 ‘통일지향적 평화’임. 또한 통일한국이 추구하는 평화는 어디까지나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상정하는 만큼 ‘민주평화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통합·통일’은 새로운 평화구상의 최종적 지향점이라 할 수 있음.
- 한반도 평화구축의 궁극적인 목적은 통일임.
 - 단시간 내에 달성할 수 있는 목표는 아니지만,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미래상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통일지향성을 배제할 필요는 없을 것임.
 - 기존의 통일 논의가 방향성 제시에 그쳤다면, 이제는 통일한국의 밑그림을 그려야 할 때임.
 - 통일한국의 정체, 경제, 사회·문화 제도에 대한 전반적이고 구체적인 시나리오 제시 및 검토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통일과 통합이 함께 논의되고 진행되어야만 진정한 의미의 통일이 가능함.

- 외형적 통일을 이루더라도 남북한 주민들 간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통일은 또 다른 고통을 수반할 수밖에 없음.
- 독일의 사례에서 보듯이 외형적 통일보다 통합이 더 많은 시간과 자금, 노력이 필요한 만큼 통일 이후의 통합을 위한 준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임.
- 통일의 목적이 남북한 주민들의 ‘행복’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함.
- 분단 고통 해소 및 민족구성원 간의 화해를 위한 사회·문화교류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함.

다. 새로운 평화구상 추진방향

- 「한반도 신 평화구상」의 추진방향은 통일부가 아래와 같이 설정한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추진의 기본방향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함.
 - 화해와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실용과 생산성 추구
 - 원칙에 철저하되 유연한 접근
 - 국민 합의에 기반하여 투명한 정책을 추진
 - 국제협력과 남북협력의 조화
- 통일부의 대북정책 추진 기본방향을 보다 자세히 보면 다음과 같음.
- ‘실용과 생산성’과 관련, 남북관계는 이념의 잣대가 아니라 실용의 잣대로 풀어가며,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증진 노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는 것임.
 - 실용과 생산성을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
 - 국민들이 동의하는가?

-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가?
 - 비용 대비 성과가 있는가?
 - 북한의 발전을 촉진하는가?
 - 평화통일에 기여하는가?
- ‘원칙에 철저하되 유연한 접근’과 관련, 북한의 핵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하고, 진정성 있고 내실 있는 대화를 추진한다는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지만, 접근방식은 현실을 고려해서 유연하게 하겠다는 것임.
- ‘국민 합의’와 관련, 정책의 전 과정에서 국민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국민적 합의에 기반하여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임.
- ‘국제협력과 남북협력의 조화’와 관련, 한반도 문제는 남북문제인 동시에 국제적 문제라는 인식하에 남북협력이 국제협력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는 것이며, 6자회담을 통해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동시에 남북관계가 북핵문제의 해결을 촉진하도록 하겠다는 것임.
-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한반도 신 평화구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선도적으로 대안을 제시하여 국제사회의 공감을 얻어내는 동시에 북한으로 하여금 이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또한, 북한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내의 여러 논의구조를 체계화하고 동시에 이들 간의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
- 한편, 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도 단일한 형식에 집착할 필요는 없으며, 다양한 협의 체제를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사고의 전환도 요구됨.
- 이와 같은 기본적 추진방향하에서 「한반도 신 평화구상」을 추진하기 위한 방향 설정을 위해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5대 정책제안 내용의 추진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북한 경제발전과 북한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국제협력 프로그램 실행과 관련, 우선적으로 북한을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북한은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확산을 지속시킨 것으로 인해 현재 유엔과 미국 등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바,
 - 우선적으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 포기가 중요하며,
 - 국제협력 프로그램을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규범에 따르겠다는 의지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고위급 회의 설치 문제는 남북 간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서 북한에 제시하여 남북한 간의 실질적인 경제통합을 향한 청사진을 남북이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임.

- 북한은 해방 이후 여러 차례 경제개혁과 개방을 위한 시도를 하였지만, 근본적인 해결책보다는 제한적인 개혁과 개방 정책만을 추구하였기 때문에 실패하였음.
 - 남한은 북한의 가장 중요한 경제협력 대상이기 때문에 남한과 북한이 협력해서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을 수립·시행한다면 북한의 경제회생은 어려운 일이 아님.
- 관련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경제·교육·재정·인프라·생활 향상 분야에 걸친 대북 5대 개발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 실용과 생산성의 원칙에 의거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
- 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해서는 북한이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해서 경제적으로 투자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국제사회가 북한을 매력 있는 투자대상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북한 개발에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바, 남한의 개발경험과 자본 및 국제금융기구의 재정적 지원 등 다양한 재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는 6자회담을 통해서 추진하되, 남북대화에서도 북한의 성의 있는 자세를 지속적으로 촉구하여야 할 것임.
-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6자회담을 통한 유인책의 제공과 함께 국제적 압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며,
 - 남북대화를 통해서도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북한의 안보와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음.

- 남북한 재래식 무기의 감축 문제는 포괄적인 남북한 간 신뢰구축의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남북대화를 통해서 추진해야 할 것임.
 - 북한은 선군정치를 내세우며 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정책을 지속하고 있으므로, 북한의 핵무기와 함께 재래식 무기에 의한 위협은 현실적인 것임.
 - 남한은 국방 선진화를 통해서 북한의 위협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할 것이며, 남북대화를 통한 신뢰구축과 재래식 무기 감축 협상을 가능한 빨리 시작하는 것이 필요함.

4. 결 론

- 『한반도 신 평화구상』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대외관계가 보다 중층적이고 복합적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며, 내용적으로 전통적인 외교·안보의 틀에 더하여 새로운 영역에 대한 접근을 포함하는 한국의 선도적인 역할이 요구됨.
 - 한국의 대외정책은 주변 4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한국의 외교력 강화를 위해서 2010년 G20 회의를 계기로 중견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 기존의 양자관계를 중심으로 한 외교에 더해서 다자적 접근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대외정책의 발전이 필요함.
 - 한국은 분단국가로서 안보적 문제를 중요시해야 하지만,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매력인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달성한 국가 이미지를 이용한 외교력의 확충이 중요함.

I
II
III
IV
V
VI
VII

- 『한반도 신 평화구상』 실현을 위한 우호적 국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한·미 공조와 한·중 협력을 동시에 심화해야 하는바,
 - 향후 진행될 G2 시대에 대비한 균형감 있는 한국의 대외정책 마련과 실행이 필요함.
 - 이명박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는 한·미관계를 새로운 환경에 맞추어 발전시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바, 한·미동맹 미래비전을 구체화하고 고위급 전략대화를 개최하는 것을 적시하고 있으며,
 - 한·중 신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호혜적인 경제·통상협력 확대와 양국관계 갈등요인의 안정적 관리와 북핵 해결 및 북한문제 관련 협력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한반도 신 평화구상』 실현을 위해서는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다자 관계의 형성이 필요한바,
 - 이명박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는 동아시아 지역 전략적 파트너십 과 경제·안보·문화 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으며,
 - 4강 외 동남아·서남아 역내 주요국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동시에,
 - 지역다자협의체를 한국 내에 적극적으로 유지하고,
 - 동아시아 협력안보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추진하며,
 - 동아시아 공동체 발전의 촉매로써 문화적 소통 및 협력을 추진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음.

- 새로운 영역의 발굴과 접근과 관련, 이명박 정부는 ‘에너지 협력외교 강화’와 ‘지구촌 문제 해결에 기여’ 및 ‘인권·문화 외교 강화’를 100대 과제로 선정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세부사안을 명시하고 있음.

- ‘에너지 협력외교’ 관련, ① 에너지 협력벨트 구축, ② 에너지 협력 외교 인프라 강화 및 해외자원 개발기업 지원, ③ 자원부국과의 우호협력 관계 강화 및 에너지 관련 국제 활동 강화
 - ‘지구촌 문제 해결에 기여’ 관련, ① 기여외교를 위한 대외개발원 조 확대, ② 국제평화유지활동 강화
 - ‘인권·문화 외교 강화’ 관련, ① 유엔 인권이사국으로서 활동 강화, ②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 ③ 자원부국 대상 문화외교 전개
- 『한반도 신 평화구상』 실현은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촉진하여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함.
- 인류 보편적 가치로 자리 잡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의한 국가 경영이라는 세계적 추세에 뒤떨어진 북한의 현 정권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도록 하는 근본적 접근이 필요함.
- 『한반도 신 평화구상』을 통해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한국이 분단을 극복하고 남북 통합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한반도가 아시아 및 세계 평화의 장애요소가 아닌 국제사회가 공감하는 평화정착의 모범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는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함.

참고문헌

1. 논문

Galtung, Johan. "Violence, Peace, and Peace Research."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6, No. 3, 1969.

2. 기타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 (베이징, 2005.9.19).

Ⅲ. 북한 로동당 대표자회의 개최와 김정은 후계구도의 공식화

이소자키 아츠히토(磯崎敦仁)
(계이오대학 전임강사)

1. 들어가며

- 건국 이래, 북한의 실질적인 최고 지도자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두 명밖에 존재하지 않았고, 그 ‘혈통’과 ‘가문’이 강조되어 왔음. 2010년 9월 상순에는 44년 만에 당대표자회가 소집된다 고 발표되어, ‘3대 세습 공식화를 하기 위한 무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관측되었음.
- 그러나 당대표자회는 당초 소집 예정이었던 9월 상순에 개최되지 않고, 사실상 연기가 되었음. 본 보고에서는 최근 북한 정치동향을 살펴보고, 로동신문의 논조를 기초로 하여 당대표자회 소집의 의의와 연기 배경을 살펴보겠음.

2. 안정지향의 신년공동사설

- 북한이 매년 원단에 발표하는, 당·군·청년단체기관지에 의한 공동사설은, ‘김정일 총서기의 인사말’이며, 그 해의 1년을 점쳐볼 수 있는 중요한 분석 소재임.
 - 2010년 공동사설은 예년에 비해 북한다운 위세가 느껴지지 않는, 온화하고 현실적인 논조로 구성되었음. 공동사설의 표제는 “인민생활 향상에 있어서 결정적 전환을 가져올 것”으로 바뀌었고 종래 북한이 스탈린 형의 중공업, 국방경제 우선 노선을 견지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2010년은 사람들의 환심을 살 방향으로 전환을 선명히 했다고 말할 수 있음. 그 중에서도 경공업과 농업이 중점 과제로 여겨졌음.

I

II

III

IV

V

VI

VII

- 한편, 국가활동의 지도적 지침인 ‘선군사상’에 관한 언급은 격감하여, 표면적으로는 정치·사상색이 옅어졌음. 2009년 및 2010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건강 불안설을 일축하듯, 과거에 비해 왕성한 현지 지도를 실시했다고 분석되고 있지만, 현지지도의 대부분은 종래 중시되어왔던 군 시찰은 아니고 인민 생활 향상에 직접 관계된 공장이나 농장 등으로의 방문이었음.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후계자로서의 발판을 굳히기 시작했던 1970년대와 현재 상황을 비교하는 표현도 볼 수 있음.
 - 후계자 문제 해결을 촉진하겠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준비가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음. 후계자 문제는 북한의 특이한 체제를 유지해 가기 위한 중점 과제임.
 - 비록 폭력 수단을 동원하여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후계자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민생활 향상’이라는 긍정적 배경이 있는 것이 좋을 것임.
- 2009년 공동사설 키워드였던 ‘자력갱생’은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고, 대신에 “대외 시장을 확대하고 대외무역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이 지시되었음.
 - 중국에의 일방적인 의존을 피하면서도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제 제재의 해제가 필수적이며, 따라서 대외 정책의 방향을 주목할 수 있는 표현임.

- 2009년은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 문제를 공동 사설을 통해 처음으로 언급했지만, 2010년은 그 방법이 미국과의 ‘대화과 교섭’에 있다고 한걸음 더 나아갔음. 한국에 대해서도 ‘관계개선’을 호소하고 있음.
 - 이처럼 대미, 대남 관계를 호전시키고 싶다고 하는 의사도 ‘인민 생활 향상’, 나아가서는 체제의 안정적 유지라고 하는 과제에 종속되는 것으로 파악해야 할 것임.
 - 예년과는 달리, 대외관계의 언급이 공동 사설의 말미에 배치되어 할애되는 글자의 수가 적은 것도 이를 의미함.

- 그리고 신년 공동 사설로부터 2010년 10월에 후계자 문제에 관련된 큰 행사가 준비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관측이 나왔음.

3. 김정은의 침투

- 이번 후계자 문제의 특징은, 후계자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남 김정은이라는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그것을 의심할 만한 증거도 나오지 않았다는 데에 있음. 일본에서 김정은이 후계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된 배경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음.
 - 첫째, 김정은에 대한 찬양가로 보이는 가요 『발걸음』임.
 - 일본어로는 ‘足音(아시오토/발소리)’, 내지는 ‘足取(아시도리/발걸음)’라고 번역되는 이 노래의 가사를 보면, ‘김대장’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2월에 탄생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위업을 이어받아서’ 부상한 것을 알 수 있음.
 - 이 노래는 2009년 2월 23일의 첫 보도(조선인민군 제264 대연합

I
II
III
IV
V
VI
VII

부대 예술선전대 공연) 이후로, 동년 5월 25일의 인민군 3중3대 혁명 붉은 기 감나무 중대 군인의 예술소품공연 등, 북한미디어에 가끔 등장하고 있고, 6월 17일에는 니혼테레비가 평양 시내에서 촬영한 영상으로부터 노래의 존재 및 가사와 함께 멜로디가 처음으로 확인됐음.

- 그러나 이것으로는 ‘김대장’이 장남인 정남, 차남인 정철, 삼남인 정은 중 누구를 지목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았음.

○ 거기에 새로운 증언을 한 사람이 『김정일의 요리사』 저자인 후지모토 겐지였음.

- 그는 2009년 7월 4일 니혼테레비가 방영한 프로그램에서, 『발걸음』은 1992년 1월 8일, 김정은의 9살 생일 때 보천보전자악단의 이종오가 발표했으며, 당시는 ‘김대장’ 부분이 ‘작은 대장’으로 불렸다고 증언하였음.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어린 아이들을 “대장”이라고 부르면서 함께 놀았었다는 종래 증언과도 모순되지 않는 것이었음.

- 그 이후, 7월 20일 NHK 종합티비 뉴스 “북한 ‘김대장’ 찬양가”는 『발걸음』 가사가 게시된 북한의 선전물에서 ‘김대장’ 부분이 굵은 글씨로 쓰여진 것을 밝혔음. 이는 ‘김대장’이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맞먹는 인물로서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음.

○ 둘째, 김정은의 27세 생일인 2010년 1월 8일의 보도 모습임.

- 태양절(김일성 주석 생일)이나 당창건기념일과 같은 축제일에만 들을 수 있던 『축배를 올리자』라는 노래가, 평소와 같은 금요일

- 인 1월 8일, 북한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에서 반복하여 방송되었음.
 - 거기에서 동 일자의 로동신문 제1면에는, “위대한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 일본의 저명한 식물학자 가모 모도데루씨가 진귀한 식물을 선물했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게재되었음. 가모씨는 북한에서 김정일에게 꽃을 증정한 것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기도 함.
 - 또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마음에 드는 것으로 여겨지는 논설원에 의해 쓰여진 2면의 “정론”도 주목해 볼 수 있음. 여기에서도 신년 사설과 같이 당 창건 65주년을 맞는 10월이 중시되고 있지만, 9월 내지는 당대표자회 개최를 시사하는 언급은 없음.
- 셋째, 북한의 선전물을 촬영한 사진과 내부분서임.
- 대만인 관광객이 원산을 여행했을 때 찍었다고 여겨지는 사진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었음. 거기에는 『발걸음』 기사와 함께, “장군복”, “대장복”, “만경대혈통, 백두의 혈통을 이은 청년대장 김정은 동지” 등의 문구가 적혀있었음.
 - 또 마이니치 신문이 “존경하는 김정은 대장동지의 위대성 교육자료”라는 제목의 내부분서를 입수했다고 하여 그 전문을 번역한 것을 웹상에 공개했음. 중일·도쿄신문도 동일한 문서와 사진을 입수했다고 보도하였음.
- 그 외에도, 친북 색채를 띤 한국의 월간지 『민족21』은 2009년 6월호의 특집기사에서, 북한에서는 터부로 여겨지는 후계자 문제를 정면에서 취급하여 김정은이 후계자가 되었다고 보도한 일이나, 2009년 6월 초에 김정남으로 파악된 남성에게 니혼테레비, TV아사히가 각각 마카오에서 인터뷰를 하여 “후계자는 김정은이라고 듣고 있다”라는 발언을 보도한 점도 김정은 후계설을 뒷받침하였음.

I
II
III
IV
V
VI
VII

4. 활발해지는 인사

- 2010년 5월 18일, 조선중앙통신은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3회 회의를 6월 7일에 소집”한다는 5월 17일 부상임위원회 결정사항을 알렸음.
 - 이례적으로 이전 회의가 개최된 지 2개월 만에 소집된 것이었음. 대의원 선거 직후 제1회 회의를 제외하고 결산·예산을 취급하지 않는 임시회의 개최는, 1972년 헌법 개정 이후 4차례밖에 없었고 이들은 모두 부주석 내지 총리의 변경을 포함하는 것이었음.
 - 제12기 제3회 회의도 장성택 당부장이 국방위부위원장으로 취임하고, 총리 교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례와 같았다고 말할 수 있음.
 - 그러나 의제가 인사뿐이었던 것은 이 회의가 처음이었음.

- 두 달 만이었던 최고인민회의 개최도 이례였지만, 거기에 앞서 보도되었던 김일철의 해임도 이례적으로 행해졌음.
 - 이는 5월 13일자 국방위원장 결정 제06호에 의해, “연령상의 이유로 국방위원회위원,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직무에서 해임되었다”고 보도되었음.
 - 80세라는 고령을 이유로 한 해임 발표였기 때문에, 해임 직후 최고인민회의에서 조명록 제1부위원장을 은퇴시키려는 포석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으나 그렇게 되지는 않았음.
 - 국방위원회는 1명의 위원장, 1명의 제1부위원장, 4명의 부위원장,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1-1-4-6의 12인 체제가 되었음.

- 내각 성원으로는 약력이 공표된 최영림 신임 총리(79) 이하, 신임 부총리로는 강능수(80), 이태남(71), 김락희(76), 전하철(82), 그리고 신임 부총리 겸 기계공업상으로 조병주(67), 신임 부총리 겸 전자공업상으로 한광복(64)이 임명되었음. 이는 오랜 세월을 걸친 독재체제의 폐해라고도 할 수 있는 인사상의 교착상태를 드러내는 것이었음. 그 외에도 동 회의에서는 경공업상, 식료일용공업상, 체육상도 교체되었음.
 - 이러한 대폭적인 인사는 2008년 말의 내각인사를 시작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당대표자회 소집도 그 연장선에 있다고 생각됨.
 - 인민보안부, 인민내무군 등 조직의 명칭 변경과 개편도 추진되어 왔으며, 당조직의 개편, 당규약의 개정 가능성도 가정하고 있었음.
- 2009년 2월 19일에는 오극렬 대장이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취임했음.
 - 이 결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김정일』 이름에 의한 것임.
 - 김일성 주석 사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당중앙군사위원장으로 취임한 것이 밝혀진 것은 이 보도가 처음이었음.
 - 이때부터 당대표자회 개최를 모색하기 시작했는지는 전혀 불확실하지만, 당의 재정비를 염두에 두기 시작한 조치라고 파악할 수 있음.

I
II
III
IV
V
VI
VII

5. 당대표자회 소집

- 2010년 6월 26일자 로동신문은 1면에 “조선로동당 대표자회를 소집할 데 대하여”라는 6월 23일자 『당정치국 결정서』를 발표했다.
 - 1980년 10월 14일에 최종 개정된 것으로 알려진 당규약 제30조에 의하면, ① 당중앙위원회는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에 당대표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당대표자회 대표자 선거 수속과 대표자선출 비율은, 당중앙위원회가 결정한다. ③ 당대표자회는 당의 노선과 정책 및 전략전술에 관한 긴급한 문제를 토의결정하고,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당중앙위원회위원, 후보위원 또는 준후보자위원을 제명하여 그 차기 임원을 보선한다고 되어 있음.
 - 이번 당대표자회의에서는, ‘당최고지도기관선거’만이 의제로 명시된 점이 특징적임. 당대표자회나 당대회에서는 중앙위원이 선출되는 것 때문에 종래는 ‘당중앙지도기관선거’라고 표현되었고, ‘당최고지도기관’이 무엇을 나타내는지는 실제로 당대표자회가 개최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임.

- 당 대표자회는 과거 2회 개최된 적이 있었음.
 - 1958년 3월 3일부터 6일에 걸쳐 거행된 제1회 당대표자회는 1957년 10월의 제3기 10월 전원회의에서 소집이 결정되었음.
 - 1966년 10월 5일부터 12일에 걸쳐 개최된 제2회 당대표자회는 1966년 3월부터 4월의 제4기 제13회 전원회의에서 소집이 결정되었음.
 - 이를 고려하면, 2개월 반 전에 소집이 발표된 이번 회의는, 전례 없이 긴급하게 소집된 것이었음.

- 6월 7일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당정치국의 제의에 의해 총리가 교체되었는데, 이번 당대표자회의 소집도 『당정치국 결정서』에 의한 것은 주목할 만함.
 - 중앙위원회의 폐회 중에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여기로 와서 그 위상이 급상승한 것은 당정치국이 당최고지도기관선거의 초점 중 하나가 될 것을 상기시켰음.
- 한편, 당대표자회에 대표자를 보내기 위한 지방의 대표회는 1997년에도 개최가 됐음.
 - 1997년 9월 21일 당 평안남도위원 대표회에서 김정일을 총서기로 추천하는 결정서가 채택된 것을 시작으로, 9월 22일에는 군 당대표회에서도 결정서를 채택, 10월 8일에 당중앙위·당중앙군사위의 특별보도가 나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당총서기로 취임하였음.
 - 중앙 차원의 당대표자회는 개최되지 않았고, 이 과정에 대해서 동년 10월 10일자 로동신문은, 김정일 총서기는 “실무적 수속없이” 선출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 즉, 이번 당대표자회 개최는 이력저력 선거를 거행한다는, 실무적인 수속을 고집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2010년 6월30일에는 대표자회에 관하여 처음으로 사설이 게재되었음.
- 7월 4일자 로동신문은, “조선로동당대표자회를 높은 정치적 열의와 훌륭한 노력적 성과로 맞이하자”라는 슬로건을 제시했음.

- 이들에 의하면, 9월 상순의 당대표자회는 당대회를 대신하는, 당 대회에 필적하는 회의임이 명확해졌음.
 - 그렇게 생각하면, 당의 대규모 회의 개최는 제6회 당대회가 거행된 지 30년 만임.
- 저번 제6차 당대회는, 1980년 10월 10일부터 14일에 걸쳐 개최되었고, 3,220명의 대표자가 참석했음.
- 6차 당대회에서는 ① 김일성 총서기에 의한 당중앙위 사업총괄보고, ② 당중앙검사위 사업총괄 보고, ③ 당규약개정, ④ 당중앙지도기관 선거(위원 145명, 위원후보 103명)의 네 가지 의제가 다뤄졌음.
 - 마지막 날에 개최된 당중앙위 제6기 제1회 전원회의에서 김정일이 정치국 상무위원, 서기, 중앙군사위원으로 선출되었음. 결과적으로 김정일 후계 공식화, 데뷔를 위한 대회였다고 해석됨.
 - 그러므로 이번 대표자회가 김정은 후계 공식화를 위한 소집이 아닌가라는 견해가 유력하였음.

6. 당대표자회에 관한 로동신문 논조

- 44년, 30년 만에 큰 회의를 개최하는 수고 및 비용을 생각해 보면, 이번 당대표자회는 후계체제 정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이 유력한 견해였음.
- 2008년 여름부터 건강악화를 지적받아온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무엇보다도 체제유지를 우선시하고 있으며, 그것은 후계체제 정비를 뜻함.
 - 당대표자회 개최 일정조차 정확하게 전해지지 않는 상황 아래,

거기서 무엇이 결정될 것인가 하는 정보를 입수하고 정밀 조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그러나 로동신문 논조는, 매우 특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어 하나의 힌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됨.

○ 첫째로, 당대표자회를 당대회와 필적하는 큰 행사로서 내거는 것과 동시에, ‘대축전장’으로 여겨지는 10월 10일의 당건설 65주년과 항상 결부시켜 ‘경사’로 보고 있었음.

- 7월 후반에는 당대표자회를 위한 꺾기 집회도 연달아 개최되고 있음. ‘당최고지도기관 선거’로 불리는 것처럼 인사가 의제가 된다고 여겨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한번씩 개최되는 최고인민회의 등과는 완전히 다른, 특별한 취급을 하고 있음.

○ 둘째, 김정은의 이름이나 후계자 문제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전혀 없지만,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 현격히 지지를 암시하는 표현이 증가하고 있음.

- 그 경향은 7월, 8월에 들어서면서 ‘김일성 민족’, ‘김일성 조선’이나 ‘혁명의 계승’이 일부러 강조되는 것으로 뚜렷해졌음.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최종적으로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는 알 수 없지만, 북한국민에게 구독의 의무가 있는 로동신문을 통독하는 한, 김정은이 그 위치에 선출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음.

○ 셋째, 당대표자회 개최에 이르는 과정이 어느 정도 공표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음.

I
II
III
IV
V
VI
VII

- 8월 26일부터는 “최근, 시(구역), 군 당대표회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되었음. 그 후 관청 차원, 도 차원의 당대표회 개최에 대해서는 비교적 구체적으로 보도되고 있음.
 - 9월 6일에는 “우리들의 대표자들이 혁명의 수도 평양으로 들어온다”고 보도되었음.
- 그러나 9월 14일의 사실을 마지막으로 단번에 그 어조는 약해졌음.
- 9월 15일부터 태풍 피해를 보도했고, 9월 17일에는 3주 이상 전에 보내온 우호국가 시리아에서의 위문 전문을 소개하는 등, 9월 상순에 당대표자회가 개최되지 않았던 것이 흥수 때문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처럼 보였음.
 - 그러나 그 이후에 등장하는 표현으로도 당대표자회가 중지된 것이 아니고, 연기되었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음.
 - 한편, 후계자 존재를 암시하는 논조도 볼 수 없게 되었음.
- 아래는 몇 가지 구체적인 논조를 소개하겠음.

2010/7/13	『로동신문』	「위대한 당을 따라 총진군 앞으로!」
2010/7/22	『로동신문』	「사설-일심단결된 위력으로 당대표자회를 의의 깊게 맞이하자」
	『로동신문』	방성화, 「정론-백두산 청춘서사시」
2010/7/24	『로동신문』	이동찬, 「정론-혁명동지」
2010/8/7	『로동신문』	주창신·손소연, 「정론-조선은 결심하면 한다」
2010/8/15	『로동신문』	「사설-당의 주위를 단단하게 단결해 위대한 김일성 조선을 한없이 빛내자」

2010/8/21	『로동신문』	송미란, 「정론-우리는 누구인가?」
2010/8/28	『로동신문』	신 강, 「빛나라 선군장정 십만리여!-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가 선군혁명 령도를 개시하신 지 50주년에 즈음하여」
2010/8/28	『로동신문』	「사설-청년들은 우리당의 사상과 결심을 숭신하여 실현하는 선군혁명의 전투전사가 되자」
2010/8/31	『로동신문』	유명, 「서사시-세계여, 룡남산을 바라보라!」
2010/9/1	『로동신문』	김은남, 「룡남산과 함께 불멸의 영도업적 길게 전하는 주체 교육 과학의 최고 전당-경애하는 장군님이 불멸의 령도의 자취를 남긴지 50주년을 맞이하는 김일성종합대학에서-충실성의 전통을 대를 이어 빛내자」
2010/9/7	『로동신문』	림 정, 「룡남산의 맹세가 있어서 강성대국의 눈부신 미래가 현실로서 퍼진다-역사의 기적, 세기적 변혁」
2010/9/9	『로동신문』	「위대한 당에 대한 천만군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
	『로동신문』	「사설-당 령도하에 사회주의 우리조국은 끊임없이 강성변영할 것이다」
2010/9/11	『로동신문』	「불패의 단결로 백승 올리는 위대한 당」
2010/9/14	『로동신문』	「사설-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당 건설 업적을 끊임없이 빛내가자」
	『로동신문』	「우리당은 인민대중과 혼연 일체를 이룬 불패의 당이다」
	『로동신문』	「당면해 나와 있는 중요한 문제-국토환경보호성 활동가들과 주고 받은 이야기」

I
II
III
IV
V
VI
VII

2010/9/17	『로동신문』	「사설-모든 힘을 총집중하고 올해 농업 종반을 잘 마치자」
	『로동신문』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 시리아 아랍 공화국 대통령이 위문 전문을 보내왔다」
	『로동신문』	박옥경, 「정론-곧바로 가자!」
2010/9/19	『로동신문』	「김일성 조선의 선군 역사는 5백년, 5천년 영원히 흐른다-음악무용 대공연 “선군승리천만리”에 대하여」

- 예고되었던 ‘9월 상순’을 9월 15일까지로 확장하여 해석했다 하더라도, 그 기간에 당대표자회는 개최되지 않았고, 사실상 연기되었음.
 - 로동신문 9월 16일자에서는 홍수피해가 크게 보도되어 있음. 각국 미디어가 보도한 것처럼, 표면상으로는 홍수피해 확대가 당대표자회 연기의 이유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9월 6일자 로동신문에서 보도된 것처럼 이미 대표자들이 평양에 들어오고 있는 상태에서 홍수피해 영향을 간파할 수 없었다는 점은 의문임.

7. 당대표자회 개최의 이점

- 30년 전의 제6차 당대표자회가 김정일의 공식 데뷔의 자리였기 때문에, 이번 당대표자회는 김정일의 처우에 초점이 집중되어 버렸음. 그러나 김정일 체제에서 당대표자회를 개최하는 다른 이점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 점에 대해서, 당대표자회 개최 전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논의되어 왔음. 모두 후계체제의 정비라는 맥락에 통하는 것임.

○ 첫째로, 당기반의 재생임.

- 한국 통일부에 의하면 1980년 10월에 선출된 145명의 중앙위원 중 절반 이상이 사망 내지 해임되었다고 알려짐.
- 최근에는 2008년에 박성철, 2009년에 홍성남, 2010년에는 김중린, 리용철, 리제강 등의 고위급 간부의 사망이 눈에 띈. 지난번 당대표자회로부터 30년, 당중앙위 전원회의로부터 16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이는 당연하다고도 할 수 있음.
- 대형인사를 단행하고 당조직을 재정비하는 것으로써 김정일 국방위원장 자신의 부담도 경감될 뿐더러 당간부의 대량 승진은 인센티브 부여도 됨.
- 규모는 미지수이지만, 어느 정도는 세대교체도 진행될 것임.
- 거기에다가 당규약에 따라 중앙위원을 선출한다는 과정이 중요함.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절대적인 독재권한이 있다면, 인사도 자의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임.
- 1997년 9월부터 10월에 걸쳐서 진행된 김정일 스스로의 총서기 추대·취임의 경험이나 2009년 2월의 오극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임명처럼 갑자기 김정은이 국방위원 등의 요직에 추대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음.
- 그러나 선출의 형식을 고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정통성 확보를 위한 목적이라고 짐작됨.

○ 둘째로, 당·군 관계의 명확화임. 즉, 지금까지 표방해온 ‘조선로동당이 영도하는 선군정치’를 실체화한다는 것임.

I
II
III
IV
V
VI
VII

- 그 의미로, 정치국 상무위원의 구성이나 중앙군사위원회의 부활이 주목됨.
 - 당조직의 재생은, 앞으로도 군이 지도하는 군사 독재체제가 아닌 지도부가 군을 이용하면서 독재체제를 유지시켜나갈 것이라는 점을 확인시켜 줌.
 - 2009년 4월의 헌법개정에서도 제1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는 사항은 남겨졌음. 국가에 대한 당의 우월성이 재확인되었다는 것임.
 - 당대표자회 개최를 계기로 당조직의 재생, 당기반의 강화로 인해 조선인민군이 조선로동당의 당의 군대임을 재확인한 셈임.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절대적인 권력을 과시할 수 있을 동안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 건강상태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권력의 인수, 정책 결정 과정이 불명료하게 됨.
- 형식적으로는 ‘국가의 중추’로 구가되어 온 국방위원회가 중심이 되었지만, 그 형태는 무너졌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음.
 - 제1부위원장인 조명록은 유명무실한 존재가 되었고, 부위원장은 4명 중 3명이 군인으로, 민간 출신은 장성택 당부장뿐이었음.
 - 즉, 단기적으로는 기득권자의 논리가 작용하여 군출신 간부와 당출신 간부가 협력하면서 위기관리체제를 운영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군인이 과도한 권력을 과시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띠고 있다는 것임. 적어도 그 위험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음.

- 더욱이, 당대표자회에서 김정은 후계구도가 공식화되면 그가 공식적으로 ‘실무 지도’를 시작할 수 있음.
 - 김정일이 공식적인 자리에 데뷔한 이후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기까지는 14년이라는 기간이 있었음. 김정일이 후계자로 내정된 1974년부터 추산하면 20년 동안 신중하고도 확실하게 권력승계 준비를 해왔다고 할 수 있음.
 - 김정은 후계구도를 일찍 공식화한다는 것은 그 이후의 승계 준비 기간이 길어진다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2010년에는 당창건 65주년임과 동시에, 김정일이 등장한 지 30주년, ‘선군혁명령도’를 시작한지 50주년이기도 하여, 딱 떨어지는 숫자를 좋아하는 북한에서는 축하의 분위기를 연출하기 좋은 때임.
 - 물론 핵문제에 따른 경제제재에 더하여, 화폐개혁·디노미네이션의 실패, 천안함 사건에 의한 남북 간 경제협력 관계의 정체, 그리고 홍수피해도 이어졌기 때문에 도저히 축하 무드라고는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도 사실임.
 - 그러나 김일성 주석 탄생 100주년인 2년 후에 경제상황이 호전될 것으로 볼 수도 없고, 환경조건도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8. 나가며

- 최근 북한 정치의 동향 및 당대표자회 개최는 김정일 체제가 포스트 김정일 시대에 있는 ‘비김정일화’를 피하기 위한 과제를 하나씩 해결하는 것처럼 보임.

- 첫째로, 후계자의 조기 지명임.
 - 대내적으로는 「발걸음」 등의 전선 교육으로 침투했다고 할 수 있는데, 당대표자회에서 김정은 후계구도가 공식화되면 권력승계 과정이 크게 진전될 수 있음.
 - 후계자를 지명함으로써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레임덕이 시작된다는 위협성은 있지만, 스탈린 격하나 ‘림표(林彪)사건’과 같은 ‘비김정일화’를 초래하는 것보다는 현격히 낫다는 것이 정상적인 생각일 것임.

- 둘째로, 후견인의 지명임.
 - 후계자가 실적이 없는 젊은이일수록 후견인의 존재가 중요함.
 - 이미 2009년부터 김경희 당부장의 빈번한 수행이 눈에 띄었고, 2010년 6월에는 장성택 당부장이 국방위부위원장으로 취임했음.
 - 거기에다가 당대표자회 내지는 거기에 따른 중앙위전원회의에서 정치국 상무위원 등의 인사가 결정되어 공표되면 이것 역시 큰 진전이 됨.

- 셋째로, 체제 틀의 규정임.
 - 절대적 권력자의 유고 상황에서는 정책결정과정의 제도화되어 있지 않으면 큰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음.
 - 2009년 4월 9일의 최고인민회의를 통한 헌법개정으로 최고 영도자가 국방위원장임을 나타내, 군과 경찰, 비밀경찰의 간부도 포함한 국방위의 재편을 했음.
 - 당대표자회에서 당·정관계, 당·군관계를 명확히 한다면, 이 측면도 진전하는 것임.

- 그리고, 이상의 과정을 사람들에게 납득시키기 위한 폭력장치를 확실히 마련하는 것, 축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3대 세습을 정당화하기 위해 경제상황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해지고 있음.
- 당대표자회가 9월 상순에 개최되지 않았던 것처럼, 후계자 문제의 목표를 향해 일직선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다는 인상이 강함.
 - 노동신문의 논조를 보아도, 2009년 6월, 7월쯤에는 후계자의 존재를 암시하는 기사가 늘어났지만, 그 이후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견재와 그 권력을 과시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음.
 - 2009년 7월쯤에는 노동신문에 빈번히 나왔던 「발걸음」의 이름도 2010년 초반에는 완전히 볼 수 없게 되었음.
 - 북한 국방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체제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본다면, 이번 당대표자회 소집이 그러한 움직임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음.
 - 후계체제 정비는 상당히 신중하고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엿볼 수 있음.

보 론

통일연구원 주최 한·일포럼 개최 전날인 2010년 9월 28일, 조선로동당의 대표자회가 44년 만에, 그리고 중앙위원회 총회가 17년 만에 개최되어, 다음날 미명에 김정일 총서기의 3남으로 알려진 김정은의 이름이 들어간 당 간부 명단이 발표됐다. 이하는, 통일연구원 측의 요청에 따라서 당대표자회 개최 후에 집필한 보론이다.

(1) 개요

- 당대표자회 목적은 ‘최고지도기관의 선거’로 사전에 발표되어 있었지만, 대부분의 예측대로 김정은이 공식 데뷔하고, 장래를 대비해 체제 강화를 도모하는 조치가 있었음.
 - 김정은은 중앙군사위원회에 신설된 부위원장직에 취임하고, 사실상의 후계자로서의 모습을 보였다.
 - 탈고시점(2010.10.10)에서는 북한의 공식 매체가 그를 ‘후계자’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작년부터 북한 국내에서는 김정은이 김정일 위원장의 ‘위업’을 이어받는 인물이라고 하여 여러 선전 활동이 전개되어 왔음.
 - 또, 김정은이 취임한 자리는 보통 20대 후반의 젊은 사람이 맡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님. 공개된 영상을 보아도 분명히 한 명만 극단적으로 젊고, 유일하게 인민복을 착용한 김정은이 맨 앞줄에 있었기에, 내외적으로 후계자로서의 인상을 주는 데 충분했음.

- ‘김정일 위원장의 후계자는 누구인가? 다시 세습인가?’ 라는 오랜 세월의 의문은 일단 결론이 난 것임.

- 김정일 위원장이 환갑을 맞은 2002년쯤부터 장남 김정남, 차남 김정철, 그리고 기타 인물들이나 집단 지도체제의 가능성도 포함해 여러 가지 ‘정보’가 보도되기 시작했음.
- 한때, 북한 매체의 논조에도 후계자의 존재를 암시하는 것이 있었지만, 이 문제는 후계자가 공식화됨으로써 본래의 의미를 갖게 됨.
- 김정일의 등장으로, 북한의 본질이 장자 중시의 유교사회보다는, 독재에 있다는 것을 재인식할 수 있음. 후계자의 선정은 최고지도자의 전권 사항인 것임.

(2) 김정일 류의 전례 답습

- 김정일 위원장이 공적인 장소에 등장하고 나서 30년간, 소련과 동구권 사회주의체제 붕괴를 겪으면서도 체제유지가 이루어진 것을 보면, 김정일로의 권력승계 문제는 북한에게 성공한 전례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므로 그 경험은 상당 정도 답습되어, 당기관지 로동신문이 김정일이 후계자로 내정된 1970년대와 현재를 대비하는 기사를 작년 부터 가끔 게재하는 모습을 보이곤 하였음.
- 물론, 전례가 완벽히 답습된 예라고는 할 수 없음. 이번에는 크게 두 가지 상이한 점을 볼 수 있음. 후계체제 정비가 급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과, 김정일 위원장이 제창해왔던 ‘선군정치’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것임.

- 2009년 1월에 한국 연합뉴스가 “삼남이 후계자로 내정됐다”고 보도한 이래, 찬양가 『발걸음』의 유포나 김정은을 찬양하는 포스터 사진, 장남인 김정남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증언 등, 여러가지 정황 증거가 빠르게 나왔음.
 - 이 모든 것들이 김정은이 후계자로 정해진 것을 암시하는 결정적인 증거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것을 부정하는 증거도 없었다는 점이 이번 후계문제의 특징이기도 함.

- 김정일 위원장이 등장한 30년 전의 전례와 비교하면 급속도로 후계 체제 정비가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음.
 - 당대표자회에서 중앙군사위부위원장으로 추대한 김정은은, 당일 행해진 기념촬영 후에도, 조선인민군 제851군부대 훈련 시찰(10월 5일 보도), 당창건 65주년에 즈음하여 개최된 은하수관현악단의 ‘10월의 음악회’ 관람(10월 6일 보도)에 이어, 10월 9일에는 중앙 보고대회에 참석하고, 같은 날 밤에는 매스게임 아리랑 공연장에서 방북 중인 저우용강(周永康) 중국공산당 정치국상무위원과도 만나는 등, 동정보도가 연일 계속되었음.
 - 김정일의 경우는 후계자로 내정된 후 6년 정도의 준비기간을 거쳐, 1980년 10월 10일 제6차 당대표자회를 통해 처음으로 공식보도에 그 이름을 나타냈음.
 - 그 후에는 오랫동안 동정 보도는 없었고, 1981년 5월 30일에 김일성 주석의 측근 간부였던 심창완의 영전을 조문했다(5.29)는 것이 보도되었음.
 - 또한 김정일은 묘향산지구(5.18~22)를 시작으로, 서서히 실무 지도를 시작했음.

- 같은 해에 이이백 조총련부 의장과 재일조선청년학생 축하단 등과 회견을 했지만, 외국 대표와의 회견은 더 이후에야 이뤄졌음.
 - 전례를 크게 상회하는 속도로 김정은이 등장한 배경에는 2008년 8월에 불거진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악화가 있다고 확실시되고 있음.
- 시간 축으로 더해 또 다른 특징은 김정일 위원장이 수십 년간 내걸어 왔던 선군정치의 현저한 영향임.
- 때마침 8월 25일은 선군혁명 령도 50주년으로 대규모 행사가 준비되었음.
 - 작년 북한에서는 “역사의 개서가 진행되고 있어 김정일이 약관 18세 때부터 군을 인솔해왔다”고 강조하고 있음.
 - 중앙군사위원회는 작년 2월에야 김정일 총서기가 위원장으로 취임한 사실이 알려진 지 얼마 안 된 조직이지만, 김정은이 군을 지도하는 입장에 있는 동 기관의 2인자가 되었다는 사실로부터 선군정치를 계속해 나갈 의사가 명확해졌다고 말할 수 있음.
 - 그것은 김정일·김정은 체제가 군을 완벽히 장악하는 것을 최대의 과제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선군정치는 동구권 사회주의체제의 붕괴가 직접적인 계기가 되고 있음.
- 북한은 1989년 차우세스크 루마니아 대통령 처형으로부터 군이 지도자를 배신하지 않는 것이 체제유지를 위한 절대조건이라는 교훈을 얻었음.
 - 이후, 후계체제 정비 과정에서 군의 지지를 얻기 위해 일시적이거나 강경책을 취할 가능성도 남아 있음.

- 이번 일련의 움직임은 김정은 체제의 시작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김정일 체제하에서 그 권위를 계승받은 후계자가 누군지가 공표된 것에 지나지 않음.
- 세습인 이상, ‘김일성 민족’, ‘김정일 조선’을 종래 이상으로 강조하는 교육·교화에 의해서 정통성 확보를 시도하게 됨. 이번 30년 만에 개정된 당규약 서문에서도 그 경향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음.

(3) 인사의 묘

- 당대표자회 소집과 같은 날에 개최된 중앙위원회에서, 말단의 당세포와 총서기를 제외하고 사실상 기능이 정체되어 있었던 당조직의 재생이 시도되었음.
- 당간부 직위가 채워진 것은, 민간 출신 인사에게 있어서도 큰 인센티브가 됨. 이번에 공개된 인사에 대해서는 김정은의 공식화 이외에도 몇 가지의 주목할 만한 점이 있었음.
 - 첫째, 대장보다 격상된 차수 칭호가 주어진 리영호 총참모장의 대두임. 김정은과 같이 중앙군사위부위원장으로 취임하고 상무위원의 자리도 얻은 것임.
 - 한편, 오극렬 국방위부위원장은 중앙위원에 머물러 그 이상의 당요직은 주어지지 않았음. 이것이 명단이 보도되었을 때 처음으로 눈에 띈 점이었음.
 - 김정일 총서기의 매제로, 김정은의 중요한 후견인으로 주목받아

은 장성택 국방위부위원장은 상무위원으로 들어가지 않고 정치 국원 후보, 중앙군사위원회에 머물게 되었음.

- 둘째, 상무위원은 김정일 총서기,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영림 내각총리, 조명록 국방위 제1부위원장, 리영호 총참모장의 5명이었음.
 - 오랫동안 투병생활로 인해 동정 보도가 없었던 조명록이 들어간 것은 의외의 일임.
 - 권력자가 있는 기관에 실권이 옮겨가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며, 김정은이 부위원장이 된 중앙군사위원회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은 확실한 사실임.
 - 고령인 조명록 국방위 제1부위원장이 상무위원에서 머지않아 빠질 때, 그 자리에 김정은이 취임할 것을 이미 계산한 인사였다는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음.
- 셋째, 신 지도부의 주요멤버를 보면, 김정은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가 잘 알려진 고령의 간부들이었음.
- 이번에 공표된 당 인사와 국방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내각총리, 게다가 인민무력부장 등의 직위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볼 때, 절대적 수위에 있는 김정일 총서기 및 또한 같은 김일성 주석의 피를 잇는 여동생인 김경희 당부장, 사실상 후계자로서 데뷔를 한 김정은을 제외하고 제2인자가 없는 균형 인사가 선택되었다고 할 수 있음. 바로 ‘인사의 묘’임.
 - 이로써 최고권력자의 건강에 위급상황이 생겼다고 해도, 특정한

간부가 실권을 잡는 일 없이 합의에 의해 김정은 부위원장이 보다 높은 지위로 추대되는 '위기관리체제'가 갖추어졌다고 할 수 있음.

(4) 논조 분석의 타당성과 한계

- 현저한 논조의 변화와, 당대표자회가 44년 만에 열린다는 사실을 보면, 김정은 후계의 공식화가 그 귀착점임을 전망하는 데에 크게 어려움은 따르지 않았음.
 - 북한 국내에서는, 로동신문을 읽는 것이 의무화가 되고 있음. 그렇기 때문에 특징적인 표현의 출현이나 그 출현 빈도의 증감은 중요한 분석 소재가 되어왔음.
 - 당대표자회 소집이 발표된 후, 로동신문의 논조에는, “대를 이어 전통을 빛내자”는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혁명의 계승’, ‘김정일 총서기의 자손’, ‘만경대(김일성 주석의 탄생지로 알려진) 가문’, ‘백두(김정일 총서기의 탄생지로 알려진)의 혈통’, ‘혁명의 제3세대’와 같은 표현을 사용해 후계자 등장을 강하게 암시하여 왔음.

- 그러나 외부사회에서 여러 수단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검증해도, 몇 가지 예기치 못한 전개가 있었던 것은 부정할 수 없음. 한국 언론을 중심으로 한 여러 잘못된 보도도 향후의 교훈이 될 것임.
 - 먼저, 김정은의 이름이 처음으로 북한 공식 매체에 나타난 것은, 당대표자회 그 자체에 관한 보도가 아니라, 당일 미명에 발표된, 조선인민군대장의 칭호를 수여받았다는 뉴스였음.
 - 어떻게든 선거에서 ‘선출’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 것을 감안

- 하면 이러한 전격적인 임명은 놀라웠음.
- 또, 김정은이 취임할 가능성이 있는 자리로 정치국 상무위원이 제시되어 왔지만, 그것은 김정일이 공식적인 자리에 데뷔했을 때인 30년 전의 전례에 영향을 많이 받은 분석이었음.
- 게다가, 당초 예고되었던 9월 상순이 되어서도 당대표자회는 개최되지 않았고, 연기된 이유에 대해서 북한 측은 밝히지 않았음.
 - 그러나 일본과 한국 미디어가 보도한 것처럼 8월 하순과 9월 초에 북한을 덮친 홍수 피해가 표면적 이유가 된 것은 로동신문에서도 읽어낼 수 있음.
 - 9월 17일자 1면 전면에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 시리아 아랍 공화국 대통령이 위문전문을 보내왔다”라는 기사를 게재한 것임. 전보일은 ‘8월 23일’로 되어 있고, 전문이 보내온 지 3주간이나 지나고 난 뒤의 부자연스러운 공표였음.
 - 거기에 앞서 9월 15일에는 첫 태풍으로 “수십 명이 사망하고, 약 8,300세대 주택이 파괴됐다”라고 보도되고 있음.
 - 그 후, 당대표자회에 관한 로동신문의 논조는 명확히 약화되었음. 개최 의사는 명확히 나타내고 있으나, 후계자의 등장을 시사하는 특정적인 표현을 전혀 볼 수 없게 된 것이었음. 그 배경에 대해서도 현 시점에서는 명확히 설명할 수 없음.
 - 작년 4월에는 헌법이 개정되고, 김정일 총서기가 위원장을 맡는 국방위원회가 강화되었음. 그 시점에서는, 필자 자신도 국방위원회를 중심으로 후계체제가 정비될 것으로 전망했었고, 2010년 당대표자

회를 개최하고 중앙군사위에 부위원장 자리를 신설하는 등의 변화는 예측하지 못했었음.

- 실제로, 김정일 체제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신중하게 후계체제 준비를 진전시키고 있는 것은 본문에서 논한 바와 같음.

(5) ‘아버지의 유산’ 계승

- 올해 초부터 북한 미디어는 10월을 ‘대축전장’으로 만든다고 반복해 말해왔음. 10월 10일의 당창건 65주년을 중시해온 것임. 또 당대표 자회를 9월 상순에 개최한다고 발표한 후에는, 양자를 항상 같이 알려 왔음.
- 이번에 개최된 일련의 행사들을 보면, 김정일의 총서기 재추대와 김정일의 등장을 연출하고, 예고대로 축하 분위기를 조성하였음.
 - 10월 9일에는 대형 불꽃놀이 행사 ‘축포야회’가 개최됐음.
 - 10월 10일 0시에는 김정일 총서기가 김정인과 간부를 이끌어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조선로동당의 창건자이시고, 민족의 아버지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가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 기념궁전을 방문했음.
 - 10일 10시부터는, 평양의 김일성 광장에서 경축 열병식과 군사퍼레이드가 개최되었고 조선중앙텔레비전은 이례적으로 생중계로 그 모습을 보도했음.
 - 물론 ‘대축전장’이 되는 이유가 후계자를 대중에게 선보이기 위한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논하지는 않았지만, 열병식은 사실상 김정

- 은의 등장을 내외적으로 어필하고, 세습을 기정사실화하는 기회가 되기도 했음.
- 또 로동신문에 의하면, 당창건 65주년에 즈음하여 파격적 배급을 실시한 것으로 보임.
- 그 이면에서 3대세습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보도되고 있음.
- 북한과 중국 국경에서의 비합법적 왕래를 통한 소문이나 DVD의 유입에 의하여 국외 상황도 북한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는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이 현실임.
 - 또한 아무리 북한이 정보통제 사회라 하더라도, 인간에게는 비교하는 능력이 갖추어져 있음. 타국의 정보가 불충분하다 하더라도, 20년 전, 30년 전이 그나마 낫다고 말하는 식의 비교가 가능함.
 - 냉전 종결 직후에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기 때문에, 김정일 총서기가 최고권력자가 된 이후 북한은 전례없는 식량난을 겪게 되었음.
 -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김일성 주석에 대한 흠모의 마음이 있다고 하지만, 경제가 최악의 상태에 있던 시기에 등장한 김정일에 대해서는 불만만 더해가고 있음.
- 따라서 불만을 억제하는 폭력장치가 기능하고, 김정일의 지도력이 과시될 수 있을 때 후계자의 공식화를 강행했다고 할 수 있음.
- 3대세습의 의사표명은 오랜 동안의 피폐한 경제에 더해, 국제사회의 제재, 화폐개혁(디노미네이션)에 의한 혼란, 천안함 사건에 따른 한국과의 협력 중단, 거기에다가 홍수 직후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행해졌음.

- 김정은에게 계승된 ‘아버지의 유산’은 추정할 수 없고, 정통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큰 과제임.

- 정확히 30년 전 10월, 김정일 후계구도는 오랜 기간의 모순이 드러나 경제가 하강선을 더듬으려는 시기에 공식화되었음.
- 김일성 주석의 ‘아버지의 유산’을 계승받은 김정일 총서기는 3대세습 의사를 국내외로 천명했음. 김일성 주석의 혈통을 계승받고 있다는 스스로의 정통성을 부정하게 될 수도 있는 다른 선택사항은 나타나지 않았던 것임.

참고문헌

1. 단행본

조선로동당. 『김정일동지락전』.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8.

2. 논문

礮崎敦仁. “北朝鮮の「多元主義」—弛緩と抑制” 『東亞』. No. 476, 2007年 2月.

礮崎敦仁. “金正日とイデオロギ?—北朝鮮「先軍思想」への道.” 『慶應の教養學』. 東京: 慶應義塾大學出版會, 2008年.

礮崎敦仁. “2010年の北朝鮮を展望する 権力継承意識し安定志向—現實的トーン目立った新年共同社説.” 『金融財政business』. No. 10054, 2010年 1月 25日.

礮崎敦仁. “最高人民會議の役割—北朝鮮の「最高主權機關」.” 『現代韓國朝鮮研究』. 第7号.

礮崎敦仁. “金正日「先軍政治」の本質.” 小此木政夫編 『危機の朝鮮半島』. 東京: 慶應義塾大學出版會, 2006年.

詳細は: 礮崎敦仁. “メディアが暗示する後継者の存在—2009年の「キム正恩」.” 『紀要國際情勢』. No. 80.

3. 기타

城内康伸. “正恩氏「後継」文書—北朝鮮一般黨員が學習.” 『東京新聞』. 2010年 9月 19日.

『로동신문』.

『민주조선』.

I

II

III

IV

V

VI

VII

IV. 화폐개혁 이후 북한의 경제동향과 전망

최수영
(통일연구원 기획조정실장)

1. 서언

- 북한에서는 화폐개혁(2009.11.30)과 함께 추진된 시장통제 강화, 외환사용 불허 등으로 시장기능이 마비되고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과 후유증이 나타났음.
 - 북한 일부 지역에서는 아사자가 발생했다는 보도가 흘러나오고 있고, 주민들이 당국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는 등 민심이반 현상이 두드러졌음.
-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북한은 기존 정책 방향을 수정해 화폐개혁 후유증 치유와 민심 수습에 나서고 있음.
 - 대내적으로는 경제정책 방향을 시장통제 강화에서 완화(시장거래 허용)로 선화하였음.
 - 대외적으로는 2009년 하반기부터 더욱 긴밀해진 중국과의 관계를 활용해 중국 중심의 자본 유치 및 대외개방 확대 등 북·중 경제협력 가속화를 시도하고 있음.
- 이 글에서는 화폐개혁 이후 북한의 경제상황과 최근 변화된 정책방향을 살펴보고 북한경제를 전망해 보기로 하겠음.

2. 화폐개혁과 북한 당국의 대응

가. 화폐개혁의 목적

- 북한 당국은 2009년 11월 30일 북한 ‘원’ 구권을 신권과 100:1로 교환하는 ‘화폐교환’을 단행하였음.

- 구권과 신권의 교환비율이 1:1 등가교환이 아닌 점에서 사실상 화폐개혁에 해당함.
 - 교환 한도(세대당 구권 10만원)를 설정하고, 한도초과액은 은행에 예치한 다음 추후 별도로 지급하도록 하였음.
 - 화폐개혁은 당초 2008년경 시행(발행연도가 2008년으로 인쇄된 신권 확인)하려 했으나 김정일의 와병과 겹쳐 미루어오다가 김정일의 건강이 다소 호전된 2009년 말 단행한 것으로 추정됨.
 - 화폐개혁과 함께 물가는 2002년 7월 수준을 유지하고, 임금(생활비)은 종전 금액을 보장하도록 하였음.
- 화폐개혁 이후 북한 당국의 반시장 조치는 2010년 1월 중순까지 지속되었음.
 - 화폐개혁 이후 지방의 대규모 도매시장(종합시장) 폐쇄 시도: “북한 당국이 2009년 12월 30일 내각 조치로 2010년 3월 말부터 청진 수납 시장의 운영 관리를 중지해 사실상 폐쇄하기로 결정”(2010.1.6, 『좋은벗들』)
 - 각종 재화의 공급과 분배에 대한 국가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시장 상품의 주요 공급원인 중소 무역회사들의 통폐합 추진(2010.1.20, 『좋은벗들』; 『NK지식인연대』)
 - 화폐개혁 이후 북한당국은 외국인에 대해서도 북한 내 외화 사용을 철저히 단속하고 있다고 북·중 무역업자들이 발언(2010.1.14, 『요미우리신문』)
 - 북한의 화폐개혁은 시장통제 및 재정확충을 통한 계획경제의 전반적 복원에 목적을 두고 있음.

- 2002년 ‘7.1 조치’ 이래 추진된 부분적인 경제개혁(분권화, 시장화)의 부작용이 누적되자 다시 시장을 통제하고 계획경제를 복원하기 위한 수순의 일환으로 화폐개혁을 단행함.
 - 북한 당국은 화폐개혁을 통해 시중자금을 국가재정으로 환수하고, 물가와 임금을 재조정하여 근로자의 직장복귀 및 국가유통망의 활성화를 기대하였음.
 - 북한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장은 “화폐교환으로 재정적 토대 마련될 것”이라고 언급(2010.1.23)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화폐개혁은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정치·사회적 목적을 우선시하면서 추진된 것으로 보임.
- 화폐개혁 단행 시 김정일 후계체제 구축에 필요한 양호한 정치·사회적 환경 조성을 우선 고려하였음.
 - 즉, 북한은 화폐개혁과 함께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선심성 조치로써, 임금을 종전 수준으로 보장하는 인플레이션 유발 조치를 병행하였음.

나. 한계와 부작용

- 화폐개혁(화폐교환 및 액면가치변경)은 기본적으로 심각한 정책적 오류를 내포하고 있음.
- 극심한 물자부족 상황에서 당국의 통화량 관리와 가격통제를 통해 시장가격을 하향 조정한다는, 거의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설정하였음.
 - 화폐개혁 이후 취한 시장통제 및 외화사용 금지는 물자공급의 위

- 축으로 이어지는 조치로서 근본적인 한계를 내포하고 있음.
- 임금을 종전 수준으로 지급함으로써 단기적으로 주민들의 실질 소득 및 구매력이 크게 증가하는 인플레이션 유발 조치를 시행하였음.
- 이런 근본적인 한계 때문에 화폐개혁 이후 물가폭등 및 화폐가치 폭락 등, 북한 당국의 기대와는 달리 경제의 난맥상이 심화되었음.
- 화폐개혁 이후 식량과 생필품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물가와 환율은 폭등하였음.
 - 평양에서 쌀 1kg의 시장가격은 55원(2009년 12월 말) → 370원(2010년 2월 초)으로 6배 이상, 같은 기간 환율은 134원 → 395원으로 약 3배 폭등
 - 물가폭등은 물자부족, 시장통제 병행, 구매력 증가에 기인함.
- 특히 국가배급은 물론 국영 유통망마저 미비한 상황에서 시장통제로 시장을 통한 주민들의 자력 생존마저 위협받고 아사자가 발생하자 일부 주민들의 국가에 대한 태도는 적대적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전해짐.
- 시장접근은 물론 중국으로부터의 은밀한 수입 통로마저 차단되면서 심각한 물자 품귀현상이 유발되었음.
 - 이에 따라 당국에 대한 불평불만이 고조되고, 시장 단속요원 등 공권력에 대해 공공연히 도전하거나, 김정일의 지도력 및 후계자의 자질에 대한 비판적 루머가 유포됨.

다. 화폐개혁 초기 경제상황

- 화폐개혁 이후 초기 북한의 경제상황에 대해 상반된 내용이 전해지고 있으나 준비부족과 부작용에 따른 심각한 혼란이 발생하였음.
 - 국내 언론매체는 NGO의 소식통을 인용해 식량난에 따른 아사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함.
 - 반면 박상권 평화자동차 사장은 인터뷰에서 평양의 경우 물자공급도 원활하고 시장에서의 혼란도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함.

- 전반적으로 화폐개혁의 부작용은 매우 심각한 편이나 지역 간에 상당한 편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 지역 행정당국의 화폐개혁 이전 필요물자의 확보 정도, 시장통제의 강도, 화폐개혁 이후 대처 능력 등에 따라 편차가 발생함.
 - 북·중 접경지역인 양강도, 자강도, 함경도 등에서 혼란이 극심한 반면, 평양 등의 지역은 상대적으로 혼란이 제한적임.

- 화폐개혁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은 무엇보다도 물자공급 부족현상의 지속으로 인한 급격한 인플레이션의 재발에 기인하고 있음.
 - NGO(자유북한방송 및 좋은벗들)는 화폐개혁 실시 후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시장 물가는 화폐개혁 이전 수준으로 폭등, 주민들의 생활이 최악의 상황이라고 평가함.

- 화폐개혁 초기 시장에 대한 과도한 통제 및 폐쇄 등의 조치로 화폐개혁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이 가중되었음.
 - 2002년 ‘7.1 조치’ 이후 ‘계획과 시장의 결합’이라는 노선을 채택, 이에 따른 시장의 확산은 당초 기대와는 달리 계획경제의 정상화

- 를 가로막는 역효과를 초래하였음.
 - 2005년부터 북한에서는 시장통제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화폐개혁 단행 시점에서 시장에 대한 통제 강화는 최고 수위에서 실시됨.
 - 시장에 대한 좌편향이 화폐개혁과 맞물려 극단적인 형태로 진행되자 북한 경제현실에서 시장의 순기능 및 긍정적 역할이 사라지면서 혼란과 부작용이 가중되었음.
- 외환거래에 대한 통제로 북한 화폐의 가치 하락, 물자 수입 및 공장·기업소들의 경제활동은 상당히 위축되었음.
 - 화폐교환 상한액 설정으로 북한 원화의 가치저장기능이 훼손, 외화(달러, 위안화 등) 보유 선호 증대로 북한 화폐 가치 하락
 - 외환거래를 통제함으로써 추가적인 북한 원화 가치 하락
 - 중국산 수입품이 대부분인 시장 물품 공급에 중대한 차질 초래.
 - 기업 운영자금(밀자금)으로 외화를 다량 보유하고 있던 공장·기업소들의 경제활동 위축

라. 당국의 후속대응

- 북한 당국은 화폐개혁 이후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민심이반 현상이 현저해지자 이례적으로 당국의 실책을 인정하면서 문제의 조기 해결을 위한 수습 방안을 내놓고 있음.
 - 북한은 시장거래 허용 → 화폐개혁 실패 인정 및 책임자 문책 → 각급 기관에 식량 확보 독려 등의 사태 수습 조치를 취함.
 - 이러한 북한의 후속대응은 화폐개혁 및 이후 취해진 조치들을 더

이상 강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취해진 현실적인 타협(시장에 굴복)이라 할 수 있음.

- 시장통제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기 위해 시장활동, 외환사용 및 대외무역에 대한 통제를 부분적으로 완화하였음.
 - 2010년 2월 이후 종전과 같이 시장에서 농산품은 물론 공산품과 수입품 거래를 허용하고, 외화는 호텔 등 외국인 출입이 빈번한 지역에 국한하여 그 사용을 허가하였음.
 - 그러나 상인들의 당국 조치에 대한 불신과 물가 상승을 고려한 판매 기피 경향, 기관·기업소들의 무역활동 위축 등으로 시장 거래는 한동안 저조하였음.

- 북한 당국은 화폐개혁의 후유증이 심각하다는 점을 인식, 화폐교환에 책임이 있는 재정책임자를 인사조치하고 화폐개혁의 실패를 인정하였음.
 - 로동당 계획재정부장 박남기 해임(2010.1월 중순), 이후 박남기는 처형된 것으로 전해짐.
 - 김영일 내각총리는 “무리한 화폐교환 추진”으로 인민생활에 어려움이 가중된 것에 대해 사과(2월 초)
 - 화폐개혁이 실패한 정책이었음을 시인하는 내용의 통지문을 해외 공관에 발송(2월 중순)

- 식량 확보를 독려하고 공급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대외 경제활동을 강화하고 있음.
 - 긴급 구제미를 방출(2010.2.19)하고 모든 무역기관 및 외화별이

- 기관에 각개전투식의 ‘식량수입 확대’를 지시함.
- 화폐개혁 이전부터 추진해 온 투자유치 활동 강화, 국가개발은행·수출입은행 설립 계획 발표, 김정일의 라선특구 방문 및 개발독려, 중국에 라진항 사용권 부여 등 대외경제활동을 전개함.
 - 김영일 당 국제부장을 중국에 보내(2010.2.23) 원조확보를 도모하면서, 금강산·개성 관광 재개 등 남북경협 활성화를 촉구함.
- 화폐개혁으로 이반된 민심을 수습하고자 김정일도 주민 위무에 직접 나서고 있음.
- 김정일은 인민들의 숙망인 ‘흰쌀밥에 고기국’이 해결되지 않았음을 인정(2010.1.9)하고, “인민들이 강냉이밥을 먹는 것이 가슴 아프다”(2010.2.1)고 하는 등 주민들을 위무하였음.
 - 또한 김정일은 『2.8 비날론연합기업소 준공 경축 군중대회』에 참석(2010.3.6), 김일성 유훈사업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고 주민들의 의식주 해결에 부심하고 있음을 강조한 바 있음.
- 북한 당국은 이런 화폐개혁 후유증 치유 조치 및 주민 회유 노력과 함께 사회 통제력 회복을 위해 불온세력에 대한 통제 강화 등 대주민 통제활동도 병행하였음.
- 북한 내 남한물자 거래 등 ‘비사회주의 현상’ 단속 지속
 - 국경지역에 대한 통제와 검열 강화
 - 김정일의 보안기관 방문을 통해 힘을 실어줌으로써 역할 강화를 요구
 - 정책 난맥상의 외부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불순세력을 쓸어버리기 위한 보복성전”(2010.2.8, 보위부·보안성 성명)을 주민들에게 선전하여 공포감 주입

- 유동인구 통제 차원에서 공민증 교체사업(2010.2.22~3.6) 진행

3. 최근 북한의 경제동향

가. 시장가격(물가 및 환율) 폭등과 불안정

- 화폐개혁 이후 북한의 물가 및 환율은 폭등한 후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있음.
 - 환율 및 물가는 2월 중순까지 지속적인 상승 추세에 놓였다가, 2월 말과 3월 초에 폭등하였음.
 - 2월 말, 3월 초 환율과 물가의 이례적인 폭등은 소비교란보다는 북한 원화에 대한 신뢰가 극도로 추락한 화폐교란현상이 극도로 심화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음.
 - 북한 원화는 현재 교환 기능만 남아 있고 저축 수단으로서의 가치는 거의 소멸한 것으로 보도(2010.6.22, 자유아시아방송)
- 2010년 북한의 ‘원-달러’ 환율의 변동 추이는 다음과 같음.
 - 화폐개혁 이후 무역기관들의 무리한 연말 수입 증대와 북한의 외화사용 금지 조치(외화사용 금지 포고문은 2009년 12월 28일 게시)로 환율 급등하기 시작함.
 - 이후 환율은 2월 말, 3월 초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연초의 달러 당 120원 수준에서 2,300원 수준으로 약 20배 폭등하였음.
 - 3월 중순에 1,100원 수준으로 하락한 후 4월 초까지 600~700원 수준으로 추가 하락함.
 - 4월 초, 중순 이후에는 다시 1,000원대 수준으로 상승한 후 6월

I
II
III
IV
V
VI
VII

말까지 900~1,000원대에서 안정세 유지

- 지성남 주(駐) 영국 북한 대사 및 이기성 교수는 화폐개혁 시행 초기에는 일시적, 부분적 불안정 상황이 있었으나 지금은 수습됐다고 언급(2010.3.18, 『연합뉴스』; 4.19, 『교도통신』)
- 그러나 7월 중순 이후에는 1,500원대를 초과하는 등 다시 상승하였음.

● 표 IV-1 시장환율과 쌀 가격 추이

(평양, 2010년 1~8월)

기간	시장환율 (원/달러)	쌀 가격 (원/kg)
2009.12.09~12.15	-	44
2009.12.30~2010.1.04	134	55
2010.1.05~1.06	120	120
1.08~1.14	215	210
2.02~2.08	395	370
2.17~2.23	500	470
2.25~3.03	2,300	950
3.02~3.08	2,300	1,300
3.09~3.23	1,100	700
3.26~4.01	600	200
4.01~4.07	700	450
4.08~4.26	1,000	500
4.26~5.06	900	400
5.07~5.25	1,000	450
6.26~7.05	900	550
7.07~7.13	900	600
7.15~7.21	1,580	900
8.04~8.10	1,400	1,050

출처: 『데일리NK』, <www.dailynk.com>.

- 물가수준(kg당 쌀 가격)은 환율의 변동폭을 반영, 등락을 거듭하였음.
 - 북한은 생필품 가격 안정을 위해 시장에서 거래시 가격 상한제를 1월 29일부터 도입 (2010.4.19, 『교도통신』)했으나, 쌀 가격은 연초 120원에서 3월 초 1,300원으로 연초 대비 약 11배 폭등함.
 - 3월 중순에 700원 수준으로 하락한 후 4월 초까지 200원 수준으로 추가 하락: “(북한 당국이) 주민강연회를 열어 4월부터 국가 식량 공급의 정상화를 홍보하고, 외화벌이 기관에 대한 불법 비축식량 단속 강화” 등이 하락의 원인이라 지적(2010.3.23, 『NK지식인연대』; 자유북한방송)
 - 4월 초, 중순 이후에는 다시 450원 수준으로 상승한 후 400~500원 수준에서 등락하다가 6월말 현재 550원 수준을 유지함.
 - 7월 중순 이후부터 쌀값은 다시 폭등세를 보여 8월 초 현재 1,050원 수준으로 다시 상승함.

나. 인민생활 향상 강조: 식량확보에 주력

- 화폐개혁 이후 더욱 가중된 경제난을 완화하고 주민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2010년 우선 과제로 인민생활 향상이 제기되었음.
 - 2010년 신년공동사설에서 경공업과 농업을 최우선적으로 언급·강조
 - 경공업과 농업을 강조하는 사설 게재: ‘다시 한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며 신심 드높이 앞으로’(2010.1.9, 『로동신문』)
 - 농업성 장학수 국장은 올해 농사의 역점사업은 종자혁명이라 언급 (2010.1.18, 조선중앙방송)

I

II

III

IV

V

VI

VII

-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2차 회의(2010.4.9, 만수대의사당)에서 인민생활을 다시 강조하고, 이를 향상시키는 원칙에서 2010년 예산 편성: 농업(2.5% 증가)·경공업부문(4.5% 증가)의 예산증가를 확대
 - 비록 인민생활을 강조하고 있으나 농업·경공업부문에서의 성과 보다는 당면한 식량조달 문제 및 물가 폭등에 대처해 주민불만을 해소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등장함.
- 김정일은 ‘경제일꾼 협의회’(평양, 2010년 1월 말)에서 상반기 내 국가식량공급 정상화를 지시함.
 - 이에 따라 국방위원회는 모든 무역 기관과 외화별이 기관에 식량 수입 확대 ‘명령’을 하달(2010.2.23, 『연합뉴스』)
 - “북한 당국이 떼기밭을 세대별로 조정해 6~7월에 수확할 수 있는 보리, 밀, 감자를 무조건 재배케 함으로써 춘궁기를 넘기라는 지시를 군인민위원회에 내렸다”고 전함(2010.3.22, 자유북한방송; NHK)
 - 북한 당국은 최근 심각한 식량난을 완화하기 위해 ‘식량수입 책임량’을 달성하지 못하는 외화별이 회사(무역회사)는 군부와 민간을 불문하고 무조건 폐쇄하라고 지시(2010.3.24, 자유북한방송; 『연합뉴스』; 『좋은벗들』)
- 화폐개혁 이후 물가폭등 등으로 어려워진 식량 상황에 대처하고자 중국으로부터 곡물 등의 수입을 확대함.
 - 2010년 상반기(1~6월) 중국으로부터 식량 14만 톤, 비료 10만 톤을 수입
 - 밀가루의 수입은 지난 해 같은 기간 대비 383% 증가

다. 반시장조치의 완화: 시장경제에 대한 좌편향 정치논리 후퇴

- 북한 당국은 2002년부터 추진한 경제개혁에 따른 경제관리의 분권화·시장화가 낭비와 무질서, 나아가 체제불안의 근원이 된다는 판단 아래 2005년부터 계획경제 복원과 시장통제에 몰두해 왔음.
 - 이러한 시장통제는 시장이 ‘국가 돈주머니’(재정)를 빼앗아 갈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충성’의 기반이 지도자가 아니라 시장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지도부의 인식에서 출발함.
 - 김정일은 2008년 “경제개혁의 전면적 철회”를 선언하면서 일부 간부들의 시장 친화적 사고에 “예리한 당적 통제”를 주문(2008. 6.18 담화), 이에 따라 권력층에서는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를 압도하게 되었음.
 - 특히 김정일 와병 이후 서둘러 후계체제를 정비하기 위해 통제일변도 정책의 수요는 급증한 반면, 경제정책에서 실용성·합리성을 고려할 여지는 현저히 위축됨.
 - 김정일 “시장은 자본주의 서식장”으로 규정(2007.8) → 장사할 수 있는 나이 및 무질서한 거래 규제(2007.10) → 시장 개장일 및 거래품목 통제(2008.10) → 시장폐쇄 착수(2009.6) → 화폐개혁(2009.11) → 외화거래 통제(2010.1)
- 그러나 2010년 1월 중순 이후에는 주요 도시의 시장거래를 다시 전면 허용하는 등 반시장조치를 완화하고 있고, 3월부터는 시장 및 주민들의 사(私)경제는 전면 복원된 것으로 알려짐.
 -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시장은 상당히 이전 분위기를 회복(2010.2.4, 『연합뉴스』)

- 북한당국은 시장을 무조건 종전처럼 열고 시장에서의 식량거래를 절대 단속하지 말도록 공안기관에 지시(2010.2.18, 『좋은벗들』)
 - 화폐개혁의 후속조치로 금지했던 외화 교환을 최근 다시 허용 (2010.3.15, NHK)
- 이와 같이 북한은 화폐개혁 이후 경제 난맥상 치유와 민심 수습의 일환으로 시장통제 완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 화폐개혁 이후 추진된 시장통제 강화는 오히려 김정일 후계구도 구축을 위한 경제적 기반 마련 및 지적 쌓기에도 불리한 상황을 초래하였음.
 - 주민들의 불만 해소와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시장통제 완화는 불가피한 선택임.
 - 따라서 2005년부터 시작된 시장경제에 대한 좌편향 정치논리는 화폐개혁과 같은 경제정책 실패로 후퇴하게 되었음.
- 개혁(실리주의) 지향 인물로 알려진 박봉주 전 내각총리가 노동당 제1부부장으로 복권(2010.8.21, 『연합뉴스』)됨으로써 경제에 대한 좌편향 정치논리의 후퇴를 가늠할 수 있음.
- 박봉주는 2003년 9월 총리에 발탁된 후 2002년 ‘7.1경제관리조치’를 앞장서 추진
 - 그러나 당과 군부의 견제로 2006년 6월 자금전용 혐의로 ‘40일 직무 정지’에 처해졌다가 2007년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총리직에서 해임, 순천비날론연합기업소(평남 소재) 지배인(행정책임자)으로 좌천
 - 최근 노동당 경공업부(장성택 부인 김경희가 부장) 2인자의 자리로 복귀

라. 라선시 개방 및 국가개발계획 추진

- 최근 북한 당국은 라선시를 개방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해 왔음.
 - 김정일은 라선시를 방문(2009.12)하여 ‘대외활동의 강화와 대외 시장의 확대’를 주문함.
 -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통해 경제자유무역지대인 라선시를 외자 유치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용이하도록 ‘특별시’로 지정(2010.1.4)하였음.
 - 박철수 대풍그룹 총재는 김정일 위원장이 특별시 승격 시 김수열 라선시장에게 라선을 국가 개발 중심지로 건설하라고 지시했다고 언급(2010.3.25, 『환구시보』; 『연합뉴스』)
 - 2010년 3월에는 임경민 전 무역상을 라선특별시 당 책임비서로 임명하였고,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이 라선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6개월 후에 이곳을 완전히 개방하겠다”고 언급(2010.3.8, 『조선중앙통신』; 『산케이』)

- 또한 북한은 『국가개발은행』을 설립해 경제개발에 필요한 외자유치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비치고 있음.
 - 국방위원회 결정(2010.1.20)으로 국가개발은행과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 조정위원회를 설립하였음.
 - 국가개발은행은 이사회 1차 회의에서 국방위원회 대표 전일출을 이사장, 재중동포 박철수를 부이사장에 선출함으로써 출범했음(2010.3.10, 『조선중앙통신』)
 -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은 대외경제협력기관으로 국가개발은행에 대한 투자유치 및 자금원천을 보장하는 경제연합체로 활동: 박철수

회장은 국가개발은행 설립을 위한 100억 달러 규모의 외자유치를 추진 중이라고 MBC와의 인터뷰에서 언급

- 북한은 ‘북한 경제인프라구축 10개년계획’을 추진, 올해 평양을 포함한 8개 도시 인프라 개발계획에 착수한다고 발표하였음.
 - 박철수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 총재는 국가예산과는 별도로 ‘북한 경제인프라구축 10년계획’을 발표(2010.3.2, 『연합뉴스』; 『닛케이』)
 - 또한 박철수 총재는 평양과 남포, 라선, 원산 등 8개 도시에 5년간 1,200억 달러 상당의 자금을 투입하는 인프라 개발계획을 올해 착수한다고 발표(2010.4.16, 『교도통신』; 『연합뉴스』)
 - 이러한 작업은 김정일의 측근인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책임자로 있는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이 주도하는 것으로 전해짐.

- 북한은 전방위적인 해외 투자자 모집을 지시하는 등 ‘외자 유치 총동원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짐.
 - 국방위원회 산하에 외자 유치 전담 기구인 ‘룡악산 지도총국’ 신설, 지도총국 산하 집행기관인 ‘령봉경제연합회’는 베이징 등에서 외자 유치를 위해 활동(2010.3.15, 『연합뉴스』)
 - 황금평과 위화도 개발권을 준 것으로 알려진 ‘룡악산지도총국’은 5월에 투자 유치 설명회를 중국에서 열고 적극적인 투자 유치에 나설 계획(4.19, 『연합뉴스』)

마. 북·중 경제협력 가속화: 대중 의존 심화

- 북한은 화폐개혁의 실패를 만회하고자 외자 유치 및 대외개방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이를 위해 북한은 중국에 더욱 밀착, 북·중 경제관계 확대에 치중

- 2009년 북한의 핵실험 이후 다소 소원했던 북·중 관계는 하반기부터 급속히 회복되었고, 양국은 경제협력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음.
 -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방북(2009.10) 시 양국은 다양한 경제협력에 합의
 - 북·중 양국은 「경제원조에 관한 교환문서」, 「경제기술원조협정」, 「교육기관간 교류협약서」, 「소프트웨어 산업분야 교류협조 양해문」, 「중국 관광단체의 조선관광 실현에 관한 양해문」 등에 서명, 신압록강대교 신설, 훈춘-라진항 연결도로 건설, 라진항 부두 개발 등의 인프라 개발에 합의, 신압록강대교 인근 위화도(12.2km²)와 황금평(11.45km²) 지역을 자유무역지대로 개발하기 위해 중국 기업에 50년 임대형식으로 개발권 부여 및 중국은 북한에 2,000만 달러 상당의 식량·에너지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이를 계기로 그동안 북한의 미온적인 태도로 진전을 보지 못했던 북·중 간 대규모 경제협력사업들이 본격적으로 논의 또는 추진되기 시작함.

- 북·중 양국은 2010년에도 고위급 인사들의 상호 방문 및 김정일의 중국 방문을 통해 현안 및 경제협력 문제를 논의하고 있음.

- 2010년 2월 왕자루이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의 김정일 면담, 김계관 외무성 부상의 베이징 방문 시 6자회담 복귀, 평화협정 문제와 더불어 양국 경제협력 문제 논의
 - 김영일 북한 노동당 국제부장이 랴오닝성과 지린성을 방문, 양국 접경지역 경제협력 방안 논의
 - 김정일의 두 차례(2010년 5월과 8월 말) 중국 방문을 통해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경제지원과 협력을 보장받은 것으로 추정됨.
- 북한의 최근 긴밀해진 중국과의 관계를 활용해 우선 중국자본 중심으로 외자유치에 노력하고 있음.
- 북한은 일단 중국자본의 투자 유치를 통해서 라선시와 신의주 일대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임.
 - 중국은 창지투(長吉圖) 개발선도구 계획과 연계해 북한 라진항 사용권 획득으로 동북 3성 물류를 태평양으로 운송할 수 있는 동해 출루권 확보
- 북·중 교역규모는 2010년 1~6월 지난 해 같은 기간 대비 16.8% 증가해 북한의 대중 의존이 심화되었음.
- 중국 해관통계에 따르면 2000년 1~6월 북·중 무역규모는 12.9억 달러, 이 중 북한의 대중 수출은 3.5억 달러로 1.1% 감소한 반면 대중 수입은 9.4억 달러로 25.2% 증가
 - 이에 따라 북한의 대중 무역적자는 상반기에만 5.9억 달러로 지난 해 같은 기간 4억 달러에 비해 48.5% 급증
 - 상반기 대중 주요 수입품목은 식량 14만 톤, 원유 30만 톤, 비료 10만 톤 등이고, 이 중 밀가루는 작년 동기 대비 383% 급증했고

- 전화 및 전신기기도 381%나 폭발적으로 증가
- 이런 대중 수입의 급증은 북한의 식량난과 함께 주요 물자의 단가 상승에 기인
 -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가 갈수록 심화되는 원인은 남북관계 경색(5.24 조치 포함)으로 남북교역이 거의 중단되고, 핵실험 이후 일본과의 교역이 거의 중단되면서 북한이 필요한 물자를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북한과 중국은 라선지역 및 인접 중국 지역을 연계 개발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훈춘(琿春)시는 “조만간 훈춘-라진항 통로가 열리고 중국의 라진항 이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힘 (2010.1.15, 『연합뉴스』)
 -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투먼(圖們)시는 북한과 투먼-청진항 구간 철도 보수에 합의, 4월부터 보수 작업 개시 예정(2010.1.17, 『연합뉴스』)
 - 지린(吉林)성은 라진항 10년간 사용권을 획득하였고 10년 추가 협상 진행 중이라고 리룡시(李龍熙) 지린성 연변조선족자치주 당 위원회 부서기가 2010년 3월 7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공개(2010.3.8, 『연합뉴스』)
 -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룡징(龍井)시가 북한 청진과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건설키로 하는 등 동해 진출을 위한 국제물류통로 개척 추진(2010.4.9, 『長春日報』; 『연합뉴스』)
 - 라진항의 배호철 항장은 5월 19일 훈춘(琿春)시를 방문, 강호권 훈춘시장과 라진항 개발 관련 경험 논의(2010.5.21, 『연합뉴스』)

- 동시에 북한과 중국은 신압록강대교 건설을 비롯한 신의주 및 인근 지역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음.
 - 북한은 위화도와 황금평을 자유무역지구로 개발하기 위해 중국의 2개 기업에 각각 50년 임대 형식으로 개발권을 부여(2010.2.23, 『연합뉴스』)
 -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의 방북 당시 북한과 중국이 합의한 신압록강대교는 10월 착공될 전망(2010.2.25, 『연합뉴스』), 전인대 대표인 자오렌성(趙連生) 단둥시장도 10월 착공 언급(2010.3.7, 『차이나데일리』)
 - 북한과 중국 지린성(吉林省) 지안시(集安市)는 합작으로 압록강 상류인 임토와 문악 등 2개의 수력발전소 건설 착공식(2010.3.31, 집안시) 진행(2010.4.1, 『교도통신』)

- 또한 북한과 중국은 북한 관광을 위해 다양한 상품 개발 및 통행 편의를 위해 협력하고 있음.
 - 연변조선족자치주는 훈춘에서 북한 나진과 평양, 판문점에 이르는 새로운 관광코스 개발계획 발표(2010.2.12, 『연합뉴스』)
 - 투먼(圖門)시 외사관광국 리창싌(李昌勛) 국장은 북한 당국과 합의 아래 2개 관광 노선에서 사업을 실시 중(2010.4.9, 『東亞經貿新聞』; 『연합뉴스』)
 - 중국의 북한 단체관광이 4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2010.4.16, 조선중앙방송; 『조선중앙통신』)
 - 중국 고려여행사는 8월 7일 첫 함흥 관광에 나설 관광객 모집(2010.4.3, 『연합뉴스』)
 - 북한 조선관광사 엔지대표처는 4월 13일부터 엔지에서 비자 발급

개시(2010.4.26, 『吉林日報』)

- 지린(吉林)성 바이산(白山)시 창바이(長白)조선족자치현이 5월 1일부터 북한 변경관광을 위한 통행증 발급 시작(2010.5.9, 『吉林新聞』; 『연합뉴스』)

4. 전망 및 고려사항

- 북한은 올해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주민 생활 안정과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임.
 - 화폐개혁 이후 악화된 식량사정을 해소하기 위해 최소한 가을 추수기 이전까지는 중국으로부터의 식량 확보에 주력할 것임.
 - 김정일의 8월 말 방중으로 중국으로부터의 식량을 포함한 경제적 지원이 예상되지만 수해로 인한 작황 전망도 좋지 않기 때문에 쌀 등 곡물가격은 불안정한 가운데 상승이 예상됨.
 - 식량수급의 불안정 및 물가 폭등을 야기하는 시장통제와 같은 반시장적조치는 사라지고 시장거래는 허용하지만, 2002년 ‘7.1 조치’ 이후 취해진 시장지향적 개혁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외부세계로부터의 지원이 거의 중단된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거래가 활성화된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생활은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대외경제부문에서는 중국과의 경험 강화에 주력할 것이며, 라선시 개방 확대와 이미 발표된 국가개발계획 추진을 통해 외자유치에 나설 것임.
 - 북·중무역, 중국의 대북 투자는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의 창지투(長吉圖) 개발계획과 북한의 라선지역을 연계한

I

II

III

IV

V

VI

VII

- 북·중 접경지역 개발 및 북한 내 인프라 건설은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진전이 예상된다.
- 그러나 북한의 국가개발계획 추진을 위한 외자유치 계획에는 중국 이외 어느 국가도 동참할 수 없는 상황임.
 - 특히 미국이 북한의 불법 해외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북제재를 실시하고 있어 국가개발계획 자금조달 창구인 대풍그룹을 통한 외자유치는 거의 불가능함.
- 최근 북·중관계 밀착에 따라 향후 예상되는 북한경제의 지나친 구조적 대중국 의존 현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중 경제협력 강화, 한·일협력 등 우회적인 방법을 구사해야 할 것임.
- 중국의 동북 3성 개발계획에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
 -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두고 중국과의 경쟁을 지양하고 중국과 협력, 동반하는 대북 투자진출 방안을 모색함.
 - 대북 경험과 관련 중국 당국과 논의하기 위한 공식·비공식 협의 채널 구축을 추진함.
 - 남북경협을 남북관계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적 차원에서 탄력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

V. 북한의 핵개발과 일본의 대응

다케사다 히데시(武貞秀士)
(일본방위연구소 총괄연구관)

1.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 북한은 장기간에 걸쳐 탄도미사일과 플루토늄형 핵무기를 개발해 왔음.
- 1950년대 이후, 구소련의 연구소에 원자로 기술 연구자를 파견하여, 원자력 발전의 노하우를 취득함.
 - 중국에도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기술 제공을 타진함.
- 1970년대 이후, 중국, 구소련, 이집트, 파키스탄, 이란과의 협력을 계속하면서, 탄도미사일과 핵개발을 지속해 왔음.
- 1993년 로동미사일 실험, 1998년 ‘대포동 1호’, 2006년과 2009년에 ‘대포동 2호’의 실험을 행함.
- 2006년 10월 제1차 핵실험, 2009년 제2차 핵실험(2009.5.25)
- 현재,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선언하고, 핵 사용의 가능성을 시사하였으며, 핵무기의 숫적 증가를 언급하기 시작하였음.
-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할 때 추구한 전략적 목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음.

I

II

III

IV

V

VI

VII

가. 북한은 대량살상무기의 개발을 미국과의 협의를 진전시키
기 위한 계기로 삼으려고 함.

○ 2010년 4월 21일 북한 외무성은 『조선반도와 핵』이라는 비망록을 발표

- “우리는 다른 핵보유국들과 평등한 입장에서 국제적인 핵전파방지와 핵물질의 안전관리노력에 합세할 용의가 있다. 우리는 필요한 만큼 핵무기를 생산할 것이지만 핵군비경쟁에 참가하거나 핵무기를 필요이상으로 과잉생산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핵보유국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국제적인 핵군축노력에 참가할 것이다”고 언급함.

→ 미국이 주도하는 핵확산방지체제(NPT)의 강화를 의식한 내용

- “조선반도에 공고한 평화체제를 마련하고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공화국정부의 입장은 불변하다. 비핵화의 실현은 신뢰조성을 필요로 하고 있다. 아직도 정전상태에 있는 조선반도에서 평화협정이 빨리 체결될수록 비핵화에 필요한 신뢰가 조속히 조성될 것이다”고 언급함.

→ ‘미국의 핵에 대항하기 위한 북한 핵, 한반도의 균형유지, 평화협정의 체결’ 등을 주장한 부분은 미·북관계의 정상화와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한 것임.

→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전략적으로 고려한 핵무기 개발임을 인정하고 있음.

나. 북한은 대량살상무기를 한국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에 대한 외국세력의 지배를 거부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음.

- 북한 외무성의 비망록에 의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의 사명은 조선반도와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의 기간에 나라와 민족에 대한 침략과 공격을 억제, 격퇴하는 데 있다”고 언급하고 있음.
 - 북한이 한반도에서의 ‘국가’라고 부르는 지역은, 헌법이나 로동당 규약상, 남북한을 포함한 지역이므로, ‘국가와 민족의 남쪽 부분인 한국을 점령 상태에서 해방하기 위함’이라는 의미가 내재되어 있음.
 - 이는 북한 핵무기의 사명은 ‘미군을 격퇴시켜 통일을 달성하고 유지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시사함.

 - 북한이 “핵보유국과 야합하여 우리를 반대하는 침략이나 공격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한 비핵국가들에 대하여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는 정책을 변함없이 견지하고 있다”고 언급한 부분은, 경우에 따라 미국의 동맹국에 핵 선제공격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함.
 - 북한은 2009년 3월 일본이 미사일 방위(MD)를 운용할 경우,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보도를 했는데, 이번 비망록에도 ‘핵 선제공격’을 긍정적으로 시사함.
-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어떤 계기에서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I
II
III
IV
V
VI
VII

- 1990년대, 북한체제의 붕괴 가능성이 있을 때, 체제보장의 수단으로서 대량살상무기의 개발을 결정했다는 설명이 있음.
- 또, 사용 가능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이라크가 미국의 공격을 받는 것을 보고, 북한이 핵개발에 박차를 가했다는 설명이 있음.
- 그러나 비망록은 “조선반도가 핵화된 경위와 근원부터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음.
 - 북한이 미국의 핵무기 존재에 대해 인식한 것은 1950년 한국전쟁 때부터임.
 - 북한이 “남은 최후의 선택은 ‘핵에는 핵으로’ 대항할 뿐이다”고 회고한 것은, 핵무기 개발의 동기는 한국전쟁에서부터라고 시사하는 것임.

2. 북한의 핵 논리

- 어떤 국가든 국가적 차원의 전략 없이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음. 이란의 우라늄 농축 활동이 핵무기 개발의 우려를 심화시켰지만, 이란의 핵무기 개발 계획이 실현되려면, 중동지역 내의 정치역학, 미국에 대한 전략을 고려해야 함.
- 핵개발의 의욕이 있는 국가나 개발을 포기한 국가는, 각각의 전략을 가지고 개발을 행하거나, 핵계획을 포기하였음.
 - 미국의 지원 약속을 받고 핵을 포기한 리비아는 ‘핵 논리’보다 체제 보장 수단으로써 핵개발 계획을 가졌을 것

- 인도와 파키스탄은 상호 핵 균형이 이루어지면, 안정된 핵이 된다는 ‘공통의 인식’이 있었음. 즉, 양국에는 핵전략이 있었고, ‘현상타파적 핵’이 아니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커다란 쟁점이 되지 않았음.

□ 북한의 경우, 국가와 민족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현상타파적 핵’임.

- 통일정책과 결부된 핵무기 개발

○ 리영호 북한군 총참모장은 2009년 4월 24일, ‘조선인민군 창건 78돐 경축 중앙보고대회’에서 연설을 통하여 “핵억지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침략의 아성을 가루로 만들어 날려보낸다”고 경고하면서, 한국 이명박 정권을 “조국통일의 적”이라고 비판하였는데, 이는 북한 핵이 한반도 통일을 의식한 핵무기임을 시사함.

○ 북한의, “핵억지력의 강화를 피하면서 ‘강성대국’의 실현을 추구하고, 통일의 슬로건을 계속해서 내걸면서, 통상전력의 실천적 훈련과 강화를 도모한다”는 자세로부터 ‘통일정책과 결부된 핵전략’의 존재가 부상함.

□ 천안함 사건이 2010년 3월에 발발하였지만, 북한은 2009년 4월 이후, 한국을 포함하여 대외적으로 강경한 자세를 취하였음.

○ 2010년 1월, 북한은 육해공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한국에서의 전투를 상정한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모습을 세계에 송신함.

I
II
III
IV
V
VI
VII

- 서해 5도 주변 해역에서의 사격훈련에 의한 긴장, 비무장지대에
서의 긴장상태가 보도
- 장성택 당 행정부장·오극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역할 증대와 병
행하여 대외적인 강경자세가 두드러짐.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상태와 결부된 북한 지도체제의 변화
가 생긴 것은 아닌가?
-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의 개발이 장기 전략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장
래 주한 미군이 철수하고, 미·북 평화조약이 체결되고, 북한이 대
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을 완료한다면, 남북의 군사적 긴장은 높아
질 것임.
-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을 완료해서 대미 억지력을 완성했
다고 판단할 때, 미군의 개입의사가 흔들릴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
지면,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의 가능성이 나타날 것임.
- 북한의 통상전력이 한국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데 충분하다고 할
수 없지만, 대량살상무기의 개발 기술은 어떠한가?
 - 군사기술력이 완벽하지 않지만, 외국과의 교류에 의해 탄도미사
일의 유도장치, 액체연료의 연료계통 기술, 고체연료기술, 탄도미
사일 본체의 합금 기술, 2단계·3단계 분리기술의 일부는 과제를
극복하고 있는 중이 아닐까?
- 2006년 7월의 대포동 2호의 실패로부터 2년 8개월 후, 북한이 대포동
2호 미사일 실험에서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두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3. 북한의 대량살상무기가 노리는 것

북한의 핵무기는 한국, 일본, 미국 어느 곳을 노리고 있는가?

해석 1: 한국을 노림.

- 일본, 미국이 아님.

○ 이유 1: 북한이 일본을 노리면, 미국이 미·일 안보조약에 근거하여 북한을 공격함.

- 북한이 이를 알기 때문에, 일본을 공격할 수 없음.

- 북한은 미국을 공격할 능력이 없음.

○ 이유 2: 북한이 미국을 공격하면, 미국은 평양을 공격할 것

- 북한은 이를 알기 때문에 미국, 주일미군, 주한미군을 공격할 수 없음.

○ 해석의 약점

-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면, 미국은 한·미 안보조약에 근거하여 북한을 공격할 것

- 따라서, 한국이 공격을 받는데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본이 공격을 받는데 미국이 북한을 공격한다는 것과 정합성이 없음.

해석 2: 일본을 노림.

- 한국, 미국이 아님.

I

II

III

IV

V

VI

VII

- 이유
 - 한국은 동족이기 때문에 공격하지 않고, 미국은 강대한 군사력 때문에 공격을 할 수 없음.
 - 반면, 일본은 동족도 아니고, 미국에 비해 공격하기 쉬움.

- 이유의 약점
 - 미·일 안보조약이 기능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해석

- 해석 3: 미국을 노림.
 - 한국, 일본보다 개연성이 높음.

- 이유 1: 일본은 미·일 안보조약이 있고, 평양이 이를 알기 때문에 공격할 구실이 없음.

- 이유 2: 한국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축적해 온 남북교류의 실적이 있고, 한국의 여론은 북한에 동정적으로 되어 왔음.
 - 북한은 이를 간단하게 버리지 않을 것
 - ‘한국을 우군으로 삼으면서, 미국과 대결할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생각

- 이유 3: 미국과의 대결 시, 대량살상무기는 불가결함.
 - 대량살상무기는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할 수 있음’을 과시하여 미국의 한반도 개입을 저지하기 위한 ‘억지력’임.

- 이유의 약점
 -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정상화, 평화조약체결이 목표임.
 - 북한은 미국과의 전쟁이 승산이 없음을 잘 알고 있음.
 - 한국전쟁의 경험이 북한 군사전략의 출발점임.
 - 따라서, 대량살상무기의 목표에 미국을 두는 것은 무리임.
 - 북한 고위직 인사는 “미국과 북한은 미국과 이스라엘과 같은 관계가 되어야 한다”라고까지 발언

4. 통상전력과 관계

- 북한의 군사력을 살펴보면, 북한은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실험을 계속해 오면서 통상전력을 강화하였음.
 - 북한은 2010년 10월, 육해공의 통합연습을 실시하였고, 신형 전차, 야포의 수를 증가시켜 왔음.
- 북한이 2010년 3월, 잠수정의 어뢰를 사용하여 한국의 천안함을 공격한 이유는 무엇인가?
 - 군사적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이 중요
- 북한은 강성대국의 기치를 들고 군사적 수단을 통해 국위를 선양해 왔고, 김정일과 국방위원회는 한반도에서 미국의 축출과 더불어 통일을 추구해 왔음.
-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음.

I

II

III

IV

V

VI

VII

가. 과거 북방한계선(NLL) 남측에서 3차례 충돌하면서 북한은 2차례 타격을 받았음.

- 1999년 6월, 한국과 북한의 함정이 충돌하여 북한 어뢰정이 침몰,
- 2002년 6월, 한국의 고속정 1척이 침몰, 5명이 사망 및 행방불명,
- 2009년 11월 10일, 북한의 경비정이 타격을 입음.

- 이후, 북한은 복수의 기회를 검토하기 시작
 - 잠수정의 어뢰 공격은 군사적으로 성공률이 높음.
 - 서해는 수심이 낮기 때문에 130톤급 잠수정이면 잠수하여 침투하기 어려움.

나. 한국 해군의 서해지역에서의 방어 능력이 충분하지 못함.

- 한국은 소말리아에 어뢰 탐지 능력이 있는 구축함을 파견했기 때문에 대잠 능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천안함이 북방한계선(NLL) 경비를 하게 됨.
- 북한은 이를 파악하고 공격함.
- 한국 국방부의 고위인사가 서해에서 북한 잠수정의 공격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를 공표하였지만, 잠수정 공격에 대한 대처는 아님.
 - 북한 잠수정의 70~80%가 동해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서해지역에서 불시에 감행되는 어뢰 공격을 상정하지 못하였음.
- 한국해군의 현대화 계획이 일본을 의식하여 ‘대양해군론’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잠수정 및 경비정에 대한 대책을 염두에 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북한은 숙지함.

**다. 한국의 해군함정이 북방한계선(NLL) 근처에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해주 해군기지나 잠수정 기지 등에 접근이 가능함.**

- 따라서, 북한은 해주기지의 취약성을 해소하는 것이 과제
 - 북한은 이 지역의 긴장을 높여 북방한계선(NLL)의 재검토를 전략적으로 노림.

라. 북한의 핵전략과 관련이 있음.

- 북한은 2009년 4월, 탄도미사일 ‘대포동 2호’의 발사 실험을 했고, 비행거리 3,200km 이상에 성공함.
- 북한은 이어 동년 5월에 제2차 핵실험을 감행하여 대량살상무기의 개발에 자신을 가지게 되었고, 장차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하여 미국의 핵무기를 억제하려고 함.
- 아울러, 북한은 주한미군의 철수를 재촉하여 한국군과의 통상무기 전투에서의 승리를 추구함.
 - 북한은 잠수함, 초계정 등 통상전력을 강화할 시기가 왔다고 판단, 2009년 말 해군훈련을 강화, 2010년 1월에 육해공 통합연습을 실시
 - 즉, 한국과의 통상전 대비 시작

마. 북방한계선(NLL)의 무력화와 서울 공격

- 북방한계선(NLL)이 무력화되면, 북한 해군의 함정이 서해에서 인천

I
II
III
IV
V
VI
VII

접근이 가능하고, 서울이 북한 해군함정의 포의 사정거리에 들어 옴.

- 북한 육군의 포에 의한 서울 공격은 준비단계에서부터 미국에 탐지되어 파괴될 가능성이 있음.
- 북한 서해함대의 함정이 황해를 자유롭게 왕래하게 되면, 북한은 해상으로부터 서울 공격이 가능함.

바. 북한 잠수정의 스텔스 능력

- 북한은 고무·플라스틱 등을 사용하여 레이더에 포착되기 어려운 잠수정의 스텔스 능력을 실험했을 가능성이 있음.
- 천안함을 공격한 연어급 잠수정은 수출용이고, 야간 투시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스텔스 능력이 있음.
 - 북한과 이란이 보유한 스텔스 기술은 진일보하고 있고, 그 능력을 테스트하려는 목적도 내포되어 있음.

5. 일본의 대응

- 한반도의 안정과 전쟁 방지, 핵을 사용한 테러 억제,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방지, 안정된 국제사회의 실현 등을 위해 일본은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 것인가?

가. 핵확산 방지

- 북한의 핵확산 방지를 위해 북한과 당·군·경제 등의 분야에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함.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을 볼 때, 중국이 북한 경제발전에 핵심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음.
- 북한의 군사능력 향상이 동북아시아의 안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식을 중국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함.
 - 중국은 핵안보 정상회의(Nuclear Summit)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나. 제2차 핵안보 정상회의의 주요 과제

- 2012년 제2차 핵안보 정상회의가 한국에서 개최되는데, 현재 국제사회의 관심 사항을 생각해 보면, 핵 테러에 대한 대처뿐 아니라, 대량살상무기의 기술이나 물질의 확산방지, 중동과 동북아시아 간의 대량살상무기 개발협력의 유무 등이 주요한 의제가 될 수 있음.
- 일본, 미국, 한국, 중국, 유럽 등은 핵무기의 기술 확산을 우려하고 있음.
 - 핵확산 문제의 대처에 대해서는 아시아와 유럽이 상호 협력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함.

I

II

III

IV

V

VI

VII

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문제에 대한 장기적 시각에서의 접근

- 일본, 한국, 미국은 장기적 시각에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대처하는 안보 및 외교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의 핵 개발 프로세스, 핵 관련 교섭의 경위, 북한의 공식보도 등을 고려해 보면, 북한의 핵무기 개발문제에 대해 장기적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음.

- 북한의 핵개발 및 통상전력의 훈련은, 북한의 미·북 평화협정안이나 정전 협정의 해체 제안 등과 일체(一體)된 대전략의 일부임.
 - 이 점을 고려해 보면, 이란과 북한의 군사협력관계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음.

- 북한의 핵은 대미 억지력을 위한 것이지만, ‘민족통일’이라는 최종 목표를 향한 중요한 중간점임.
 - 따라서, 북한은 중유, 식량, 체제보증 등의 담보에도 불구하고 핵 포기라는 전략적 결단을 하지 않았음.
 - 여러 가지 논의 가운데 중요함.

참고자료

- 북한의 핵무기, 생화학무기, 탄도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와 관련, 『2010년도 방위백서』의 ‘북한 관련 부분’을 참고자료로 첨부했음.
-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해서는 핵무기 계획 이외에도, 생화학무기의 능력에 대해서도 지적되고 있음.
- 북한의 핵문제는 일본의 안전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일 뿐 아니라, 대량살상무기의 비확산이라는 관점에서 국제사회의 중요한 문제이기도 함.
- 특히,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의 운반수단인 탄도미사일을 증강시키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북한의 핵실험은 일본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협이고, 동북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것임.
 - 북한의 핵실험을 절대 용인할 수 없음.
- 그리고, 북한은 기존의 탄도미사일의 배치, 사거리의 장거리화, 고체연료화 등을 연구개발하고 있음.
 - 따라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문제도 핵문제와 함께 아시아·태평양 지역뿐 아니라, 국제사회에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음.

1. 핵무기

가.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대응

- 북한의 핵개발 문제에 대해서는 이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 또한 2003년 8월부터는 6자 회담이 개최되고 있음.
- 2005년의 제4차 6자회담에서 북한이 “모든 핵무기 및 기존의 핵계획”을 포기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공동성명이 처음으로 채택되었음.
- 그러나 그후 북한은 6자회담의 참가를 연기함과 더불어 2006년에 7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고 핵실험 실시를 발표함.
- 이와 같은 북한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에 대해 국제사회는 유엔 안보리 결의 제1695호 및 제1718호를 채택하는 등 대북 제재조치를 취함.
- 따라서, 북한은 2006년 12월 제5차 6자회담에 복귀하고, 2007년 2월에 제4차 6자회담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 조치」에 합의함.
 - 이 합의에 근거, 북한은 영변 핵시설의 활동정지 등 수락
- 그리고, 2007년 10월에 제6차 6자회담이 개최되어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가 발표되었고, 북한은 2007년 말까지

영변 핵시설의 불능화를 완료하였으며, “모든 핵시설의 완전하고도 정확한 신고”를 행할 것이 합의됨.

- 그러나 이 합의 내용의 이행은 완료되지 못함.

- 북한은 2009년 4월의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비난하는 유엔 안보리 의장의 성명에 대해 6자회담의 불참을 시사함과 더불어 폐연료봉의 재처리 개시를 표명함.

- 아울러, 유엔 안보리가 사죄하지 않을 경우,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포함한 조치를 취할 것을 표명하였고,

- 동년 5월에는 제2차 핵실험의 실시를 발표함.

- 이에 대해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실험 실시를 강력하게 비난하고, 2009년 6월에 북한에 대해 추가적 제재 조치를 결정한 유엔 안보리 결의 제1874호를 채택함.

- 북한은 새롭게 추출된 플루토늄의 전량을 무기화하고, 우라늄 농축 작업에 착수할 것을 표명함.

- 북한은 2009년 9월 우라늄 농축 실험을 성공리에 이행하고, 완료단계에 진입함.

- 동년 11월, “사용된 연료봉의 재처리를 8월 말까지 성공리에 끝내었고, 추출된 플루토늄의 무기화에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발표함.

- 이처럼, 북한은 핵개발의 진전을 강조하는 한편, 미국과의 협의가

I

II

III

IV

V

VI

VII

진전되는 상황에 따라 6자회담을 포함한 다자협약에 참가할 가능성을 시사함.

- 미국의 보즈워스 대북 정책 특별대표가 오바마 정권의 고위 인사로서는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함.

○ 이상과 같은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대응에 대해 두 가지 견해가 있음.

- 첫째, 의도적으로 긴장을 고조시켜 무엇인가를 담보로 확보하려는 소위 ‘벼랑 끝 전술’의 구사

- 둘째, 북한의 최종적인 목적은 핵무기의 보유에 의한 억지력의 확보

○ 북한의 궁극적 목표가 체제유지라는 관점에서 보면, 상기 두 가지의 견해는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님.

○ 북한 핵문제의 해결에는 한·미·일의 연대가 무엇보다도 중요함.

- 아울러, 6자회담의 참가국인 중국·러시아, 유엔,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와 같은 국제기구의 역할도 중요함.

나. 핵무기 계획의 현황

○ 북한은 지극히 폐쇄적 체제이기 때문에 핵무기 계획의 상세한 부분은 불분명한 점이 많음.

- 과거의 핵개발 상황이 해명되어 있지 않은 것에 더해, 일련의 북한의 언동 등을 고려해 보면, 북한의 핵무기 계획이 상당히 진전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북한이 2006년에 이어 2009년 5월에도 핵실험의 실시를 발표한 것은 북한의 핵무기 계획이 한층 진전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시사함.
-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대량살상무기의 운반수단인 탄도미사일 능력의 증강과 함께 고려하면, 북한의 핵실험은 일본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협이고, 동북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용인할 수 없는 것임.
- 일반적으로 핵무기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하기 위해 소형화하는 데에는 상당한 기술력이 필요함.
-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중국이 1960년대까지 이와 같은 소형화 기술을 획득했다는 것을 고려해 보면, 북한이 비교적 단기간에 핵무기의 소형화·탄두화의 실현을 이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관련 동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2. 생화학 무기

- 북한의 생화학 무기의 관한 상세한 사항은 매우 불투명함.
 - 북한이 지극히 폐쇄적인 체제일 뿐 아니라,
 - 생화학 무기의 제조에 필요한 물자·기재·기술의 상당 부분이 민군 양용이기 때문에 위장이 용이하기 때문

I
II
III
IV
V
VI
VII

- 북한은 1987년 「생물무기 금지조약」을 비준했지만, 여전히 일정한 생산기반을 보유하고 있음.
- 그리고 북한은 「화학무기 금지조약」에 가입하지 않고, 화학제의 생산이 가능한 복수의 시설을 유지하고 있고, 이미 상당량의 화학제 등을 보유하고 있음.

3. 탄도미사일

- 북한의 탄도미사일 역시 폐쇄적 체제로 인해 불분명한 점이 많지만, 북한은 군사력의 강화뿐 아니라, 정치외교적 관점 및 외화 획득의 관점에서 탄도미사일의 개발에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음.

가. 스커드미사일

- 198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은 스커드-B, 사정거리를 늘린 스커드-C를 생산·배치하였고, 스커드-B·C 미사일을 중동 여러 나라에 수출함.

나. 로동미사일

- 북한은 1990년대까지 로동미사일 등 사정거리가 긴 미사일 개발에 착수하였음.
- 배치가 진전되고 있는 로동미사일은 단단식(單段式)의 액체연료 추진방식의 탄도미사일임.

- 사정거리 1,300km,
 - 일본열도 거의 전역이 사정권 내
- 1993년에 동해를 향해 발사된 미사일은 로동미사일일 가능성이 높음.
 - 2006년 7월 북한의 남동부 지역에서 발사된 6발의 탄도미사일은 스킨드미사일 및 로동미사일
 - 2009년 7월 북한의 남동부 같은 지역에서 발사된 7발의 탄도미사일은 스킨드미사일 또는 로동미사일로 추정
 - 로동미사일의 성능은 상세히 알 수 없지만, 스킨드미사일의 기술을 기반으로 한 것을 고려해 보면, 특정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수준의 높은 정밀도는 갖추지 있지 못한 것으로 보임.
 - 폐쇄적인 북한체제에 의한 군사적 의도의 파악 곤란, 전 국토에 걸친 군사 시설의 지하화, 스킨드미사일처럼 로동미사일의 차량 발사대(Transporter-Erector-Launcher, TEL)에 탑재되어 이동하고 운영되는 점을 고려해 보면, 로동미사일의 발사에 대해 상세한 발사 위치나 시간 등 구체적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다. 대포동 1호 미사일

- 북한은 사정거리 약 1,500km 이상인 대포동 1호 미사일을 개발해 왔음.

I

II

III

IV

V

VI

V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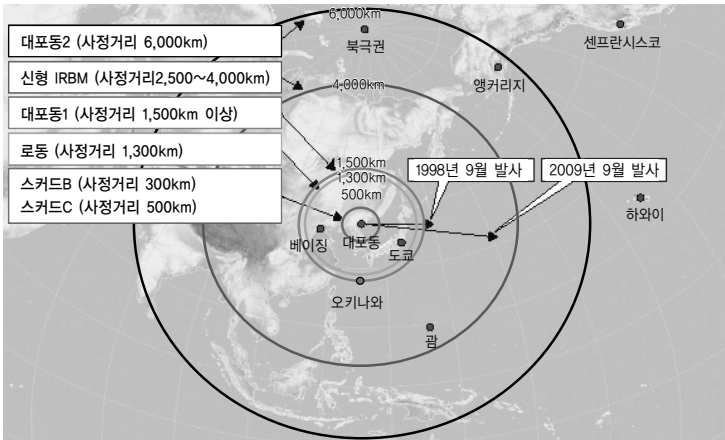
- 대포동 1호 미사일은 로동미사일을 1단계, 스커드미사일을 2단계에 이용한 2단식의 액체연료 추진 방식의 탄도미사일임.
 - 1998년에 발사된 탄도미사일의 기초
- 최근, 북한이 장거리 대포동 2호 미사일의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보면, 대포동 1호는 대포동 2호를 개발하기 위한 과도기의 미사일일 가능성이 있음.

라. 대포동 2호 미사일

- 대포동 2호 미사일은 신형 추진체를 1단계, 로동미사일을 2단계에 활용한 2단식 미사일임.
 - 사정거리 6,000km
- 대포동 2호 미사일은 2006년 7월에 북한의 동북부 연안지역에서 발사된 후, 1단계 분리도 되지 않은 채 공중에서 폭발하였고, 발사지점 근처에 떨어짐.
- 그리고 신형 대포동 2호 또는 개량형 미사일이 2009년 4월에 북한의 동북부 연안 지역에서 발사되었는데, 2006년의 대포동 2호 미사일과 비교해 보면, 사정거리가 늘어났다고 추정됨.
 - 일본 상공을 넘어 3,000km 이상 비상(飛翔)한 뒤, 태평양에 떨어짐.
- 북한은 신형 대포동 2호 미사일의 발사를 통하여 추진부의 대형화, 다단계 추진 장치의 분리, 제어 등 소요 기술의 검증에 할 수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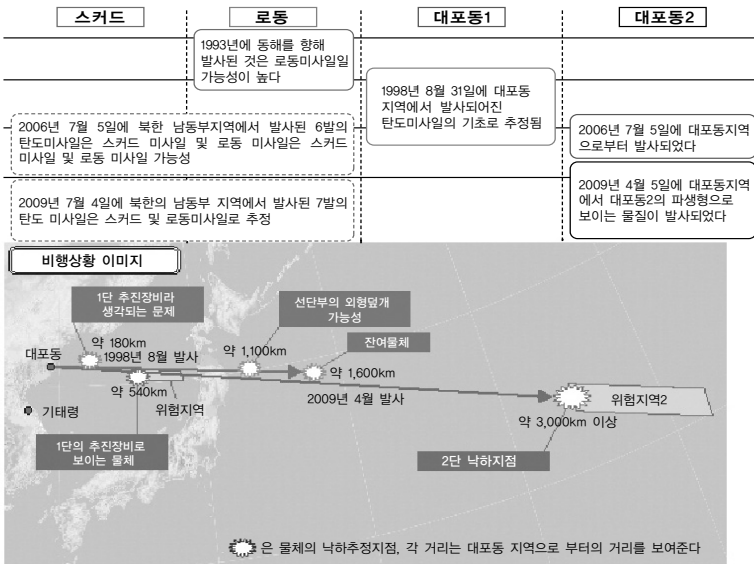
- 아울러, 신형 대포동 2호 장거리 미사일의 실험은 탄도미사일의 사정거리 연장, 탄도 중량의 증가, 명중도의 정밀성의 향상에 기여함.
 - 신형 대포동 2호 장거리 미사일의 발사가 로동미사일 등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탄도미사일의 성능 향상에도 연결될 가능성이 있음.
- 북한은 현재도 이상과 같은 장거리 탄도미사일뿐 아니라,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나 고체연료 추진방식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개발을 추구하고 있을 것임.
- 또, 스커드미사일, 로동미사일 등 기존의 탄도미사일의 경우도 사정거리의 증대 등 개량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 주의해야 할 것
- 북한이 발사실험을 거의 하지 않고 탄도미사일 개발을 급속하게 진전해 온 배경으로, 외부로부터의 각종 자재·기술의 북한 유입 가능성에 대해 고려해야 함.
- 그리고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관련, 북한의 탄도미사일 본체 및 관련 기술의 이전·확산에 대한 지적, 이와 같은 이전·확산에 의해 얻은 이익으로 미사일 개발을 추진하였다는 지적 등이 있음.
 - 로동미사일 본체 및 관련 기술의 이란이나 파키스탄으로의 이전
- 그러므로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는 개발·배치의 동향뿐 아니라, 이전·확산의 관점에서 우려해야 하고, 계속해서 주목해야 함.

●그림 V-1 북한 탄도미사일 사정거리



위 그림은 대포동을 중심으로 각 미사일의 도달가능거리를 원심형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림 V-2 북한에 의한 미사일 발사 상황



Ⅵ. 한·일국교정상화와
북·일관계 재고:
대북정책을 둘러싼
한·일협력의가능성

기미야 타다시(木宮正史)
(도쿄대학 교수)

1. 서론

- 2010년은 1910년 한·일병합 100년이 되는 해임.
 - 병합에 이르는 과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둘러싸고 논의가 전개되어 왔음. 이 점에 관해, 일본 국내에서도 조약 체결이 강제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불법·무효”라는 한국 측의 주장을 받아 들여야 한다고 하는 논의도 있었음.
 - 간 나오토 민주당 정권은 1910년의 한국 병합 자체는 “합법이고 또한 유효하며, 1945년 이후에 무효가 되었다”라고 하는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당시의 일본 정부의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식민지 지배가 한국민의 의사에 반한 것이었다는 점을 수상 담화에서 인정했음.

- 한국 국내의 한·일국교정상화에 대한 평가
 - 한국에서 박정희 대통령 및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는, 비록 인권 탄압, 독재라는 측면에서 비판의 여지는 있지만, 경제발전을 달성하여 북한과의 체제 경쟁에 승리하는 조건을 준비했다고 하는 점에서 다른 역대 정권, 역대 지도자와 비교하여 대체로 높은 평가가 주어지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음.
 - 또한 박정희 정권의 외교정책에서 하나의 큰 성과가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국교정상화 자체에 대해서 반드시 긍정적 평가가 주어지고 있는 것은 아님.

- 2010년 8월의 간 나오토 수상의 담화는 여러가지 입장에서 다른 ‘기대 수준’에 따른 평가가 공존할 수 있음.
 - 무라야마 담화를 따른 것으로 보이는 사죄 내용에 추가해서 1910년을 기점으로 하는 식민지 지배가 한국 국민의 의사에 반한 것이었다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밝힌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한편, 결국 식민지 지배의 “불법이고 또한 무효”라는 법적 효과의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언급이 없었던 것이 비판되었음.
 - 다만 간 수상의 담화가 1910년의 한국 병합이라는 점에 주목한 것이라면, 한국뿐 아니라 북한도 대상으로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관한 언급은 없었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북한의 납치 문제나 핵개발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 일본의 국내 여론을 의식한 것이라는 점은 말할 필요도 없음.

- 1991년에 개시되었고 또한 2000년 북·일 평양선언에 의해서 하나의 전환기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일국교정상화 교섭은 오랫동안 재개되지 않았음.
 - 북·일국교정상화를 달성해야 한다는 국내 여론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음. 북·일국교정상화 교섭은 일본에게도 북한에게도 외교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음.
 - 일본에서는 민주당으로의 정권 교체가 교섭 진전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일부 존재하였지만 북·일관계에 관해서는 자민당 정권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음.
 - 더욱이 민주당 정권 성립 이후, 정책 노선의 변경(迷走)과 참의원 선거에서의 패배가 겹쳐 중의원과 참의원의 여야 세력이 상반됨에 따라 민주당이 분열의 위기를 내포하게 되었음. 이로 인해 정권

기반이 취약하게 된 상황이 초래되면서 북·일국교정상화 교섭에 본격적으로 임할 수 있는 국내적 조건이 마련될 수 없었음.

2. 한·일국교정상화와 북·일국교정상화를 둘러싼 역설

- 한·일병합 100년을 계기로 한·일병합에 이르는 과정의 합법성 논란이 고조되며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가 재검토의 대상이 되었지만, 북·일국교정상화에 관한 언급은 없었음.

- 그 배경에는 한·일국교정상화에 대한 평가와 북·일국교정상화에의 ‘적용’을 둘러싼 다음과 같은 상반된 구조가 존재하기 때문임.
 - 한·일국교정상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측은 북·일국교정상화에 대한 ‘적용’에 소극적인 데 비해, 한·일국교정상화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측은 북·일국교정상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임.

- 전자를 대표하는 논의로서, 부시 정권 시기, 미 국무성의 대북정책의 수립에 관해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또한 미국과의 전략적 관계를 매개로 한·일관계의 변동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한 *Alignment Despite Antagonism*의 저자인 빅터 차(Victor Cha) 조지타운대학교수의 견해를 소개할 수 있음.
 - 그는 조선일보 2004년 9월 3일에 게재한 “해외칼럼: 일·북협상과 한·일협정”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음.

일본 관료들은 장차 체결될 일·북협정이 1965년의 한·일협정을 바

탕으로 할 거라고 말한다. 1965년 한·일협정에는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총 100억 달러쯤에 해당하는 원조와 장기 저리 차관(당시 화폐로 정부 원조 2억 달러, 상업차관 3억 달러)이 수반됐다. 하지만 한·일협정이 오늘날 북·일협정의 바탕이 될 수 있을지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한·일협정은 냉전이 절정에 달했을 당시 동북아시아에 있는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을 연결한다는 의미가 있었다. 일본은 한반도 공산화를 막기 위한 보루(堡壘)로서 한국의 취약한 경제를 강화하기 위해 비정상적으로 많은 경제 원조를 제공했다. …한·일 간엔 역사적 반감이 남아 있고 때때로 해상 갈등도 빚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일본 국민을 납치한 적도, 일본에 직접적인 군사 위협을 가한 적도 없었다.

일·북협정은 전혀 다른 상황에서 이뤄지게 될 것이다. 북한은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과 로동미사일 배치로 일본에 직접적인 군사 위협을 가하고 있다. …그들은 일본 민간인들을 납치했고, 감금한 동안 죽게 내버려 두었다. …오늘날 북한과의 협정은 동맹국과 맺는 게 아니라, 자국 안보를 직접 위협하고 주권을 침범하는 나라이자 이미 100억 달러를 일본에 빚진 나라와 맺는 것이다.

일본 관료들은 남북한에 같은 형식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일본 정부의 의무감 때문에 1965년 한·일협정이 참고할 만하다고 정당화할지도 모른다. 만일 그게 이론적 근거라고 하더라도, 북한에 줄 금액은 한국에 주었던 1965년 화폐 기준 5억 달러를 지금 가치로 환산한 것일 수는 없으며, 그때 화폐로 4,500만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이어야 할 것이다. 이는 1965년 한·일협정에서 일본이 한국에 식민 지배로 인한 재산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향후 10년간 지급기로 했던 금액이다. …일본과 한국, 일본과 북한을 둘러싼 상황은 서로 독자적이다. 일본은 그에 따라 양국을 대우해야 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 관료주의적으로는 편하겠지만 일본 국익에는 손해를 끼치게 될 것이다.

- 1965년의 한·일국교정상화는 냉전 체제하에서 반공의 ‘유사(類似) 동맹’으로서의 한·일 간의 상호협력을 확립한 것이라는 평가가 논의의 전제임.
 - 거기에다 한·일관계와 북·일관계는 차별화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며, 더욱이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이 북한의 변화로 연결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임.
 - 오히려 북·일국교정상화와 거기에 따르는 경제협력이 북한의 군사력 강화나 현 체제의 강화로 연결되므로 환영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함축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됨.
- 빅터 차는 한국의 보수계 신문에는 자주 등장하는 유명인이지만 한·일국교정상화에 관해서 일본이 한국에 비정상적으로 많은 경제원조를 제공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국의 보수나 진보를 막론하고 반론이 예상됨.
- 단지 한·일국교정상화라는 박정희 정권의 불가피한 결단을 평가하는 내용과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관한 신중한 자세만이 한국 보수계의 입장과 공통됨.
 - 게다가 냉전기의 한국이 일본의 한반도정책에 관해서 ‘양다리 외교’, 즉 한국뿐 아니라 북한과도 양다리를 걸친다고 하는 의미로써 일본의 북한 접근을 비판하는 논의에도 서로 통하는 데가 있음.
- 다음으로, 그 반대편에 있는 견해로써, 한국을 대표하는 한국사학자이며, 진보 진영의 원로이기도 한 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의 칼럼 “한·일 조약과 조·일 조약”을 소개할 수 있음. 이는 2000년 3월 27일 한겨레 신문에 게재된 것임.

앞으로 체결될 조·일조약에서는 어떠한 형태로건 일본 제국주의의 강제 지배 사실이 명기되고 사죄가 표시됨으로써 민족해방운동의 정당성이 확립되어야 하며, 그에 따라서 한·일조약도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보면 조·일조약 체결 과정은 한·일조약을 바로잡는 과정이 되어야 하며, 따라서 그것은 남북 분단국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민족 차원의 문제 그것이다.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 일본과 조약을 맺게 됨으로써 역사적 사실을 명시하는 일보다 만약 경제적 추구를 더 앞세우게 된다면, 한·일조약에서와 같은 과오를 남북이 함께 범하는 결과가 되고 말 것이다.

- 이것은 2002년 9월의 북·일 평양선언 이전에 작성된 것이지만, 북·일 평양선언에 대해서 한국 내 일부에서 나타난 ‘염려’, 즉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일본과 조약을 맺게 됨으로써 역사적 사실을 명시하는 일보다 경제적 추구를 더 앞세우게”된 결과, 한·일협정과 같은 방식으로 청구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를 나타낸 것으로서 매우 시사하는 바가 많음.
- 일본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던 한·일국교정상화가 아니라, 본래 있을 수 있는 다른 형태의 북·일국교정상화를 요구하고 있음.
- 북·일국교정상화에 관해서는 한·일국교정상화의 전철을 밟아서 는 안 된다는 것을 북한에도 요구하고 있음.
- “북·일국교정상화로 인해서 한·일국교정상화를 바로잡는다”라는 발상은 일본정부의 입장에서는 용인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현실이었던 역사’를 ‘있어야 할 역사’로 접근시키려고 한 이와 같은 구상은 김영삼 정권 시기 ‘역사 바로세우기’ 정책에 현저하게 나타난 것처럼, 한국에서는 비교적 빈번히 행해지고 있는 것이기도 함.

- 단지, 북한에 대한 일본의 경제협력의 효과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아님. 이것은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의 대북정책에도 공통된 입장임.
 - 이는 미국과 일본의 대북 강경론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면서 한국이 주도하는 대북 포용정책에 미국과 일본이 동조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관여의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으며, 그것이 북한의 공격적 자세를 완화시키고, 한반도에 있어서의 남북 공존을 제도화하며,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체제변화를 유도하여 남북통일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임.
 - 그러한 의미에서, 일본이 북·일국교정상화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여 그렇게 유도해 왔고, 그와는 반대로 대북 강경론에 경도된 일본 정부나 여론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음.

● 표 VI-1 한·일국교정상화와 북·일국교정상화에 대한 평가의 비뚤어진 구조

미래의 북·일국교정상화의 평가	과거의 한·일국교정상화의 평가	
	긍정적	부정적
긍정적	-	강만길
부정적	Victor Cha	-

- 이상과 같이 어떤 의미에서는 양극단에 있다고 생각되는 두 개의 견해이지만 양자 모두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던 한·일국교정상화와 지금부터 있어야 할 북·일국교정상화와는 같은 내용이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기묘한 일치점이 존재함.

- 전자는 한·일국교정상화가 냉전 체제하의 유사동맹관계의 성립을 의미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으며, 현재의 북·일관계는 그러한 조건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달라야 한다고 주장함.
 - 이에 반해 후자는 한·일국교정상화가 탈식민지화라는 측면에서 불충분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북·일국교정상화에 대해서는 그와 같이 불충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함.
- 물론 양 의견으로부터 아무 정책적 합의가 없었다는 것은 아님.
 - 전자는 북·일국교정상화에 수반되는 북·일 간 경제협력이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고 북한의 대응 여하에 달렸다는 신중함을 요구함.
 - 후자는 북·일국교정상화가 “한·일국교정상화를 바로잡는” 것이 되어야 하며, 보다 철저한 식민지 지배의 청산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임.
- 어느 쪽의 논의에도 경청해야 할 부분은 있으나, 이러한 두 개의 논의에서는 한·일국교정상화의 성과를 북·일국교정상화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거기에 따라 북·일관계의 타개를 도모하는 것은 바라기 어려움.
 - 전자는 어떠한 북·일국교정상화를 피하고, 거기에 따르는 새로운 북·일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는지에 관한 현실적 모델이 제시되지 않음.
 - 후자에는 한·일국교정상화가 반면교사라는 점은 있지만, 북·일국교정상화와 거기에 따르는 북·일 협력이 어떠한 것인지에 관한 현실적 모델이 제시되지 않음.

- 그러면 한·일국교정상화는 북·일국교정상화의 현실적 모델이 될 수 없는 것인가? 양자의 논의에서 결정적으로 결여된 부분은 한·일국교정상화로부터 기인한 결과를 북·일 국교정상화를 매개로 새로운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형성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전략적 자세가 아닐까 생각됨.
- 환언하면 대북정책을 둘러싼 한·일의 제휴 가능성 그 자체를 위의 두 가지 논의가 봉쇄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위구함.
 - 한·일국교정상화를 비롯한 한·일관계에서 축적된 경험을 향후의 북·일 국교정상화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북한문제를 둘러싼 한·일 간 제휴를 더 한층 긴밀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함.
 -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그와 같은 한·일 간 제휴를 강화시키기 위한 원동력은 이 두 가지 논의에서는 나올 수 없을 것임.
- 물론 오해가 없도록 사전에 양해를 구해 둘 필요가 있겠지만, 1965년의 한·일국교정상화라는 현실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아님.
- 그 후의 조건의 변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일본 사회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인식의 변화, 한·일의 힘의 균형의 변화 등에 맞게 한·일국교정상화의 ‘보완’이 필요함.
- 반대로 이러한 전략적인 자세를 진행시키기 위해서라도, 한·일의 역사 인식의 문제에 보다 올바르게 정면으로부터 임해야 한다는 논의가 일어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필자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 간 수상의 담화를 전략적인 의미로 평가함.

- 북한 문제를 논의하려고 할 때, 왜 이러한 점을 논의하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이는 북한 문제를 둘러싼 현실적인 문제와 깊게 관련됨. 즉, 남북관계의 당사자가 아닌 일본이 북·일관계나 일본의 대북정책에 대해 한국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명확히 이해하기 어렵고, 그로 인해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것의 근저에는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한·일의 제휴를 방해하는 심리적 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됨.
- 단지 대북정책에 대한 한·일 간 제휴가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면, 특히 이 점을 문제시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름. 그러나 과연 그럴까?
- 이 점에 대해서 이하 북한문제를 둘러싼 문제의 구도를 고찰하여 대북정책을 둘러싼 한·일의 제휴가 왜 필요한가를 분명히 함으로써, 한·일 제휴의 심리적인 저해 요인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를 모색해 보도록 하겠음.

3. 북한의 통미봉남 및 중국 의존에 관하여

- 북한이 ‘통미봉남’ 전략을 선택하는 이유
 - 북한의 외교정책은 1990년대 초반의 남북고위급 회담시기, 2000년 6월의 남북정상회담 시기를 제외하면, 대미관계와 대남관계에 관해서 거의 ‘통미봉남’으로 일관해 왔음.
 - 남북 간의 결정적인 체제 격차를 전제로 하면 무조건적인 남북 간의 교류나 협력이 깊어지는 것은 북한 체제의 위기로 연결됨.
 - 한·미관계의 현상을 여건으로 하면, 북한이 한국은 북·미관계의

범위 내에서 남북관계를 진행시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북관계보다 북·미관계를 우선시키는 것이 북한에게는 남북관계를 보다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한 합리적인 선택이 됨.

- 북·미관계가 기대만큼 진전되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의 경제지원도 믿을 수 없는 경우에는 북한이 유일하게 경제지원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중국임.
 - 비록 중국에의 의존을 강하게 하는 것이 북한에게 최선의 선택은 아니라고 해도, 한국에의 의존을 강하게 하는 것과 비교했을 경우의 ‘차선의 선택’이기 때문임.
- 북한이 ‘우리 민족끼리’라는 이념을 강조해도 이상과 같은 외교의 우선순위를 고려하면, 중국·미국과의 관계가 우선이며, 한국과의 관계는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음.
 - 일본과의 관계 역시 한국과 같은 위치설정인 것과 동시에, 북·일 국교정상화에 수반해서 상당 규모의 경제협력을 확실히 획득할 수 있다고 해도 일본의 취약한 정권 기반이나 국내 여론으로 인해 그것도 쉽게 기대할 수 없음.
 - 북한의 단기적인 체제 유지라는 목표를 전제하고 어느 나라에 의존하고, 어느 나라의 지원을 받아야 하느냐 하는 선택을 해야 될 경우에는 상기와 같은 우선순위가 작용할 것임.
 - 그렇게 생각하면, 비록 한·일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북한에게 우선순위가 낮은 한국, 일본과의 관계개선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됨.
 - 2002년 이후, 일본 국내에서 북·일국교정상화의 필요성을 지지하

I
II
III
IV
V
VI
VII

는 견해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북한의 자세는 ‘좋은 핑계’가 되었을 것임. “북·일국교정상화 교섭이 진행되지 않는 것은 북한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면 좋기 때문임.

-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북한에게 이러한 선택이 과연 타당한 선택일지는 의문임. 물론 이것은 일의적으로는 북한 자신이 판단해야 할 것이지만 북한의 과거의 정책 선택을 고려하면, 북한 자신이 그러한 선택에 충분히 만족하고 있는지 의문이 됨.
 - 우선 과거의 정책에서 봐도 1950년대, 국내의 소련파, 연안파를 숙청해 배제하는 것으로 김일성을 중심으로 하는 만주파의 헤게 모니를 확립했음.
 - 게다가 1961년 중·소와의 사이에 신속히 체결된 우호협력상호원 조 조약은 그 조약 성립 과정의 정치역학에 관해서는 여러가지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북한이 자국에 대한 관여를 중·소 간 경쟁의 구도로 만들었다고 볼 수 있음.
 - 1960년대, 미국과 일본이 협력해서 한국을 지원한 것과 달리 중·소 대립이라는 외적 환경은 한편으로 북한에 대한 한국의 국력 역전을 귀결시키는 요인이 된 것은 부정할 수 없음.
 - 반면 중국과 소련으로 하여금 북한에의 관여를 둘러싸고 경쟁하게 함으로써 중국과 소련이라는 대국에 대한 북한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용했다는 점도 또한 부정할 수 없음.

- 이와 같이, 소련의 위성국인 냉전 체제하의 중동유럽 제국과는 달리, 북한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대신하여 주체사상이라는 독자적

- 인 체제 이념을 개발해서,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에 고집해 왔음.
- 동시대 남북한의 체제 실적이 북한 우위에서 한국 우위로 역전하는 등, 북한의 외교 실적을 과대 평가해야 하는 것이 아닌 것은 물론임.
 - 그러나 중국과 소련이라는 대국의 틈에서, 더욱이 사회주의 대국 간의 대립이 깊어진 가운데 대국의 힘을 이용하면서 한편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율성을 높이는 것을 모색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곤란한 일이었는가를 엿볼 수 있음.
- 그러한 북한이 G2시대의 도래라고 말하고 있을 만큼 중국의 국력이 이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거대하게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와 같이 중국에의 일방적 의존을 강하게 하는 선택을 계속할지는 매우 의문임.
- 게다가 ‘통미봉남’이라는 북한의 전략도 물론 일의적으로는 한국에 흡수되는 것을 경계하여 선택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뿐만 아니라, 중국에의 의존이 너무 강해지지 않게 균형을 잡기 위한 의미가 있다고도 볼 수 있음.
- 실제로 1990년대 초반, 북·일국교정상화 교섭의 개시, 남북 고위급회담의 개시라는 형태로, 동시기에 한·일과의 접근을 시도한 예도 있음.
 - 또한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으로부터 2002년 9월 북·일정상회담과 북·일 평양선언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임. 이 배경에는 한국의 김대중 정권이 북·일 양국에 대해서 북·일관계 개선과 북·일국교정상화 교섭의 재개를 강력히 권유했다는 사실이 있음.

- 북한 외교는 주변 관계국, 특히 일본·미국·한국이 일치단결해 북한에 대응하지 못하도록 “목을 박는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면서도 그러한 전술에서는 양보를 꺼내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오히려, 북한 나름의 관여정책, 바꾸어 말하면 ‘포용정책’의 선택이 있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함.
- 2차례에 걸친 고이즈미 전 총리의 북한 방문에도 불구하고, 주로 납치 문제에 기인하여 싸늘해진 일본의 국내 여론에 의해서 북·일관계가 정체한 것은 북한으로서는 오산이었을 것임.
- 또한 이명박 정권으로의 교체로 인해 한국 정부가 김대중 정권의 대북포용정책, 노무현 정권의 평화번영정책을 재검토한 것은 북한으로서는 그때까지 진행해 온 남북관계의 진전을 재검토하는 계기가 되었음.
- 거기서 새롭게 등장한 미국 오바마 정권에 대해 기대를 걸고, 그것을 흔들기 위해서 2009년 4월과 5월에 걸쳐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실시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북·미관계의 개선에 브레이크를 거는 결과를 가져왔음.
- 그리고 2009년 12월의 화폐개혁 실시로 인해 발생한 경제 혼란이 더해져 경제 측면에서의 대 중국 의존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음.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와 같은 중국 일변도의 의존은 스스로 초래했다기보다는 정책 선택의 실패에서 기인한 것이고, 불가피한 측면이 크다고 생각됨.

- 2010년 5월과 8월부터 9월에 걸쳐 유례 없는 단기간의 2차례 방문, 거기다가, 북한으로서는 미국 내의 ‘얼마 안 되는’ 북한 이해자인 카터 전 대통령의 북한 방문 시기에 맞추어 김정일이 중국을 방문한 것은 천안함 사건에 관한 중국의 대응에 대한 ‘감사’, 후계 체제에의 ‘승인’, 그리고 추가하여 중국에 대한 배려의 자세를 나타냈다는 의미가 있음.

○ 그러나 이와 같이, 일단 북한은 중국 의존에 경사한 진자이지만, 조만간에 반대방향으로 쏠리는 일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 때의 기회를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가 관건임.

- 실제로, 2010년 9월에 들어가서, 북한은 나포한 한국 어민을 송환하고, 이산가족 상봉사업의 재개를 제안하는 등, 한국에 대한 유화적 자세를 나타내기 시작하고 있음.

4. 교착하는 북한 문제 타개를 위한 한·일협력의 가능성

○ 북한의 폭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절대적인 영향하에 두는 편이 안전하다는 전제에 근거하면, 북한이 중국 의존을 더 한층 강화하게 하는 것은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닐지도 모름.

- 한때, 미국 내부에서도 6자회담에서의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고, 이러한 입장을 취하려고 한 흔적도 있음. 또한 한국에서도 남북관계의 범위 내에서 한국 주도로 북한을 순화시키는 것이 곤란하다는 인식에 근거하여, ‘중국에 맡기기’도 무방하다는 생각도 있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다음의 두 가지 이유로 보아 그러한 자세에는 문제가 있음.
 - 첫째, 천안함 사건에 대한 중국의 대응에서 나타난 것처럼, 북한의 행동에 대한 허용 범위에 관해 여전히 중국과 일본·미국·한국과의 사이에는 큰 괴리가 존재함.
 - 중국에 북한 문제를 맡겨 줌으로써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는지 하는 의문은 이 사건을 계기로 더 한층 높아진 것처럼 보임. 이 사건에 관해서 한국 국내에서 여전히 다양한 억측이 있는 것은 알고 있음.
 - 게다가 중국은, 북한의 폭주를 억제하기 위해서도 우선은 북한과의 동맹관계의 재확인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것도 일단은 이해할 수 있음.
 -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도발 행위 및 핵개발을 통제하려고 하는 중국의 힘, 그리고 힘의 행사에 ‘진지성’에 여전히 전적인 신뢰를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것도 어쩔 수 없음.
 - 둘째, 중장기적인 동아시아 질서에 관련되는 문제임. 북한문제를 ‘중국에 맡기기’로 하는 것은 질서 형성의 주도권에 관해서 결과적으로 한·일보다 중국에 유리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음.
 - 중국의 대국화는 기정 사실로 되고 있으며 중국이 대국으로서 상응한 책임 있는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것은 무조건 보장되는 것은 아님. 오히려 그렇게 되도록 주변의 압력이 필요함.
 - 그러한 의미로 북한문제에 관해서도 ‘중국에 맡기기’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의 이해와는 대치하는 형태로 또는 중국과 상호 보완적으로 협력하는 형태로, 한·일이 응분의 역할을 담당

하는 것은 역시 필요할 것임.

- 특히 한국으로서는 남북통일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만큼, ‘중국에 맡기기’라는 점에 관해서는 저항이 더 한층 뿌리 깊을 것임.

○ 이상과 같이 북한문제를 ‘중국에 맡기기’로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역시 한·일이 응분의 책임 있는 대응을 해야 함.

- 한·일의 경우에는 국력에서 보더라도 각각 단독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음.

- 한국은 남북협력이라는 수단으로, 일본은 북·일국교정상화와 거기에 따르는 경제협력이라는 수단을 유효하게 활용하고 북한을 유도하여 북한으로부터 양보를 이끌어내는 교섭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수 밖에 없을 것임.

○ 유감스럽지만, 이러한 북한을 둘러싼 한·일 협력이 유기적으로 행해질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고는 말하기 어려울 것임.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하나의 큰 심리적 요인이 전술한 것과 같은 한·일국교정상화와 북·일국교정상화와의 관계에 대한 비뚤어진 관계에 있다고 생각됨.

5. 끝으로

○ 북·일국교정상화와 남북협력에 관한 한·일 간 제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시켜 나갈 것인가는 향후의 과제로 하기로 함.

○ 본고의 문제의식은 한·일병합 100년이라는 고비의 해에 한·일관계

에서 한·일국교정상화 교섭에 관한 재검토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중에, 본래는 이 문제가 북한도 대상으로 하는 문제임에 불구하고 거기에 언급되지 않는 상황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에 관한 것이었음.

- 이상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일국교정상화와 북·일국교정상화에 대한 평가가 상반된다는 문제가 대북정책을 둘러싼 한·일 제후를 방해하는 심리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가설을 제시했음.
 - 가설의 실증 작업이 행해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 대신에 북한을 둘러싼 한·일 제후가 곤란한 상황이 ‘통미봉남’ 및 중국 의존이라고 하는 북한의 대응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을 지적했음.

- 단지 북한의 과거의 행동 양식을 볼 때, 그러한 경향이 일방적으로 지속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고, 한·일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지적하였고, 그와 같은 가능성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도 상기의 비뚤어진 구조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한·일국교정상화의 경험을 북·일국교정상화에 어떻게 활용할지에 관한 한·일의 제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이끌어냈음.

참고문헌

1. 단행본

국민대학교일본학연구소 편. 『한일회담과 국제사회』. 서울: 선인, 2010.

_____. 『의제로 본 한일회담』. 서울: 선인, 2010.

김대중. 『김대중 자서전 2권』. 서울: 삼인, 2010.

서동만. 『북조선 사회주의 체제성립사, 1945-1961』. 서울: 선인, 2005.

이종석. 『북한-중국 관계, 1945-2000』. 서울: 중심, 2000.

임동원. 『피스메이커(임동원 회고록,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20년)』. 서울: 중앙북스, 2008.

Lankov, Andrei N. *Crisis in North Korea: The Failure of De-Stalinization, 1956*. Honolulu, HI: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4.

淺野豊美·木宮正史·李鍾元. 『歴史としての日韓國交正常化, 上·下』. 東京: 法政大學出版局, 近刊.

林東源, 波佐場譯. 『南北首腦會談への道: 林東源回顧錄』. 東京: 岩波書店, 2008.

金大中アジア太平洋平和財団. 波佐場譯. 『金大中平和統一論』. 東京: 朝日新聞社, 1999.

平岩俊司.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と中華人民共和國』. 横浜: 世織書房, 2010.

和田春樹. 『北朝鮮 遊撃隊國家の現在』. 東京: 岩波書店, 1998.

I
II
III
IV
V
VI
VII

2. 논문

金伯柱. “中朝同盟の形成動因に關する一考察: 1961年中朝同盟條約の締結過程を中心に.” 『中國研究月報』. 第64卷 第5号, 2010年 5月.

3. 기타자료

강만길. “역사칼럼: 한·일조약과 조·일조약.” 『한겨레』. 2000년 3월 27일.

빅터 차. “해외칼럼”: 日-北협상과 韓-日 협정.” 『朝鮮日報』. 2004년 9월 3일.

Ⅶ. 중국의 대북정책과 중·북관계

이기현
(통일연구원 국제관계연구센터 부연구위원)

1. 문제제기

- 중·북관계는 ‘순망치한의 관계’로 종종 표현될 정도로 양국관계는 매우 긴밀한 것으로 알려짐.
 - 국공내전 시기부터 중국 공산당에 대한 북한 공산당 인사들의 심적, 물질 도움이 컸음.
 - 한국전쟁 당시에도 중국은 건국 초기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참전을 강행함으로써 혈맹관계임을 증명함.
 - 중국은 지속적으로 경제 원조 등을 통해 북한의 경제적 지원자 역할을 해옴.
 - 북핵 해결 과정 및 최근 천안함 사건에서 나타나듯이 중국은 북한에 대한 강압적 수단보다는 평화적 수단을 선호함.

- 그러나 중·북관계를 단순하게 혈맹관계로 이해하기에는 힘든 양자간 갈등의 역사가 존재함.
 - 북한은 1956년 8월 종파사건 이후 당·정·군 내 연안계를 숙청함으로써 중국의 국내 간섭을 배제하고, 주체노선을 표방함.
 - 북한 외교라인에서 친중 인사들은 철저히 배제되었고, 사실상 중·북 간 외교채널은 김일성 일인에게 집중되었음, 이는 북한이 중국의 내정간섭을 우려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적 실례임.
 - 중국의 개혁개방을 통한 실용주의 노선은 사회주의적 전통을 고집하는 북한과의 노선 갈등을 초래함.

- 특히 한·중 수교는 중국과 북한 간 사실상의 외교적 단절을 초래함.

I

II

III

IV

V

VI

VII

한·중 수교 이후 2000년 5월 김정일의 방중 시기까지 양국은 의례 적 수준의 교류를 제외하고 의사소통이 거의 없었음.

- 그렇다면 중·북관계는 어떠한 관계였으며, 앞으로 양국관계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여기서는 탈냉전시기 이후 중국의 대북정책과 중·북관계의 변화를 중국의 시각에서 논의하고자 함.

2. 중국의 국내외적 환경변화와 중·북관계

가. 중국의 대북한 인식과 중·북 혈맹관계

- 역사적으로, 중국은 조공책봉 질서 안의 범위에서 한반도 내 국가 들을 자신들의 속국으로 인식해 옴.
 - 임진왜란, 한국전쟁 참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대를 넘어 중국의 한반도 개입은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노력의 일환임.
- 냉전시기, 한국전쟁에 개입한 중국에게 북한은 안보 전략적 가치와 공산주의라는 사상적 유대를 같이하는 동맹 파트너로 인식됨.
 - 국공내전 시기, 동북지역 장악에 있어 조선족들의 공헌과 중국 공산당과 북한 공산주의 운동가들과의 유대관계는 중·북관계를 더욱 밀접하게 함.
 - 특히 소련, 미국, 일본 등 주변 강대국 간의 관계 사이에서 북한의 전략적 중요성은 더욱 커짐.

- 그러나 중국의 내정간섭을 우려한 북한의 주체 노선은 양국 간 혈맹 관계 속에서도 일정정도의 긴장을 지속시켜 옴.
 - 종파사건 이후, 북한의 친중라인이 제거되었으며, 북한은 중국과 소련 사이에서 자국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는 독자적인 외교 전략을 구사해 옴.

나. 중국의 국내외적 환경변화

- 문화혁명의 혼란을 극복한 중국은 경제발전을 최우선의 국가목표로 두고 이를 위해 개혁개방을 통한 발전전략을 구사함. 이는 이데올로기보다 실리를 추구하는 실용주의 노선을 견계 함.
 - 덩샤오핑을 위시한 중국 개혁그룹의 개혁·개방 정책은 계획경제의 모순을 인정하고, 시장의 기능을 더욱 강화시키는 것이었음.
 - 덩샤오핑의 ‘흑묘백묘론’, ‘선부론’ 등은 중국이 향후 이데올로기에 집착하지 않고 실용을 중시하겠다는 상징적인 선언이었음.
-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탈냉전이라는 대외환경 변화는 중국의 실용주의 노선을 더욱 강화시킴.
 - 실용주의적 사고는 미국과의 관계개선, 소련과의 분쟁 종식을 견인함.
 - 비록 1989년 천안문 사태로 인해 서방과의 관계에서 약간의 굴곡이 있었지만, 중국은 오히려 적극적인 시장개혁과 경제관계를 통한 외교관계 개선 전략을 도모함.
- 북한과의 관계도 이러한 국내외적 상황 변화에 영향을 받음.

I
II
III
IV
V
VI
VII

- 중국의 대외관계 설정에 있어 이데올로기 대신 경제적 실용주의가 더욱 중시됨.
-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으로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대북관계 운용에 있어서도 경제적 실리가 중시됨.
- 한·중 수교는 대표적인 중국의 실리외교 사례임.

다. 중·북관계의 변화: 혈맹에서 전략적 협력관계로

(1) 중·북관계의 균열과 악화

- 중국의 실용주의 노선은 중·북 간 전통적 혈맹관계에 균열을 야기함.
 - 중국은 북한이 개혁개방에 근거한 자신들의 외교노선과 경제정책을 지지하기를 희망했으나, 북한은 중국의 노선과는 거리를 둔 접근을 함으로써 양국 간의 노선차이를 보임.
- 한·중 수교라는 중국의 선택은 양국 관계를 악화시킴.
 - 북한은 동구 사회주의권의 몰락을 위기로 판단하고, 중국과의 이념적 동질성을 강조하면서, 양국 간의 친선관계를 확대시키려 했으나 중국은 한·중 수교를 선택함.
 -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 유지를 위해, “한국과 수교를 하지만 북한체제 유지를 보장할 것”이라는 등의 논리를 가지고 중·북관계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설득함.
 - 이러한 중국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한·중 수교 이후 북한은 중국을 “제국주의에 굴복한 변절자, 배신자”라고 비난함.

- 한·중 수교는 북한의 외교적 고립을 결정적으로 심화시킴.
 - 한·중 수교 시점은 북한이 핵사찰 문제로 외교적으로 궁지에 몰리고 있던 때였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더욱 큰 압박으로 작용함.
 - 중·북 간 수뇌부의 상호방문이 사실상 중단되었으며, 북한은 일방적으로 정전위원회 중국 대표단 철수를 요구함.
- 양국 경제관계에도 실용주의 경제노선이 적용되고, 이 또한 북한경제를 악화시킴.
 - 중국은 1990년대 들어 양국 무역에서 국제가격의 절반 이하로 상대방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우호가격제와 구상무역을 철폐하고 현금결제 방식을 요구함. 거래단위도 중앙에서 지방으로 전환시켜 정상적 무역관계를 강조함.
 - 이 조치 이후 북한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음.
- 당시 소련의 붕괴와 러시아 경제 불안으로 중국은 북한의 유일한 경제 지원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택한 경제 조치를 볼 때, 중국이 양국관계를 동맹관계에서 실용주의적 협력관계로 전환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음.

(2) 중·북관계의 회복

- 북한은 감정적으로 중국에 배신감을 느꼈지만 동북아 역학구도와 역사적 관행을 고려, 전통적 정치관계가 유지되기를 바램.

- 북한에게 중국은 유일한 사회주의 강대국이자 외교적 지원국이었으며, 중국의 원조가 매우 긴급한 상황이었음.
 - 한·중 수교 이후, 북한의 중국에 대한 비난은 한·소 수교 이후 북한이 소련에 대해 맹비난한 것보다는 훨씬 강도가 약했음.
- 중국은 경제난이 북한의 체제 붕괴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 우려했고, 1994년 미·북 간 핵협상 타결로 인해 미·북관계가 적대에서 협상관계로 전환되면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할 것을 우려했음.
- 중국은 1995년부터 대북원조를 재개했으며, 양국무역에서 철폐했던 구상무역과 우호가격제를 부활시킴. 특히 199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대북 경제지원을 재개함.
- 북한은 심각한 내부자원 고갈과 외교적 고립상태에서 중국과의 정상외교를 가동시킴.
 - 2000년 5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중국을 비공식 방문, 남북정상 회담의 통보형식이기는 했지만 이후 중·북 간 정상적 외교채널이 가동됨.
 - 이후 북한은 중국의 개혁개방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신의주 행정특구', 「개성공업지구법」 등을 발표함.
- 2001년 김정일의 방중을 통해 중·북 간 우호관계는 더욱 강화되고, 양국의 대미 공조가 대외적으로 과시됨.
 - 김정일의 방중 시기는 미국 부시행정부의 출범 시기와 일치함. 김정일 방중 이후, 북한과 중국은 “공동의 관심사인 중대한 국제

문제에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고 발표함.

- 김정일과 장쩌민의 정상회담에서 중·북 양국은 양국 협력관계의 공고화, 대미관계 및 MD문제에 관한 협력, 경제부문 협력 및 지원 등에서 양국의 이해를 일정정도 일치시킴.
- 이렇듯,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동맹관계에서 실용주의적 협력관계로 전환시키려 시도했었으나, 북한의 경제난 심화로 인한 북한체제의 위기 발생 가능성, 미·북관계의 변화 등으로 인해, 북한과의 관계를 실용주의 기초 위에 동맹 관계적 성격을 가미한 전략적 협력관계로 전환시킴.

3. 북핵문제와 중국의 입장

가. 1, 2차 북핵 위기와 중국의 대북 정책

(1) 북한의 동맹 딜레마와 핵

- 북한은 사회주의 두 강대국의 갈등 때문에 일방에 대한 편승이 불이익으로 다가오는 ‘동맹의 딜레마’를 경험했음. 이러한 북한의 안보 딜레마는 핵보유의 야망을 키우게 함.

(2) 중국의 북핵에 대한 입장

- 중국은 안정적 경제성장을 위해 평화적 주변 환경을 선호하기 때문에 북한에 의해 동북아 정세가 불안정해지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려고 하고,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싶어함.

I

II

III

IV

V

VI

VII

- 북한의 핵개발은 한국, 일본 및 대만에게 핵무기 개발의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에 중국은 이로 인해 동북아의 심각한 불안정이 조성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함.
- 중국은 북한의 돌출행위 등에 대한 위협과 불확실성 때문에 무력수단 보다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도록 설득해야 한다는 입장임.

(3) 1차 북핵 위기와 중국의 입장

- 1994년 1차 북핵 위기 시 중국은 북핵문제에 있어 사실상 방관자적 지위에 있었음.
 - 1989년 천안문 사건 이후로 중국은 서방과의 외교관계 개선에 주력하고 있었으며, 본격적인 시장개혁을 위해 인내하며 때를 기다리는 ‘도광양회’의 전략이 외교 노선의 주를 이루고 있었음.
 - 대북 관계에 있어서도 중국은 한·중 수교로 인해 북한과의 관계가 냉각되면서 사실상 대북 레버리지가 없었다고 볼 수 있음.
- 중국은 단지 당사자와의 대화의 원칙을 되풀이하면서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함.
- 핵협상 타결로 미·북관계가 개선되자, 중국은 북한의 동맹이탈에 대한 우려로 인해 경제 원조를 재개하는 등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나섬.

(4) 2차 북핵 위기와 중국의 입장

- 2002년 2차 북핵 위기의 발생시점은 중국 후진타오 체제의 출범 시점과 일치함. 이 때문에 후진타오 집권 초기부터 북핵 관련 정책은 대북정책의 중요한 부분을 점하게 됨.
- 후진타오 체제의 북핵 정책은 장쩌민 시기부터 주장해 온 ‘북핵 3원칙’, 즉 한반도의 평화·안정, 평화적 해결, 한반도 비핵화에 근거를 두었음.
- 다만, 1차 북핵 위기에 비해 북한의 핵개발 및 보유 가능성이 높아지고, 중국의 외교정책의 변화가 있었음.
 - 후진타오 체제는 다자/주변 외교를 강화하면서 국제무대에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을 강조해 옴(소위 ‘책임대국’ 혹은 ‘유소작위’).
- 대외적으로 미국과의 관계 변화도 후진타오 체제의 대북정책에 영향을 줌.
 - 부시행정부 초기, 미국은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하고, 중국을 견제하는 정책을 펼기 때문에, 후진타오 신지도부에게는 강대국간의 이해가 교차하는 한반도가 전략적으로 더욱 중요해짐.
- 중국은 북한의 핵보유가 기정사실로 될 경우,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 주변국들의 핵개발 의지 증대, 자국의 정치 안보상황의 악화, 이에 따른 경제발전 전략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판단함.

- 이러한 판단하에 중국은 보다 적극적으로 북핵 문제 해결에 개입함.
 - 중국은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대규모 경제 원조를 약속하는 등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함.
 - 중국은 3자회담, 6자회담의 주선 등 북한에 대한 설득과 압력에 많은 노력을 기울임.
 - 동시에 중국은 대북 설득을 위한 정치경제적 압력도 시도함. (양빈 사건, 대북송유관 잠정폐쇄, 「중조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 중, 군사 동맹 부문 삭제 주장 등이 대표적 사례임.)
- 그러나 2006년 북한의 핵실험은 6자회담을 주도했던 중국의 역할을 약화시킴.

나. 북핵 실험 이후 중국의 대북정책

- 북핵 실험은 중국의 대북 입지 약화라는 결과만 부각됨. 특히 제2차 핵실험으로 인해 중국의 대북 레버리지는 매우 약화됨.
-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와 대북 압력(제재)에 따른 전략적 손실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짐.
 - 중국입장에 볼 때, 북한의 핵 포기 가능성은 낮았으며, 북핵 협상 역시 장기화될 것이라 판단되었음.
 - 북한에 대한 적극적 제재가 북한의 돌발행위를 야기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 증대됨.
- 따라서 중국은 미·북 간 중재자 역할을 통해 균형자로서의 대북 입

지를 강화하는 전략 추구, 또한 북핵의 궁극적 해결보다는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정책의 주안점을 둠.

- 북한에 대해서는 전통 우의 관계를 강조하고, 외교적 소통, 경제 협력을 강화
- 주변국에 대해서는 6자회담의 유용성을 강조하면서, 6자회담에서의 자국의 역할 강조

○ 2009년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을 전후해 북핵과 북한문제를 분리접근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분석됨.

-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6자회담에서 중국의 주도권을 강화하고 대북한 영향력을 유지함.
- 북한의 경제 위기로 인한 정권 붕괴 등 급변사태를 막기 위해 북한과의 경제협력 강화 및 자국의 동북진흥개발과 북한을 연계시키려 함.

4. 천안함 사건과 중국의 대북정책

가. 천안함 사건에 대한 중국의 인식

-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기조는 한마디로 ‘현상유지(status quo)’임.
 - 중국의 현 전략적 이해는 지속적 경제발전을 위한 주변 국가들과의 안정적 안보 환경을 조성하고 상대적인 영향력을 유지하는 것임.
 - 이러한 중국의 전략적 이해의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의 한반도 안정화를 위한 구체적 수단은 북한체제 생존, 북한의 점진적 개혁·개방 유도가 우선시되어야 함.

I

II

III

IV

V

VI

VII

- 중국 정책결정 내부 그룹 간에 북한 문제를 두고 인식의 차이가 존재함.
 - ‘현실주의 그룹’은 북한의 미사일과 핵실험 감행 등 중국의 국제적 입장을 난처하게 하는 북한을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해 옴. (이들은 한국과의 관계를 증시하는 것으로 판단됨.)
 - ‘전통주의 그룹’은 북한과의 순치관계를 강조하면서 북한이 전략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경제교류 및 지원을 확대할 것을 요구해 옴.

- 이런 상황에서 천안함 사건의 발생은 중국에게 대북한 ‘연루와 방기의 딜레마’를 가중시킨 것으로 파악됨.
 - 중국은 천안함 사건 등 북한의 돌발 사태로 인한 한반도 전쟁 발발 시 중국의 연루를 걱정함.
 - 또한 한·미·일 제재에 동참함으로써 북한을 방기할 시, 전략적 자산인 북한을 상실할 위험성과 핵실험 등 북한의 돌출행동을 촉진할 것을 우려하게 됨.

나. 천안함 사건 이후 중국의 전략과 행보

- 천안함 사건 이후 중국의 입장 정리과정에서 약간의 갈등이 있었지만, 북한을 옹호하는 입장으로 합의가 됨.
 - 북한 부담론에 근거해 북한 제재를 주장하는 ‘현실주의 그룹’과 북한과의 역사적 우호관계와 전략적 가치를 주장하는 ‘전통주의 그룹’ 간의 갈등이 존재한 것으로 알려짐.
 - 중국 외교부는 한국 측에 매우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와 군부 등 전통적 북한 우호론자들의 입장이 더 강력했던 것으로 파악됨.

- 한국 국방부의 미국 항공모함 서해 합동훈련 참가 요청 등 미국의 적극적 개입이 우려되고, 한·미·일 공조 체계의 강화는 중국의 북한 방기에 따른 전략적 손실에 대한 우려를 제고함.

○ 내부 입장차가 정리되자 중국은 대북제재를 반대하고, 빠른 타협을 유도함.

- 중국은 천안함 사건의 유엔 안보리 회부 반대, 안보리 의장성명에서 한국 및 미국과 타협하여 상황의 빠른 종료를 유도하는 전략을 택함.
- 안보리 의장성명 논의과정에서 중국은 북한을 특정해 규탄하는 데는 끝까지 반대하면서도, 천안함이 공격(attack)받았다는 점과 이 같은 행위를 비난(condemn)하는 내용을 허용하는 선에서 타협을 함.

○ 중국은 천안함 사건을 안보리 성명으로 일단락 짓고, 남·북 양측과 미국 등 당사국이 이를 더 이상 문제 삼지 말고 6자회담 테이블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하는 전략적 행보를 지금까지 취해옴.

- 이는 중국이 사건 초기부터 강조해 온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라는 자국의 전략적 이해와 일치하는 것임.

다. 중국의 대북전략과 미·중관계

- 천안함 사건은 단순히 중·북 동맹이라는 양자관계의 차원이 아니라 새로운 미·중관계의 출현과 연관이 있음.
 -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경제위기는 동북아 세력균형체제에 균열을 야기함.
 - 오바마 정부 등장 이후 미국은 공개적으로 중국 봉쇄 전략 폐지를 선언하는 등, ‘미·중 간 이익균형을 통한 자국이익 확보’라는 교육지책을 구사함.
 - 그 결과, 동북아에서 중국의 행동반경이 넓어졌고,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높아짐.

- 중국의 천안함 사건에 대한 태도는 단순히 북한을 두둔한다기보다는 미국의 안보프레임 틀 속에서 문제를 접근하지 않겠다는 전략적 판단에 근거함.
 - 천안함 사건 이후 중국은 동북아에서 미국 주도의 안보체계가 강화되는 것을 경계함.
 - 대북제재에 반대함으로써 미국의 대중국 압박과 미국 주도의 동북아 안보 틀 속에 갇히는 것을 거부함.

5. 향후 전망

- 중국은 북한의 외교적 비호자 역할과 경제적 지원을 통해 북한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것으로 예상됨.
 - 한·미·일의 대북 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중국에게 의

존할 수밖에 없게 됨.

- 북한의 내부위기는 중국이 북한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넓히고 있음.
- 김정일 위원장의 2차례에 걸친 중국 방문은 향후 북한의 중국 의존도가 더욱 높아질 것을 확인시켜 줌.

○ 그러나 중·북 간의 전략적 이해의 편차 때문에 현재의 관계가 장기적으로 지속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은 북한에 대한 적극적인 관여 정책으로,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 나아가 비핵화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그러나 북한은 정권 생존을 위한 재정확충이 현재로서는 제1의 목표이며, 동북아의 불안정한 구도를 이용, 중국의 외교적·경제적 지원을 확보하는 전략을 구사해 옴. 더구나 북한은 중국의 내정 간섭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음.
- 북한이 중국의 이해에 부합하는 제스처를 보일지는 몰라도, 과거의 양국 관계의 경험과 북한정권의 속성상 궁극적으로 중국의 이해가 달성될지는 미지수임.
- 또한 북한의 경제개혁 의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중국이 적극적인 대북 투자와 경제협력을 진행하기 힘든 상황임.

北韓の政治・經濟と
韓・日の
戰略的共助

I. 李明博政権の 対北朝鮮政策と統一構想

裴廷鎬

(統一研究院 國際關係研究Center 所長)

1. 前政権における対北朝鮮政策の教訓

- 前政権の対北政策は、南北間の経済交流、社会文化交流などでかなりの成果を挙げた。
- しかし、前政権では北朝鮮の態度変化をあまりにも楽観的に期待し、体制擁護と核保有戦略、統一宣伝戦略や民族協調戦術などを見過ごしてしまった。
- そのため南北の関係はミサイル発射実験や核実験などによって、一挙に梗塞状態におちいる局面がしばしばあった。
- 言いかえれば、南北関係はいつ、いかなる事件によっても梗塞し、悪化するかもしれないという不確実性・不安定さを内包した極めて脆弱な信頼関係に留まっていた。

2. 李明博政府の対北朝鮮政策

- 李明博政府は、相生共栄の対北朝鮮政策と「非核・開放・3000」を基礎にした朝鮮半島の新平和構想とグランド・バーゲン(Grand Bargain)を掲げている。

A. 相生共栄の対北朝鮮政策と「非核・開放・3000」

- 李明博政府の対北政策は<表 I -1>に示した対北政策である。

I

II

III

IV

V

VI

VII

□ 「非核・開放・3000」は、「相生共栄」の対北政策の概念のなかで展開された具体的な推進戦略である。

- 北朝鮮に核廃棄の決断を促す環境を作りつつ、南北共同繁栄の道を追及するという戦略である。
- それは、北朝鮮の核廃棄進展状況にしたがって韓国が国際社会と協力し、北朝鮮の経済再建及び住民生活改善のための経済・教育・インフラ・生活向上など五大分野において包括的パッケージ形態の支援を提供する戦略。

●表 | -1 「相生共栄」の北朝鮮政策の体系

ビジョン	実用と生産性に基づいた相生と共栄の南北関係発展を果たし、 朝鮮半島の平和統一の実質的土台を拡充すること。	
目標	平和共同体	○ 北朝鮮の核問題解決と南北間の軍事的緊張緩和による朝鮮半島における新たな平和構造を創出すること。
	経済共同体	○ 南北の経済協力は、韓国側の一方的支援中心から脱皮し、双方で相互補完的な協力がなされるべきだ。 ○ 経済協力事業は ▲北の核問題の進展 ▲経済的妥当性 ▲財政負担 ▲国民的合意など四原則に立脚して進めなければならない。
	幸福共同体	○ 南北分断は南北住民すべての幸福を制約してきた。 ○ 南北の関係発展への努力は、分断と冷戦の痛みを治癒すること。 ○ 南北7千万民族の幸福を追求 - 南北における人道的懸案問題を解決し、南北住民の生活の質的向上

<p>推進原則</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實用と生産性 ○ 原則に徹底、柔軟なアプローチ ○ 民族的合意 ○ 南北協力と国際協力の調和
<p>推進課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真心ある南北の対話 ○ 朝鮮半島の平和定着 ○ 相生と互惠の南北経済協力 ○ 社会・文化交流の活性化 ○ 人道的問題の解決

B. 「朝鮮半島新平和構想」とグランド・バーゲン (Grand Bargain)

- 李明博大統領は2009年8・15<光復節>の祝辞で、朝鮮半島の平和と実現のための包括的構想として「朝鮮半島の新たな平和構想」を提示した。
- 李明博大統領は、2009年9月21日(現地時間)にニューヨークで「朝鮮半島の新たな平和構想」の延長線上で、「北朝鮮が核プログラムを放棄することが自らを発展させる唯一の道」ということを強調しつつ、北朝鮮核問題の根本的解決を追求する「グランド・バーゲン (Grand bargain)」を公式的に提案した。

(1) 「朝鮮半島新平和構想」

- 「朝鮮半島新平和構想」は「非核・開放・3000」を根幹としている。
- 「朝鮮半島新平和構想」は北朝鮮が核を放棄し、政治・軍事的信

I
II
III
IV
V
VI
VII

頼を構築し、南北の共同繁栄を追求することである。その主な内容は次の通りである。

- 第一に、北朝鮮の完全な非核化のスタート
- 第二に、北朝鮮経済発展のための国際協力の実行
- 第三に、南北経済共同体の実現のための南北ハイレベル会議の設置
- 第四に、経済・教育・財政・インフラ・生活向上など五大プロジェクトの推進
- 第五に、南北における在来型武器削減の論議

(2) グランド・バーゲン(Grand Bargain)

□ グランド・バーゲン(Grand Bargain)は、北朝鮮の核プログラムの一部についてアプローチする過去の接近方法と違い、「北朝鮮の核問題」を「北朝鮮問題」という大きな枠組みから「包括的な一括妥結」方式を追求する提案だといえよう。

○ 同時に、「グランド・バーゲン(Grand bargain)」は北朝鮮の核開発中止に力点をおく接近ではなく、交渉の最終目標である「不可逆的(irreversible)非核化」を念頭においた北朝鮮の非核化に直接近づくとする根本的提案である。

□ グランド・バーゲン(Grand bargain) の主な内容。

- ① 六者協議を通じて、北朝鮮が核放棄の決断を確実に見せる核プログラム中心部を廃棄すれば、北朝鮮に対し確実な安全保障と国際支援を本格化する。

- 具体的な要素は五カ国協議を通じて決定。

- ② 北朝鮮核廃棄の終着点について、明白な合意を土台に韓米比中ロの五カ国は、
合意による具体的な行動プログラムを準備し、推進する。

□ 「グランド・バーゲン(Grand bargain)」の戦略的意義

- ① 米朝直接対話で、「核保有国」の地位を確保しようとする北朝鮮の戦略意図を遮断。
- 北朝鮮は核問題を米朝だけの問題と見なし、韓国を排除しようとしている。
 - その上北朝鮮は、米朝両国の直接対話で核保有国の地位を確保しようとしている。
 - 李明博大統領は、このような北朝鮮の意図を決して許さず、同時に、北朝鮮の核をこれ以上米朝両者間だけの議題とすることはできないという立場を表明した。
 - すなわち、韓国政府も長官級ハイレベル会談で北朝鮮の核問題を中心議題として扱い、北朝鮮核問題の解決のため積極的に介入する役割を果たそうというものだ。
 - 「グランド・バーゲン」提案は、「核保有国の地位を確保しようという北朝鮮の戦略的意図を遮断」、「北朝鮮核問題解決のための韓国の断固とした意志及び積極的努力」 などのような戦略的意義がある。

I

II

III

IV

V

VI

VII

- ② 「サラミ戦術(salami tactic)」の限界克服と根本的解決の追求。
- サラミ戦術(salami tactic)とは、取引の内容をいくつか細切れにして、徐々に積み重ねて行きながら実際の内容を勝ち取っていくという戦術である。
 - すなわち、北朝鮮の段階的行動に対しては、そのたびに少しずつ補償を与える戦術である。

 - このようなサラミ戦術では、北朝鮮核問題においては部分的成果をあげるに留まった。
 - 北朝鮮の「瀬戸際戦術」により、「危機→交渉→合意→破棄」の過程を繰り返すなかで、根本的解決には限界が現れた。

 - 北朝鮮は重油支援、米国のテロ支援国家の指定解除など、反対に得るものを引き出しながら、一方では核廃棄を後ろに追いやり、2度の核実験を強行した。
 - すなわち、韓米日中ロ5者は時間と費用だけ消耗する結果を招いてしまった。

 - 「グランド・バーゲン」提案は、サラミ戦術(salami tactic)の限界を克服するために根本的問題解決の方法をはっきりさせたことに戦略的な意義がある。

3. 北朝鮮の戦略的対応

A. 李明博政府スタート直後、北朝鮮の戦略的拒否

- 北朝鮮は、相生と共栄の対北政策と『非核・開放・3000』構想を保守政権の強硬政策だと非難しながら、早々と対話を一方的に中断し、強硬措置をとりつつ拒否感を表した。
 - 2008.2.25: 李明博政府スタート
 - 2008.3.29: すべての南北当局間の対話中断及び接触拒否
 - 2008.4. 1: 李明博大統領の実名を直接取り上げて非難はじめる

- 北朝鮮の戦略的拒否の意図
 - 対南戦略において『南南葛藤』を誘発させ、李明博政府が対北政策を宥和政策に転換するようにするため。
 - 南北関係の不安により朝鮮半島の緊張状態を引き起こすことで、韓国国内に李明博政府の対北政策をめぐる理念的分裂、国論分裂などが作り出されるよう誘導し、そのような分裂と批判的雰囲気によって李明博政府の対北政策を宥和政策に転換させるため。
 - 北朝鮮と中国の戦略的協調。
 - 『6.15 南北共同宣言』(2000年)と『10.4南北首脳宣言』(2007年)の履行による経済的支援を一方的に要求。
 - 北朝鮮は核保有国を目指しつつ、同時に韓国に経済支援の確保を追求。

- 北朝鮮は、金大中政権発足の初期にも、盧武鉉政府の発足初期にも韓国政権を非難したが、李明博政権に対する非難や拒否感はいわゆる「かけひき合戦」以上のものがある。

B. 対南の戦略的接近

- 強硬 → 融和 → 強硬

(1) 北朝鮮の強硬措置

- 2008.7.11 金剛山で南の観光客、銃に撃たれて死亡する事件が発生
- 2009.3.30 北朝鮮、開城公団の韓国からの勤務者を抑留
- 2009.4.5 北朝鮮、咸鏡北道ムスタン里所在の発射場から長距離ロケットを発射
- 2009.5.25 北朝鮮、二度目の核実験を強行

(2) 北朝鮮の宥和的アプローチ

- 2009年7月に入り、北朝鮮による李明博大統領への非難が減少しはじめ、8月に入ってから南への宥和的アプローチが可視的に現れはじめた。
 - 2009年7月には、李明博大統領の実名を取り上げる回数が2009年5-6月に比べて約30% 減少した。
 - 同年8月23日、金大中元大統領の弔問に訪れた北朝鮮弔問団が李明博大統領を表敬訪問した以後、李明博大統領への非難がなくなりはじめた。

- 南北首脳会談の実現と準備過程において、韓国の経済支援を得るために戦術的变化。

(3) 北朝鮮の硬軟「Two-track」接近戦略

□ 2010年に入り、北朝鮮は硬軟「Two-track」で接近。

(A) 宥和的アプローチ

- 北朝鮮は「新年社説(2010.1.1)」で「北南対話、関係改善」を強調した。
- 北朝鮮は外務省声明(1.11)と談話(1.18)を通じ、
 - △ 国連の制裁解除を六者協議復帰の前提条件に
 - △ 米朝敵対関係の解消及び平和協定締結を六者協議の先決議題に提示
- 北朝鮮の「アジア太平洋平和委員会」が「金剛山・開城再開会談」を提案(1.14)。
- 北朝鮮赤十字会:「トウモロコシ 1万t 受ける」と連絡する(1.1)。
- 北朝鮮が南北海外工業団地の合同視察の評価会議を受け入れる(1.19)。
- 南北当局者間の懸案問題協議(1.19-21)。
 - 韓国政府:「3通(通行、通信、通関)問題」を集中提案
 - * 開城公団: 南側 117企業が稼働、北朝鮮の労働者約4万人以上

I

II

III

IV

V

VI

VII

(B) 強硬な態度

□ 哨戒艦事件以前。

- 北朝鮮国防委員会: スポークスマン声明(1.15)を通じ、韓国の一部マスコミの「北朝鮮急変事態対備計画」報道 (1.13) と関連し、
 - 「報復聖戦」を取り上げ、朝鮮半島に関係するすべての協定から南側当局を除外すると脅迫した。

- 北朝鮮総参謀部はスポークスマン声明(1.24)を通じ、金泰栄 (キム・テヨン) 国防長官の「北朝鮮核攻撃時には先制攻撃」発言に対し、
 - 「宣戦布告と見なす」と主張、「朝鮮戦争の惨事が繰り返されるかもしれない」と脅迫した。

- 北朝鮮、ペクリョン島<白翎島> (近くの北方限界線(NLL)の北朝鮮側海上で海岸砲100余発以上を発射(2010.1月中旬)。

- 哨戒艦「天安号」に対する奇襲攻撃(2010.3.26)。

- 北朝鮮当局、金剛山の南側不動産及び財産の凍結、没収を強行 (2010.4.13)。

□ 哨戒艦事件以後、北朝鮮の対南誹謗。

- 呉克烈国防委員会副委員長の談話発表(3放送、5.20)。
 - 哨戒艦沈没事件を「米国と日本、韓国が我々を孤立圧殺しようとした謀略」だと主張。

- 北朝鮮の「朝鮮中央通信社軍事論評員」、哨戒艦事件の「捏造説」主張（『朝鮮中央通信』5.26）。
- 北朝鮮の祖国戦線「南朝鮮人民に送る公開状」を公表（『朝鮮中央通信』5.29）。
 - 北朝鮮の対南機構である「祖国統一民主主義戦線(祖国戦線)」中央委員会は「南朝鮮人民に送る公開状」の発表を通じ、李明博大統領の実名を取り上げ、「逆賊一味を断固審判しなくてはならない」と扇動。
- 祖国戦線中央委員会は公開状で「まもなく行われる『地方自治選挙』は地方権力を争奪するための与野党の単なる票争いではなく、『平和か戦争か』『民主かファッショか』という深刻な政治的対決」だとし、「李明博一味に与える票は『戦争の票』だとし、『ファッショ独裁の票』と力説した。
- 平壤で10万人の群集大会を開催（『朝鮮中央通信』5.30）
 - 「国際軍民合同調査団」の「哨戒艦沈没事件の調査結果」を再び「謀略劇」だと主張し、韓国政府を厳しく非難した。

4. 李明博政府の三大統一構想

A. 哨戒艦事件による北への対抗措置

- 李明博大統領は、「5.24国民談話」で哨戒艦攻撃に対する北朝鮮の責任を問うレベルから北への対抗措置を発表した。

I

II

III

IV

V

VI

VII

- 北への対抗措置の中心的内容。
 - ▲ 北朝鮮船舶に対する韓国海上交通路の封鎖
 - ▲ 南北交易・交流の中断
 - ▲ 北朝鮮の挑発に対する積極的抑制の原則堅持
 - ▲ 哨戒艦事件に対する国連安全保障理事会への上程など

- 金剛山での観光客銃撃死亡事件、開城公団での韓国人勤労者の抑留、北朝鮮による2度目の核実験強行など、これまで北朝鮮が南北関係を壊し続けてきたにもかかわらず、
 - <韓国としては> 乳幼児など、脆弱層に対する人道支援は行ってきており、今後も続けていく。

- 「大韓赤十字社」は、北朝鮮の要請にしたがって、コメ5000トンとセメント・ラーメン・医薬品など水害の救護物資を送ることを決定(8.13)、実行した。
 - 北朝鮮: 韓国政府に対する猛烈な誹謗と脅迫を続けた。
 - 『朝鮮中央放送』(8.14); 李明博大統領を「逆賊一味」と非難
 - 『朝鮮中央放送』(8.16); 李明博大統領を「逆徒」、韓国政府を「傀儡」と呼んで非難。

B. 三大 共同体の統一構想

- 李明博大統領は、2010年「8.15光復節」の祝辞で「置かれている分析状況から平和統一を目標にしなければならぬ」とことを力説し、「平和・経

済・民族」の三大共同体の概念を具体的な統一構想として提示した。

(1) 背景

- 若い世代の統一に対する夢とビジョン、意志などを強める。
 - 若い世代の一部には、「ドイツ統一などにみられる莫大な統一費用」に対する認識のせいで、「統一」よりも「分断体制下の不安定な平和共存」を望んでいる。

- 統一論議の活性化。
 - 分断管理や平和共存に力点を置いた前政権の北朝鮮政策の限界を反省。
 - 北朝鮮の経済と食糧問題の悪化
 - 北朝鮮の核開発及び核保有国追求
 - 金正日の健康異常と世襲後継者体制問題など。

 - 不安定な平和共存の分断状況を克服し、統一へ向かうべきだという主張を強く提起。
 - 政策目標を分断管理及び平和共存から統一に転換すべきだという主張を提起。

 - 先進化による韓国的发展を追求することは、時代的な課題であり、
 - 統一は、これを実現していく過程で解決しなければならない重要な課題だという認識の拡散。

I

II

III

IV

V

VI

VII

□ 消極的分断管理から積極的な統一準備へと転換。

- 政策目標を分断管理及び平和共存から統一へと転換
 - 統一に備えた人的、物的、政策的力量の強化
- 「統一税」は統一のための財源調達の本格的準備
 - 統一基金の本格的準備

□ 統一推進構想を現実に合わせて体系化。

- 超党派的論議と国民的合意による「民族共同体統一案」(1994)が作られた後、「民族共同体統一案」は金泳三政府、金大中政府、盧武鉉政府、李明博政府の統一方案として継承された。

●表 1-2 「民族共同体統一案」(1994)の中心内容及びその特徴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1) 統一哲学: 自由民主主義(2) 統一に対するアプローチの視点: 民族共同体建設を通じた統一国家の建設<ul style="list-style-type: none">○ 経済共同体、社会文化共同体、政治共同体の建設により「1民族 1 国家 1 政府」の統一国家の建設<ul style="list-style-type: none">- 経済共同体と社会文化共同体は機能的に相互作用(3) 3段階統一案: 斬新的で段階的接近
「和解・協力段階」→「南北連合段階」→「統一国家段階」 |
|---|

- 「民族共同体統一案」を継承しつつも、変化した内外情勢と南北関係の状況を反映させ、発展を追求。

- 朝鮮半島の非核化による平和定着が最も早急で最優先の課題
 - 「和解・協力段階」の推進から必要な行動計画を「平和共同体」、「経済共同体」の実現の方向へ具体化
- 平和統一のための課題を具体化
- 平和、経済、民族共同体は平和統一を成し遂げるための三大課題

(2) 主な内容と特徴

●表 1-3 三大共同体統一構想の主な内容

平和 共同体	<ul style="list-style-type: none"> ・目標: 非核化による朝鮮半島の実質的な平和定着実現 ・戦略: 「グラント・バーゲン」, 「朝鮮半島新平和構想」
経済 共同体	<ul style="list-style-type: none"> ・目標: 南北経済の相互依存増大と経済統合推進を通じた北朝鮮の経済開発と支援 ・戦略: 「非核・開放・3000」プロジェクトの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国際社会との協力を本格稼働すると同時に経済・教育・財政・インフラ・生活向上など五大プロジェクトを推進
民族 共同体	<ul style="list-style-type: none"> ・目標: さまざまな分野の同質性回復、民族全体の尊厳と基本権を保障、民族全体の生活の質の向上 ・戦略: 制度統合と価値統合の並行

- 平和共同体、経済共同体、民族共同体は段階的な先後関係ではなく、相互重層的に進行するもの。
- 平和共同体、経済共同体、民族共同体は機能的に相互作用しながら、シナジー効果を創出。

I

II

III

IV

V

VI

VII

- 現時点では朝鮮半島の非核化による朝鮮半島の安定と平和定着が最も早急な課題であり、平和共同体の建設を最優先課題として設定する。
 - 前政権の対北政策から教訓を得られるように、南北関係は経済交流、社会文化交流でかなりの成果があっても、政治-軍事レベルの信頼構築が成し遂げられなければ、いつどのように崩れるかもしれない「砂上の楼閣」に過ぎないこともある。
 - 南北関係は、ミサイル発射実験、核実験などによって、一挙に梗塞する状況にしばしば直面した。

- 朝鮮半島の非核化は、朝鮮半島の平和、統一のために必須的要素である。

(3) 統一費用

- 統一費用は、▲ 統一の時期と統一案 ▲ 南北統合課題の範囲と水準 ▲ 費用支出期間の算定などによって、大きな偏差がある。

- 統一費用の計算においては分断費用、統一利益などを考慮しなくてはならない。
 - 純粋な統一費用 = 統一費用の合計 - 分断費用 - 統一便益

- 統一後、時間が経てば、統一費用は減少し、統一利益は増加する。
 - 統一費用は北朝鮮の開発費用なので、時間が経てば、北朝鮮への投資費用となる。
 - 統一は、朝鮮半島に新たに跳躍とチャンスを与える。

Ⅱ. 成熟した世界国家と 朝鮮半島の 新たな平和構想

金圭倫

(統一研究院 南北協力研究Center 前任研究委員)

1. 序論

- 李明博政府は、成熟した世界国家の達成を、韓国外交安保のビジョンとして設定し、この為の多様な課題を提示している。
- 朝鮮半島の新たな平和構想は、李明博政府が遂行している朝鮮半島の統一と対北朝鮮政策を、未来志向的な次元から達成しゆく事案を提示している。
- 朝鮮半島を取り囲む東北アジア情勢の複雑性と、北朝鮮の不安実情は、韓国に新たなる平和構想を提示させ、朝鮮半島の不確実性を緩和させることを要求している。
- 本論文は、朝鮮半島の新たなる平和構想を実践する為の推進方向を模索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

2. 成熟した世界国家

- 李明博政府は出航に合わせて、外交政策の根幹を成熟した世界国家と設定し、多様な国政課題を遂行しており、青瓦台（大統領府）が発行した「李明博政府 外交安保のビジョンと戦略」冊子では、成熟した世界国家の達成を李明博政府の外交安保ビジョンとして明示している。
 - 成熟した世界国家という目標達成の為の核心的価値として正義と平和、共同繁栄、世界主義を設定し、

I

II

III

IV

V

VI

VII

- 実践原則は国民統合、実用的成果、国際協力を基盤とした創造的な実用主義に設定した。
 - 成熟した世界国家の達成の為に、①相生・共栄の南北関係、②協力ネットワーク外交、③包括的実利外交、④未来志向的先進安保体制等の4大分野の戦略の遂行を提示している。
- 4大分野についての以下に示すような重点課題の遂行を提示している。
- まず、相生・共栄の南北関係の運営と関連して、朝鮮半島の非核・平和構造の強固化、南北経済共同体の基盤造成、南北の社会文化共同体の基盤造成、人道的協力の増進等の重点課題の実戦を提示。
 - 二つ目に、協力ネットワーク外交の樹立と関連して、21世紀の韓・米戦略同盟構築、主要国関係の強化、東北アジア協力体制の構築、グローバルパートナーシップ拡大等の中心課題を提示。
 - 三つ目に、包括的実利外交の遂行と関連して、エネルギー協力外交の強化、FTA締結の多辺化、寄与外交の拡大、在外国民の保護と在外同胞の活動支援等の重点課題を明示。
 - 四つ目に、未来志向的先進安保体制の樹立と関連して、先進安保能力の拡充、国防経営の効率化、対外軍事協力、包括安保分野の力量具備等の課題を提示。
- 李明博政府の外交安保ビジョンの中で、朝鮮半島の新たな平和構想と関連があるのは、相生・共栄の南北関係運営の為に提示された、朝鮮半島の非核・平和構造の強固化であり、
- この内容をより詳細に見ると、青瓦台は「南北軍事関係は不安な平

和状態」にあり、「平和の基本的条件である軍事的信頼に関する進展が最も不十分である」と判断している。

- 「北朝鮮の核問題は、朝鮮半島の平和を脅かし、統一を阻む最も根本的な軍事脅威」であると看做している。
- よって、韓国は北朝鮮の軍事脅威に対して、徹底した国防準備態勢を構築すると同時に、北朝鮮の核兵器放棄の説得をする一方で、六者会談を通じた国際共助を通して、北朝鮮の核プログラムの通報、検証、廃棄過程を推進するであろうと提示している。

○ 2008年に提示された李明博政府の100大政課題によれば、成熟した世界国家樹立との目的の下に、4つの戦略を提示している。

- 朝鮮半島の新たな平和構造の構築、国益を優先しながら、世界に寄与する実用外交の駆使、堅固な先進安保体制の構築、品格があり、尊重される国家の建設等であり、
- 朝鮮半島の新たな平和構造構築に関連した5大課題を明示しており、一つ目の課題は、北朝鮮の核放棄を持続的に推進することとし、
① 9.19合同声明の全面的理解のための六者会談を推進、② 非核化の第二段階完了と、第三段階への進入、履行に関連した、韓・米・日・中・露間の協力強化、③ 北朝鮮の核放棄に重点を置いた六者会談と、南北関係の相互進展、④ 北核問題の進展のための国内的な関心、及び国際社会の支持獲得努力拡大等の、細部的な実戦事項を2012年の下半期までに完了することを提示している。
- 二つ目の課題は、非核・開放・3000構想の推進として、① 汎政府推進企画団等を通しての5大分野（経済、財政、インフラ、教育、生活向上）別の細部事業推進方案を、2009年の下半期ま

でに整え、②北核問題の進展等に合わせて、対北協議を経た5大分野の事業を、2012年下半年までに段階的に推進することを明示している。

- 三つ目に、韓・米関係を新たなる環境に合わせて発展させる課題に関連し、①李明博政府の初、韓・米正常会談の開催を2008年の上半期に完了し、②韓・米同盟の未来ビジョン樹立原則の合意を、2008年の下半期に完了したとの点を明示しており、③韓・米FTAの早期批准への努力と、④大学生の研修就職プログラムの出帆を、2009年の上半期までに達成しようとしたとの点を指摘している。一方で、2012年下半年までに達成せねばならない実戦事項として、韓・米関係の発展の枠を強固にし、韓・米同盟の未来ビジョン具体化、ハイレベルでの戦略対話の開催、駐韓米軍の基地移転政策協議会の運営を提示している。
- 四つ目の課題として、我が政府は、南北間の人道的問題を解決することを明らかにしている。
- 五つ目の課題として、新アジア協力外交を推進しゆく点を明示している。

- 上のような韓国政府の公式的立場表明による外交安保ビジョンと戦略、及び課題の提示は、現在の韓国の外交安保政策の根幹を成しており、成熟した世界国家の達成のために朝鮮半島の新たなる平和構想を実現することが重要な事案であると指摘している点を見てとることができる。

3. 朝鮮半島の新たな平和構想

- 朝鮮半島の新たな平和構想実現が、李明博政府の政策目標として再び提示されたことは、李明博大統領の第64周年光復節の慶祝辞によるものであった。
- 李明博大統領は、2009年8月15日に「光復の光、さらに大きな大韓民国」との題の下で行われた演説の中で、北朝鮮に対するメッセージを「これからは対話せねばならない時」との小題の下で次のような部分を明らかにしている。
 - 南北が共に繁栄しゆく道を探したいとの前提の下に、朝鮮半島の新たな平和構想を推進しゆくことを明らかにしたものであり、
 - 初めに、「北朝鮮の経済を発展させ、北朝鮮の住民の暮らしを画期的に向上させる国際協力プログラムを積極実行」することを提示
 - 二つ目に、「南北経済共同体の実現のためのハイレベル会議の設置」を提案
 - 三つ目に、「関連国及び国際機構との協力を通して、経済、教育、財政、インフラ、生活向上分野に渡る、対北5大開発プロジェクトを推進」することを提示
 - 四つ目に、朝鮮半島の非核化についての強調
 - 五つ目に、「南北朝鮮の在来式武器の減縮」に対する論理の提案

A. 新たな平和構造の理論的土台

- 李明博政府は、上記のような成熟した世界国家の達成を、韓国外交安保のビジョンとしている通り、朝鮮半島の平和定着は韓国の外交安保政

I

II

III

IV

V

VI

VII

策を推進するための、土台の役割をしていると看做している。

- 朝鮮半島の平和状態は、消極的平和の範疇に属していると言えるように、
 - 韓国と北朝鮮は第2次世界大戦終戦以降、それぞれの国家を朝鮮半島の南側と北側に建設しての対峙状態から、1950年6月25日の北朝鮮の南侵攻によって同民族が互いに争い殺し合う戦争を引き起こしたものであり、
 - 6.25戦争（朝鮮戦争）を終結させる状況として、1953年7月27日に休戦協定を通して停戦体制に突入した状況にある。
 - 北朝鮮は、最近起こった天安艦（哨戒船）事件を含め、引き続き挑発を続けてきており、休戦線を取り囲んで韓国と北朝鮮の対峙状態は持続している状況である。
 - よって、朝鮮半島では、過去60年余りに渡って本格的な戦争が勃発してはいないものの不安定な状況で、北朝鮮は北防限界線（NLL）を取り囲んでの挑発を継続することによって、朝鮮半島が不安定な状態にあるということを持続的に想起させている実情がある。
 - これに加えて北朝鮮は、1980年代末の冷戦の解体及び社会主義圏の崩壊という危機状況にあたり、核兵器開発を本格的に続けている。
 - 事実、北朝鮮の核兵器開発は朝鮮半島の安定を直接的に脅かす事案であるのみならず、東北アジア地域の安保状況を不安定にする重要な事案である。
- これに関連して、朝鮮半島の不安定な平和状態を堅固な平和状態に転換させるために多様な協議や提案があった。

- 1990年代序盤に進められた、韓国と北朝鮮間での基本合意書締結過程においての平和に対する論理と合意は次に示す通りである。
 - 1990年12月13日に合意された『南北韓の和解と不可侵及び交流・協力に関する合意書』の序文では「政治軍事的な対決状態を解消して民族的和解を成し遂げ、武力による侵略と衝突を防ぎ、緊張緩和と平和を保障」するという内容を指摘しており、
 - 基本合意書の第1章、南北和解部分の第5条では「南と北は、現在の停戦状態を、南北間の強固な平和状態に転換させるために合同で努力し、このような平和状態が成し遂げられる時まで現在の軍事停戦協定を遵守する」と明示している。
 - このような基本合意書の内容は現実化されていないのが現実ではあるが、朝鮮半島の平和を強固にせねばならないとの点に、韓国を北朝鮮が合意したということも、厳然とした事実である。

- 韓国と北朝鮮間の合意で指摘された事項以外にも、朝鮮半島の平和を強固にする方案に対しては専門家の中で、主に制度的接近を巡って多くの論議がなされている。
 - 朝鮮半島の平和定着のためには、韓国と北朝鮮間の合意を通して停戦協定を平和協定に転換し、これを周辺国が保障する形態について多様な論議が行われた。
 - 例えば、韓国と北朝鮮間の平和協定を優先視する専門家は、韓国と北朝鮮が一連の協商を経て平和協定を調印した後に、アメリカと中国がそれを保障する「2+2」方式、又は米・中・日・露が保障する「2+4」方式等についての論議が代表的なものである。
 - このような論議によって、北朝鮮の核問題解決を模索する過程では、

韓・北・米・中の四者会談が開催されたこともあり、現在進められている韓・北・米・中・日・露の六者会談の構想を支える見解となっているのである。

- 北朝鮮の核問題解決過程で構想された六者会談では、韓・北・米・中・日・露の六カ国が北朝鮮の核問題を究極的に解決するためには、国際的な多者間安保協力が必要であるとの認識下に、これに対しての合意を導出したのである。
 - 六者会談の参与国は、朝鮮半島の安定が東北アジアの安定の重要な要素であると同時に、東北アジアにおいての多者間安保協力が、朝鮮半島の安定と北朝鮮核問題の根源的な解決の一環をなり得るとの点に着眼し、2005年9月19日に合意した第4次六者会談の合同声明で「六者は東北アジアの恒久的な平和と安定のために共同努力しゆくことを公約」し、
 - 同声明では「直接関連当事国は適切な別途フォーラムにおいて朝鮮半島の恒久的平和体制に関する協商をもつであらう」との点を明示している。
 - また、「六者は、東北アジアでの安保協力増進のための方案と手段を模索することを合意」した。
- このような朝鮮半島の平和を定着させるための合意と提案は、当然南北間協商、又は東北アジア主要国と南北を含む国際的協商過程において導出されたものとし、専門家は制度主義的立場を根幹として様々な方案を提示したものである。

- 他方で、人類社会の歴史的な進行過程において、国際間紛争を防止し、平和を恒久的にする理論的論理が数多く進行している。
 - これに関連して、平和理論の先駆者的位置を占めているガルトウングは、彼の論文『暴力、平和、平和研究』の中で、戦争、テロのような直接暴力に対比させ、貧困、社会不安、否正義、不平等、政治的弾圧、子捨て、疾病の繰り返しを、構造的暴力としての概念を導入した。
 - ガルトウングは、戦争と平和という伝統的な二分法を脱皮し、戦争もなく平和もない状態が、世界的な現実をよりよく反映していると看做し、
 - 「単に戦争がないという意味の平和」を「消極的平和」と定義し、間接的、又は構造的暴力がない状態を「積極的平和」と定義した。

- 以上のような論議を再び整理、及び総合し、朝鮮半島の新たな平和構想の理論的土台を模索すると、
 - 優先的に、朝鮮半島の新たな平和構想は軍事・安般的な側面だけではなく、経済的な側面までも考慮した枠組みの上で推進せねばならないとの点や、
 - 人類文明の根源を脅かす核兵器の開発、又は使用が根本的に許されない原則の下に構成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であろうし、
 - このためには人類歴史上、国際的に受け入れられ、検証された普遍的な価値を志向することが重要である。

- 筆者と共同研究陣が執筆した『新平和構想実現のための戦略と課題』という冊子では、朝鮮半島の新たな平和構想の理論的土台は民主平和論(Democratic Peace)、市場経済平和論(Market Economy

Peace)、非核化平和論(Nuclear Free Peace)の3大軸によって支えられることを提示している。

- 民主平和論の主な命題は「民主主義国家間には、戦争が起こらない」ことであり、民主主義国家は利益の相互衝突を非民主主義国家に比べて武力の脅威や使用なしに解決するとの信念と経験に基礎を置いている。よって、民主主義拡散が国際安保を増進させる重要な連結リングであるため、韓国と北朝鮮が民主主義の価値を尊重することが朝鮮半島の平和の基盤となることである。
- 市場経済平和論は自由な市場経済秩序に基礎を置き、資本主義の発展が平和を恒久化するとの主張として、自由な市場経済を運営する国家は、紛争と葛藤を戦争ではない他の方法を通じた解決を模索するとの点に着眼している。
- 非核化平和論は、アメリカのオバマ大統領が提示した「核兵器なき世界 (A World without Nuclear Weapons)」という主張でも用いられた通り、核兵器は人類を壊滅させる破壊力を保有しているため、全世界的に核兵器をなくさなければならないとの主張に基礎を置いている。事実上、朝鮮半島でも北朝鮮が核実験断行し、核兵器開発を続けている状況であるため、新たな朝鮮半島の平和を模索するためにはこのような平和の要素が極めて重要である。

B. 新たな平和構想の推進目標

- 朝鮮半島の新たな平和構想を推進する究極的な目標は、朝鮮半島の平和を恒久的なものとするために、① 非核・平和、② 開放・改革、③ 開発・協力、④ 統合、統一等の4大目標を設定し、推進することが必要である。

(1) 非核・平和

- 朝鮮半島の新たなる平和構想が追求する基本目標は、北朝鮮の非核化を通じた朝鮮半島の安全と平和を恒久的に堅持することである。
 - 北朝鮮の核保有は、朝鮮半島内での不可逆的な軍事的不均衡を招来し、軍事的葛藤と脅威を高潮させる。
 - 完全な非核化のみが真の意味での朝鮮半島の平和を担保する。
 - 不可逆的な軍事的不均衡を解消するための第一歩は、北朝鮮の完全なる非核化である。
 - 非核化が前提とされない軍備統制及び軍備減縮は無意味である。
 - 真の意味での朝鮮半島の平和が完成されるための礎が軍事的な緊張緩和である程に、恒久的な朝鮮半島の平和を堅持するためには、何よりも北朝鮮の非核化問題が完全に解決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 北朝鮮の非核化と共に、在来式武器の減縮は南北韓の軍事的緊張を緩和するにあたって、また一つのモーメンタムとなることである。

- 非核・平和は北朝鮮の核廃棄を通じた平和、即ち「非核化平和」と、これを超えての南北関係の構造的葛藤要因が除去された「積極的平和」という新たなる平和構想が追求する、新たな平和概念に基盤をおく。

(2) 開放・改革

- 北朝鮮経済が直面している、全般的な危機を克服するためには、開放と改革が必須である。

- 北朝鮮の経済状況は、現在の経済体制を固守する限り、改善される余地はない。
 - 北朝鮮の経済の失敗は、産業部門全般に渡る成長と生産体制の崩壊という悪循環が複合的に適用されることで表われる経済体制事態の失敗である。
 - 供給不足と生産性の問題が根本的に解決されない限り、北朝鮮経済の回生は程遠い。
- 北朝鮮が直面している経済難を克服するためには、北朝鮮政府の自発的で革新的な解放と改革政策が何よりも先行しなければならない。
- すでに多くの社会主義圏国家が開放と改革を通して激甚な経済危機を克服した。
 - 社会主義経済体制の限界を克服するための経済政策の改革が、何よりも急務である。
- 世界経済体制への編入は、北朝鮮経済の改革を伴う程に経済問題の解決の重要なモーメントとなりうる。
- 北朝鮮の開放とは、結局のところ国際社会への編入を意味する。
 - アメリカ及び日本との修好を通しての世界体制への編入なしには、閉鎖体制を維持したままで北朝鮮の経済問題を解決することには限界がある。
 - これは、単純な経済的開放を超えて、米・北関係及び北・日関係の正常化を含む広義の開放を包括しているものである。
 - 北朝鮮の非核化と開放を通じた北朝鮮の国際社会編入は、北朝鮮体制の崩壊の脅威を減少させる純機能を果たすであろう。

- 「開放・改革」は、「開発・協力」と共に自由に基づいた資本主義の発展が平和を促進し、戦争を抑止するという「市場経済平和論」と国際社会の信頼と協力の中で、朝鮮半島での「持続可能な平和」を追求するとの意味において、新たな平和構想の平和概念を具体化させるための目標である。

(3) 開発・協力

- 単純な経済危機克服を超えて、北朝鮮経済の成長基盤を構築し、北朝鮮の住民たちの生活を向上させるためには、経済及び社会全般に対する開発プログラムが必要である。
 - 社会間投資資本施設の拡充に終わるのではなく、北朝鮮住民に対して人道的な危機が再発しないようにするための社会開発プログラムが必要である。
 - 北朝鮮住民の生活の質を改善するための生活環境改善プログラムは勿論のこと、開放と改革の時代に合わせた各種の教育プログラムの開発も急務の事案である。
- 北朝鮮開発プログラムを推進する過程において、南北協力、国際協力、南北協力と国際協力間との連携は必須的である。
 - 多様な北朝鮮開発プログラムを、特定の主体単体の力のみでは解決することができない。
 - プログラムの開発、資本の拡充、プログラムの教育及び実施過程において、それぞれの力量を最適化できる組み合わせを探し出して構成することが必要である。

I

II

III

IV

V

VI

VII

- 南北と国際社会間との協力は勿論のこと、開発プログラム事業間での緊密な協力が成されてこそ、北朝鮮発展のシナジー効果を創出することができるであろう。

(4) 統合・統一

- 新たなる平和構想が追求する平和は、「統一志向的平和」である。また、統一韓国が追求する平和は、どこまでも自由民主主義国家を想定しているだけに、「民主平和論」を基盤としている。よって、「統合・統一」は、新平和構想の最終的な志向点であるといえることができる。
- 朝鮮半島平和構築の究極的な目標は統一である。
 - 短期間内に達成できる目標ではないが、政策の方向性を設定し、未来像を提示するとの側面において、統一志向性を排除する必要はないであろう。
 - 既存の統一論議が方向性の提示に終わっていたのであれば、これからは統一韓国のデッサンを描かねばならない。
 - 統一韓国の政体、経済、社会文化制度についての全般的で具体的なシナリオ提示、及び検討作業を持続的に推進する必要がある。
- 統一と統合が共に論議され、進行してこそ、真の意味での統一が可能である。
 - 外形的な統一は成されたとしても、南北住民間での統合が成されなければ、統一はまた異なった苦痛を伴わざるを得ない。

- ドイツの事例からわかるように、外形的な統一よりも、統合がより長い時間と多くの資金、努力を要するように、統一以降の統合のための準備を疎かにしてはならないであろう。
- 統一の目的が南北住民の「幸福」のためのものであることを、明らかにせねばならない。
- 分断の苦痛解消及び民族構成員間での和解のための、社会・文化交流協力を持続的に推進して行かねばならない。

C. 新たなる平和構想推進方向

- 新たなる平和構想の推進方向は、統一部が、以下のように設定した李明博政府の対北政策推進の基本方向と脈絡を共にするものとする。
 - 和解と協力の精神を基とした、実用と生産性の追及
 - 原則を徹底しながらも、柔軟な接近
 - 国の合意に基づき、透明な政策を推進
 - 国際協力と南北協力の調和
- 統一部の対北政策推進基本方向をより詳細に見ると、次の通りである。
- 実用と生産性とに関連して、南北関係は理念の基準ではなく、実用の基準として適用し、南北関係の発展と平和増進の努力を、一貫性を持って推進するということ。
 - 実用と生産性を判断するための具体的な基準
 - 国民は同意したのか。
 - 北朝鮮住民の暮らしの質工場に実質的に寄与するのか。

- 費用に対して成果はあるのか。
 - 北朝鮮の発展を促進するのか。
 - 平和統一に寄与するのか。
- 原則に徹底しながらも柔軟な接近に関連して、北朝鮮の核は必ず廃棄されねばならず、真正性があり内実のある対話を推進するとの原則を徹底して守りながらも、接近方式は現実を考慮しながら柔軟に行うということ。
- 国民の合意に関連して、政策の全過程において国民の参与が為されるようにし、国民の意見を幅広く収斂し、国民の合意に基づいて政策を推進するということ。
- 国際協力と南北協力の調和に関連して、朝鮮半島の問題は南北の問題であると同時に、国際的な問題であると認識し、南北協力が国際協力との調和を成し遂げるようにすることであり、六者会談を通して北朝鮮の核問題を平和的に解決すると同時に、南北関係が北の核問題の解決を促進するようにすること。
- このような脈絡から見ると、新たな平和構想の推進の為には韓国が先導的な代案を提示し、国際社会の共感を得ると共に、北朝鮮に受け入れさせることが重要である。
- また、北の核問題解決の為に、国内の様々な論議構造を体系化すると同時に、これらの間の共助体制を強化することが重要である。

- 一方、北朝鮮問題解決の為の国際共助も、単一の形式に執着する必要はなく、多様な協議体制を複合的に活用するという、思考の転換も要求される。

- このような基本的な推進方向のもとで、朝鮮半島の新たな平和構想を推進する為の方向設定の為に、李明博大統領が光復節の慶祝辞の中で明らかにした5大政策提案内容の、推進方向を示すと、次の通りである。

- 北朝鮮の経済発展と、北朝鮮の住民の暮らしを向上させる国際協力プログラムの実行に関連して、優先的に北朝鮮を国際金融機構の支援を受けて、国際社会の一員となれるようにすることが重要である。
 - 北朝鮮は核兵器等の大量殺戮兵器の開発と拡散を持続する事で、現在国連やアメリカ等からの西側諸国からの制裁を受けており、
 - 優先的に北朝鮮の核兵器開発の放棄させることが大切であり、
 - 国際協力プログラムを北朝鮮住民の生活の質の向上に適用する為には、北朝鮮が国際社会の規範に従うという意志が先行せね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である。

- 南北経済共同体実現の為の、ハイレベル会議の設置問題は、南北韓の真正性のある対話を通して北朝鮮に提示し、南北韓の間の実質的な経済統合に向けた青写真を南北が共に作り上げて行かねばならない。
 - 北朝鮮は開放以降、幾度にも渡って経済改革と開放を試みたが、根本的な解決策よりは、制限的な改革と開放政策のみを駆使して来た為に失敗した。

- 韓国は北朝鮮の最も重要な経済協力対象である為、韓国と北朝鮮が協力して北朝鮮の経済発展戦略を樹立、施行すれば、北朝鮮の経済回生は難しいことではない。
- 関連国及び国際機構との協力を通じた経済、教育、財政、インフラ、生活向上分野に渡る対北5大開発プロジェクトの推進に関連し、実用と生産性の原則に依拠して優先順位を決め、国際社会との協力を推進せねばならない。
 - 北朝鮮の経済開発の為には、北朝鮮が市場経済体系を導入し、経済的に投資環境を改善する事で国際社会に、北朝鮮を魅力のある投資対象として認識させることが重要である。
 - 北朝鮮の開発には、莫大な財源が必要であり、韓国の開発経験と資本、及び国際金融機構の財政的支援等、多様な財源を効果的に使用できるようにする方案の準備が必要である。
- 朝鮮半島の非核化問題は、六者会談を通して推進されながらも、南北対話の中でも北朝鮮の誠意ある姿勢を持続的に追及せねばならない。
 - 北朝鮮に核兵器開発を放棄させる為には、六者会談を通じた誘引策の提供と共に、国際的圧力が並行されなければならず、
 - 南北対話を通して、北朝鮮の核兵器の保有は北朝鮮の安保と経済の役には立たないと点を持続的に説得する必要がある。
- 南北の在来式武器の減縮問題に関連して、包括的な南北間の信頼構築の次元において、漸進的に南北対話を通して推進せねばならない。
 - 北朝鮮は先軍政治を掲げ、軍隊の重要性を強調する政策を継続しているため、北朝鮮の核兵器と共に、在来式武器による脅威は現実

的なものである。

- 韓国は、国防先進化を通して北朝鮮の脅威に徹底的に備えねばならず、南北対話を通じた信頼構築と、在来式武器減縮の協商を可能な限り早期に始める必要がある。

4. 結論

- 朝鮮半島の新たな平和構想を実践する為には、韓国の対外関係がより重層的で複合的に構成されねばならず、内容的には伝統的な外交・安保の枠組みに加えて新たな領域に対しての接近を含む、韓国の先導的な役割が要求される。
 - 韓国の対外政策は、周辺四カ国を中心として形成されていると言えるので、韓国の外交力強化のために2010年、G-20会議を契機に中堅国家としての位相を確保することが重要である。
 - 既存の両者間系を中心とした外交に加え、多者的な接近を複合的に活用する対外政策の発展が必要である。
 - 韓国は分断国家として安保的な問題を重要視せねばならないが、韓国が有する魅力である民主主義と経済発展を同時に達成した国家のイメージを利用して、の外交力の拡充が重要である。
- 新たな平和構想実現の為の、友好的な国際環境を助成する為には、韓・米共助と、韓・中協力を同時に深化させねばならず、
 - これから進行するG-2時代に備えた均衡感のある韓国の対外政策の整備と実行が必要である。

I

II

III

IV

V

VI

VII

- 李明博政府の100大政課題は、韓・米関係を新たな環境に合わせて発展させることを含んでおり、韓・米同盟の未来ビジョンを具体化してのハイレベルな戦略対話の開催を指摘しており、
 - 韓・中の中の新協力体制を構築する為に、互恵的な経済・通商協力の拡大と、両国関係においての葛藤要因の安定的な管理、北朝鮮核問題の解決及び北朝鮮問題に関連した協力を図ることを目標としている。
- 新たな平和構想実現の為に、重層的で複合的な多者関係の形成が必要であり、
- 李明博政府の100大政課題は、東アジア地域の戦略的パートナーシップと、経済・安保・文化の共同体を構築する事を含んでおり、
 - 4強の他にも、東南アジア・西南アジア地域内の主要国別オーダーメイド型戦略を樹立して推進すると同時に、
 - 地域多者協議体を韓国内に積極的に誘致し、
 - 東アジア協力安保体制構築を推進し、
 - 東アジア共同体発展の触媒として、文化的な疎通及び協力を推進する事を明示している。
- 新たな領域の発掘と接近に関連して、李明博政府はエネルギー協力外交の強化と、地球村問題の解決に寄与、及び人権・文化外交の強化を100大課題として設定しており、次のような細部事案を明示している。
- エネルギー協力外交に関連し、① エネルギー協力ベルトの構築、② エネルギー協力外交のインフラ強化及び海外資源開発企業の支援、③ 資源不足国との友好協力関係強化及びエネルギー関連国際活動の強化。

- 地球村問題の解決寄与に関連し、① 寄与外交の為の対外開発援助拡大、② 国際平和維持活動の強化。
 - 人権・文化外交の強化に関連し、① 国連人権理事国としての活動強化、② 人権と民主主義増進の為の国際社会の努力に積極賛同、③ 資源富国を対象とした文化外交の展開。
- 新たなる平和構想の実現は、北朝鮮の改革と開放を促進し、北朝鮮住民の生活の質を向上させることが重要である。
- 人類の普遍的価値として定着した、民主主義と市場経済による国家経営という世界的な趨勢から遅れをとった北朝鮮の現政権を、国際社会の一員として責任ある行動をとるように働きかける、根本的な接近が必要。
- 朝鮮半島の新たなる平和構想を通して朝鮮半島の問題を解決する事は、韓国が分断を克服し南北統合を実現する過程において、朝鮮半島がアジア及び世界平和の障害要素ではなく、国際社会が共感する平和定着の模範事例となる可能性があるという事であり、今後も持続的に一貫して推進することが重要である。

Ⅲ. 党代表者会の開催と 金正恩の公式化

磯崎敦仁

(慶応義塾大学専任講師)

1. はじめに

建国以来、北朝鮮の実質的な最高指導者は金日成主席、金正日国防委員長の二人しか存在せず、その「血統」や「家門」が強調され続けてきた。2010年「9月上旬」には実に44年ぶりとなる党代表者会が招集されると発表され、三代目を公式化するための舞台ではないかと観測された。しかし、招集予定の「9月上旬」になっても開催されることはなく、事実上の延期となった。本報告では、最近の北朝鮮政治動向を振り返り、『労働新聞』の論調をもとに党代表者会招集の意義や延期の背景を探る。

2. 安定志向の新年共同社説

北朝鮮が毎年元旦に発表する、党・軍・青年団体機関紙による共同社説は、「金正日総書記の挨拶」とされ、同国の一年を占う重要な分析素材である³。

2010年の共同社説は、例年に比べると、北朝鮮らしい威勢を感じさせない、穏やかで現実的なトーンであった。共同社説は表題から「人民生活向上において決定的転換をもたらす」ことが訴えられており、従来のスターリン型の重工業、国防経済優先路線からすると、2010年は人々の歓心を買う方向への転換を鮮明にしたといえる⁴。なかでも軽工業と農業が重点課題とされた。一方、国家活動の指導的指針とされる「先軍思想」に関する

3. 拙稿「北朝鮮の「多元主義」一弛緩と抑制」、『東亜』、No.476 (2007年2月号)、24-34頁；拙稿、「2010年の北朝鮮を展望する 権力継承意識し安定志向一現実的トーン目立った新年共同社説」、『金融財政business』、No.10054、(2010年1月25日号)、10-14頁。

4. “党創建65周年を迎える今年にもう一度軽工業と農業に拍車をかけ人民生活で決定的転換を成し遂げよう”、『労働新聞』、2010年1月1日付。

言及は激減し、表面的には政治・思想色が薄まった。2009年及び2010年、金正日国防委員長は健康不安説を一蹴するかのように、過去にないほど旺盛な「現地指導」を行ったとされているが、その多くは従来重視されてきた軍への視察ではなく、「人民生活向上」に直接関係した工場や農場などへの訪問であった。

金正日国防委員長が後継者としての足場を固めはじめた1970年代と現在の状況を対比する表現も見受けられた。後継者問題の進展を直接的に示唆するものではないが、水面下では準備が着実に進められているものと考えられた。後継者問題はその特異な体制を維持していくための根幹的な課題である。それを円滑に解決するためには、たとえ暴力装置で制御できる術を有しているにせよ「人民生活向上」という肯定的背景があったほうがよい。

2009年の共同社説のキーワードであった「自力更生」には一言も触れられず、代わりに「対外市場を拡大して対外貿易活動を積極的に展開」することが示された。中国への一国依存を避けながらそれを実現するためには、経済制裁の解除が必須で、対外政策の行方が注目される表現であった。

2009年は「朝鮮半島の非核化実現」について共同社説で初めて言及したが、2010年はその方途が米国との「対話と交渉」にあると一步踏み込んだ。韓国に対しても「関係改善」を呼び掛けている。このように対米、対韓関係を好転させたいとする意思も「人民生活向上」、ひいては体制の安定的維持という課題に従属するものととらえるべきだろう。例年、対外関係への言及が共同社説の末尾に配置され、割かれる字数がわずかであることもそれを物語っている。

そして、2010年10月に後継者問題に関連するような大行事が準備されるのではないかと観測が出てきたのも、この新年共同社説からであった。

- ・誇らしい労力的成果を抱いて10月の大祝典場に入っていく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 ・慶事となる10月の空に押し寄せる荘嚴な祝砲声は党に従って先軍の道を最後まで行くこととする千万軍民の誓いの祝砲声として、全人民が真の社会主義福を享受する歡喜の祝砲声として全世界を震撼させるようになるであろう⁵。

3. 正恩氏の浸透

今回の後継者問題の特徴は、後継者が金正日国防委員長の三男・正恩氏であるという確実な証拠はないものの、それを疑う材料も出てきていないということにある。わが国において、正恩氏が後継者と確実視されるようになった背景を整理しておく⁶。

第一に、正恩氏を称賛したとされる歌謡「パルコルム」である。日本語では足音ないし足取りなどと訳されるこの歌の歌詞を見ると、「金大将」なる新たな人物が「2月」に誕生した金正日国防委員長の「偉業を受け継いで」浮上してきたことがわかる。

パルコルム（足音／足取り）

3 タッタッタッタ足音 わが金大将の足音

2月の偉業を受け継いで 前へタッタッタ

足音足音 より高く鳴り響いて 燦然たる未来を繰り上げてタッタッタ

5. 前掲、「党創建65周年を迎える今年にもう一度軽工業と農業に拍車をかけ人民生活で決定的転換を成し遂げよう」。
6. 詳細は、拙稿「北朝鮮メディアが暗示する後継者の存在—2009年の「キム正恩」」『紀要国際情勢』, No.80、93-107頁。

2009年2月23日の初報道（朝鮮人民軍第264大連合部隊芸術宣伝隊の公演）以降、同年5月25日の軍三重三大革命赤い旗柿の木中隊軍人の芸術小品公演等、北朝鮮メディアにたびたび登場しており、6月17日には日本テレビが平壤市内で撮影した映像を放映し、歌の存在及び歌詞とともにメロディーが初めて確認された。しかし、これでは「金大将」が長男・正男氏、二男・正哲氏、三男・正恩氏のいずれを示すのかが判然としなかった。

そこに新たな証言をしてきたのが、「金正日の料理人」藤本健二氏であった。2009年7月4日、日本テレビ放映番組において、1992年1月8日、正恩氏9歳の誕生日に普天堡電子楽団の李鍾吾7氏が発表し、当時は「金大将」の部分が「小さい大将」と歌われた、と述べたのであった。金正日国防委員長が幼い子供達を「大将」などと呼んで遊んでいた、との従来証言とも矛盾しないものであった。その後7月20日のNHK総合テレビのニュース「北朝鮮『キム大将』称賛の歌」は、「パルコルム」の歌詞が掲示された宣伝画において、「金大将」の部分が太字で書かれていることを明らかにした。「金大将」が金日成主席、金正日国防委員長に匹敵する人物として扱われているということであった。

第二に、正恩氏27歳の誕生日とされる2010年1月8日の報道ぶりである。太陽節（金日成主席誕生日）や党創建記念日といった祝祭日にしか流れなかった「祝杯を挙げよう」なる歌が、普通の金曜日であるはずの同日、北朝鮮のテレビやラジオで繰り返し放送されたのであった。

7. 李鍾吾は、「口笛」や「あなたがいなければ祖国もない」等を作曲したことで知られる。

祝杯を挙げよう

3 同志よ祝杯を挙げよう 誓いの祝杯を挙げよう

われわれは永遠に党に従い 戦って勝つ

祝杯 勝利の祝杯 祝杯 喜びの祝杯

嚮導の党のために祝杯を挙げよう

さらに、同日付の『労働新聞』1面トップは、「偉大な指導者金正日同志に日本の著名な植物学者加茂元照が珍しく貴重な植物達を贈り物に送ってきた」と題する記事であった。加茂氏は金正日花を贈呈したことで、北朝鮮では広く知られる人物である。また、金正日国防委員長のお気に入りとする論説員による2面掲載の政論も目を引いた。ここでも新年共同社説同様、党創建65周年を迎える10月が重視されているが、9月ないし党代表者会開催を示唆する言及はない。

- 山河は白い雪に覆われても、われわれの胸には五穀百果が実って祝砲が爆発する10月、10月がざわめく。
- 1月の山の頂から10月の祝砲を思い浮かべてみて、2012年の勝利、後孫万代を見通すわれわれには將軍男児の抱負と愛国精神が胸いっぱい抱かせてくる⁸。

第三に、宣伝画の写真と「内部文書」の入手である。台湾人が元山を旅行した際に写したとされる写真がインターネットで公開された。そこには「パルコルム」の歌詞とともに、「將軍福、大將福」、「万景台血統、白頭の血

⁸ 董泰官，“政論—嚮導の党のために！”，『労働新聞』，2010年1月8日付。

統を継いだ青年大将金正恩同志」などと書かれていた。また、毎日新聞が「尊敬する金正恩大将同志の偉大性教養資料」と題する「内部文書」を入手したとして、その全文訳をウェブ上で公開した。中日・東京新聞も同様の文書画像を入手したとしている⁹。

その他、親北朝鮮的といわれる韓国の月刊誌『民族21』2009年6月号が特集で、北朝鮮ではタブーとされるはずの後継者問題を正面から扱い、正恩氏が後継者に決定した、と報じたことや、2009年6月初旬に正男氏とみられる男性に日本テレビ、テレビ朝日がそれぞれマカオでインタビューを行い、「後継者は正恩氏と聞いている」といった発言が報じられたことも、正恩氏後継説の追い風となった。

4. 活発化する人事

2010年5月18日、朝鮮中央通信は、「最高人民会議第12期第3回会議を6月7日に招集」するといふ5月17日付常任委決定を報じた。前回会議から2カ月ぶりの異例の招集であった。代議員選挙直後の第1回会議を除き、決算・予算を扱わない臨時的な開催は、1972年の憲法改正以降4例だけしかない。いずれも副主席ないし総理の変更を含むものであった。第12期第3回会議も、張成沢党部長が国防委副委員長に就任し、総理交代が行われたため、まさに前例どおりだったといえる。しかし、議題が人事のみだったのはこの会議が初めてであった¹⁰。

2カ月ぶりの最高人民会議開催も異例であったが、それに先立って報じら

⁹ 城内康伸、「正恩氏「後継」文書―北朝鮮一般党員が学習」、『東京新聞』2010年9月19日付。

¹⁰ 最高人民会議については、拙稿“最高人民会議の役割―北朝鮮の「最高主権機関」”，『現代韓国朝鮮研究』，第7号、58-70頁。

れた、金鎰喆次帥の解任も異例な形で行われた。5月13日付の国防委員会決定第06号によって、「年齢上の関係（80）で国防委員会委員、人民武力部第1副部長の職務から解任された」とされたのである。80歳という年齢も挙げながらの解任発表だったため、直後の最高人民会議で趙明禄第一副委員長を引退させる布石かとも観測されたが、そのようにはならなかった。国防委員会は、委員長-第一副委員長-副委員長-委員数が1-1-4-6の12人体制となった。

略歴が公表された、新総理の崔永林氏(79)以下、新副総理の姜能洙氏(80)、李泰男氏(71)、金榮熙氏(76)、全夏哲氏(82)、新副総理兼機械工業相の趙炳珠氏(67)、新副総理兼電子工業相の韓光福氏(64)といった顔触れは、長年にわたる独裁体制の弊害ともいえる人事の膠着ぶりを示すものであった。その他、同会議では、軽工業相、食料日用工業相、体育相も交代している。このような大幅な人事は、2008年末からの内閣人事を皮切りに断続的に行われており、党代表者会招集もその延長上にあると考えられる。人民保安部、人民内務軍といった組織の名称変更や改編も進められてきており、党組織の改編、党規約の改正可能性も想定内であった。

2009年2月19日には、呉克烈大将が国防委副委員長に就任している。この決定は、「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国防委員会朝鮮労働党中央軍事委員会 委員長 金正日」の名によるものであった¹¹。金日成主席死後、金正日国防委員長が党中央軍事委員長に就任していることが判明したのはこの報道が初めてであった。この頃から党代表者会の開催を模索しはじめたかどうかは全く不明であるが、党の再整備を視野に入れはじめた措置と捉えうる。

¹¹ “偉大な領導者金正日同志の名義にされた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国防委員会、朝鮮労働党中央軍事委員会決定”，『労働新聞』，2009年2月21日付。

5. 党代表者会招集

2010年6月26日付『労働新聞』は、1面トップで、「朝鮮労働党代表者会を招集することについて」という同月23日付「党政治局決定書」を発表した。

- 党中央委員会政治局は、主体革命偉業、社会主義強盛大国建設の偉業遂行で決定的転換が起きているわが党と革命発展の新たな要求を反映して、朝鮮労働党最高指導機関選挙のための朝鮮労働党代表者会を主体99(2010)年9月上旬に招集することを決定する¹²。

1980年10月14日に最終改正されたとされる党規約によれば、「① 党中央委員会は、党大会と党大会の間に党代表者会を招集することができる。② 党代表者会の代表者の選挙手続と代表者選出比率は、党中央委員会が決定する。③ 党代表者会は、党の路線と政策及び戦略戦術に関する緊急の問題を討議決定し、自己の任務を遂行できない党中央委員会委員、候補委員又は準候補委員を除名してその次員を補選する。」(第30条)。今般党代表者会では、「党最高指導機関選挙」のみ議題として明示されていることが特徴的である。党代表者会や党大会では中央委員が選出されることから、従来は「党中央指導機関選挙」と表現されており、「党最高指導機関」が何を指すのかは実際に党代表者会が開催されないとわからないものであった。

¹² “23日発表された朝鮮労働党代表者会を招集することについての朝鮮労働党中央委員会政治局決定書”，『労働新聞』，2010年6月26日付。

党代表者会は過去2回開催されたことがある。1958年3月3日から6日にかけて行われた第1回党代表者会の招集は、1957年10月の第3期10月全員会議で、1966年10月5日から12日にかけて開催された第2回党代表者会は、1966年3月から4月の第4期第13回全員会議でそれぞれその招集が決定していることから、2カ月半前の招集発表となった今回は、その「緊急」性において前例を上回るものであった。

6月7日の最高人民会議では「党政治局の提議」により総理が交代したが、今般党代表者会の招集も「党政治局決定書」によるとされたことは注目に値する。中央委全員会議閉会中に権限を代行すると規定されているとはいえ、ここにきて急浮上したことは、政治局が「党最高指導機関選挙」の焦点の一つになるであろうことを想起させた。

一方、党代表者会に代表者を送るための、地方レベルの代表会は1997年にも開催されていた。1997年9月21日、党平安南道委代表会で金正日国防委員長を総書記に推戴する決定書が採択されたのを皮切りに、9月22日には軍党代表会でも決定書を採択、10月8日に党中央委・党中央軍事委の「特別報道」が出されて金正日国防委員長が党総書記に就任したのであった。中央レベルの党代表者会は開催されておらず、このプロセスについて同年10月10日付『労働新聞』は、金正日総書記は「実務的手続きなし」に選出されたと説明している。ということは、今般党代表者会の開催は、まがりなりにも「選挙」を行うという、「実務の手続き」にこだわったものといえる。

2010年6月30日には代表者会に関する初めての社説が掲載された。

- ・今回招集される朝鮮労働党代表者会は、主体革命偉業、社会主義強盛大国建設の偉業遂行で決定的な転換が起こっているわが革命発展の新しい要求に合うように党を強化し、その領導的機能と役割をいっそう高め、祖国と民族の燦然たる未来を切り開く上で大きな意義を持つ政治的出来事になる。
- ・朝鮮労働党第6回大会が行われたときから今日に至る30年間は、金正日総書記の精力的な指導の下、わが党の強化発展で根本的な転換が起こり、革命と建設のすべての分野で偉大な勝利と成果が収められた誇り高い路程であった。
- ・偉大な金正日同志を首班とする党中央委員会を命で死守し、党中央の周囲に団結し、団結し、また団結しなければならない¹³。

7月4日付『労働新聞』は、「朝鮮労働党代表者会を高い政治的熱意と輝かしい労力的成果で迎えよう」とのスローガンを提示した。これらにより、「9月上旬」の党代表者会は、党大会に代わりうる、党大会に匹敵する会議であることが明確となった。そのように考えると、党の大規模会議としては前回の党大会から数えて30年ぶりということができる。

前回の第6回党大会は、1980年10月10日から14日にかけて開催されており、3,220名の代表が参加したとされる。①金日成総書記による党中央委事業総括報告、②党中央検査委事業総括報告、③党規約改正、④党中央指導機関選挙（委員145名、委員候補103名）の四議題が扱われ、最終日に開催された党中央委第6期第1回全員会議で金正日氏が政治局常務委員、書記、中央軍事委員に選出された。結果的に金正日氏の公式化、デビューのための大会であったと解釈される所以であ

¹³ “社説—朝鮮労働党代表者会を高い政治的熱意と輝かしい労力的成果で迎えよう”，『労働新聞』，2010年6月30日付。

る。だからこそ、今般党代表者が、正恩氏公式化のための招集ではな
いかとの見方が有力視されたのであった。

6. 党代表者会に関する『労働新聞』論調

44年ぶり、30年ぶりの大会議開催という手間、コストを考えても、今般党
代表者会は後継体制の整備に直接関連ありと考えるのが素直な見方であっ
た。2008年夏から健康悪化が指摘されてきた金正日国防委員長にとって
何よりも優先されるのは体制の維持であり、それは後継体制の整備を意味す
る。党代表者会の開催日程さえ正確に伝わってこない状況の下、そこで何
が決定されるのかという「情報」を入手して精査することは望めない。しか
し、『労働新聞』の論調は、非常に特徴的な変化を見せており、一つのヒ
ントになりうると考えた。

第一に、党代表者会を党大会に匹敵する大行事として掲げるとともに、
『大祝典場』とされる10月10日の党創建65周年と常に並列させて『慶事』
としていた¹⁴。7月後半には党代表者会に向けた決起集会も相次いで開催
されている¹⁵。『党最高指導機関選挙』というように、人事が議題であるとき

¹⁴ 政府機関紙『民主朝鮮』でも同様の傾向は見られる。例えば、“政論—栄光のその日
に向かって”，『民主朝鮮』，2010年7月11日付は、『党代表者会をわが党と祖国史に未永
く輝く慶事として意義深く迎えようと全国が立ち上がっている』としながら、『波瀾万丈の人
類の政治史を顧みると、首領の党として歴史の舞台に出現しながらも指導の代を正しく継
承できなかったため後世が災いを被ら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悲劇が記録されている』などと
述べている。

¹⁵ “朝鮮労働党代表者会をわが党と祖国青史に長く輝く慶事として意義深く迎えるための決起
集会—四大先行部門工場、企業所で進行”，『労働新聞』，2010年7月15日付；“朝鮮
労働党代表者会を迎え人民生活向上のための大高潮の熱風を強く起こそう—軽工業、
農業関連部門単位で決起集会進行”，『労働新聞』，2010年7月17日付；“経済強国建
設で誇らしい成果を成し遂げて党代表者会を意義深く迎えよう—各地工場、企業所で決
起集会進行”，『労働新聞』，2010年7月18日付；“朝鮮労働党代表者会を高い政治的熱

れているにも拘わらず、年一回以上開催されている最高人民会議などとは全くの別格扱いである。

第二に、正恩氏の名や後継者問題についての直接的言及は皆無だが、前年同時期と比べて格段にそれを示唆する表現が増えている。その傾向は7月、8月になるにつれ強まり、「金日成民族」、「金日成朝鮮」や「革命の継承」がことさらに強調されるようになった。金正日国防委員長が最終的にいかなる判断を下すかは知る由もないが、北朝鮮国民に講読義務が課されている『労働新聞』を通読する限り、正恩氏がしかるべき地位に「選挙」されることを当然と受け取らせるような雰囲気醸成しているといえた。

第三に、党代表者会開催に至るプロセスがある程度公表されている点が挙げられる。8月26日からは、「最近、市(区域)、郡党代表会が進行」されていると報じられるようになり、その後の省庁レベル、道レベルの党代表会開催については比較的具体的に報じられている¹⁶。9月6日には、「われわれの代表者達が革命の首都平壤へ入っている」と報じられた¹⁷。しかし、9月14日の社説を最後に一気にトーンダウンする。9月15日から台風被害を

意と輝かしい労力の成果で迎えるために総突撃前へ—科学、教育、保健、商業部門で決起集会進行」、『労働新聞』、2010年7月20日付。

¹⁶ 例えば、“偉大な金正日同志を朝鮮労働党代表者会代表に推戴することはわが党の人民の最大の栄光—朝鮮労働党黄海北道、黄海南道、南浦市代表会進行”、『労働新聞』、2010年9月1日付。“敬愛する金正日同志をわが党の最高首位に変わりなくお仕えすることは千万軍民の最大の栄光、最大の幸福—朝鮮労働党平壤市代表会”、『労働新聞』、2010年9月2日付によれば、平壤では8月28日人民文化宮殿で代表会が開催されたという。“敬愛する金正日同志の領導に従って白頭で開拓された主体革命偉業を主体革命偉業を輝かしく完成しよう—朝鮮労働党慈江道、両江道代表会進行”、『労働新聞』、2010年9月3日付も両道での8月28日開催と明示。代表会は軍で開催された(“全人民軍将兵達の熱花のような忠情の心を込め最高司令官金正日同志を朝鮮労働党代表者会代表に高く推戴—朝鮮労働党代表者会代表者選挙のための朝鮮人民軍代表者会進行”、『労働新聞』、2010年8月27日付)。

¹⁷ 李東賛，“政論—偉大な嚮導者”、『労働新聞』、2010年9月6日付。

報じ始め、9月17日には3週間以上も前に送られたはずの友好国シリアからの慰問電文を紹介する等、「9月上旬」に開催されなかった背景に洪水があることを示唆しているように見受けられるが、その後の表現でも中止ではなく延期であることが読みとれる。一方、後継者の存在を暗示するような論調も見られなくなってしまった。

以下、いくつか具体的な論調を紹介する。

□ 2010/7/13 『労働新聞』 「偉大な党に従って総進軍前へ！」

- われわれは、遠からず朝鮮労働党の歴史に特筆すべき出来事として、 永く輝く党代表者会を迎える。
- 全国の党員の心が勝利者の大祭典へと向かっているので、党代表者会は誇らしい勝利者の大会合として盛大に慶祝されるであろう。

□ 2010/7/22 『労働新聞』 「社説——心団結の威力で党代表者会を意義深く迎えよう」

- 今回招集される朝鮮労働党代表者会は、われわれの一心団結の威力を誇示する意義深い契機になる。
- わが人民は 1966年10月に開催された党代表者会を迎え、自力更生の革命精神で7カ年計画遂行の炎を激しく入れて、朝鮮労働党第6回大会が開かれた時には社会主義大建設の一大熱風を起し、至るところに労働党時代の記念碑的創作物を数多く建てた。
- 偉大な金正日同志は、朝鮮労働党の代表者、領導者であられ、わが一心団結の唯一中心であられる。

I

II

III

IV

V

VI

VII

□ 2010/7/22 『労働新聞』 方城華 「政論—白頭山青春叙事詩」

- 偉大な領導者金正日同志は次のように指摘された。「世代を継いで遂行される革命偉業を中断なく粘り強く前進させて完成していこうとするならば、新たな世代の青年達が前世代の革命精神を受け継ぎ、先行世代が成し遂げた闘争業績を固守して継承発展させ、絶えず新たな勝利を成し遂げていかねばなりません。」
- 革命の継承は思想と精神の継承であり、その思想と精神で充満した世代の継承である。
- 白頭青春、これは朝鮮の青年達が革命の大をいかなる思想と精神で継いでいかを祖国と歴史の前に世代の本分を何と自覚しいかに果たしていくかを語ってくれる継承者の宣言である。

□ 2010/7/24 『労働新聞』 李東賛 「政論—革命同志」

- 今まさに近づいてくる9月の事変を待ち東西海の青い水も激情に波打って白頭の天鯉樹海も昼も夜も眠れずに寝られない。
無数で苦しい歴史の峻嶺を越えて、われわれの革命は強盛大国建設偉業の分水嶺を迎える決定的時刻に至った。
- 1980年代の忠臣達はわが党の組織思想的基礎を盤石に押し固めることで主体革命偉業継承の蒼蒼たる未来を開いておき、峻厳な1990年代の先軍革命戦士達は將軍様を政治思想的に、命で死守し、百回倒れても再び起きて戦う不撓不屈の精神力で建国偉業に匹敵する伝説的な奇跡を創造した。
- 百戦百勝はただ革命同志隊伍の純潔な継承によってのみ担保される。
昨日も今日も変わらない白頭の密林のようにこの地には一つの思想と志向で充満し、純潔とバルコルムを一つに合わせる革命同志達が生い茂る森をなした。
- バルチザン世代、基礎築城世代、1990年代の先軍革命同志、21世紀

の強行軍同志！

革命の開拓世代から革命の3代、4代達、名人財士から平凡な女性達、…。

- 先軍の宝剣で守りぬいた白頭の赤い旗は金日成民族の開花繁栄期、強盛大国の威容の中によりめらめらとひるがえらなくてはならず、民族万代繁栄の旗幟として継承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 9月の祝杯を10月の祝砲声に続け、2012年の勝利の春の丘に向かって信心高く継続革命前へ！

- 2010/8/7 『労働新聞』 朱昌仙・孫素娟 「政論—朝鮮は決心すればやる」

- 主体の信念が血筋として流れる金日成民族の子孫らしく主体のわが国、わが祖国をより富強にしよう！
- 朝鮮労働党代表者会と党創建65周年が近づいてくるほど祖国の地のどこでも世紀的変と偉大な奇跡が力強く胎動している。

父なる首領様の意志をこの地の上に現実として花開いた金日成民族の誇らしい子孫達、母なる党に捧げる素晴らしい贈り物を自らの手で用意してはっきりした生の跡を刻んだ真の愛国者達が勝利の慶祝広場に入っていく喜びに溢れた姿が見える。

- 2010/8/15 『労働新聞』 「社説—党の周りに固く団結して偉大な金日成朝鮮を限りなく輝かせていこう」

- 全党員と人民軍将兵、人民は、先軍の旗幟高くわが祖国の誇らしい歴史を強盛大国建設の偉大な勝利へ輝かせて党創建65周年と党代表者会を勝利者の大祝典として迎えなければならない。

I

II

III

IV

V

VI

VII

偉大な金日成同志の子孫としての栄誉を代を継いで輝かせていかねばならない。

□ 2010/8/21 『労働新聞』 宋美蘭 「政論—われわれは誰か」

• 思想が継承されて歴史と伝統が継承されなければならず、精神力が継承される時、首領の子孫だと堂々と言うことができる。

• われわれは偉大な首領様に似た子孫である。

われわれは白頭の革命伝統という聖なる遺産を持った子孫、社会主義制度という偉大な財富を持った子孫、核国家という恐ろしい力を持った子孫である。侵略家達が核を出してくるならば共に核を出して、先端技術を出してくるならば最先端技術を出す子孫達である。

• 金日成同志の子孫、金正日同志の子孫という大きな幸福の中に千年万年福楽する統一強盛大国のその日のために千万軍民よ、分秒を争って奮発しよう。走ろう。

瞬間を生きてもその方の子孫らしく、一生を生きてもその方の子孫らしく、金日成-金正日同志の子孫らしく毎日、毎瞬間輝かしく生きよう！

□ 2010/8/22 『労働新聞』 申炳強 「輝け、先軍長征千万里よ！—敬愛する最高司令官同志が先軍革命領導を開始されてから50週年に際して—」

• わが將軍様の胆力と気性が

そのまま受け継がれたりしいそのパルコルムの音

一步ごとに従おう、武装で奉ろう

われわれの最高司令官

われわれの党中央を
千世万世永遠に命で死守しよう！

- 2010/8/28 『労働新聞』 「社説—青年達はわが党の思想と決心を率先して実現していく先軍革命の戦闘闘士になろう」

- 今日わが青年達は歴史的な党代表者会と党創建65周年を勝利者の大祝典として迎えるための総攻撃戦で全国が勢いよく沸き立っている激動的な時期に青年節を迎えている。
- 先軍時代の青年達は、白頭先軍伝統を輝かしく継承していく最も革命的な戦闘隊伍である。朝鮮革命の開拓期に鳴り響いた抗日大戦の銃声は、青年達の血沸く革命熱意雷声であった。白頭先軍伝統は、朝鮮青年達の心臓の中に大切にされた継続革命の血管である。
- 青年達は、偉大な首領金日成同志の子孫らしく、強い民族自尊の精神力で他人ができないもの、世界にないものを作り出し、全ての戦線で奇跡と変革を起こすことで、朝鮮は決心すればやるということを全世界によりはっきりと見せつけねばならない。20代、30代に世界的な博士、世界的な発明家になる抱負を抱いて、強盛大国建設に尽くす素晴らしい科学研究成果と技術革新案をより多く出しておかねばならない¹⁸。

I

II

III

IV

V

VI

VII

¹⁸-8月28日は「青年節」であるが、前年同日の社説には、継続革命や20代、30代、金日成同志の子孫に関する言及はない。

- 2010/8/31 『労働新聞』 柳明鎬 「叙事詩—世界よ、竜南山¹⁹を仰ぎみよ！」

- 先軍朝鮮の明日のように 明るく喜悦に溢れた姿
白頭の白い雪のようにきれいで純潔な心 将軍様を空のように信じて従う青年達
白頭の血統を代を継いで輝かしていく 先軍革命の信頼できる根幹
- 「朝鮮よ汝を輝かさん」 その愛国の誓いを抱いて
先軍革命総進軍の鼓の音高く
朝鮮労働党代表者会を迎える9月を 金日成民族の歴史に特記する大事変として
勝利者の大祝典として輝かしていく祖国よ
父なる首領様誕生 100周年になる2012年に
歓喜の火を見よ、勝利の祝砲が爆発してくる時
世界は偉大なわが党 金日成朝鮮を驚嘆の視線で見つめるだろうと

- 2010/9/1 『労働新聞』 李銀南 「竜南山とともに不滅の領導業績長く伝える主体教育科学の最高殿堂—敬愛する将軍様が不滅の領導の跡を残されて50周年を迎える金日成綜合大学で一忠実性の伝統を代をついで輝かさん」

- 党と首領に対する忠実性は金日成綜合大学の第一生命、竜南山の聖なる忠実性の伝統を代を継いで輝かす先軍霊將の革命戦士にならん！
- 金日成綜合大学の活動家達と教職員、学生達は、今後も永遠に純潔できれいで熱くて熱烈な竜南山の高貴な伝統を代を継いで固守し、大学を

¹⁹- 金正日氏が「主体革命偉業継承」を誓ったとされる「竜南山の誓い」については、『金正日同志略伝』平壤：朝鮮労働党出版社、2008年、6-49頁。

名実ともに党と首領に絶えず忠誠を尽くす大学に、主体革命偉業の信頼できる働き手達を育てる科学技術の最高殿堂、世界屈指の大学としてさらに燦然と輝かしていくであろう。

- 2010/9/2 『労働新聞』 林正鎬 「竜南山の誓いがあり強盛大国のまばゆい未来が現実として広がる一歴史の奇跡、世紀的変革」

- 人工地球衛星「光明星2」号の成果的発射、世界を驚嘆させたCNC技術、主体鉄生産体系の完成、主体繊維、主体肥料瀑布等、人民の理想が実現されるこの全ての事変が竜南山の誓いにつながっている。

偉大な將軍様が竜南山の誓いを抱かれてわが朝鮮を全世界に輝かしていくこの地には、世紀的な創造と変革の歴史が絶えず流れるであろう。

- 2010/9/7 『労働新聞』 「偉大な党に対する千万軍民の絶対的な支持と信頼」

- 社会主義強盛大国建設の最後勝利を成し遂げていく千万軍民の大高潮熱風が意義深い朝鮮労働党代表者を前にしてより強く吹きまくっている。

既に報道されたように、大規模金野江軍民発電所堰堤建設と大鷄島干潟地建設の勝利的完工、礼城江青年2号発電所竣工等、最近用意された記念碑的創造物と革新的成果は、わが軍隊と人民が朝鮮労働党代表者にささげる労力的贈物である。

I

II

III

IV

V

VI

VII

- 2010/9/9 『労働新聞』 「社説—党の領導下に社会主義わが祖国は絶えず強盛繁栄するであろう」

- わが共和国は百戦百勝の党の領導下に人民の理想が輝かしく実現されている偉大な首領様の国であり、人民大衆中心の社会主義強国である²⁰。
- 今年の共和国創建記念日は、わが人民の全ての勝利の組織者であり嚮導者である朝鮮労働党が創建されて65周年と歴史的な党代表者を前にして迎えることとなり、より意義深い名節になっている。
- 特に党代表者会と党創建65周年を迎える今年、わが党の思想と領導業績の偉大性をより深く体得し、党の領導によって信心高く進むわが軍隊と人民の革命的風貌を全世界に誇示しなくてはならない。

- 2010/9/11 『労働新聞』 「不敗の団結で百勝轟かす偉大な党」

- 全国各所で進行された党代表会で連日伝えられた感激的な便りが、わが軍隊と人民の心臓を無限に激動させている。
偉大な金正日同志を朝鮮労働党代表者会代表に高く推戴！
- 世界社会主義運動の歴史で首領の逝去を奇禍（儀崎注：機会の誤植？）に機会主義者、野心家達が権力の席に座って首領の思想と業績を去勢抹殺して、党隊列の分裂を招来した事態（複数）は、党の統一団結も継承されなくては固守することも発展することもできないという痛切な教訓を残した。
そうだ。団結の継承問題こそ領導の継承問題である。
- 絶世の偉人を代を継いで団結の中心に高くお仕えした偉大なわが党の強盛大国建設偉業は必勝不敗である。

²⁰ 前年同日の「社説—先軍朝鮮の偉大な繁栄の時代を絶えず輝かせていこう」の冒頭文は、「わが共和国は偉大な勝利と繁栄の歴史を重ねてきた国、絶えず洋々たる前途を持った主体の社会主義強国である。」となっており、党について言及がなかった。

- 2010/9/14 『労働新聞』 「社説—偉大な金正日同志の党建設業績を絶えず輝かせていこう」

・歴史的な党代表者会と党創建65周年が近づいてくる今、全党员と人民軍将兵、人民はわが党を最も尊敬高くて権威ある必勝不敗の党に強化発展させてこられた敬愛する將軍様の偉大性をさらに心臓深く刻んでいる。

- 2010/9/14 『労働新聞』 「わが党は人民大衆と渾然一体をなした不敗の党である」

・先軍の旗幟下に新たな世紀を嚮導し、隆盛繁栄の最全盛期を広げていく偉大な党の領導を受けているのは、わが人民の大きな栄光であり自慢である。歴史的な党代表者会と党創建65周年を前にしている今、わが党に対する人民達の信頼の心は、さらに熱くなっている。

- 2010/9/14 『労働新聞』 「当面して出ている重要な問題—国土環境保護省活動家達と交わした話」

・わが党の歴史に特記すべき党代表者会と10月の大祝典を誇らしい労力的成果で迎えるため、今日の日その日を遺訓で輝かしている党员達と勤労者達の献身的な闘争によって、国土管理事業では新たな転換が起きるであろう。

I

II

III

IV

V

VI

VII

- 2010/9/17 『労働新聞』 「社説—全ての力を総集中し今年の農事終盤をうまくやろう」

・全農業勤労者達と支援者達は、朝鮮労働党代表者会と党創建65周年を労力的成果で輝かせる一心を抱いて、意義深い今年の農事を輝かしく終えなければならない。

- 2010/9/17 『労働新聞』 「偉大な領導者金正日同志にシリアアラブ共和国大統領が慰問電文を送ってきた」

・われわれは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の多くの地域を襲った洪水によって多大な被害を被ったという衝撃的なニュースに接しました。
・2010年8月23日

- 2010/9/17 『労働新聞』 朴玉京 「政論—まっすぐ行こう！」

・朝鮮労働党代表者会と党創建65周年にささげる誇らしい労力的贈物を抱いて、慶祝広場に足取り堂々と入って行くようになるこの時代の先駆者達と偉勲者達を見よ。

- 2010/9/19 『労働新聞』 「金日成朝鮮の先軍歴史は5百年、5千年永遠に流れる—音楽舞踊大公演『先軍勝利千万里』について」

・意義深い今年、わが軍隊と人民は8月25日を先軍の大慶事として最も盛大に慶祝した。
今回の8.25慶祝行事で決定をなした朝鮮人民軍芸術人達の音楽舞踊

大公演『先軍勝利千里』は、歴史的な党代表者会が開かれる9月の雲囲気をできるかぎり高潮させながら先軍革命偉業の偉大な嚮導者である栄光なる朝鮮労働党に対する全人民的な信頼心をさらに培って、党創建65周年慶祝広場に向かって走る千万軍民の進軍を力強く押してくれた。

- 栄光なるわが党にささげる人民軍隊のまた一つの忠情の結晶体である今回の大公演は、朝鮮労働党創建65周年と歴史的な党代表者会を前にして沸き立つわが人民の大高潮闘争に力強い拍車をかけてくれた。

予告された「9月上旬」を9月15日までと拡大解釈したとしても、その間に党代表者会が開催されず、事実上の延期となった。『労働新聞』上では、9月16日付から洪水被害について大きく報じるようになっていく。各国メディアが報じているように、表面上は洪水被害の拡大が党代表者会の延期理由とされている模様である。しかし、9月6日付『労働新聞』で報じられたように、既に代表者達が平壤に入ってきている段階で、洪水被害の影響が見抜けなかったのか、疑問であった。

7. 党代表者会開催の利点

30年前の第6回党大会が金正日氏公式デビューの場であったため、今般党代表者会開催についてはどうしても正恩氏の処遇に焦点が置かれてしまった。しかし、金正日体制にとって党代表者会を開催することの他の利点についても触れておく必要はあり、開催前は次のように考えてきた。いずれも後継体制の整備という文脈に通じるものである。

第一に、党基盤の再生である。韓国統一部によれば、1980年10月に選出された145名の中央委員のうち半分以上が死去ないし解任されたとされる。近年は、2008年に朴成哲氏、2009年に洪成南氏、2010年には金仲

I

II

III

IV

V

VI

VII

麟氏、李容哲氏、李濟剛氏といった高位級幹部の死去が目立つ。前回の党大会から30年、党中央委全員会議から16年も経とうとしているわけだから当然といえば当然である。大型人事を断行し、党組織を再整備することによって、金正日国防委員長自身の負担も軽減されるばかりか、党幹部の大量昇進はインセンティブ付与にもなる。規模は不明であるが、ある程度は世代交代も進むことになる²¹。

しかも、党規約に則って中央委員を「選出」するという過程が重要である。金正日国防委員長に絶対的な独裁権限があるならば、人事も恣意的に動かせるはずである。1997年9月から10月にかけて行われた自らの総書記推戴・就任の経験や2009年2月の呉克烈国防委副委員長任命のように、突如として正恩氏が国防委員などの要職に「推戴」されたとするのも不可能ではない。しかし、正統性確保の側面からか、形式にこだわっている様子が窺われた。

第二に、党軍関係の明確化である。すなわち、これまで標榜してきた「朝鮮労働党が領導する先軍政治」を実体化していくということである²²。その意味では、政治局常務委員の構成や中央軍事委員会の復活が注目される。党組織の再生は、今後も軍が指導する軍事独裁体制ではなく、指導部が軍を利用しながら独裁体制を維持していくことを確認することになる。2009年4月の憲法改正でも第11条(「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は、朝鮮

²¹ 世代の交代か否かは確認できないが、『労働新聞』論説員についても2010年上半年期には連名記事が目立ち、下半期に入ってから大幅な交代が見られる。

²² 先軍政治については、拙稿「金正日とイデオロギ――北朝鮮「先軍思想」への道」、『慶応の教養学』慶応義塾大学出版会、2008年、59-92頁、拙稿「金正日「先軍政治」の本質」、小此木政夫編、『危機の朝鮮半島』慶応義塾大学出版会、2006年、283-304頁。

本研究の一部は、平成22年度文部科学省科学研究費補助金若手研究B(課題番号40453534)及び基盤研究B(課題番号21310164)により実施した。

労働党の領導の下にすべての活動を行う。』)は残された。国家に対する党の優越性は再確認されたということである。党代表者会開催を契機とした党組織の再生、党基盤の強化によって、朝鮮人民軍が朝鮮労働党の党軍であることが再確認されることになる。

金正日国防委員長が絶大な権力を誇示できる間は問題なかろうが、その身に万一のことがあった場合、権力の受け皿、政策決定過程が不明瞭になる。形式的には「国家の中枢」と謳われてきた国防委員会が中心となりえたが、その形はいびつだと言わざるをえない。第1副委員長の趙明録は機能しておらず、副委員長は4名のうち3名が軍人で、文民は張成沢党部長だけだからである。つまり、短期的には既得権者の論理が働いて軍出身幹部と党出身幹部が協力しながら危機管理体制を機能させることができようが、中長期的には軍人が過度に権力を誇示する危険性を帯びているということである。少なくともその危険性がわずかりともあれば、排除の方向に向かうことが考えられた。

さらに、党代表者会で正恩氏が公式化されれば、彼が公式に「実務指導」を開始することができる。金正日氏が公式の場にデビューしてから、金日成主席が死去するまでは結果として14年間もあった。金正日氏が後継者として内定した1974年から数えれば20年間かけて慎重に且つ確実に権力継承準備を進めてきたといえる。正恩氏を早めに公式化することは、その後の後継準備期間を長くすることにもなる。2010年は、党創建65周年であるとともに、金正日氏がデビューして30周年、「先軍革命領導」を開始して50周年ともされており、キリ番を好む北朝鮮で祝賀ムードを演出するには悪くない。もちろんのこと、核問題に伴う経済制裁に加え、通貨交換措置・デノミの失敗、哨戒艦沈没事件による南北間の経済協力関係停滞、さらには洪水被害も続き、到底祝賀ムードとはいえない状況にあることも事実

I
II
III
IV
V
VI
VII

である。しかし、例えば金日成主席生誕100周年を迎える2年後に経済状況が好転しているとも限らず、環境条件はそれほど大きくは変わらないのではなかろうか。

8. おわりに

最近の北朝鮮政治の動向及び党代表者会開催は、金正日体制がポスト金正日時代における非金正日化を避けるための課題を一つずつこなしているように見えた。

第一に、後継者の早期指名である。対内的には「パルコルム」等の宣伝教育で浸透したといえるが、党代表者会で正恩氏が公式化されれば、大きな前進となる。後継者を指名することによって金正日国防委員長のレームダック化が始まる危険性はあるものの、スターリン批判や林彪事件のような非金正日化を招来するよりは格段にまだというのが正常な考え方であろう。

第二に、後見役の指名である。後継者が実績のない若者であればあるほど重要である。既に2009年から金慶喜党部長の頻繁な随行が目立ち、2010年6月には張成沢党部長が国防委副委員長に就任した。さらに党代表者会、ないしそれに続く中央委全員会議で政治局常務委員等の人事が決定され、公表されれば、この側面も大きな前進となる。

第三に、体制枠組みの規定である。絶対的権力者が不在となった場合には、政策決定過程が制度化されていなくては、大きな混乱をきたす可能性がある。2009年4月9日の最高人民会議を通じた憲法改正で「最高領導者」が国防委員長であることを示し、軍や警察、秘密警察の幹部も含む国防委の再編を行った。党代表者会で党政関係、党軍関係についても明確化されれば、この側面も前進となる。

さらに、以上のプロセスを人々に納得させるだけの暴力装置を確実なものにするか、祝賀ムードを醸成し、三代世襲を正当化するために経済状況を改善することも重要になる。

党代表者会が「9月上旬」に開催されなかったように、後継者問題が目標に向かって一直線で進んでいるかといえば、そうではない印象が強い。『労働新聞』の論調を見ても、2009年6月、7月頃は後継者の存在を暗示するような記事が増えたが、その後は金正日国防委員長の健在とその権力を誇示する方向に切り替わった。2009年7月頃には『労働新聞』に頻繁に出てきた「パルコラム」の名も2010年初頭には全く見られなくなった。国防委員会を中心にした体制強化を目指していたかと思えば、今般の党代表者会招集である。後継体制の整備は、非常に慎重に、試行錯誤しながら進めている様子が窺われるのである。

補論

統一研究院主催シンポジウム開催前日の2010年9月28日、朝鮮労働党の代表者会が44年ぶりに、中央委員会総会が17年ぶりに開催され、翌日未明には金正日(キム・ジョンイル) 総書記の三男といわれる金正恩(キム・正恩) 氏の名前が入った党幹部の名簿が発表された。以下は、統一研究院側の要請に従って党代表者会開催後に執筆した補論である。

1. 概要

党代表者会の目的は「最高指導機関の選挙」と事前発表されていた

I
II
III
IV
V
VI
VII

が、大方の予測通り金正恩氏が公式デビューし、将来を見据え体制強化が図られた。金正恩氏は、中央軍事委員会に新設された副委員長職に就き、事実上後継者としてお披露目されたことになる。脱稿時点(2010年10月10日)において北朝鮮の公式メディアが彼を「後継者」だと明言しているわけではないが、昨年から同国国内では、金正恩氏が金正日総書記の「偉業」を受け継ぐ人物であるとして様々な宣伝活動が展開されてきた。また、金正恩氏が就任したポストは、通常20代後半の若者が就けるものではない。公開された映像を見ても、明らかに一人だけ極端に若く、唯一人民服を着用した金正恩氏が最前列におり、後継者であることを内外に印象づけるのに十分なものであった。

金正日総書記の後継者は誰か、そもそも再び世襲なのか、という長年の論議にはとりあえず決着がついたことになる。金正日総書記が還暦を迎えた2002年頃から長男・金正男氏、二男・金正哲氏、その他の人物や集団指導体制の可能性も含めて様々な「情報」が報じられてきた。一時、北朝鮮メディアの論調にも、後継者の存在を暗示していると読みとれるものがあったが、この問題は後継者が公式化されることによって本来の意味を持つ。金正恩氏の登場によって、北朝鮮の本質が長子重視の儒教社会よりも、独裁にあることを再認識させられた。後継者の選定は最高指導者の専権事項だということである。

2. 金正日流の前例踏襲

金正日総書記が公の場に登場してから30年間、ソ連・東欧社会主義体制の崩壊を経ても体制護持が図られたことを考えると、前回の後継者問題は北朝鮮にとって成功した前例だといえる。だからこそ、その経験は相当程

度踏襲され、党機関紙『労働新聞』は、金正日氏が後継者に内定した「1970年代」と現在を対比する記事を昨年からのたびたび掲載してきた。

もちろんのこと、前例が完全に踏襲されているわけではない。今回は大きく二つの相違点が見られた。後継体制の整備が急ピッチで進展しているということと、金正日総書記が提唱してきた「先軍政治」に沿って進められているということである。

2009年1月に韓国の聯合ニュースが「三男が後継者に内定した」と報じて以来、称揚歌「パルコルム(足音)」の流布や金正恩氏を称えるポスターの写真、長男・金正男氏とみられる人物の証言等、様々な状況証拠が矢継ぎ早に出てきた。いずれも金正恩氏が後継者に内定したことを示す決定的証拠とはいえなかったが、それを否定する材料も出てこなかったのが今回の特徴でもあった。

党代表者会で中央軍事委副委員長に就任した金正恩大將は、当日行われた記念撮影の後も、朝鮮人民軍第851軍部隊軍人の訓練視察(10月5日報道)、党創建65周年に際して開催された銀河水管弦楽団の「10月音楽会」観覧(10月6日報道)に続き、10月9日には中央報告大会への出席、同日夜にはマスゲーム「アリラン」で訪朝中の周永康・中国共産党政治局常務委員とも対面する等、動静報道が連日続いた。

これらの動きは、金正日書記がデビューした30年前の前例と比べて急ピッチで後継体制の整備が進んでいることを物語っている。金正日書記の場合は、後継者として内定してから6年ほどの準備期間を経て、第6回党大会で初めて公式報道にその名を現わした。1980年10月10日のことであった。その後は長らく動静報道がなく、1981年5月30日に金日成主席の側近幹部だった沈昌完氏の霊前を弔問した(5月29日)と報じられ、妙香山地区(5月18日～22日)を皮切りに、徐々に「実務指導」が開始された。同

I

II

III

IV

V

VI

VII

年中に李季白総連副議長や在日朝鮮青年学生祝賀団等とも会見しているが、外国要人との会見はもっと後になってからのことである。前例をはるかに上回るスピードで金正恩氏が登場してきた背景には、2008年8月に悪化したとされる金正日総書記の健康状態があることが確実視されている。

時間軸に加え、いま一つの特徴は、金正日総書記が十数年来掲げてきた「先軍政治」の色濃い影響である。おりしも8月25日は「先軍革命領導50周年」であるとして大規模行事が用意されていた。近年、北朝鮮では歴史の書き換えが進んでおり、金正日氏が弱冠18歳の時から軍を率いてきたと強調してきた。中央軍事委員会は、昨年2月に金正日総書記が委員長に就任していることが判明したばかりの組織だが、金正恩氏が軍を指導する立場にある同機関のナンバー2になったことで、「先軍政治」を継続していく意思が明確になったといえる。

それは、金正日・金正恩体制が軍の完全掌握を引き続き最重要課題として捉えていることを意味する。「先軍政治」は、東欧社会主義体制の崩壊が直接的な契機となっている。1989年のチャウシェスク・ルーマニア大統領処刑は、軍が指導者を裏切らないことが体制維持の絶対条件であるとの教訓を北朝鮮にもたらししていた。今後、後継体制整備に向けて、軍の歓心を買うために一時的であるにせよ強硬策をとる可能性も残されたままである。

今回の一連の動きは、金正恩体制の始まりではなく、あくまでも金正日体制下で、その権威を受け継いだ後継者が誰であるのか、が公表されたにすぎない。世襲である以上、「金日成民族」、「金日成朝鮮」を従来以上に強調する教育・教化によって「正統性」確保が図られることになる。今回30年ぶりに改正された党規約序文でもその傾向が明確に表れている。

3. 「人事の妙」

党代表者会の招集と同日開催された中央委員会により、末端の党細胞と総書記を除いて事実上機能不全に陥っていた党組織の再生が図られた。党幹部のポストが埋まったことは、文民にとって大変なインセンティブになる。今回公表された人事については、金正恩氏の公式化以外にもいくつかの注目すべき点があった。

第一に、大将より格上の次帥称号が与えられた李英浩総参謀長の台頭である。金正恩氏と同様に中央軍事委副委員長に就任したほか、常務委員のポストも得たのであった。一方、呉克烈国防委副委員長は、中央委員にとどまり、それ以上の党の要職は与えられなかった。これが名簿が報じられた時の第一印象であった。

金正日総書記の妹婿で金正恩氏の重要な後見役と目されてきた張成沢国防委副委員長の常務委員入りもなく、政治局員候補、中央軍事委員にとどまった。

常務委員は、金正日総書記、金永南最高人民会議常任委員長、崔永林内閣総理、趙明禄国防委第1副委員長、李英浩総参謀長の5名であった。長らく病に伏しているといわれ、動静報道もない趙明禄氏が入ったことは意外であった。権力者のいる機関に実権が移るのは世の常であり、金正恩氏が副委員長となった中央軍事委の位相が高まるのは確実である。高齢の趙明禄国防委第1副委員長が常務委員から遠からず抜ける際、それらのポストに金正恩氏が就くことまで計算に入れた人事だった可能性も考えられる。

新指導部の主要メンバーを見ると、突出して若い金正恩氏を除き、ほとんどが高齢の、よく知られた幹部達であった。今回公表された党の人事と

I

II

III

IV

V

VI

VII

国防委員会、最高人民会議常任委員長、内閣総理、さらに人民武力部長等の職位を総合的に勘案すると、絶対的首位である金正日総書記、及び同じく金日成主席の血を継ぐ妹の金慶喜党部長、事実上後継者としてデビューした金正恩氏を除き、ナンバー2不在のバランス型人事が採られたといえる。まさに「人事の妙」ある。これによって、最高権力者の身に緊急事態が生じたとしても、特定の幹部がリーダーシップをとることなく、合議によって金正恩副委員長がより高い地位に祭り上げられる、いわば危機管理体制が整ったといえる。

4. 論調分析の妥当性と限界

党代表者会の招集が発表された後、『労働新聞』の論調は、「代を継いで伝統を輝かしていく」ことの重要性を強調しながら、「革命の継承」、「金正日総書記の子孫」、「万景台(注：金日成主席の生誕地とされる)家門」、「白頭(注：金正日総書記の生誕地とされる)の血統」、「革命の第三世代」といった言い回しを多用して、後継者の登場を強く臭わせてきた。北朝鮮国内では、この『労働新聞』を読むことが義務化されている。だからこそ特徴的な表現の出現やその増減は重要な分析素材となってきた。そのような顕著な論調の変化と、党代表者会がわざわざ44年ぶりに開かれる、という事実を考えると、金正恩氏の公式化・公然化がその帰着点であることを展望することにそれほど大きな困難は伴わなかった。

しかし、外部社会が様々な手段で情報を収集し、検証しても、いくつかの予期せぬ展開があったことは否めない。韓国メディアを中心とした様々な誤報も今後の教訓となろう。

まず、金正恩氏の名が初めて北朝鮮の公式メディアに出てきたのは、党

代表者会そのものに関する報道ではなく、当日未明に発表された、朝鮮人民軍大将の称号を授与された、というニュースであった。まがりなりにも選挙で「選出」されることが重視されていると考えてきたばかりに驚きであった。また、金正恩氏が就任する可能性のあるポストとして政治局常務委員が一つの焦点となってきたが、それは金正日氏が公式の場にデビューした30年前の前例に足を引っ張られ過ぎた分析であった。

さらに、当初予告されていた「9月上旬」になっても代表者会は開催されず、延期となってしまった理由について北朝鮮側は明らかにしていない。しかし、日韓メディアが報じたように、8月下旬と9月初めに北朝鮮を襲った洪水被害が表面的な理由にされたことは『労働新聞』でも読みとれる。9月17日付の一面トップに「偉大な領導者金正日同志にシリアアラブ共和国大統領が慰問電文を送ってきた」との記事を掲載しているのである。打電日は「8月23日」となっており、電文が送られてから3週間も経ってからという不自然な公表であった。それに先立ち、9月15日には同月初めの台風で「数十人が死亡し、約8300世帯の住宅が破壊された」と報じられている。

その後、党代表者会に関する『労働新聞』の論調は明らかにトーンダウンした。開催の意思は明確に示すものの、後継者の登場を示唆する特徴的な表現が全くといっていいほど見られなくなってしまったのである。その背景についても現時点で明確に説明できない。

昨年4月には憲法が改正され、金正日総書記が委員長を務める国防委員会が強化されていた。その時点では、筆者自身も国防委員会を中心に後継体制を整備していくものと展望しており、2010年に党代表者会を開催して中央軍事委に副委員長ポストを新設するなど考えが及ばなかった。実際に、金正日体制側も試行錯誤しながら慎重に後継体制の整備を進展させている模様であることは本論で述べたとおりである。

5. 「負の遺産」継承

今年初めから北朝鮮メディアは、10月を「大祝典場」にすると繰り返してきた。10月10日の党創建65周年を重視してきたのである。また、党代表者会を「9月上旬」に開催すると発表した後は、両者を常にセットで報じてきた。

今回開催された一連の行事を見ると、金正日氏の総書記再推戴と金正恩氏の登場を受け、予告どおり祝賀ムードが演出されたといえる。10月9日には大型花火行事「祝砲夜会」が開催された。10月10日0時には、金正日総書記が金正恩氏や幹部を引き連れて「社会主義朝鮮の始祖であられ、朝鮮労働党の創建者であられ、民族の父であられる偉大な首領金日成同志が永生の姿でいらっしゃる錦繡山記念宮殿」を訪問した。10日10時から、平壤の金日成広場で慶祝閱兵式と軍事パレードが開催されたが、朝鮮中央テレビは異例にも生中継でその模様を報じた。

もちろんのこと、「大祝典場」となる理由が後継者のお披露目であるとは直接的に述べていないが、閱兵式は、事実上金正恩氏の登場を内外にアピールし、世襲を既成事実化する機会にもなった。また、『労働新聞』によれば、党創建65周年に際して破格の配給を凶った模様である。

その裏で、三代世襲に対する北朝鮮の人々の不満の声が報じられている。中朝国境の非合法的な往来に伴う口コミやDVDの流入によって国外の状況もある程度知れ渡っているのが現実だが、たとえ北朝鮮が情報統制社会にあるとしても、人間には比較する能力が備わっている。他国の情報という横軸に欠陥があったとしても、20年前、30年前のほうがまだマシだったという縦軸での比較が可能である。冷戦終結直後に金日成主席が死去したため、金正日総書記がトップになった際、北朝鮮は未曾有の食糧難に見舞

われていた。北朝鮮の人々には、程度の差こそあれ金日成主席に対する欽慕の念があったというが、経済が最悪の状況にあった時期に台頭した金正日総書記に対しては不満ばかり募らせている。

しかし、不満を抑え込む暴力装置が機能しており、金正日総書記の指導力が誇示できるうちに、後継者の公式化を強行してきたといえる。社会主義体制下における三代世襲の意思表示は、長年の疲弊した経済に加え、国際社会の制裁、貨幣交換措置(デノミ)による混乱、哨戒艦沈没事件に伴う韓国との協力中断、さらに洪水直後という状況の中で行われた。父から受け継ぐ「負の遺産」は測り知れず、「正統性」確保の上でもその克服が大きな課題となる。

ちょうど30年前の10月、金正日氏は、長年の矛盾が露呈して経済が下降線をたどろうとしていた時期に公式化された。金日成主席の「負の遺産」を継いだ金正日総書記は、社会主義体制下における三代世襲の意思を国内外に闡明にした。金日成主席の血統を継いでいる、という自らの「正統性」を否定することになりかねない他の選択肢は示されなかったのである。

I

II

III

IV

V

VI

VII

参考文献

1. 日本語文献

礒崎敦仁. “北朝鮮の「多元主義」－弛緩と抑制.” 『東亜』. No. 476, 2007年 2月号.

礒崎敦仁. “金正日とイデオロギー－北朝鮮「先軍思想」への道.” 『慶応の教養学』. 東京: 慶応義塾大学出版会, 2008年.

礒崎敦仁. “2010年の北朝鮮を展望する 権力継承意識し安定志向－現実的トーン目立った新年共同社説.” 『金融財政business』. No. 10054, 2010年 1月 25日号.

礒崎敦仁. “最高人民会議の役割－北朝鮮の「最高主権機関」.” 『現代韓国朝鮮研究』. 第7号.

礒崎敦仁. “金正日「先軍政治」の本質.” 小此木政夫編. 『危機の朝鮮半島』. 東京: 慶応義塾大学出版会, 2006年.

詳細は、礒崎敦仁. “北朝鮮メディアが暗示する後継者の存在－2009年の「キム正恩」.” 『紀要国際情勢』. No. 80.

城内康伸. “正恩氏「後継」文書－北朝鮮一般党員が学習.” 『東京新聞』. 2010年 9月 19日付.

2. 韓国語文献

조선로동당. 『김정일동지락전』.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8.

『로동신문』.

『민주조선』.

IV. 北朝鮮における 通貨改革後の済動向と展望

崔壽永
(統一研究院 企劃調整室長)

1. はじめに

- 北朝鮮では通貨改革(いわゆる「貨幣改革」2009.11.30)と共に進められた市場統制の強化と外貨使用禁止によって市場機能が混乱し、経済活動が委縮するなど、深刻な副作用と後遺症が現れた。
 - 北朝鮮一部の地域では、餓死者が出たという報道もあり、住民が当局に強く反発するなど、民心離反現象が著しい。
- このような状況を打開するために、北朝鮮はこれまでの政策方向を修正し、デノミの後遺症と民心の收拾に乗り出している。
 - 国内では、経済政策の方向を市場統制強化から緩和(市場の取引を許容)へと転換させた。
 - 対外的には、2009年の下半期からより緊密になった中国中心の資本誘致と対外開放路線の拡大など、朝中経済協力を加速化させている。
- 本文では、北朝鮮における通貨改革以後の経済状況と、最近変化した政策の方向付けについて取り上げ、北朝鮮経済の展望を考える。

2. 通貨改革と北朝鮮当局の対応

A. 通貨改革の目的

- 北朝鮮当局は2009年11月30日、これまでの北朝鮮「ウォン」旧通貨を新券に交換するデノミネーション「貨幣交換」を実施した。交換比率は100:1である。

I

II

III

IV

V

VI

VII

- 旧券と新紙幣の交換比率が1:1の等価交換ではないところから、事実上のデノミとなる。
 - 交換限度(世帯当たり、旧紙幣10万ウォン)を設定し、限度額を超える部分は銀行に預けさせて、その後に別途支払うものとした。
 - 通貨改革は、当初2008年頃に施行(発行年度が2008年と印刷された新券が確認)しようとしたが、金正日が病気で倒れて延期していたのを、健康が回復した2009年末に実行したものと思われる。
 - デノミを行ったものの、物価については2002年7月のレベルを維持し、賃金(生活費)はこれまでの金額で据え置くこととした。
- このような通貨改革以後、北朝鮮当局の市場に対する措置は2010年1月中まで続いた。
- 通貨改革後に地方の大規模な卸売市場(総合市場)閉鎖を試みる: 『北朝鮮当局が2009年12月30日内閣の措置として、2010年3月未から清津水南市場の運営管理を中止し、事実上閉鎖を決定』(2010.1.6、『良き友人』)。
 - 各種財貨の供給と分配に対する国家統制を強化するとして、市場商品の重要な供給源となっている貿易会社の統廃合を推進(1.20、『良き友人』; 『NK知識人連帯』)。
 - 通貨改革後に北朝鮮当局は、外国人に対しても北朝鮮国内での外貨使用を徹底的に取り締まっていると北と取引している中国の貿易業者が発言している(1.14、『読売新聞』)。
- 北朝鮮の通貨改革は市場統制及び財政拡充により計画経済全般を立て直そうとするところにその目的がある。

- 2002年の「7.1措置」以後に進められた部分的な経済改革(分権化、市場化)の副作用が大きくなると、再び市場を統制し、計画経済立て直しの手順の一環として、今回の通貨改革を行った。
 - 北朝鮮当局は通貨改革により、市中資金を国家経済に組み入れ、物価と賃金を再調整し、勤労者の職場復帰と国家流通網の活性化を期待したもの。
 - * 北朝鮮の社会科学院経済研究所長は「通貨交換によって、財政的土台を確固とする」と述べている(2010.1.23)。
- このような措置にも関わらず、北朝鮮における通貨改革は経済的側面というより政治・社会的な目的を優先して推進されたと思われる。
- 通貨改革の施行時に、金正日後継体制の構築に必要な政治的、社会的な環境を良好なものにすることが考慮された。
 - 言い換えれば、北朝鮮は通貨改革と共に住民の反発をなだめる策として、賃金はこれまでのレベルを保障しつつ、インフレ誘発措置を並行させた。

B. 限界と副作用

- 通貨改革(貨幣交換及び額面価値の変更)は、基本的に深刻な政策的過ちを内包している。
- 深刻な物資不足のなかで、当局の通貨量管理と価格統制によって、市場価格を下方修正するという殆ど実現不可能な目標を設定している。
 - 通貨改革後にとられた市場統制と外貨使用禁止措置は、物資供給

- の委縮につながるものであり、根本的な限界がある。
- 賃金をこれまでのレベルに抑えて支払うことによって、短期的には住民の実質所得と購買力が大きく増加するインフレ誘発措置を行ったもの。
- このような根本的な限界のもとで、通貨改革後に物価が高騰し、貨幣価値が暴落するなど、北朝鮮当局の期待に反して経済の混乱状態が続いた。
- 通貨改革後に、食糧と生活必需品が不足し、物価と為替レートは高騰。
 - * ピョンヤン(平壤)で、コメ1kgの市場価格は55ウォン(2009年 12月末) → 370ウォン(2010年 2月初め) と6倍以上、同期間為替レートは134ウォン → 395ウォンへと約3倍の高騰。
 - 物価の高騰は、モノ不足、市場統制、購買力の増加に因るもの。
- 特に、国の配給はおろか、国営の流通網でさえ整備されていない状態で市場統制を行うと、住民が市場を通じた自力の生存すら脅かされ餓死者が発生するなかで、一部住民の国に対する態度は敵対的に変わったと伝えられた。
- 市場へのアクセスや中国からのこっそり持ち込まれる輸入のルートまで遮断されることにより、深刻なモノ不足の状態となった。
 - このようなところから当局に対する不平や不満が高まり、取締り官などへの公権力に公然とした挑戦的態度が見受けられ、金正日の指導力や後継者の資質に対する批判的な流言も出てきた。

C. 通貨改革初期の経済状況

- 通貨改革後初期の北朝鮮における経済状況については、相反する内容

が伝わっているが、準備不足と副作用による深刻な混乱が発生した。

- 韓国内のマスコミはNGO消息筋からの引用によって、食糧難による餓死者も発生していると報道した。

- 一方で、朴相権（パク・サングォン）平和自動車の社長はインタビューで、平壤では物資の供給も円滑で市場の混乱もそれほどない、と伝えている。

○ 一般的に通貨改革の副作用は大変深刻ではあるものの、地方によってかなりの差があるものと思われる。

- 地方行政当局による通貨改革以前の必要物資確保の程度、市場統制の強度、通貨改革後の対処能力などによって、格差が発生した。

- 中国との国境に接した両江道、慈江道、咸鏡道などではかなりの混乱があるものの、平壤などの地域では相対的に混乱は制限的な動きのようだ。

○ 通貨改革による混乱と副作用は、何よりも物資供給の不足や減少が続くことにより急激なインフレ再発に因るものである。

- NGO(『自由北朝鮮放送』『良き友人』)では、通貨改革実施後2か月も経たないうちに、市場価格は通貨改革以前の水準に高騰し、住民の生活は最悪の状況だとしている。

○ 通貨改革初期に市場への過度な統制や閉鎖などの措置をとることにより、通貨改革による混乱と副作用が加わった。

- 2002年 7.1措置後に「計画と市場の結合」という路線を採択したが、この路線の下での市場拡大は、当初の期待とは異なって計画経済の

I

II

III

IV

V

VI

VII

正常化を阻止する逆効果を招くものとなってしまった。

- 2005年から北朝鮮では、市場統制傾向が現れはじめ、通貨改革を行った時点から市場に対する統制強化は最高レベルに達した。
 - 市場に対する左偏向が通貨改革と合わせ極端な形で進むと、北朝鮮の経済的現実から純然たる市場の機能や肯定的役割が消えてしまい、混乱と副作用が加わった。
- 外貨取引に対する統制により、北朝鮮貨幣価値の下落、物資輸入や工場、企業の経済活動はかなり委縮してしまった。
- 貨幣交換の上限額を設定することによって、北朝鮮「ウォン」の価値機能が毀損され、外貨(ドル、中国人民元など)保有の偏向増大で、北朝鮮貨幣価値が下落。
 - 外貨取引を統制することによって、さらなる北朝鮮「ウォン」の価値下落。
 - 中国産輸入品がほとんどを占める市場の物資供給に大きな問題を招いた。
 - 企業の運営資金(闇資金)として多くの外貨を保有していた工場や企業の経済活動が委縮。

D. 当局の後続措置

- 北朝鮮当局は通貨改革後に経済活動が委縮し、民心離反現象が顕著になると、異例にも当局の失策を認め、問題の早期解決のため収拾策をはかった。
- 北朝鮮は市場取引を許容 → 通貨改革の失敗を認め、責任者への

- 問責→ 各機関に食糧確保を奨励など、收拾措置をとった。
- このような北朝鮮の後続措置は、通貨改革やその後にとられた措置にこれ以上強行できない状況のもとでとられた現実的な妥協(市場に屈服) だといえよう。
- 市場統制による副作用を是正するために、市場活動、外貨の使用や対外貿易に対する統制を部分的に緩和させた。
- 2010年 2月以降、これまでのように市場で農産品はもちろん、工業製品や輸入取引を許可し、外貨はホテルなど外国人が頻繁に出入りする地域に限り、その使用を認めた。
 - しかし、商人たちの当局の措置に対する不信と物価上昇を考慮した販売忌避傾向、機関や企業による貿易活動の委縮により、市場取引は一時かなり低迷した。
- 北朝鮮当局は通貨改革の後遺症が深刻だとの問題を認識し、貨幣交換に責任のある財政責任者を人事にたて、通貨改革の失敗を認めるにいたった。
- 労働党の計画財政部長朴南基(パク・ナムギ) は解任(2010年 1月中旬)され、その後に朴南基は処刑されたと伝えられている。
 - 金英逸(キム・ヨンイル) 首相は「無理な貨幣交換の推進」によって人民生活に困難が生じたことを謝った(2月初め)。
 - 通貨改革が失敗の政策だったことを認めるような文書を海外公館に発送(2月下旬)。

- 食糧確保を奨励し供給不足の問題解決のために、経済活動を強化している。
 - 緊急災害用のコメを放出(2010.2.19)し、すべての貿易機関や外貨取引関連機関にそれぞれ「食糧輸入拡大」を指示する。
 - 通貨改革以前から推進してきた投資の誘致活動を強化。国家開発銀行、輸出入銀行を設立。金正日の羅先特区への訪問や開発への奨励、中国に対し羅津港の使用権を与えるなど、対外経済活動を展開。
 - 当局のキム・ヨンイル財政部長を中国へ派遣し(2.23)、援助の確保を図りつつ、金剛山・開城観光の再開など、南北経済協力の活性化を求める。

- 通貨改革によって離れた民心を收拾すべく金正日も住民の心をなだめるために直接指導している。
 - 金正日は人民の願いである「白いご飯に肉のスープ」が解決できていないことを認め(2010.1.9)、「人民がとうもろこしご飯を食べているのは胸が痛い(2.1)」などと述べて、住民を慰めた。
 - また金正日は「2.8ビナロン連合企業所」の竣工を祝う集会に参加し(3.6)、金日成の遺訓事業を忠実に履行しており、住民の衣食住問題に心を配っていることを強調した。

- 北朝鮮当局はこのように通貨改革の後遺症に対する措置や住民を懐柔する努力と共に、社会の統制力回復のため不穏勢力に対する統制強化など、住民に対する統制活動も並行して行った。

- 北朝鮮内における韓国の品物の取引など、「非社会主義現象」の取締りを続ける。
- 国境地帯における統制と検閲の強化
- 金正日の保安機関への訪問を通じ、力づけて役割強化を要求
- 政策の外部流出を防ぐために「不純勢力を一掃するための報復戦」(2.8 保衛部・保安省の声明)を住民に宣伝し、恐怖感を植え付けた。
- 流動人口への統制ということで、「公民証」の交換(2.22-3.6)を進めた。

3. 最近の北朝鮮における経済動向

A. 市場価格(物価及び為替レート)の暴騰などと不安定

- 通貨改革後の北朝鮮における物価や為替レートは、暴騰した後不安定な状態にある。
 - 為替レート及び物価は、2月中旬まで持続的な上昇傾向にあったが、2月末と3月初めに高騰した。
 - 2月末、3月初めの為替レートと物価の異例な高騰は、消費による混乱というよりも北朝鮮の「ウォン」価値に対する信頼が極端に落ち、そこから貨幣混乱現象に陥ったものと分析されている。
 - 北朝鮮のウォンは現在交換機能だけ残っているだけで、貯蓄手段としての価値は殆ど消滅したと報道された(6.22、『自由アジア放送』)。
- 2010年 北朝鮮の「ウォンドル」為替レートの変動は次の通りである。
 - 通貨改革後に貿易機関による無理やりの年末輸入増大と北朝鮮の外貨使用禁止措置（外貨使用禁止布告文は2009年 12月28日掲示）により、為替レートが高騰し始める。

I
II
III
IV
V
VI
VII

- その後為替レートは、2月 末、3月初めまで上昇し続け、年初の1ドル120ウォンから2,300ウォンまで、約20倍に暴騰した。
 - 3月中旬に1,100ウォン水準へと下降をみせたが、4月初めには600～700ウォンとさらに下落した。
 - 4月初め、中旬以降には再び1,000ウォン台に上昇した後、6月末には900～1,000ウォン台で安定を維持している。
- * 慈成男(チャ・ソンナム) 駐英国北朝鮮大使とイ・ギソン教授は、通貨改革初期は一時的、部分的な不安定状況があったものの、現在では収拾していると言及している(3.18、『聯合ニュース』、4.19『共同通信』)。
- しかし、7月中旬後には1,500ウォン台を超えるなど、再び上昇した。

●表 IV-1 市場為替レートとコメの価格の推移

(平壤 2010年 1～8月)

期間	市場為替レート (ウォン/ドル)	コメの価格 (ウォン/kg)
2009.12.9-12.15	-	44
2009.12.30-2010.1.4	134	55
2010.1.5～1.6	120	120
1.8～1.14	215	210
2.2～2.8	395	370
2.17～2.23	500	470
2.25～3.3	2,300	950
3.2～3.8	2,300	1,300
3.9～3.23	1,100	700
3.26～4.1	600	200
4.1～4.7	700	450
4.8～4.26	1,000	500

4.26～5.6	900	400
5.7～5.25	1,000	450
6.26～7.5	900	550
7.7～7.13	900	600
7.15～7.21	1,580	900
8.4～8.10	1,400	1,050

資料: デイリーNK(www.dailynk.com)

- 物価水準(キロ当たりのコメの価格)は為替レートの変動幅を反映し、上昇と下落を繰り返した。
 - 北朝鮮は生活必需品の価格安定のために、市場取引時の価格上限制を1月29日から導入(4/19、『共同通信』)したが、コメの価格は年初の120ウォンから3月初め1,300ウォンへと、約11倍も暴騰した。
 - 3月中旬は700ウォンに下落し、4月初めに200ウォンへさらに下落: 『(北朝鮮当局が)住民への講演会を開催し、4月から国家の食糧供給の正常化について広報し、外貨取引関連機関に対する違法な備蓄食糧の取締り強化』などが、下落の原因だと指摘(3.23、『NK知識連帯』; 『自由北朝鮮放送』)。
 - 4月初め、中旬以降に再び450ウォンに上昇した後、400～500ウォンを推移し、6月末現在では550ウォン水準を維持している。
 - 7月中旬からコメの価格は再び高騰傾向をみせ、8月初め現在では1,050ウォンのレベルへと再び上昇傾向にある。

B. 人民生活の向上を強調: 食糧確保に力を入れる

- 通貨改革後に加重した経済難の緩和と住民の不満をなだめるために、2010年の優先課題として人民生活の向上が提起されたもの。

- 2010年の『新年共同社説』では、軽工業と農業を優先に言及し、強調。
 - 軽工業と農業を強調する社説掲載: 『ふたたび軽工業と農業に拍車をかけ、勝利を信じ前進しよう』(2010.1.9、『労働新聞』)。
 - 農業省のチャン・ハクス局長は、今年の農業における重点事業は、種子革命だと述べた(1.18、『朝鮮中央放送』)。
 - 『最高人民会議第12期第2回会議(2010.4.9、マンスデ議事堂)』では人民生活を再度強調し、これを向上させる原則で2010年の予算を編成: 農業(2.5% 増加)・軽工業部門(4.5%増加)の予算増加率を拡大。
 - しかし、人民生活を強調してはいるものの、農業・軽工業部門での成果というより当面の食糧調達や物価の高騰に対処し、住民の不満を解消するのが最優先課題として登場している。
- 金正日は『経済専門家協議会』(平壤、2010年 1月末)で、上半期内に国家食糧供給の正常化を指示した。
- これにしたがって国防委員会は、全ての貿易機関と外貨取引関連機関に食糧輸入拡大の『命令』を下した(2.23、『聯合ニュース』)。
 - 『北朝鮮当局が一定区画の畑を世帯別に調整し、6~7月に収穫できる大麦、小麦、ジャガイモを無条件栽培させることによって、春の困窮期を乗り越えろという指示を人民委員会に行った』と伝えた(3.22、『自由北朝鮮放送』; 『NHK』)。
 - 北朝鮮当局は最近深刻な食糧難を緩和するために『食糧輸入責任量』を達成できない外貨取引関連会社(貿易会社) については、軍や民間を問わず、無条件閉鎖せよと指示(3.24、『自由北朝鮮放送』; 『聯合ニュース』; 『良き友人』)。

- 通貨改革後の物価高騰など、困難になった食糧事情に対処するため穀物などの対中輸入を拡大。
 - 2010年 上半期(1~6月) 中国から食糧 14万トン、肥料10万トンを輸入
 - 小麦粉の輸入は昨年同月比で383%の増加

C. 反市場措置の緩和: 市場経済に対する左偏向政治論理の後退

- 北朝鮮当局は2002年から進めてきた経済改革による経済管理の分権化・市場化が、無駄と無秩序、ひいては体制不安の原因を作り出すという判断のもとで、2005年からは計画経済の復元と市場統制に力を注いできた。
 - このような市場統制は、市場が「国の財布(財政)」を減らしてしまうだけでなく、住民の「忠誠」の基盤が指導者ではなく市場へと変わっていってしまうという指導部の認識からくるものである。
 - 金正日は2008年に「経済改革の全面撤回」を宣言し、一部の幹部による市場中心的思考に対し、「鋭い党的統制」を強調(2008.6.18 談話)、これにより権力層では政治論理が経済論理を圧倒することとなった。
 - 特に、金正日が病気になったあと急いで後継体制を整備するために、統制一辺倒の政策が急増した反面、経済政策において実用性や合理性を考慮する余地は著しく委縮した。
 - * 金正日「市場は資本主義の棲みか」と規定(2007.8) → 商売が出来る年齢や無秩序な取引を規制(2007.10) → 市場の開場日や

I
II
III
IV
V
VI
VII

取引品目に対する統制(2008.10) → 市場閉鎖の着手(2009.6) →
通貨改革(2009.11) → 外貨取引の統制(2010.1)

- しかし、2010年 1月中旬後には主要都市の市場取引を再び全面許容するなど、反市場措置を緩和し、3月からは市場や住民の個人的経済は全面的に元に戻ったものとされている。
 - まだ完全ではないが、市場はかなり以前の雰囲気を回復(2010.2.4、『聯合ニュース』)。
 - 北朝鮮当局は市場を以前のようにオープンし、市場での食糧取引を決して取り締まらないように公安機関に指示(2.18、『良き友人』)。
 - 通貨改革の後続措置として禁止されてきた外貨交換を最近になって再び許容(3.15、『NHK』)。

- このように北朝鮮は、通貨改革後の経済混乱を収め民心収拾の一環として、市場統制緩和措置を行っている。
 - 通貨改革後に進められた市場統制の強化は、金正日後継体制のための経済的基盤を作り築きあげるためにも、むしろ不利な状況を招いた。
 - 住民の不満解消と経済活性化のレベルにおいても、市場統制の緩和は避けられない選択だった。
 - したがって2005年から始まった市場経済に対する左偏向の政治論理は通貨改革のような経済政策の失敗によって後退することとなった。

- 改革(実利第一主義)指向の人物として知られた朴奉珠(パク・ボンジュ)前首相が労働党第一部部長として復権(2010.8.21、『聯合ニュース』)したことで、経済に対する左偏向政治論理は後退するものとみられる。

- 朴奉珠は2003年 9月首相に抜擢された後、2002年には『7.1経済管理措置』を先頭で推進。
- しかし、党と軍の牽制によって2006年 6月 資金転用の嫌疑により『40日 の職務停止』処分を受けたが、2007年 4月には最高人民会議で首相職から解任、順天ピナロン連合企業所(平壤所在)の支配人(行政責任者)に左遷されていた。
- 最近では労働党軽工業部(張成沢(チャン・ソンテク)の夫人、金敬姫(キム・ギョンヒ)が部長)でナンバー2として復帰。

D. 羅先市の開放と国家開発計画の推進

- 最近になって北朝鮮当局は、羅先市を開放する意思を強く表した。
 - 金正日が羅先市を訪問(2009.12)し、『対外活動の強化と対外市場の拡大』を強調。
 - 北朝鮮は最高人民会議常任委員会の『政令』によって、経済自由貿易地帯である羅先市を外資誘致のために、制度的装置が整備しやすいように『特別視』に指定(2010.1.4)した。
 - 朴哲洙(パク・チョルス)、大豊(テプン)グループ総裁は、金正日委員長が特別市昇格時には金秀悦(キム・スヨル) 羅先市長に羅先を国家開発の中心地に建設せよと指示したと述べた(3.25、『環球時報』; 『聯合ニュース』)。
 - 2010年 3月には、イム・ギョンミン前貿易相を羅先特別市の党責任書記に任命し、張成沢労働党行政部長が羅先市を訪問した際に、『6か月後にはここを完全に開放する』と述べた(3/8、『朝鮮中央通信』; 『産経』)。

- また、北朝鮮は国家開発銀行を設立し、経済開発に必要な外資誘致推進計画をほのめかしている。
 - 国防委員会の決定(2010.1.20)により、『国家開発銀行』と『朝鮮大豊(テブン) 国際投資グループ調整委員会』を設立した。
 - 国家開発銀行は理事会の第1回会議において、国防委員会代表の全一春(チョン・イルチュン)を理事長に、在中同胞の朴哲洙を副理事長に選び、スタートさせた(3.10、『朝鮮中央通信』)。
 - 『朝鮮大豊国際投資グループ』は対外経済協力機関であり、国家開発銀行への投資誘致及び資金を保障する経済連合体として活動: 朴哲洙会長はMBCとのインタビューで、国家開発銀行設立のための100億ドル規模の外資誘致を推進中だと述べた。

- 北朝鮮は『北朝鮮経済インフラ構築10か年計画』を推進し、今年平壤を含む8都市のインフラ開発計画に着手すると発表した。
 - 朴哲洙『朝鮮大豊国際投資グループ』総裁は、国家予算とは別途に『北朝鮮経済インフラ構築10か年計画』を発表(2010.3.2、『聯合ニュース』; 『日経』)した。
 - また、朴哲洙総裁は平壤と南浦、羅先、元山など、8都市に5年間で1,200億ドル相当の資金を投入するインフラ開発計画を今年着手すると発表した(4.16、『共同通信』; 『聯合ニュース』)。
 - * このような作業は、金正日の側近である金養健(キム・ヤンゴン) 統一宣伝部長が責任者としている『朝鮮大豊国際投資グループ』が主導しているものと伝えられる。

- 北朝鮮は全方位的な海外投資家の募集を指示するなど、「外資誘致総動員令」を出したものと伝えられる。
 - 国防委員会傘下に外資誘致の専門担当機関である「竜岳山指導総局」の新設、指導総局傘下の執行機関である「リョンボン経済連合会」は北京などで外資誘致のために活動(2010. 3.15、『聯合ニュース』)。
 - ファングムピョン<黄金平>と威化島(ウィファド) 開発権を掌握したことで知られる「竜岳山指導総局」は5月に中国で誘致説明会を開催し、積極的な投資誘致を行う計画(4/19、『聯合ニュース』)。

E. 朝中経済協力の加速化: 大衆依存の深化

- 北朝鮮は通貨改革の失敗を挽回すべく外資誘致と対外開放に積極的になっていると判断できよう。
 - このようなところから北朝鮮は中国にさらに密接な関係を維持し、朝中経済関係拡大に重きをおくものとみられる。
- 2009年北朝鮮の核実験後に多少疎遠だった朝中関係は、下半期から急速に回復、両国は経済協力拡大に積極的に乗り出している。
 - 中国の温家宝首相の訪朝(2009.10)時、両国は多様な経済協力に合意
 - * 朝中両国は「経済援助に関する交換文書」、「経済技術援助協定」、「教育機関間の交流協議書」、「ソフトウェア産業分野交流協力了解文」、「中国観光団体の朝鮮観光実現に関する了解文」などに署名、新鴨緑江大橋の新設、琿春—羅津港の連結道路の

I

II

III

IV

V

VI

VII

建設、羅津港埠頭開発などのインフラ開発に合意、新鴨緑江大橋近くの威化島(12.2km²)とファングム平(11.45km²)地域を自由貿易地帯として開発するために、中国企業に50年の賃貸形式の開発権を与え、中国はその見返りとして北朝鮮に2,000万ドル相当の食糧とエネルギー支援を約束したと知られている。

- これを契機にこれまで北朝鮮の手ぬるい態度で進展がなかった朝中間の大規模な経済協力事業は本格的に論議され始めた。

- 朝中両国は2010年にもハイレベル訪問や金正日の中国訪問を通じ、懸案問題や経済協力問題を話し合っている。
 - 2010年2月、王家瑞中国共産党対外連絡部長の金正日との面談、金桂冠外務次官の北京訪問時に六者協議復帰問題、平和協定問題と共に両国の経済協力問題を話し合う。
 - 金英日北朝鮮労働党国際部長が遼寧省と吉林省を訪問、両国の国境地域の 経済協力問題を話し合う。
 - 金正日の二度(2010年 5月と8月 末)の中国訪問によって、北朝鮮は中国から経済支援と協力の保障を得たものと推定される。

- 最近、北朝鮮と緊密になった中国との関係を活用し、まず中国資本を中心に外資誘致に乗り出している。
 - 北朝鮮側は、まず中国資本の投資誘致により羅先市と新義州一帯を開発しようとする計画。
 - 中国側は長吉圏の開発先導区計画と結びつけ、北朝鮮の羅津港使用権獲得により、東北三省の物流を太平洋に輸送できる朝鮮半島東部海上への「出塁権」を確保した。

- 朝中貿易規模は2010年 1～6月に、前年度同月対比16.8%増加し、北朝鮮の対中依存度が深まったといえよう。
 - 中国側の統計によると、2000年1～6月の朝中貿易規模は、12.9億ドル、このうち北朝鮮の対中輸出は3.5億ドルと1.1%減少した一方で、対中輸入は9.4億ドルと25.2%増加した。
 - これにより北朝鮮の対中貿易赤字は上半期だけでも5.9億ドルと、前年度同期間の4億ドルに比べ48.5%急増した。
 - 上半期の対中主要輸入品目は、食糧 14万トン、原油30万トン、肥料10万トンなどであり、このうち小麦粉は前年度同期対比で383%急増し、電話や電信機器も381%という爆発的増加。
 - このような対中輸入の急増は、北朝鮮の食糧難と共に、主要物資の単価が上昇しているのもその原因の一つ。
 - 北朝鮮の対中貿易依存度が日増しに高まる原因は、朝鮮半島の南北関係が梗塞状態(5.24措置を含む)になり、南北交易が殆ど中断、核実験以後には日本との貿易も中断するにしたいがい、北朝鮮の必要な物資は中国に依存せざるを得ないことからくるものと分析される。

- 北朝鮮と中国は、羅先地域及び隣接の中国地方を連携開発するために協力を強化している。
 - 延辺朝鮮族自治州の琿春市では、「もうすぐ琿春―羅津港の航路が開かれ、中国の羅津港利用が可能になるだろう」と言われている(2010.1.15、『聯合ニュース』)。
 - 延辺朝鮮族自治州の図們市では、北朝鮮と図們―天津港の区間鉄道の補修事業に合意、4月から補修作業を開始する予定

- (2010.1.17、『聯合ニュース』)。
- 吉林省は羅津港の10年間使用権を獲得し、今後10年追加交渉が進められていることを李龍熙吉林省延辺朝鮮族自治州共産党委員会副書記が2010年 3月 7日の全国人民代表大会(全人代)で公開した(3.8、『聯合ニュース』)。
 - 延辺朝鮮族自治州龍井市が北朝鮮の清津と連結する高速道路を建設することなどで、進出のための国際物流ルート開拓を推進(4.9、『長春日報』；『聯合ニュース』)。
 - 羅津港のペ・ホ Chol 港長は、5月 19日中国の琿春市を訪問、姜虎権琿春市長と羅津港開発関連の経済協力について話し合った(5.21、『聯合ニュース』)。
- 同時に北朝鮮と中国は、新鴨緑江大橋建設をはじめとする新義州や近隣地域の開発に積極的に乗り出している。
- 北朝鮮は威化島とファングム平を自由貿易地区として開発するために、中国の二つの企業にそれぞれ50年の賃貸形式で開発権を与えた(2010.2.23、『聯合ニュース』)。
 - 中国の温家宝首相の訪朝時に北朝鮮と中国が合意した新鴨緑江大橋は、10月にも着工される見込みであり(2.25、『聯合ニュース』)、全人代の代表である趙連生丹東市長も10月着工に言及している(3.7、『チャイナデیلیー』)。
 - 北朝鮮と中国吉林省の集安市では、合弁で鴨緑江上流のイムトと文岳(ムナク)など、2つの水力発電所建設の着工式(3.31、集安市)をおこなった(4.1、『共同通信』)。

- また北朝鮮と中国は、北朝鮮観光のための様々な商品開発と通行の便宜のため協力している。
 - 延辺朝鮮族自治州では、琿春から北朝鮮の羅津と平壤、板門店に行く新たな観光コースの開発計画を発表した(2010.2.12、『聯合ニュース』)。
 - 図們市外事観光局の李昌勛局長は、北朝鮮当局との合意のもとに、2つの観光ルートで事業を実施中(4.9、『東亜経貿新聞』;『聯合ニュース』)。
 - 中国の北朝鮮への団体観光は4月12日から本格的に始まった(4.16、『朝鮮中央放送』;『朝鮮中央通信』)。
 - 中国の高麗旅行社は、8月 7日に初めて咸興(ハムン) 観光への観光客を募集(4.3、『聯合ニュース』)。
 - 北朝鮮の朝鮮観光社延辺支社では、4月 13日から延吉でビザの発給を開始(4.26、『吉林日報』)。
 - 吉林省白山市長白朝鮮族自治州では5月1日から北朝鮮との辺境観光のための通行証発給を始めた(5.9、『吉林新聞』;『聯合ニュース』)。

4. 今後の展望と考慮すべきこと

- 北朝鮮は今年最優先課題として住民生活の安定と向上のための努力を続けるものと思われる。
 - 通貨改革後に悪化した食糧事情を解消するために、少なくとも秋の収穫期以前までは中国からの食糧確保に力を入れるだろう。
 - 金正日の8月 末訪中によって、中国から食糧を含む経済支援が予想されるが、水害による作況状況もあまり良くないと思われるので、コメ

などの穀物価格は不安定なもとで上昇するものと予想される。

- 今後、食糧需給の不安定さと物価の暴騰を惹起される市場統制のような反市場措置は消え、市場取引は許すものの、2002年「7.1措置」後にとられたような市場指向的改革の推進は難しいと思われる。
 - 海外からの支援が殆ど中断した状況なので、市場取引が活性化したとしても、住民の生活状況はそれほど良くなるとは思われない。
- 対外経済部門においては、中国との経済強化に力を入れ、羅先市の開放拡大と既に発表された国家開発計画の推進によって、外資誘致に乗り出すだろう。
- 朝中貿易、中国の対北投資は、今後かなり増加すると見込まれる。
 - 中国の長吉圏開発計画と、北朝鮮の羅先地域を結ぶ朝中国境地域の開発、そして北朝鮮国内でのインフラ建設は、中国との協力で進展が予想される。
 - しかし、北朝鮮の国家開発計画推進のための北朝鮮による外資誘致計画には、中国以外のどの国も参加できない状況である。
 - 特に、米国が北朝鮮の違法海外取引遮断のため、北に対する追加制裁が実施されていて、国家開発計画の資金調達の窓口になっている「大豊グループ」を通じた外資誘致は殆ど不可能な状態である。
- 最近、朝中関係が緊密になるにしたがって、今後予想される北朝鮮経済の行き過ぎた構造的対中国依存現象を事前に防止するためには、韓中経済協力の強化、韓日協力など、迂回的な方法がとられるべきだろう。
- 中国の東北三省開発計画に韓国企業の積極的参加を誘導する。

- 北朝鮮との経済協力で中国との競争を止揚し、中国と協力しながら共に進む対北投資進出を模索する。
- 対北経済協力と関連し、中国当局と話し合うための公式、非公式の協議チャンネルを作るための取り組みを進める。
- 南北経済協力を朝鮮半島の南北関係レベルだけでなく、国際的レベルにおいて弾力的に推進すべきだろう。

I

II

III

IV

V

VI

VII

V. 北朝鮮の核ミサイル 開発と日本の対応

武貞秀士

(防衛研究所統括研究官)

1. 北朝鮮の大量破壊兵器開発

北朝鮮は長い時間をかけて、弾道ミサイルとプルトニウム型の核兵器開発を続けてきた。1950年代以降、旧ソ連の研究所に北朝鮮の原子力炉技術研究者を派遣して、原子力発電のノウハウを取得し、中国にも核兵器開発の技術供与を打診したことがある。70年代以降、中国、旧ソ連とロシア、エジプト、パキスタン、イランとの協力を続けながら、弾道ミサイルと核の開発をしてきた。そして、1993年にノドンミサイルの実験、1998年にはテポドン1、2006年と2009年にテポドン2の実験を行なった。また、2006年10月、第一回の核実験を行ない、2009年5月25日に第二回の実験を行なった。北朝鮮は、いまや、核兵器の保有を宣言し、核の使用の可能性を示唆し、核兵器の数を増やすことに言及しはじめた。

では、北朝鮮が大量破壊兵器を開発するとき、何を目標にしているのだろうか。

第一に、米国との協議を進めてゆくことのきっかけにしたいという狙いがある。2010年4月21日に北朝鮮外務省は、「朝鮮半島と核」と題する備忘録を発表した。そのなかで、「必要なだけ核兵器を生産するが、核軍備競争に参加したり核兵器を必要以上に過剰生産したりはしない。ほかの核保有国と同等の立場で国際的な核拡散防止と核物質の安全管理の努力に合流する用意がある」と述べている。米国が主導する核拡散防止体制の強化策を意識した内容である。

続いて、「朝鮮半島に恒久平和体制を樹立し、非核化を実現する北朝鮮の立場は不変だ。朝鮮半島非核化の実現は信頼醸成を必要としており、平和協定締結が必要である」と指摘している。米国の核に対抗するための北朝鮮の核であり、朝鮮半島の均衡を維持し、平和協定締結を主張

I

II

III

IV

V

VI

VII

している部分は、北朝鮮の核兵器開発が、米朝関係の正常化と矛盾しないことを主張しているくだりである。あくまでも、米国との関係正常化を視野に入れた核兵器開発であることを認めている。

第二に、北朝鮮は大量破壊兵器を、韓国を含む朝鮮半島全体に対する外国の支配を拒否するための手段として位置づけている。すなわち、備忘録によると、「北朝鮮の核兵器の使命は、朝鮮半島と世界の非核化が実現されるまでの期間に国と民族への侵略と攻撃を抑止、撃退するところにある」。北朝鮮が朝鮮半島で「国家」と呼ぶときは、憲法上も労働党規約上も、南北をあわせた地域である。「国家と民族への侵略と攻撃を抑止し、撃退するため」とは、「国と民族の南半分である韓国を占領された状態から解放するため、また再度奪還する試みを抑止するため」という意味になる。つまり、北朝鮮の核兵器の使命は、米軍を撤退させ統一を達成し維持することであることを示唆している。「核保有国と結託してわれわれに反対する侵略や攻撃に加担しない限り、非核国家に対して核兵器を使用したリ、核兵器で脅かしたりしない政策を変わりなく堅持している」との部分は、韓国への派オリヲをした部分であり、場合によっては、米国の同盟国に対して核を先制使用することもあるという意味にもとれる。北朝鮮がテポドン2を発射する直前の2009年3月、北朝鮮は日本がミサイル防衛を運用した場合、大量破壊兵器を使用することを示唆する報道をしたが、この備忘録でも「核の先制使用」を肯定していることになる。

北朝鮮の核兵器開発計画は、きっかけは何か。どの時期にまで遡るのかという議論がある。90年代、北朝鮮の体制が崩壊する可能性がでてきたとき、体制保証を獲得する手段として大量破壊兵器開発を決めたという説明がある。また、使用できる核兵器を持っていなかったイラクが米国の攻撃を受けたことで、北朝鮮の核開発に拍車がかかったという説明がある。

しかし、備忘録は、朝鮮半島に核が持ち込まれた「経緯と根源から正確に認識すること」が必須だと指摘した。北朝鮮が米国の核兵器の存在を意識したのは、1950年6月に始まった朝鮮戦争のときであるということになる。北朝鮮が「残された最後の選択は唯一、『核には核で』 対抗することだけであった」と回顧するとき、核兵器開発の動機は、朝鮮戦争に遡ることを示唆しているといえよう。

以上述べたように、北朝鮮の発言からは、北朝鮮の核兵器開発の狙いが、米朝協議の進展と米朝正常化、そして、朝鮮半島有事において、米国の軍事介入することを阻止することにあることがわかる。

2. 北朝鮮の「核の論理」

ある国家がコストのかかる核兵器開発を国家としての戦略なしに行なうことはない。イランのウラン濃縮活動が核兵器開発の懸念を深めているが、イランの核兵器開発計画が事実であれば、中東地域内の政治力学、米国に対する戦略が考えられよう。核開発の疑惑がある国や核開発を放棄した国家は、それぞれの戦略があって開発を行い、また核計画を放棄してきた。米国が支援を約束することで核の放棄を決断したりビアには、「核の論理」よりも、体制保証の手段としての核開発計画があったのだろう。インドとパキスタンは、互いの核でバランスがとれれば、安定した核になるという「共通認識」があるのだろう。両国には核戦略があり、現状打破的な核ではないがゆえに、国際社会で大きな争点にはなりにくい核であった。

しかし、北朝鮮の場合、国家と民族の統一を実現するための手段であり、現状変更の核であり、建国以来の統一政策と絡んだ核兵器開発であることがその公式報道からも明らかであろう。北朝鮮の李英鎬朝鮮人民軍

I
II
III
IV
V
VI
VII

総参謀長が2009年4月24日、朝鮮人民軍創建78年の前日の記念集会で演説し、「核抑止力を含むあらゆる手段を動員し、侵略の牙城を粉々に吹き飛ばす」と警告するなかで、韓国の李明博政権を「祖国統一の敵」と批判しているのは、朝鮮半島統一を意識した核兵器であることを示唆している。北朝鮮が核抑止力を強化しながら「強盛大国」の実現を図り、統一のスローガンを保持し続け、通常戦力の実践的訓練と強化を図るという姿勢からは、「統一政策と絡んだ核戦略」の存在が浮かび上がってくる。

3月、韓国の哨戒艦が沈没する事件が起きたが、北朝鮮が2009年4月以降、韓国を含め、対外的に強硬姿勢をとってきたのは事実である。2010年1月、北朝鮮は陸海空合同訓練を実施し、韓国での戦闘を想定して軍事訓練をする模様を世界に配信した。西海5島周辺海域での射撃訓練による緊張や、非武装地帯での緊張状態が報道されてきた。北朝鮮内部との関連では、張成沢・国防委員や、呉克烈国防委員会副委員長の役割が増大すると並行して、対外的に強硬姿勢が目立ってきた。これは、金正日国防委員長の健康問題が絡み、北朝鮮の指導体制に変化が起きているからであろう。

北朝鮮の大量破壊兵器開発が長期的な戦略に基づいたものであることを考えると、将来、在韓米軍が撤退して、米朝平和条約ができ、北朝鮮が大陸間弾道弾を完成したとき、南北の軍事的緊張は高まるということになる。北朝鮮が大陸間弾道弾を完成して、米国に対する抑止力が完成したと北朝鮮が判断するとき、米軍の介入意思が揺らぐ条件が揃っていれば、朝鮮半島では戦争勃発の可能性が出てくる。北朝鮮の通常戦力は韓国との戦闘で勝利するために十分とはいえないが、大量破壊兵器開発技術はどうか。軍事技術力は完璧ではないが、外国との交流により、弾道ミサイルの誘導装置、液体燃料の燃料系統の技術、固体燃料技術、

弾道ミサイル本体の合金技術、2段目、3段目の切り離し技術などの一部は、課題を克服しつつあるのではないだろうか。2006年7月のテポドン2の失敗から、2年8か月後に、テポドン2号ミサイル実験で、ある程度の成功を収めたことは重要である。

3. 北朝鮮の大量破壊兵器の狙うもの

では、北朝鮮の核兵器はどこを狙っているのだろうか。

解釈その1 韓国をねらっている。日本、米国ではない。

解釈の理由 日本をねらえば、日米安全保障条約に基づいて、米国が北朝鮮を攻撃する。そのことを知っている北朝鮮は、日本を攻撃することはできない。米国を攻撃する能力はない。米国を攻撃すれば、米国は平壤を攻撃するだろう。そのことを知っている北朝鮮は米国、在日米軍、在韓米軍を攻撃することはできないという解釈である。

解釈の弱点 韓国を攻撃するのであれば、米韓同盟条約に基づいて、米国は北朝鮮を攻撃する。韓国が攻撃されても、米国は北朝鮮を攻撃しないと解釈しているのだろうか。日本が攻撃されたら米国は平壤を攻撃すると考えているのと整合性がない。

解釈その2 日本をねらっている。韓国でもなく、米国でもない。

解釈の理由 韓国は同族であるので攻撃しない。米国は強大な軍事力があるので攻撃しない。それに比較すると、日本は攻撃しやすい。

解釈の弱点 この解釈は日米安全保障条約が機能しないという解釈にたっている。そうだろうか。

I
II
III
IV
V
VI
VII

解釈その3 米国をねらっている。韓国、日本よりも蓋然性が高い。

解釈の理由 日本は日米安全保障条約がある。平壤はそれを知っている。平壤を攻撃する口実を与えたくない。韓国は、2000年の南北首脳会談以降、蓄積してきた南北交流の実績がある。韓国の世論は北朝鮮に同情的になってきた。北朝鮮はこの「成果」を簡単に捨てたくない。つまり、「韓国を味方につけながら、米国と対決してゆく絶好の機会が到来した」と金正日国防委員長は考えている。米国と対決するときに、大量破壊兵器は不可欠である。しかも、それは、使うのではなくて、「使うことができる」ことを誇示して、米国の朝鮮半島問題への介入を阻止するための「抑止力」なのである。

解釈の弱点 米国とは関係正常化、平和条約締結が目標であった。米国と戦争をしたら、北朝鮮は勝算がないことを知っている。また、朝鮮戦争の経験が北朝鮮の軍事戦略の出発点であったはずである。大量破壊兵器の目標に米国を据えることは無いだろう。北朝鮮高官は「米国と北朝鮮は、イスラエルと米国のような関係にならねば」とまで発言している。

4. 通常戦力との関係

北朝鮮の軍事力を考えると、大量破壊兵器を開発し、実験を繰り返すのと並行して、通常戦力を強化してきた。2010年10月、陸海空の統合演習まで実施し、韓国との千党体制を強めて、新型戦車、野砲の数を増やしてきた。そのときに2010年3月、韓国哨戒艦沈没事件が起きたのであった。

北朝鮮がこの時期に、潜水艇の魚雷という手段を使って、韓国の哨戒艦を攻撃した理由はなにか。まず、軍事的観点から説明することが重要になろう。北朝鮮は強盛大国をスローガンにして、軍事的手段を通じて国威を

高揚し、金正日が率いる国防委員会が指導しながら、米国を朝鮮半島から追い出し、統一することに邁進してきたからである。次の6つがポイントになる。

- 1) 過去、北方限界線（NLL）南側での三度の衝突では、北朝鮮が二度、ダメージを受けた。1999年6月、韓国と北朝鮮の海軍艦艇同士が衝突して、北朝鮮の魚雷艇が沈没するなど大きな損失を被った。2002年6月の衝突では、韓国軍の高速艇一隻が沈没し、死者、行方不明5名を出すなどの被害を受けた。そして、三度目の2009年11月10日の衝突で北朝鮮の警備艇が炎上したあと、北朝鮮は報復の機会を検討し始めた。潜水艇が潜行して魚雷で韓国哨戒艦を攻撃する場合、軍事的成功率は高い。この海域は浅い海だが、130トン級潜水艇であれば潜水して侵入するのは困難ではない。
- 2) 韓国海軍はこの海域で潜水艇への防御態勢が十分とはいえなかった。韓国はソマリアに魚雷探知能力のある駆逐艦を交代で派遣しており、十分な装備を持たない哨戒艦「天安」がNLLの警備にあたっていることを北朝鮮は知っていただろう。韓国国防部長官は、黄海では北朝鮮哨戒艦による攻撃があったときの対応シナリオを公表してきたが、潜水艦攻撃への対処ではない。それに、北朝鮮の潜水艦の7、8割は東海岸に配備されており、西の黄海での魚雷による不意打ちを想定していなかったのである。また、韓国海軍の近代化計画は日本を強く意識した「大洋海軍論」に基づいたものであり、北朝鮮の潜水艦や警備艇対策を念頭に置いたものではなかったことを、北朝鮮は熟知していただろう。

I

II

III

IV

V

VI

VII

- 3) 北方限界線があると韓国海軍艦が北朝鮮海軍の海州海軍基地や潜水艦基地などに接近できる。北朝鮮の基地の脆弱さを解消すべく、北方限界線を解消することが北朝鮮にとっての課題であった。この海域の緊張が高まれば、北方限界線の見直し論議に繋がるという思惑があるだろう。

- 4) 北朝鮮の核戦略との関連がある。2009年4月、弾道ミサイル「テポドン2」の実験をして、三千二百キロ以上飛行することに成功した。5月には第二回核実験をして、大量破壊兵器開発の技術に自信を深めていた。将来、大陸間弾道弾を開発して米国を核兵器で抑止する目処がたつたと北朝鮮は判断しただろう。あとは、在韓米軍撤退を促進して、韓国との通常兵器での戦いで勝利することである。潜水艦、哨戒艦などの通常戦力を強化する時期がきたと判断した北朝鮮は、昨年来、海軍訓練を強化してきたし、陸海空統合演習を2010年1月に実施して、韓国との通常戦闘に備え始めていた。

- 5) 北方限界線を無くせば、北朝鮮海軍艦艇は黄海から仁川に接近して、北朝鮮海軍艦艇の砲でソウルを射程に入れることが可能になる。陸の火砲によるソウル攻撃では、準備段階で米国に探知されて破壊される可能性がある。西海艦隊の艦艇が黄海を自由に往来できれば、海上からソウル攻撃が可能になる。

- 6) 北朝鮮の潜水艇のステルス能力(ゴム、プラスチックなどを使用し、レーダーで補足されにくい潜水艇)を実験した可能性がある。今回、北朝鮮が使用したと見られるヨンオ級潜水艇は、輸出用であ

り、夜間暗視装置を持ち、ステルス性を持たせている。イランと北朝鮮が保有しているが、ステルス技術は日進月歩であり、その能力をテストするという目的もあっただろう。

5. 日本はどう対応するか

では、朝鮮半島の安定を維持し、戦争勃発を防止して、核を使ったテロを防止し、大量破壊兵器の拡散を防止し、安定した国際社会を実現するためには、われわれは、どうすべきなのか。

第1に、核拡散防止のためには、北朝鮮との間で党、軍、経済の分野で緊密な関係を維持している中国の積極的な役割を期待したい。金正日国防委員長の中国訪問で、改めて中国が北朝鮮の経済発展の鍵を握っていることがわかった。北朝鮮の軍事能力の向上が北東アジアの安定に影響するという意識を、核セキュリティー・サミットで重要な役割を演じた中国と共有することが重要であろう。

第2に、2012年の第2回核セキュリティー・サミットは韓国で開催されるが、現在の国際社会の関心事項を考えると、核テロへの対処のみならず、大量破壊兵器の技術や物資の拡散防止、中東と北東アジア間の大量破壊兵器開発協力の有無などが、主要な議題となる可能性がある。日本、米国、韓国、中国、欧州諸国は、核兵器の技術拡散を懸念するという点では意識を共有している。核拡散問題への対処という課題で、アジアと欧州が協力しあうことも重要であろう。

第3に、日本、韓国、米国が長期的視点を持って、北朝鮮の大量破壊兵器開発に対処する安全保障と外交の戦略をたてる必要があるであろう。日米北朝鮮の核兵器開発のプロセス、核関連交渉の経緯、北朝鮮

I

II

III

IV

V

VI

VII

の公式報道を考えると北朝鮮の核兵器開発問題については、長期的視点が必要であることがわかった。北朝鮮の核開発と通常戦力の訓練は、北朝鮮の米朝平和協定案や休戦協定解消提案と一体となった大戦略のなかの一部であることを考えると、イランと北朝鮮の軍事協力関係のポイントがどこにあるも明らかになってくる。北朝鮮の核は、米国に対する抑止力という説明ではあるが、その抑止力なるものが、「民族統一」という最終目標に向けての重要な中間点であることが重要である。だからこそ、北朝鮮は、重油、食糧、体制保証などの「見返り」に対しても、核放棄という戦略的決断をすることはなかった。このことは、さまざまな議論のなかで重要になるのではないだろうか。

参考資料

(2010年9月に公表された『防衛白書』22年度版の北朝鮮関連部分を添付した)

北朝鮮の大量破壊兵器については、核兵器計画をめぐる問題のほか、化学兵器や生物兵器の能力も指摘されている。北朝鮮の核問題は、わが国の安全保障に影響を及ぼす問題であるのみならず、大量破壊兵器の不拡散の観点から国際社会全体にとっても重要な問題¹である。特に、北朝鮮による核実験は、北朝鮮が大量破壊兵器の運搬手段となりうる弾道ミサイル能力を増強していることとあわせ考えれば、わが国の安全に対する重大

¹ペリーノ・米ホワイトハウス報道官(当時)は、08(平成20)年4月24日、北朝鮮がシリアの秘密裏の核活動を支援していたとする声明を出した。また、10(同22)年2月のDNI「年次脅威評価」は、「北朝鮮は、07年10月の六者会合の第二段階の措置合意において、核物質、技術およびノウハウを移転しないとの約束を再確認したものの、我々は北朝鮮が再度核技術を輸出する可能性について引き続き警戒している。」と指摘している。

な脅威であり、北東アジアおよび国際社会の平和と安定を著しく害するものとして附じて容認できない。

弾道ミサイルについては、既存の弾道ミサイルの配備、長射程化や固体燃料化²などのための研究開発が進められていると考えられるほか、北朝鮮による拡散についての指摘が引き続きみられる。北朝鮮のミサイル問題も、特に、核問題とあいまって、アジア太平洋地域だけでなく、国際社会全体に不安定をもたらす要因となっており、その動向が強く懸念される。

1. 核兵器

A. 北朝鮮の核問題に対する対応

北朝鮮による核開発問題については、この問題の平和的解決と朝鮮半島の検証可能な非核化を目標として、03(同15)年8月以降、六者会合³が開催されている。05(同17)年の第4回六者会合では、北朝鮮による「すべての核兵器および既存の核計画」の放棄を柱とする共同声明を初めて採択するに至った。しかし、その後、北朝鮮は、六者会合への参加を引き延ばすとともに、06(同18)年、7発の弾道ミサイルの発射や核実験実施の発表を行った。このような北朝鮮による緊張を一層高める行動に対し、国際社会は、国連安保理決議第1695号および第1718号を採択するなどして、

²一般的に、液体燃料推進型のミサイルは、発射直前に時間をかけて液体燃料を注入する必要がある。これに対し、固体燃料推進方式のミサイルは、推進剤が前もって装填されていることから即時発射が可能であり発射の兆候が事前に察知されにくいこと、保管や取扱いが容易であることなどの点で、液体燃料推進方式のミサイルよりも軍事的に優れているとされる。

³第2回は04(平成16)年2月に、第3回は同年6月に、第4回は05(同17)年7月から8月にかけてと9月に、第5回は同年11月、06(同18)年12月および07(同19)年2月に、第6回は同年3月と9月に開催された。

北朝鮮に対する制裁措置を実施した。北朝鮮は、同年12月、ようやく第5回六者会合に復帰し、07(同19)年2月には、第4回六者会合の共同声明を実施していくための「共同声明の実施のための初期段階の措置」に合意した。この合意に基づき、寧辺の核施設の活動停止などが実行されたことを受け、同年10月には、第6回六者会合の成果文書として「共同声明の実施のための第二段階の措置」が発表され、北朝鮮が同年末までに、寧辺の核施設の無能力化を完了し、「すべての核計画の完全かつ正確な申告」を行うことなどが合意された。しかしながら、その合意内容の履行は完了していない。⁴

北朝鮮は、09(同21)年4月の北朝鮮によるミサイル発射を非難する国連安保理議長声明に対して、六者会合への不参加を示唆するとともに、使用済み燃料棒の再処理開始を表明したほか、国連安保理が謝罪しない場合には、核実験や大陸間弾道ミサイル発射実験を含む措置を講ずる旨表明し、同年5月には、2度目の核実験の実施を発表した。これに対し、国際社会は、北朝鮮による核実験実施を強く非難し、北朝鮮に対する追加的な措置を決定する国連安保理決議第1874号を同年6月に採択したが、北朝鮮は、新たに抽出されるプルトニウムの全量を兵器化すること、ウラン濃縮作業に着手することなどを表明した。北朝鮮は、同年9月にはウラン濃縮実験が成功裏に行われ、完了段階に入ったとするとともに、同年11月には使用済み燃料棒の再処理を8月末までに成功裏に終え、抽出されたプルトニウムを武器化する上で注目すべき諸成果が収められたと発表した。このように、北朝鮮は、核開発の進展を強調する一方、米国との協議の進展状況次第で六者会合も含む多国間協議を行う可能性を示唆し、同年12月に

⁴ 08(平成20)年6月、北朝鮮は核計画の申告を提出したが、10(同22)年5月現在、検証の具体的な枠組みに関する合意は得られていない。

は、米国のボズワース北朝鮮政策特別代表がオバマ政権の高官としては初めて訪朝した。

以上のような北朝鮮の核問題に対する対応は、意図的に緊張を高めることによって何らかの見返りを得ようとするいわゆる瀬戸際政策であるとの見方がある一方で、北朝鮮の最終的な目的は核兵器の保有による抑止力の確保であるとの見方もある。北朝鮮の究極的な目標は体制の維持であると言われており、こうした観点を踏まえれば、これらの見方はいずれも相互に排他的なものではないとも考えられる。

北朝鮮の核問題の解決にあたっては、日米韓が緊密な連携を図ることが重要であることは言うまでもないが、六者会合の他の参加国である中国、ロシアなどの諸国や国連、国際原子力機関(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といった国際機関の果たす役割も重要である。

B. 核兵器計画の現状

北朝鮮の核兵器計画の現状については、北朝鮮がきわめて閉鎖的な体制をとっていることもあり、その詳細についてはなお不明な点が多いが、過去の核開発の状況が解明されていないことに加え、一連の北朝鮮の言動を考えれば、北朝鮮の核兵器計画が相当に進んでいる可能性も排除できない。⁵ また、06(同18)年につづいて、09(同21)年5月にも北朝鮮が核実験

⁵-10(平成22)年2月のDNI「年次脅威評価」は、「北朝鮮が核兵器を製造したかどうか不明であるが、北朝鮮はその能力を有するものと評価している。」と指摘している。プルトニウム型については、シャープ在韓米軍司令官は、同年3月の下院歳出委員会で「いくつかの核兵器に十分な量のプルトニウムを現在保有していると評価している。」と証言した。また、ウラン型については、同年2月のDNI「年次脅威評価」は、「情報コミュニティは、北朝鮮がこれまでに兵器用のウラン濃縮能力を追求してきたと引き続き高い自信で評価している。」と指摘している。

の実施を発表したことは、北朝鮮が核兵器計画をさらに進展させた可能性が十分にあることを示すものである。北朝鮮による核実験は、北朝鮮が大量破壊兵器の運搬手段となりうる弾道ミサイル能力を増強していることと併せ考えれば、わが国の安全に対する重大な脅威であり、北東アジアおよび国際社会の平和と安全を著しく害するものとして断じて容認できないものである。

なお、一般に、核兵器を弾道ミサイルに搭載するための小型化には相当の技術力が必要とされている。しかしながら、米国、ソ連、英国、フランス、中国が60年代までにこうした技術力を獲得したとみられることを踏まえれば、北朝鮮が、比較的短期間のうちに、核兵器の小型化・弾頭化の実現に至る可能性も排除できず、⁶関連動向に注目していく必要がある。

2. 生物・化学兵器

北朝鮮の生物兵器や化学兵器の開発・保有状況については、北朝鮮がきわめて閉鎖的な体制をとっていることに加え、生物・化学兵器の製造に必要な物資・機材・技術の多くが軍民両用であるため偽装も容易であることから、詳細については不明である。しかし、生物兵器については、87(昭和62)年に生物兵器禁止条約を批准したものの、一定の生産基盤を有しているとみられている。また、化学兵器については、化学兵器禁止条約には加入しておらず、化学剤を生産できる複数の施設を維持し、すでに相当量の化学剤などを保有しているとみられている。⁷

⁶ メイプルズDIA長官(当時)は、09(平成21)年3月の上院軍事委員会で「北朝鮮は、核弾頭を弾道ミサイルに成功裏に搭載できるかもしれない。」と証言した。また、10(同22)年2月に米国防省が公表した「弾道ミサイル防衛見直し」(BMDR: Ballistic Missile Defense Review)は、「われわれは、北朝鮮が安全保障戦略を今後10年間変更しない場合、北朝鮮が立証された運搬システムに核弾頭を搭載することが可能となるということを想定しなくてはならない。」と指摘している。

3. 弾道ミサイル

北朝鮮の弾道ミサイルについては、北朝鮮がきわめて閉鎖的な体制をとっていることもあり、その詳細についてはなお不明な点が多いが、北朝鮮は、軍事能力強化の観点に加え、政治外交的観点や外貨獲得の観点⁸などからも、弾道ミサイル開発に高い優先度を与えていると考えられる。

A. スカッド

北朝鮮は、80年代半ば以降、スカッドBやその射程を延長したスカッドC⁹を生産・配備するとともに、これらの弾道ミサイルを中東諸国などへ輸出してきたとみられている。

B. ノドン

北朝鮮はまた、90年代までに、ノドンなど、より長射程の弾道ミサイル開発に着手したと考えられる。配備が進んでいると考えられるノドンは、単段式の液体燃料推進方式の弾道ミサイルであると考えられる。射程は約1,300kmに達するとみられており、わが国のほぼ全域がその射程内に入る

⁷メイプルズDIA長官(当時)は、09(平成21)年3月の上院軍事委員会で「北朝鮮は、化学戦計画を長期間保持」してきており、「化学剤を大量に備蓄していると信じる。」、また、「北朝鮮は、生物戦用薬剤の生産を支援できる生物戦計画を長期間保持していると信じられている。」と証言した。韓国の「2008国防白書」は、「約2,500～5,000トンの化学作用剤を分散して施設に貯蔵しており、炭疽菌、天然痘、コレラなどの生物兵器を自力で培養して生産できる能力を保有しているものと推定される。」と指摘している。

⁸北朝鮮は自ら、「外貨稼ぎを目的」に弾道ミサイルを輸出していると認めている。(98(平成10)年6月16日「朝鮮中央通信」論評、02(同4)年12月13日北朝鮮外務省報道官談話)。

⁹スカッドBおよびスカッドCの射程は、それぞれ約300km、約500kmとみられている。

可能性がある。

93(平成5)年に行われた日本海に向けての発射においては、ノドンが使われた可能性が高いほか、06(同18)年7月に北朝鮮南東部のキテリョン地区から発射された計6発の弾道ミサイルは、スカッドおよびノドンであったと考えられる¹⁰。また、09(同21)年7月、同地区から計7発の弾道ミサイルが発射されたと考えられるが、それらについては、それぞれスカッドまたはノドンであった可能性がある¹¹。

ノドンの性能の詳細は確認されていないが、命中精度については、この弾道ミサイルがスカッドの技術を基にしているとみられていることから、たとえば、特定の施設をピンポイントに攻撃できるような精度の高さではないと考えられる。

なお、閉鎖的な体制のために北朝鮮の軍事活動の意図を確認することはきわめて困難であること、全土にわたって軍事関連の地下施設が存在するとみられていることに加え、ノドンはスカッドと同様に発射台付き車両(TEL: Transporter-Erector-Launcher)に搭載され移動して運用されると考えられることなどから、ノドンの発射については、その詳細な発射位置や発射の

¹⁰ 北朝鮮が99(平成11)年以降表明してきた弾道ミサイル発射凍結を完全に放棄して06(同18)年7月に発射した計7発の弾道ミサイルのうち、3発目については北朝鮮北東部沿岸地域のテポドン地区から発射されたテポドン2であったと考えられる。その他のスカッドおよびノドンの発射については、たとえば、夜明け前から発射を開始したこと、短時間のうちに異なる種類の弾道ミサイルを連続して発射したと考えられること、発射台付き車両(TEL)を運用して発射したと考えられること、射程の異なる弾道ミサイルを一定の範囲に着弾させたと考えられることなど、より実戦的な特徴を有しており、北朝鮮が弾道ミサイル運用能力を向上させてきたことがうかがえる。

¹¹ 発射された計7発の弾道ミサイルは、いずれも09(平成21)年6月22日に北朝鮮より連絡を受け、海上保安庁が航行警報を发出した軍事射撃訓練区域(1)北緯39度9分 東経127度37分、2)北緯41度12分 東経129度50分、3)北緯41度30分 東経131度59分、4)北緯41度15分 東経132度6分および5)北緯38度55分 東経128度2分、で囲まれる区域内に落下したのではないかと推測される。

タイミングなどに関する個別具体的な兆候を事前に把握することは困難であると考えられる。

C. テポドン1

北朝鮮は、射程約1,500km以上と考えられるテポドン1の開発を進めてきた。テポドン1は、ノドンを1段目、スカッドを2段目に利用した2段式の液体燃料推進方式の弾道ミサイルで、98(同10)年に発射された弾道ミサイルの基礎となったと考えられる。北朝鮮は、最近、さらに長射程のテポドン2の開発に力点を移していると考えられ、テポドン1はテポドン2を開発するための過渡的なものであった可能性もあ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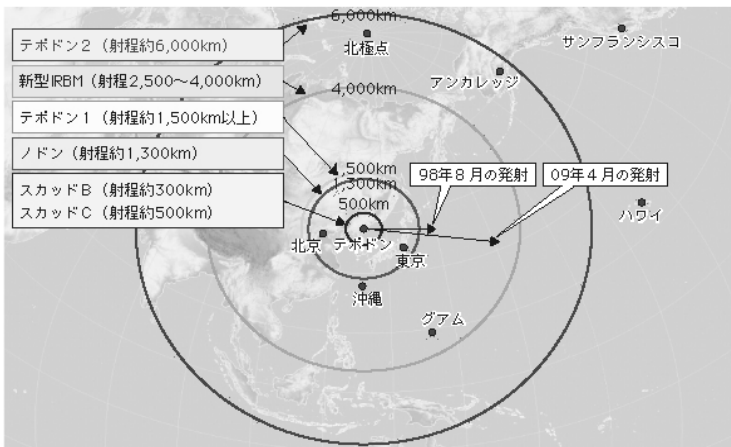
D. テポドン2

テポドン2は、新型ブースターを1段目、ノドンを2段目に利用した2段式ミサイルで、射程約6,000kmとみられている。テポドン2は、06(同18)年7月、北朝鮮北東部沿岸地域のテポドン地区から発射され、

発射数秒後に高度数kmの地点で、1段目を分離することなく空中で破損し、発射地点の近傍に墜落したと考えられる。また、09(同21)年4月、同地区からテポドン2または派生型¹²を利用したとみられる発射が行われた。この発射については、わが国の上空を飛び越えて、3,000km以上飛翔し、太平洋に落下したと推定されることから、06(同18)年のテポドン2の発射失敗時と比較すれば、北朝鮮が弾道ミサイルの長射程化を進展させたと考えられる。また、北朝鮮は、この発射を通じて、推進部の大型化、多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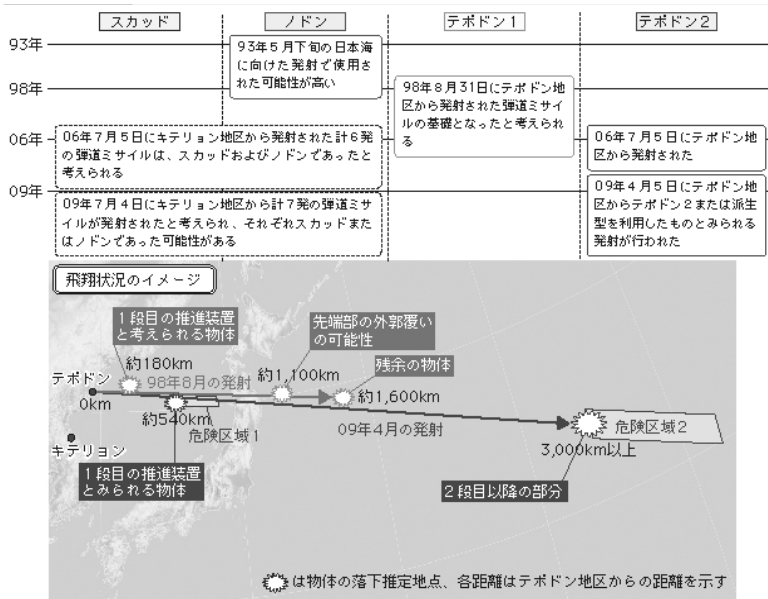
¹² たとえば、2段式のミサイルの弾頭部に推進装置を取り付けて、3段式としたもの。

● 図 V-1 北朝鮮の弾道ミサイルの射程



※ 上記図は、テポドンを中心と各ミサイルの到達可能距離を概略のイメージとして示したもの。

● 図 V-2 北朝鮮によるのミサイル 発射状況



階推進装置の分離、姿勢制御などの所要の技術を検証し得たと考えられるため、将来、さらなる長射程化などの弾道ミサイル開発を一層進展させる可能性が高い。さらに、長射程の弾道ミサイル実験は、射程の短いほかの弾道ミサイルの射程距離の延伸、弾頭重量の増加や命中精度の向上にも資するものと考えられるため、この発射が、ノドンなど北朝鮮が保有するその他の弾道ミサイルの性能の向上につながる可能性が考えられる。(図表 VI-1,2 参照)

北朝鮮は、現在も、以上のような弾道ミサイルのみならず、新たに、中距離弾道ミサイル¹³や固体燃料推進方式の短距離弾道ミサイル¹⁴の開発を行っていると考えられるほか、スカッドやノドンといった既存の弾道ミサイルについても、長射程化などの改良努力が行われている可能性に注意を払っていく必要がある。

北朝鮮が発射実験をほとんど行うことなく弾道ミサイル開発が急速に進展してきた背景として、外部からの各種の資材・技術の北朝鮮への流入の可能性が考えられる。また、ノドン本体ないし関連技術のイランやパキスタンへの移転といった、北朝鮮による弾道ミサイル本体ないし関連技術の移転・

¹³-シャープ在韓米軍司令官は、09(平成21)年3月の上院軍事委員会で「北朝鮮は現在、沖縄やグアム、アラスカを攻撃することが可能な新型の中距離弾道ミサイルを配備しつつある、」と証言した。10(同22)年2月の米国防省「BMDR報告書」は、「移動式の中距離弾道ミサイルが(北朝鮮によって)開発中である、」と指摘している。また、韓国の「2008国防白書」は、「90年代末からは、射程3,000km以上の新型中距離ミサイル(IRBM: Intermediate Range Ballistic Missile)の開発に着手し、最近、作戦配備した、」と指摘している。

¹⁴-ベル在韓米軍司令官(当時)は、07(平成19)年3月の下院軍事委員会で「北朝鮮は、新型で固体燃料推進方式の短距離弾道ミサイルを開発中である。最近では、06(同18)年3月、このミサイルを成功裏に試験発射した。一旦運用可能状態になれば、このミサイルは現行のシステムに比し、より機動的かつ急速展開が可能で、一層短い準備期間での発射が可能となるだろう、」と証言した。また、10(同22)年2月の米国防省「BMDR報告書」は、「北朝鮮は、先進的な固体燃料推進方式の短距離弾道ミサイルを開発している、」と指摘している。

拡散の指摘や、こうした移転・拡散によって得た利益でさらにミサイル開発を進めているといった指摘も見られる¹⁵。

北朝鮮の弾道ミサイルについては、その開発・配備の動向のみならず、移転・拡散の観点からも懸念されており、引き続き注目していく必要がある。

¹⁵ 10(平成22)年2月のDNI「年次脅威評価」は、「北朝鮮が弾道ミサイルや関連物資をイランやパキスタンを含む複数の国家に輸出していることは、北朝鮮の拡散活動の範囲を示すものである。」と指摘している。また、輸出先であるイランやパキスタンで試験を行い、その結果を利用しているといった指摘もある。

Ⅵ. 「日韓国交正常化と
日朝関係」再考：
対北朝鮮政策を
めぐる日韓協力の可能性

木宮正史
(東京大学教授)

1. 序論

今年、2010年は1910年韓国併合から100年であり、韓国併合に至る過程をどのように見るのかをめぐって議論が展開されてきた。この点に関して、日本国内でも条約締結過程に重大な強制という瑕疵があったために「不法・無効」であるという韓国側の主張を受け入れるべきだという議論もあったが、菅直人民主党政権は、1965年日韓国交正常化当時に日本政府が示したように、1910年の韓国併合自体は「合法かつ有効であり、1945年以降に無効になった」という主張を堅持しながらも、植民地支配が韓国国民の意思に反したものであったことを首相談話の中で認めた。

韓国では、朴正熙および朴正熙政権に対しては、経済発展を達成し、北朝鮮との体制競争に勝利する条件を準備したという点で、たとえ、その人権弾圧、独裁という点で批判はあっても、他の歴代政権、歴代指導者と比較すると、大体において高い評価が与えられていることは否定できない。そして、朴正熙政権時代の外交政策における一つの大きな成果が、1965年日韓国交正常化であることについても異論はない。にもかかわらず、日韓国交正常化自体の評価に関しては、韓国国内では必ずしも肯定的評価が与えられているわけではない。

2010年8月の菅首相の談話には、いろいろな立場からの異なる「期待水準」に照らした評価がありうる。村山談話に見られる謝罪内容に加え、さらに、1910年に起点を持つ植民地支配が韓国国民の意思に反したものであったということを明確にしたことが評価される一方、結局、植民地支配の「不法かつ無効」という法的効果の問題に踏み込まなかったことが批判された。ただし、菅首相の談話は、1910年の韓国併合という点に注目したものであれば、韓国だけではなく北朝鮮をも対象にすべきであったにもかかわらず

I

II

III

IV

V

VI

VII

ず、北朝鮮に関する言及はなかった。最も重要な理由が、拉致や核開発に起因して北朝鮮批判を強める日本の国内世論を反映したものであったことは言うまでもない。1991年に開始され、さらに、2000年日朝平壤宣言によって一つの大きな転機を迎えたはずの日朝国交正常化交渉が再開されなくなって久しい。さらに、日朝国交正常化を達成するべきだという国内世論は急激に減少の一途をたどっている。日朝国交正常化交渉は、日本にとっても北朝鮮によっても、外交政策における優先順位が劇的に低下してしまった感は否めない。日本における民主党政権への政権交代が、この交渉進展の糸口にな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期待」も一部にはあったが、日朝関係に関しては自民党政権とは大きな違いはないだろうという予想が支配的であった。さらに、民主党政権成立後の「迷走」と参議院選挙での敗北も相俟ってねじれ国会が成立し、民主党が分裂の危機を内包しつつ政権基盤が脆弱になった状況では、日朝国交正常化交渉に本格的に取り組む国内的条件が欠如していると言わざるを得ない。

2. 日韓国交正常化と日朝国交正常化をめぐる逆説

日韓併合100年を契機として、日韓併合に至る過程の合法違法に関する議論が盛り上がり、1965年日韓国交正常化が再び検討の俎上に置かれたにもかかわらず、日朝国交正常化への言及がなかったこと背景には、日韓国交正常化への評価と日朝国交正常化へのその「応用」をめぐる、次のようなねじれの構造が存在するからだと考える。それは、日韓国交正常化を肯定的に評価する側が日朝国交正常化に対するその「応用」に消極的であるのに対して、日韓国交正常化を批判的に評価する側の方が日朝国交正常化の必要性を強調しているということだ。

前者を代表する議論として、ブッシュ前政権下、国務省において対北朝鮮政策の樹立に関して重要な役割を果たし、また、米国との戦略的關係を媒介として日韓關係の変動を説明しようとした『Alignment Despite Antagonism』の著者でもある、ヴィクター・チャ（Victor Cha（ジョージタウン大学教授））の見解を紹介したい。彼は『朝鮮日報』2004年9月3日に掲載した「海外コラム：日・北協商と韓・日協定」で、次のように述べている。

日本の官僚たちは今後締結される日朝条約が1965年の日韓条約に基づいて行なわれるだろうと言う。65年日韓条約では、今日の貨幣価値で総額100億ドルに該当する援助と長期低利借款が伴った。しかし、日韓条約が今日の日朝条約のモデルになりうるか疑問が提起される。日韓条約は冷戦が絶頂に達した当時、米国の主要同盟国を連結するという意味があった。日本は朝鮮半島の共産化を防ぐための防波堤として韓国の脆弱な経済を強化するため、非正常的に多くの経済援助を提供した。（中略）

日韓間には歴史的な反感が残り、時に海上における対立もあったが、それにもかかわらず韓国は日本国民を拉致したことも、日本に直接的な軍事的脅威を加えたこともなかった。日朝条約は、これとは全然違う状況で成立されることになるだろう。北朝鮮は大量殺傷兵器プログラムとドゥミサイル配置で日本に直接的な軍事的脅威を加えている。（中略）彼らは日本の民間人を拉致し監禁したうえ、死なせてしまった。（中略）

今日、北朝鮮との条約は同盟国と締結するものではなく、自国の安保を直接脅かし主権を侵害する国であり、既に100億ドルの債務を日本に負っている国と締結するものだ。日本の官僚たちは、南北朝鮮と同様な形式で補償しなければならぬという日本政府の義務感のために、65年日韓条約が参考になると正当化するかもわからない。もし、それが理論的根拠だとしても

I

II

III

IV

V

VI

VII

北朝鮮に供与する金額は、韓国に供与した1965年貨幣価値基準5億ドルを現在の貨幣価値に換算したものではありません。当時の貨幣で4500万ドルに該当する金額でなければならないはずだ。これは、1965年日韓条約において、日本が植民地支配によって生じた財産被害に対する賠償として、それ以降韓国に10年間支払おうとした金額だからだ。（中略）

日本と韓国、日本と北朝鮮を取り巻く状況はお互いに独自のだ。日本はそれに従って両国を待遇しなければならない。そうしないと、官僚主義的にはよいかもしいが、日本の国益には損害になってしまうだろう。

1965年の日韓国交正常化は冷戦体制下における反共の「擬似同盟」としての日韓の相互協力を確立したものであるという評価が、議論の前提である。そのうえで、日韓関係と日朝関係とは差別化されるべきであると主張し、さらに、北朝鮮に対する経済支援が北朝鮮の変化につながることに對しては懐疑的である。むしろ、日朝国交正常化とそれに伴う経済協力が、北朝鮮の軍事力強化や現体制の強化につながることで歓迎すべきではないという含意があるようにも思われる。

チャは、韓国の保守系新聞にはよく登場する有名人ではあるが、さすがに、日韓国交正常化に関して、日本が韓国に「非正常的に多くの経済援助を提供」という指摘には、韓国国内において、保守・進歩の政治的立場を超えて反論が予想されるであろう。ただ、日韓国交正常化という朴正熙政権の不可避な決断を評価する立場や北朝鮮に対する経済協力に対する慎重な姿勢に関しては、韓国における保守の立場と共通する。さらに、冷戦期において、韓国においては、日本の対朝鮮半島政策に関して「二股外交」、即ち、韓国だけでなく北朝鮮とも二股をかけるという意味で、日本の北朝鮮接近を批判した議論にも相通じるものがある。

次に、その対極にある見解として、『ハンギョレ新聞』2000年3月27日に

掲載された、韓国を代表する韓国史家であり、進歩陣営の元老的存在でもある姜万吉氏(高麗大学名誉教授)のコラム「韓-日条約と朝-日条約」を紹介する。

今後締結される日朝条約ではどのような形態であれ、日本帝国主義の強制支配事実が明記され謝罪が表示されることで、民族解放運動の正当性が確立されなければならず、それに伴って日韓条約も改正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ように、日朝条約締結過程は日韓条約を正す過程にならない。したがって、それは南北分断国家次元の問題ではなく民族全体次元の問題だ。北朝鮮が経済的な困難に直面する時、日本と条約を締結し、歴史的事実を明示することよりも、万に一つでも、経済的追求を優先させることになれば、日韓条約のような過誤を南北双方が共に犯してしまう結果になってしまう。

これは、2002年9月の日朝平壤宣言の前に書かれたものであるが、日朝平壤宣言に対して、韓国国内一部で示された「懸念」、即ち、北朝鮮が「経済的な困難に直面する時、日本と条約を締結し、歴史的事実を明示することよりも、万に一つでも、経済的追求を優先させた」結果、日韓と同様な経済協力方式による請求権問題の解決を選択しようとし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懸念」を先取りしたものとして、非常に示唆的である。日本に対して、現実に存在した日韓国交正常化ではなく、本来ありうべきであった別の形態での日朝国交正常化を要求する。日朝国交正常化に関しては日韓国交正常化の轍を踏まないことを北朝鮮にも求める。「日朝国交正常化によって日韓国交正常化を正す」という発想は、日本政府の立場からは容認できるものではもちろんないが、こうした「現実にあった歴史」を「あるべき歴史」に接近させようとする模索は、金泳三政権下の「歴史の立て直し」政策に顕著に現れたように、韓国では比較的頻繁に行われていることでもある。

I

II

III

IV

V

VI

VII

但し、北朝鮮に対する日本の経済協力の効果自体に対しては、それほど否定的な見方を示しているわけではない。これは、金大中政権、盧武鉉政権の対北朝鮮政策にも共通する考え方である。日米の対北朝鮮強硬論に対しては批判的であり、むしろ、韓国が主導する対北朝鮮包容政策に日米も同調することによって、北朝鮮に対する関与の効果を最大化することができ、それが北朝鮮の「攻撃的姿勢」を緩和し、朝鮮半島における南北共存を制度化し、究極的には北朝鮮の体制変容を促すことで南北統一の基盤を造成することができると思う。その意味で、日本が日朝国交正常化に前向きな姿勢を示すことが好ましいと考え、そのように誘導してきたし、逆に、対北朝鮮強硬論に傾斜する日本政府や世論に対しては批判的であった。

●表 VI-1 日韓国交正常化と日朝国交正常化とのねじれの構造

過去の日韓国交正常化への評価	肯定的	否定的
未来の日朝国交正常化の効果		
肯定的		姜万吉
否定的	Victor Cha	

以上のように、ある意味では、対極にあると思われる二つの見解であるが、両者ともに、現実存在した日韓国交正常化とこれからあるべき日朝国交正常化とは同じものであってはならないという点で、奇妙な一致がある。前者は、日韓国交正常化が冷戦体制下における疑似同盟関係の成立を意味するものである点に注目し、現在の日朝関係はそうした条件にはなく、当然異なるべきものだ」と主張する。それに対して、後者は、日韓国交正

常化が脱植民地化という点で不十分なものであったことを指摘し、日朝国交正常化に関してはそうした不十分なものであってはならないと主張する。

もちろん、両者から何の政策的含意が得られないというわけではない。前者は、日朝国交正常化に伴う日朝経済協力は無条件のものではなく、北朝鮮の対応次第であるという意味での慎重さを求める。後者は、日朝国交正常化が「日韓国交正常化を正す」ものでなければならず、より徹底した植民地支配の清算を行うべきであるということだ。どちらの議論にも傾聴すべき部分はある。ただ、こうした二つの議論からは、日韓国交正常化の成果を日朝国交正常化に積極的に活かし、それによって日朝関係の打開を図ろうという志向は生まれ難い。前者では、どのような日朝国交正常化とそれに伴う新たな日朝関係を構築するのか、その現実的モデルが提示されない。後者においても、日韓国交正常化が反面教師ということにはなるが、日朝国交正常化とそれに伴う日朝協力がどのようなものであるのか、その現実的モデルは提示されない。

しかし、日韓国交正常化は日朝国交正常化の現実的モデルにはなりえないのだろうか。両者の議論に決定的に欠如するのは、日韓国交正常化に起因して現実の東アジアに起こった帰結を、日朝国交正常化を媒介として、新たな東アジア世界秩序の形成に積極的に生かしていくという戦略的姿勢ではないかと思われる。換言すれば、対北朝鮮政策をめぐる日韓の連携可能性それ自体を、この両者のような議論は封じ込めることになってしまっ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危惧する。日韓国交正常化を初めとした日韓関係における蓄積を、今後の日朝国交正常化にも積極的に生かすことは、北朝鮮問題をめぐる日韓の連携をよりいっそう密にすることを意味する。そういう形で、日韓の連携を強めるための原動力は、残念ながら、この両者の議論からは生まれてこないのではないかと考える。

I

II

III

IV

V

VI

VII

もちろん、誤解ないように断っておく必要があるが、1965年の日韓国交正常化という現実を全面的に受け入れろということではない。その後の条件の変化、具体的に言えば、日本社会の植民地支配に対する認識の変化、日韓の力関係の変化などに応じて、日韓国交正常化の「補完」は必要だと考えるからだ。逆に、こうした戦略的な姿勢を進めるためにこそ、日韓の歴史認識の問題にもっと真正面から取り組むべきだという議論が生まれることが望ましいとも考える。筆者は、その意味で、今回の菅首相の談話を戦略的な意味で評価する。

なぜ、北朝鮮問題を議論しようとするときに、こうした点を議論するのかと疑問に思いかもしい。実は、北朝鮮をめぐる現実的な問題とも深く関連しているからではないかと考えるからだ。もちろん、韓国政府、社会自身も何が対北朝鮮政策における最適解なのか、わからないということかもしれない。しかし、特に、南北関係の当事者ではない日本から見ると、韓国が、日朝関係や日本の対北朝鮮政策に何を期待しているのか、必ずしも理解しがたく、混乱をきたすということがあるのではないかと思われるからだ。そして、その根底には、対北朝鮮政策をめぐる日韓の連携を拒んできた何らかの心理的要因が存在して北朝鮮と考える。

ただ、対北朝鮮政策をめぐる日韓の連携がそれほど必要とされているわけではないということであれば、特に、この点を問題視する必要はないのかもしれない。しかし、果たして、そうなのか。この点について、以下、北朝鮮問題をめぐる問題の構図を考察することで、対北朝鮮政策をめぐる日韓の連携がなぜ必要なのかを明らかにすることで、対北朝鮮をめぐる日韓連携の心理的な阻害要因をどのように克服するのかを考えていきたい。

3. 北朝鮮の「通米封南」・中国依存に関して

北朝鮮の外交政策は、1990年代初頭の南北高位級会談時期、2000年6月の南北首脳会談時期を除くと、対米関係と対南関係とに関して、ほぼ「通米封南」で一貫してきたと言えるだろう。一方で、南北間の決定的な体制格差を前提とすると、無条件に南北間の交流や協力を深めることは、北朝鮮にとって体制の危機につながるであろうことは容易に想像される。他方で、米韓関係の現状を与件とすると、韓国にとって米朝関係の範囲内で南北関係を進めざるを得ないだろうと北朝鮮は考えるため、南北関係よりも米朝関係を優先させるということが、北朝鮮にとって南北関係をより有利に進めるためには合理的な選択となる。これが、北朝鮮が「通米封南」戦略を選択する理由である。

さらに、米朝関係が期待通りに進展せず、したがって韓国の経済支援も当てにできない場合には、唯一、経済支援を当てにできるのは中国ということになる。たとえ中国への依存を強めることが北朝鮮にとって最善の選択ではないとしても、韓国への依存を強めることと比較した場合の「次善の選択」だからである。北朝鮮が「われわれ民族同士」という理念を強調しても、以上のような北朝鮮外交の優先順位から考えると、中国・米国との関係が優先であり、韓国との関係は後回しにされるということにならざるを得ない。日本との関係も、韓国と同様な位置づけであるとともに、確かに日朝国交正常化に伴って相当規模の経済協力を獲得することができるとしても、日本の脆弱な政権基盤や国内世論を与件とすると、それも容易には望めないということになる。

北朝鮮の短期的な体制堅持という優先目標を与件とし、そのためにどの国に依存するのか、どの国の支援を受けるのかという選択を迫られた場合

I

II

III

IV

V

VI

VII

に、上記のような優先順位ということになるだろう。そう考えると、たとえ、日韓がどんな選択をしたところで、北朝鮮にとって優先順位の低い日韓との関係改善への取り組みは後回しにされてしまうということになる。2002年以降、日本国内で、日朝国交正常化の必要性があるという見方が急減しつつある状況では、こうした北朝鮮の姿勢は「渡りに船」ということになるかもしれない。「日朝国交正常化交渉が進まないのは北朝鮮に責任がある」ので、それは「仕方がない」ということを言っていればよいからである。

しかし、北朝鮮にとって、こうした選択が長期的に見て果たして妥当な選択なのか。もちろん、これは一義的には北朝鮮自身が判断すべきことであるが、北朝鮮の過去の政策選択を考慮すると、北朝鮮自身がそうした選択に十分に満足しているのか疑問符がつく。まず、過去の政策から見ても、1950年代、国内のソ連系、延安系を粛清し排除することで、金日成を中心とする満州派のヘゲモニーを確立した。さらに、1961年、中ソとの間で矢継ぎ早に締結された友好協力相互援助条約は、その条約成立過程の政治力学に関して、いろいろな解釈の余地があるが、結果的には、北朝鮮が自国への関与を中ソに競争させたと見て間違いはないだろう。1960年代、日米が協力して韓国を支援したのとは異なり、中ソ対立という外的環境は、一方で北朝鮮に対する韓国の国力逆転を帰結させる要因になったことは否定できないが、他方で、中ソに北朝鮮への関与をめぐって競争させながら、中ソという大国に対する北朝鮮の自律性を確保するために利用したことも、また否定できない。

このように、ソ連の衛星国であった冷戦体制下の中東欧諸国とは異なり、主体思想という、マルクスレーニン主義に代わる独自の体制理念を開発し、自律性を確保することに固執してきたのである。同時代、南北朝鮮の体制実績が北朝鮮優位から韓国優位へと逆転するなど、北朝鮮の外交

実績を過大評価するべきでないのはもちろんだが、中ソという大国の狭間で、しかも、その社会主義大国同士が対立を深めた中で、大国の力を利用しながら、大国のどちらか一方にだけ依存しないように自律性を高めることを模索したということは、確かに、その代償が唯一指導体制という、世界的に見ても類例のないほどの個人崇拜に基づく独裁体制であることを考慮したとしても、やはり、いかに困難な事業であったのかを窺い知ることができるだろう。

そうした北朝鮮が、たとえ、G2時代の到来と言われるほど、中国の国力が以前とは比較にならないほど巨大になりつつあるとは言っても、現在のような中国への一方的依存を強める選択を採り続けるのかは、はなはだ疑問である。さらに、「通米封南」という北朝鮮の戦略も、もちろん一義的には韓国に吸収されることへの警戒に起因して選択されたものであると見ることができるだろうが、それだけではなく、中国への依存が強まりすぎないように均衡を図るためという意味で、北朝鮮なりのバランス感覚が働いていると見ても、それほど間違っていないだろう。

実際に、1990年代初頭、日朝国交正常化交渉の開始、南北高位級会談の開始という形で、同時期に日韓への接近を図った例もある。また、2000年6月南北首脳会談から2002年9月日朝首脳会談と日朝平壤宣言に至る過程においても、同様である。この背景には、韓国の金大中政権が日朝両国に対して日朝関係改善と日朝国交正常化交渉の再開を強く勧めたということがある。北朝鮮外交は、周辺関係国、特に日米韓が一致団結して北朝鮮に対応しないように「楔を打ち込む」ということが基本にあることを前提としつつも、そうした戦術では譲歩を引き出すことが困難な場合には、むしろ、北朝鮮なりの関与政策、言い換えれば「抱きつき政策」の選択がありうるのを排除するべきではないだろう。

I
II
III
IV
V
VI
VII

2回におよぶ小泉訪朝にもかかわらず、主として拉致問題に起因して硬化した日本の国内世論によって、日朝関係が停滞したのは北朝鮮にとって「誤算」だっただろう。また、韓国において李明博政権への交代に伴い、金大中政権の対北朝鮮包容政策、盧武鉉政権下における平和繁栄政策を再検討したことは、北朝鮮にとって、それまで進めてきた南北関係の進展を再検討する契機にもなった。そこで、新たに登場した米国オバマ政権にある意味では期待をかけ、それを揺さぶるために、2009年4月、5月と一連のミサイル発射、核実験を行ったが、それがむしろ米朝関係の改善にブレーキをかける結果をもたらした。そして、2009年12月のデノミ実施に伴う経済混乱なども拍車をかけ、経済面における中国への依存を強める結果に陥ったということになる。北朝鮮から見ると、現在のような、中国一辺倒の依存は、自ら望んでもたらされたというよりも、政策選択の失敗に起因して、そうすることを余儀なくされたという側面が大きいのではないか。2010年5月と、8月から9月にかけてという、類例のない短期間における2度の訪中、しかも、北朝鮮にとっては米国内における「数少ない」北朝鮮理解者であるはずのカーター元大統領の訪朝時期に合わせてでも金正日訪中を設定したことは、天安艦沈没事件における中国の対応への「感謝」、後継体制への「承認」ということに加えて、中国への配慮の姿勢を示したということになるだろう。

しかし、このように、いったんは中国依存に傾斜した振り子ではあるが、遅かれ早かれ、逆の方向に振れることも十分に可能であり、その時の機会をどのようにつかまえることができるのかが鍵となるだろう。実際に、2010年9月に入って、北朝鮮は、拿捕した韓国漁民を返還し、離散家族再会事業の再開を提案するなど、韓国に対する融和的姿勢を示し始めている。

4. 膠着する北朝鮮問題打開のための日韓協力の可能性

北朝鮮の暴発を抑えるためには、中国の絶対的な影響下に置いたほうが安全であるという前提に基づけば、北朝鮮が中国依存をよりいっそう強めることは、それほど悪い選択ではないということになるかもしれない。一時期、米国内部でも、6者協議における中国の役割に「期待」して、こうしたスタンスをとろうとした痕跡もある。さらには、韓国においても、南北関係の枠内において韓国主導で北朝鮮を馴化させることがいかに困難であるのかという認識に基づいて、「中国任せ」でも仕方がないという考えもあるようだ。

しかし、次の二つの点で、そうした姿勢には問題があると考えられる。第一に、天安艦沈没事件における中国の対応に現れたように、北朝鮮の行動の許容範囲に関して、依然として、中国と日米韓の間では大きな乖離が存在するという点だ。中国に任せておいて、北朝鮮の非核化を達成できるのか、という疑問は、この事件を契機によりいっそう高まったように思われる。この事件に関して、韓国国内で依然としてさまざまな憶測があることは承知している。さらに、中国は、北朝鮮の暴走を抑えるためにも、とりあえずは中朝の「同盟」関係の再確認を強調する必要があったのではないかということもいったんは理解できる。しかし、北朝鮮の、こうした挑発行為にしても、また核開発に関して、それを統制しようとする中国の力、さらに、力の行使の「真摯度」に依然として全幅の信頼が置けないと見られても仕方がないだろう。

第二に、中長期的な東アジア秩序に関わる問題である。北朝鮮問題を「中国任せ」にするということは、秩序形成の主導権に関して、結果として、日韓よりも中国の方に有利に働くということを意味するのではないかと考えられる。中国の大国化は既成事実として進んでおり、大国としてふさわしい

I

II

III

IV

V

VI

VII

責任ある役割分担を中国にとってもらうということは必要だが、それは無条件で保障されるものではない。むしろ、そのように仕向けるための周辺諸国の「圧力」が必要である。その意味で、北朝鮮問題に関しても、「中国任せ」ではなく、場合によっては中国の利害とは対峙するような形で、また、中国と相互補完的に協力する形で、日韓が応分の役割を果たすことは、やはり必要であろう。特に、韓国にとっては、南北統一という課題を抱えているだけに、「中国任せ」という点に関しては抵抗がよりいっそう根強いだろう。

以上のように、北朝鮮問題を「中国任せ」にできないということになると、やはり日韓が応分の責任ある対応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になるだろう。そして、日韓の場合には、その国力からして、日韓それぞれが単独での問題解決能力には限界があると言わざるを得ない。韓国は南北協力という手段で、日本は日朝国交正常化とそれに伴う経済協力という手段を、いかに有効に活用して、北朝鮮を誘導し、北朝鮮から譲歩を引き出す交渉努力を持続するしかないだろう。ただ、残念ながら、こうした北朝鮮をめぐる日韓協力が有機的に行われ十分に準備されているとは言い難いだろう。それを妨げている一つの大きな心理的要因が、前述したような、日韓国交正常化と日朝国交正常化との関係についての、ねじれの関係にあると考える。

5. おわりに

日朝国交正常化と南北協力とに関する日韓の連携を具体的にどのように進めていくかは、今後の課題としたい。本稿では、韓国併合100年という節目の年に、日韓国交正常化交渉への問い直しという状況をめぐる日韓関係に直面する中、本来であれば、北朝鮮をも対象とする問題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それに言及されないという状況をどのように考えたらよいのかという問

題意識から、日韓国交正常化と日朝国交正常化に対する評価のねじれという問題が、対北朝鮮政策をめぐる日韓連携を妨げる心理的要因になっ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仮説を提示した。仮説の実証作業は必ずしも行われたわけではなかったが、その代わりに、北朝鮮をめぐる日韓連携が困難な状況が、「通米封南」・中国依存という北朝鮮の対応と関連があ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点を指摘した。ただ、北朝鮮の過去の行動様式から見ると、そうした傾向だけが一方的に持続することは考えがたく、日韓へ「接近」する可能性があることを指摘したうえで、そうした状況に迅速かつ柔軟に対応するためにも、上記のねじれの構造を解消すべく、日韓国交正常化の経験を日朝国交正常化にどのように活かすのかに関する日韓の連携が必要ではないかという結論を導き出した。

I

II

III

IV

V

VI

VII

参考文献

1. 日本語文献

浅野豊美·木宮正史·李鍾元. 『歴史としての日韓国交正常化, 上·下』. 東京: 法政大学出版局, 近刊.

林東源, 波佐場訳. 『南北首脳会談への道: 林東源回顧録』. 東京: 岩波書店, 2008.

金大中アジア太平洋平和財団, 波佐場訳. 『金大中平和統一論』. 東京: 朝日新聞社, 1999.

金伯柱. “中朝同盟の形成動因に関する一考察: 1961年中朝同盟条約の締結過程を中心に.” 『中国研究月報』. 第64巻 第5号, 2010年5月.

平岩俊司.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と中華人民共和国』. 横浜: 世織書房, 2010.

和田春樹. 『北朝鮮 遊撃隊国家の現在』. 東京: 岩波書店, 1998.

2. 韓国語文献

강만길. “역사칼럼: 한·일 조약과 조·일조약.” 『한겨레』. 2000년 3월 27일. 국민대학교일본학연구소편. 『한일회담과 국제사회』. 서울: 선인, 2010.

국민대학교일본학연구소편. 『의제로 본 한일회담』. 서울: 선인, 2010.

김대중. 『김대중 자서전 2권』. 서울: 삼인, 2010.

서동만. 『북조선 사회주의 체제성립사, 1945-1961』. 서울: 선인, 2005.

이종석. 『북한-중국 관계, 1945-2000』. 서울: 중심, 2000.

임동원. 『피스메이커 (임동원 회고록: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20년)』.

서울: 중앙북스, 2008.

빅터 차. “해외칼럼: 日-北협상과 韓-日 협정.” 『朝鮮日報』, 2004년 9월 3일.

3. 英語文獻

Lankov, Andrei N. *Crisis in North Korea: The Failure of De-Stalinization, 1956*. Honolulu, HI: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4.

I

II

III

IV

V

VI

VII

VII. 「中国の対北朝鮮政策と 中朝関係」

李基鉉

(統一研究院 國際關係研究Center 副研究委員)

1. 問題提起

- 中朝関係は、しばしば「唇亡齒寒の関係<しんぼうしかん・唇滅びて齒寒し。即ち、助け合って共存しているものの、一方が亡びると他方がひどく困る>」と表現されるほど、両国関係は非常に緊密だといわれている。
 - 国共内戦のときから中国共産党に対する北朝鮮共産党<朝鮮労働党>の人的な交流、精神的、物質的援助は大きかった。
 - 朝鮮戦争当時にも中国は、建国初期の困難な状況のなかで参戦を強行し血盟関係を証明した。
 - 中国は継続的に経済援助などによって、北朝鮮の経済的支援者としての役割を果たしてきた。
 - 北朝鮮核問題の解決や最近の哨戒艦「天安」事件でみられたように、中国は北朝鮮に強圧的なく解決>手段より平和的な手段を選択してきた。

- しかし、中朝の関係を単なる血盟関係とだけでは理解しがたい両者の葛藤の歴史も存在している。
 - 北朝鮮は1956年8月に「宗派<分派>事件」後、党・政・軍内の延安系を肅清し、中国の北朝鮮への干渉を排除、主体路線を標榜した。
 - 北朝鮮の外交ラインにおける親中人士たちは徹底的に排除され、事実上中朝の外交チャンネルは金日成一人に集中していった。これは、北朝鮮が中国の内政干渉に憂慮したことを見せる歴史的な実例である。
 - 中国の改革開放による実用主義路線は、社会主義的伝統に固執す

I

II

III

IV

V

VI

VII

- る北朝鮮との路線的葛藤を招いた。
- とりわけ中国の韓国との国交樹立は、北朝鮮と事実上の国交断絶を招いた。韓中国交樹立後から2000年5月金日成訪中の時期まで、両国の意思疎通は儀礼的レベルの交流の域を超えるものではなかった。
 - このような中で、中朝関係はどのような関係であり、その関係はいかに展開してきたのか。ここでは脱冷戦後、中国の対北朝鮮政策と中朝関係の変化を中国の視点から見ていこうとするものである。

2. 中国における国内外の環境変化と中朝関係

A. 中国における国内外の環境変化

- 文化革命の混乱を克服した中国は経済発展を最優先の国家目標とし、このために改革開放による発展戦略を駆使した。これはイデオロギーよりも実利を優先する実用主義路線を歩むということだった。
- 社会主義圏の没落と脱冷戦という環境の変化は、中国の実用主義路線を一層加速させた。
 - 実用主義的思考は、米国との関係改善、ソ連との紛争収束を牽引するものであった。
 - 1989年の天安門事件で西側との関係において若干の曲折があったとはいえ、中国はむしろ積極的な市場改革と経済関係により外交関係の改善戦略を図った。
- 北朝鮮との関係もこのような国内外の状況変化によって影響が与えられた。

- 中国の対外関係設定において、イデオロギーにとって代わって経済的実用主義がより重視された。
- 周辺国との関係改善で、北朝鮮の戦略的価値が相対的に低下し、対北朝鮮関係の運用においても経済的実利が重視された。
- 中でも韓中国交樹立は、中国実利外交の代表的な実例であるといえよう。

B. 中朝関係の変化: 血盟から戦略的協力の関係へ

- 中国の実用主義路線は、中朝の伝統的血盟関係に亀裂を引き起こした。
 - 中国は北朝鮮が改革開放にもとづく自らの外交路線と経済政策を支持することを望んだものの、北朝鮮は中国の路線とは距離をおくことで、両国間の路線的違いを際立たせた。
 - 韓中国交樹立という中国側の選択は両国関係を悪化させ、北朝鮮の外交的孤立を決定的に深めた。
 - 韓中修交当時は、北朝鮮が核問題の査察で外交的に厳しい状況だったために、北朝鮮としてはより大きな圧力を感じざるを得なかった。
 - 中朝首脳部の相互訪問が事実上中断し、北朝鮮は一方的に「停戦委員会」中国代表団の撤収を要求した。
- 両国経済関係においても実用主義経済路線が作用し、これも北朝鮮経済を悪化させた。
 - 中国は1990年代に入り両国の貿易関係において、国際価格の半分以下で相手に物品を供給する友好価格制とバーター貿易を撤廃し、現金決済方式を要求した。取引の単位<部署>も中央から地方に転

換させ、正常な貿易取引を強めた。

- 当時、ソ連の崩壊とロシア経済の不安定の中で、中国は北朝鮮に対する唯一の経済支援国であったにもかかわらず、中国の選択した経済措置を見ると、北朝鮮との関係を同盟関係から実用的協力関係へ転換させようとする意図がみとれる。
 - この措置以後、北朝鮮経済は深刻な打撃を負った。
- しかし、両国は一時的な冷却局面にもかかわらず、次第に関係を回復した。
- 北朝鮮は中国の裏切りを感じたが、東北アジアの力学的構造と歴史的慣行を考慮し、伝統的政治が維持されることを望んだ。
 - 北朝鮮にとって中国は、唯一の社会主義強国かつ外交的支援国であり、中国の援助が緊急に必要な状況であった。
 - 中国は北の経済難が体制崩壊に至ることを憂慮しつつ、1994年米朝の核問題交渉の妥結により、米朝関係が敵対から交渉関係に転換する中で、北朝鮮への影響力が失われるのではないかと憂慮した。
 - 中国は1995年から対北朝鮮援助を再開し、両国貿易において撤廃していたバーター貿易と友好価格制を復活させ、1996年からは本格的に対北経済支援を再開した。
 - 北朝鮮は深刻な内部資源の枯渇と外交的孤立の状態から脱するために、中国との正常な外交関係を稼動させた（2000年5月、金正日国防委員長の非公式訪中、南北首脳会談の通報）。
- このように中国は、北朝鮮との関係を同盟関係から実用主義的協力関係へ転換させようとしたが、北朝鮮の経済難の深刻さからくる体制危機

発生の可能性、米朝関係の変化などにより、北朝鮮との関係においては実用主義をベースにしつつも同盟関係の性格を加味した戦略的協力関係に転換させた。

3. 北の核問題と中国の立場

A. その1、第二次北の核危機と中国の対北政策

- 北朝鮮は社会主義の二大強国葛藤の<歴史の>なかで、一方に対する便乗が不利益をもたらすという同盟のジレンマを経験してきた。このような北朝鮮の安保ジレンマは、核保有の野望を育んだ。
- 中国としては安定的な経済成長のために平和的な周辺環境を望んだのであり、北朝鮮による東北アジア情勢の不安定を最大限抑制し、北の核問題を平和的に解決したかった。
 - 北朝鮮の核開発は韓国、日本や台湾にも核兵器開発の口実を与えるものであるため、中国は東北アジアに深刻な不安定な状況が生じることを憂慮した。
 - 中国は北朝鮮の突発的の行為などへの脅威と不確実性のため、武力よりも対話と交渉によって北朝鮮が核開発を放棄するよう説得しなければならぬという立場であった。
- 1994年の第一次北の核危機当時、中国は北の核問題において事実上傍観者的な立場にあった。
 - 1989年の天安門事件以後、中国は西側との外交関係改善に力を注ぎ、本格的に市場改革のため「耐えながら時を待つ」という、いわゆる

I

II

III

IV

V

VI

VII

る「韜光養晦(とうこうようかい)＝能力(刀の光)を韜み(つつみ)隠し、月のない晦(くらやみ)で力を養う」戦略が外交路線の軸をなしていた。

- 北朝鮮との関係においても、中国は韓中修交により北との関係が冷却するにつれ、実際に北へのレバレッジがなかったのだといえよう。
 - 中国はひたすら当事者対話の原則を繰り返し、消極的態度を維持した。
 - 核交渉の妥結で米朝関係が改善されるや、中国は北朝鮮の同盟離脱に対する憂慮から経済支援を再開するなど、北朝鮮との関係改善に打って出た。
- 2002年第二次北の核危機以後、胡錦涛新指導部は積極的な外交戦略を見せた。
- 胡錦涛時代は多国間及び周辺外交を強めながら、国際舞台における中国の積極的役割と責任を強調してきた。(いわゆる「責任大国」あるいは「有所作為」<必要なことには積極的に介入して行動する>路線。)
 - ブッシュ政権初期、米国は中国を戦略的ライバルと規定し、中国を牽制する政策を繰り返した。このようなところから、胡錦涛新指導部にとって大国間利害が交差する朝鮮半島は、戦略的に重要になった。
 - 中国は北の核問題解決への意志を表明、大規模な経済援助を約束するなど北朝鮮への影響力を拡大し、北朝鮮へ六者協議の参加を説得した。
 - 同時に中国は、北を説得するために政治、経済的圧力も試みた(「ヤン・ベン(楊斌)事件<北朝鮮はアグリビジネスで大成功し、中国富豪

番付2位の実業家でオランダ国籍の楊斌を2002年9月、新義州経済特区の行政長官に任命すると発表したが、10月中国警察が詐欺や税金滞納などで楊を拘束、11月に逮捕された事件」、北への送油管の暫定閉鎖、「中朝友好協力相互援助条約」の軍事同盟部分の削除主張など)。

- しかし、2006年の北朝鮮による核実験は六者協議を主導していた中国の役割を弱めるものとなった。

B. 北の核実験後の中国の対北政策

- 北朝鮮の核実験は中国の対北姿勢を弱める結果だけを際立たせた。特に、北朝鮮の第二次核実験で、中国の対北レバレッジはきわめて弱まった。
- 中国は、北朝鮮の非核化と対北圧力(制裁)による戦略的損失の間でジレンマに陥った。
 - 中国の立場からは北朝鮮が核を放棄する可能性は低く、北の核交渉もやはり長期化するだろうと判断。
 - 北朝鮮に対する積極的制裁は北の突発的の行為を引き起こすかもしれないという不確実性が増大した。
- したがって中国は、米朝の仲介者の役割によってバランスーとしての対北姿勢を強める戦略を追求し、また北の核問題に対する恒久的な解決よりも状況の安定的管理に政策の主眼をおいた。

I

II

III

IV

V

VI

VII

- 北朝鮮に対しては伝統的の友誼関係を強調し、外交的疎通、経済的協力を強化した。
 - 周辺国に対しては六者協議の有効性を強調しつつ、六者協議での自国の役割を強調した。
- 2009年の温家宝首相の訪朝を前後して、北の核問題と北朝鮮問題を分離してアプローチする方法が決定されたと思われる。
- 北の核問題解決のため、六者協議での中国の主導権を強め対北朝鮮への影響力を維持した。
 - 北の経済危機による政権崩壊などの急変事態を防ぐために、北朝鮮との経済協力を強化しつつ、中国東北地方の振興開発と北朝鮮を連携させようとした。

4. 哨戒艦「天安」事件と中国の対北政策

A. 哨戒艦事件に対する中国の認識

- 中国における朝鮮半島政策の基調は、一言で「現状維持(status quo)」である。
- 中国の現在の戦略的利害は、持続的な経済発展のため周辺国家との安定的な安保環境を作り、相対的な影響力を維持することである。
 - このような中国の戦略的利害の観点からみると、中国の朝鮮半島安定化のための具体的手段は、北朝鮮体制の生存、北朝鮮による斬新的な改革開放への誘導が優先されなくてはならない。

- 中国の政策決定グループ内部では、北朝鮮をめぐる認識の違いが存在する。
 - 現実主義グループは、ミサイルと核実験などで中国の国際的立場を難しくする北朝鮮に対し、制裁を課すべきだと主張してきた(彼らは韓国との関係を重視するだろうと判断される)。
 - 伝統主義グループは、北朝鮮との唇齒関係を強調し、北朝鮮に戦略的価値があるので、経済交流と支援拡大を要求してきた。

- このような状況下での哨戒艦事件の発生は、中国に対して北朝鮮の巻き添えと放棄のジレンマを加重させたものといえよう。
 - 中国は哨戒艦事件など、北朝鮮の突発事態による戦争勃発時、中国の巻き添えを憂慮した。
 - また、韓米日の制裁に同調することで北朝鮮を放棄すると、戦略的財産である北朝鮮を失う危険性と核実験など北の突発行為を促進させることが憂慮された。

B. 哨戒艦事件後の中国の戦略と歩み

- 哨戒艦事件後、中国はその立場をまとめる過程で若干の葛藤があったものの、北朝鮮を擁護する立場で合意した。
 - 北朝鮮負担論にもとづいて北への制裁を主張する現実主義グループと、北朝鮮との歴史的友好関係と戦略的価値を主張する伝統主義グループ間の葛藤が存在したと思われる。
 - 中国外務省は、韓国側にきわめて肯定的な信号を送ってきたと思われるが、中国共産党の対外連絡部や軍部など、伝統的な北朝鮮友

I

II

III

IV

V

VI

VII

好論者たちの立場がより強かったといえよう。

- 韓国国防部の米航空母艦による西海での合同演習参加要請など、米国の積極的な介入により、韓米日協力体制の強化は中国の北朝鮮放棄への戦略的損失に対する憂慮を高めた。
- 内部的立場の違いが整理されるや、中国は対北制裁反対と速やかな妥協を誘導した。
 - 中国は哨戒艦事件の国連安保理への提出反対、安保理の議長声明では韓国や米国と妥協し、状況の速やかな終了を誘導する戦略を選択した。
 - 安保理議長声明の論議のなかで中国は、北朝鮮を名指しする問題に最後まで反対しつつ、哨戒艦への攻撃(attack)とこのような行為を非難(condemn)するという内容の線で妥協した。
- 中国は哨戒艦事件を安保理声明で一段落させ、南北双方と米国などの当事国がこれ以上これを問題にせず、六者協議のテーブルへ速やかな復帰を促す戦略的歩調をとってきた。
 - これは中国が事件初期から強調してきた朝鮮半島の平和と安定維持という自国の戦略的利害と一致するものである。

C. 中国の対北戦略と米中関係

- 哨戒艦事件は、単に中朝同盟という両者のレベルの問題というより、新たな米中関係の出現と関係がある。
 - 中国の浮上と米国の経済危機は、東北アジアのバランスに亀裂を生んだ。

- オバマ政権以後、米国は中国への封鎖戦略の廃止を宣言するなど、米中の利益バランスによる利益確保という苦肉の策をとっている。
 - その結果、東北アジアにおける中国の行動半径が広がり、影響力を拡大する機会が高まった。
- 中国の哨戒艦事件に対する態度は、北朝鮮の肩をもつというより米国の安保プレイの枠のなかで、問題に接近しないという戦略的な判断に基づいている。
- 哨戒艦事件後、中国は東北アジアにおける米国主導の安保体制の強化を牽制している。
 - 北朝鮮制裁に反対することによって、米国の中国に対する圧迫と米国主導の東北アジア安保の枠のなかに取り込まれることを拒否したのである。

5. 今後の展望

- 中国は今後、北朝鮮に対する外交的庇護者の役割と、経済的支援による積極的関与の役割を行っていくものと予想される。
- 韓米日の制裁が続く状況において、北朝鮮は中国へ依存するしかない。
 - 北朝鮮の内部危機は、中国が北朝鮮に積極的に関与する余地を広げている。
 - 金正日国防委員長の二度にわたる中国訪問は、今後北朝鮮の中国依存度が一層高まることを確認させた。
- しかし、中朝の戦略的利害の偏差のために、現在の関係が長期に続くことは難しいと予想される。

I

II

III

IV

V

VI

VII

- 中国は北朝鮮に対する積極的な関与策により、北朝鮮の改革開放を誘導し、さらに非核化達成を目標としている。
- しかし、北朝鮮は現在、政権維持のための財政拡充が第一目標であり、東北アジアの不安定な構図を利用して、中国の外交的・経済的支援を確保する戦略を駆使してきた。一方で北朝鮮は、中国の内政干渉を極度に警戒している。
- 北朝鮮が中国の利害に合わせたジェスチャーを見せるかもしれないが、過去の両国関係の経験と北朝鮮政権の属性からみて、今後も中国の理解が恒久的に得られるかどうかは未知数である。
- また、北朝鮮の経済改革の意志が不確実な状況では、中国としても積極的な投資と経済協力を進めるには困難な状況だと言わざるを得ない。

※ [] は翻訳者によるものです

연구총서

2008-01	북한체제의 안정성 평가: 시나리오 워크숍	최진욱 외	9,000원
2008-02	한반도 선진화를 위한 남북 경제관계 발전방안 모색	임강택 외	10,000원
2008-03	남북한 출입제도 [통행·통신·통관] 개선 및 정착 방안 연구	김영운	8,000원
2008-04	전환기 동북아 국가들의 국내정치 변화와 대북전략	배정호 외	10,000원
2008-05	중국의 한·중 FTA 추진의도와 남북관계에 주는 함의	전병근, 구기보	7,500원
2008-06	한반도 통일 외교 인프라 구축 연구	박영호 외	9,000원
2008-07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조정아 외	10,000원
2008-08	김정일 정권 등장 이후 북한의 체제유지 정책 고찰과 변화 전망	전현준 외	10,000원
2008-09	이명박정부 대북정책의 추진환경과 정책과제	박형중 외	6,500원
2008-10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전략: 이론과 실제	이금순, 김수암	9,000원
2008-11	North Korea's External Economic Relations	김규륜 편	9,000원
2009-01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 전략적 협력에 관한 연구	전성훈	7,500원
2009-02	세계경제위기와 미·중관계 변화 연구: 북한 핵문제에 미치는 영향	황병덕, 신상진	9,000원
2009-03	북한의 국력 평가 연구	전현준 외	10,000원
2009-04	북한경제의 시장화 실태에 관한 연구	임강택	9,000원
2009-05	21세기 한국의 동아시아국가들과 전략적 협력 강화방안	여인근 외	10,000원
2009-06	북한체제 전환을 위한 전략적 과제와 한국의 동북아 4국 협력전략	배정호 외	10,000원
2009-07	북한 '변화'의 재평가와 대북정책 방향	박형중 외	10,000원
2009-08	북한 개방 유도 전략: 목표, 기본방향 및 단계별 과제	최진욱 외	10,000원
2009-09	북한주민 인권의식 고취를 위한 전략적 인권외교의 방향	홍우택 외	6,500원
2009-10	통일대비 북한토지제도 개편방향 연구	허문영 외	9,000원
2009-11	북한인권 침해구조 및 개선전략	이금순, 김수암	7,500원
2009-12	통일대계 탐색연구	조민 외	8,000원
2009-13	Modernization and Opening-Up of North Korean Economy: Roles and Efforts of Neighboring Countries	김규륜 외	7,500원
2009-15	Peace-Keeping on the Korean Peninsula: The Role of Commissions	Gabriel Jonsson	20,000원
2010-01	북한 핵 보유 고수 전략의 도전과 대응	박형중 외	9,500원
2010-02	탈사회주의 경제이행 국가의 권력구조 유형과 개혁 경로: 포스트-김정일 체제에 대한 시사점	최진욱, 김진하	8,000원
2010-03	북한 개방화와 인권개선 방안연구	김국신, 김연수, 서보혁	7,000원
2010-04	북한의 체제위기와 사회갈등	조한범, 양문수, 조대엽	7,500원

2010-05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동북아전략 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동북아 4국 통일외교전략	배정호 외	12,500원
2010-06	북한주민 인권의식 실태연구	이금순, 전현준	8,500원
2010-07	라진·선봉지역 물류분야 남북 협력방안 연구	김영윤, 추원서, 임을출	8,000원
2010-08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새로운 접근과 추진방안: 3대 공동체 통일구상 중심	박종철 외	11,500원
2010-09	통일한국의 정치체제	허문영	6,000원
2010-10	북한 핵에 대한 억지방향 연구	홍우택	5,000원
2010-11	북한의 포스트 김정일체제 전망	정영태 외	11,000원
2010-12	북한 주민의 의식과 정체성: 자아의 독립, 국가의 그늘, 욕망의 부상	조정아 외	17,000원
2010-13	북·중 경제관계와 남북경협의 대북 파급효과 비교분석	최수영	7,500원
2010-14	East Asian Community Building: Issue Areas and Perspectives of Regional Countries	김규륜 외	10,000원
2010-15(I)	신아시아 외교와 새로운 평화의 모색 I	김규륜 외	13,000원
2010-15(II)	신아시아 외교와 새로운 평화의 모색 II	김규륜 외	13,000원

학술회의총서

2008-01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비전 및 추진방향		10,000원
2008-02	The Vision for East Asia in the 21st Century and the Korean Peninsula		9,500원
2009-01	북핵 문제 해결 방향과 북한 체제의 변화 전망		6,500원
2009-02	북핵 일괄타결(Grand Bargain)방안 추진방향		5,500원
2010-01	이명박 정부 2년 대북정책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8,000원
2010-02	독일 통일 20년과 한반도 통일비전		6,000원
2010-03	분단관리에서 통일대비로		5,500원
2010-04	독일 통일 20년과 한국의 통일대비		7,000원

협동연구총서

2008-07-01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모형개발 및 발전방안(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6,500원
2008-07-02	남북 교류협력 효율화를 위한 거버넌스 모형구축	양현모, 이준호	6,000원
2008-07-03	북한의 국가사회관계와 통일정책 거버넌스	최진욱 외	7,000원
2008-07-04	남북연합 형성·운영의 거버넌스	박종철 외	8,000원
2008-08-01	국제사회의 개발지원 이론과 실제: 북한개발 지원을 위한모색(총괄보고서)	박형중 외	10,000원
2008-08-02	국제 개발이론 현황	이금순 외	8,000원
2008-08-03	국제사회의 원조 현황 및 추진전략	임강택 외	10,000원

2008-08-04	UN기구의 지원체제와 대북 활동	최춘흠 외	6,500원
2008-08-05	양자간 개발기구의 체계와 활동	권 율 외	10,000원
2008-08-06	다자간 개발기구의 체계 및 활동	장형수 외	10,000원
2008-08-07	국제 NGO의 원조정책과 활동 연구	이종무 외	8,000원
2009-15-01	북한개발지원의 포괄적 추진방안(총괄보고서)	임강택 외	8,500원
2009-15-02	북한개발지원의 이론과 포괄적 전략	박형중 외	10,000원
2009-15-03	북한개발지원의 쟁점과 해결방안	김정수 외	10,000원
2009-15-04	북한개발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장형수 외	10,000원
2009-15-05	북한개발지원체제의 구축방안	이종무 외	9,000원
2009-15-06	지방자치단체의 북한개발지원 전략과 접근방법	양현모 외	10,000원
2009-16-01	복잡계 이론을 통한 북한의 정상국가화 방안 연구 (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6,000원
2009-16-02	북한체제의 행위자와 상호작용	이교덕 외	8,000원
2009-16-03	북한 계획경제의 변화와 시장화	이 석 외	9,000원
2009-16-04	탈냉전 이후 국제관계와 북한의 변화	민병원 외	8,000원
2009-17-01	비핵·개방·3000 구상: 추진전략과 실행계획 (총괄보고서)	여인곤 외	7,500원
2009-17-02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및 추진환경과 전략	박종철 외	8,000원
2009-17-03	비핵·개방·3000 구상: 한반도 비핵화 실천방안	조 민 외	9,000원
2009-17-04	비핵·개방·3000 구상: 북한의 개방화 추진방안	함택영 외	7,500원
2009-17-05	비핵·개방·3000 구상: 남북경제공동체 형성방안	조명철 외	7,000원
2009-17-06	비핵·개방·3000 구상: 행복공동체 형성방안	이금순 외	7,500원
2010-14-01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2,000원
2010-14-02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上)	황병덕 외	14,000원
2010-14-03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下)	황병덕 외	13,000원
2010-15-01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세부 실천방안 (총괄보고서)	여인곤 외	9,000원
2010-15-02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추진환경 및 전략과 실천방안	박영호 외	9,500원
2010-15-03	이명박 정부 대북통일정책의 세부실천방안	허문영 외	7,000원
2010-15-04	이명박 정부 외교정책의 세부실천방안(1): 협력 네트워크 외교 분야	남궁영 외	7,500원
2010-15-05	이명박 정부 외교정책의 세부 실천방안(2): 포괄적 실리외교 분야	전재성 외	9,500원
2010-15-06	이명박 정부 안보정책의 세부 실천방안	이수훈 외	7,500원
2010-16-01	북한의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연구(총괄보고서)	이교덕 외	7,000원
2010-16-02	북한의 정치부문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전현준 외	7,500원
2010-16-03	북한 시장 진화에 관한 복잡계 시뮬레이션	조정아 외	14,000원
2010-16-04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방안	민병원 외	7,500원

논문

통일정책연구, 제17권 1호 (2008)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7, No. 1 (2008)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7권 2호 (2008)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7, No. 2 (2008)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8권 1호 (2009)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8, No. 1 (2009)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8권 2호 (2009)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8, No. 2 (2009)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9권 1호 (2010)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9, No. 1 (2010)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9권 2호 (2010)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9, No. 2 (2010)		20,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8	이금순 외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8</i>	이금순 외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9	이금순 외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9</i>	이금순 외	20,000원
북한인권백서 2010	박영호 외	2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0</i>	박영호 외	20,000원

기타

2008	2006 독일통일백서		8,000원
2009	Lee Myung-bak Government's North Korea Policy	Suh, Jae-Jean	5,500원
2009	김정일 현지도 동향 1994-2008		15,000원
2009	The U.S.-ROK Alliance in the 21st Century	Bae, Jung-Ho, Abraham Denmark	10,000원
2009	북한의 주요현안과 한-미 전략적 공조	배정호	10,000원
2009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에 따른 미-중관계의 변화와 한반도	배정호	10,000원
2010	김정일 현지도 동향 1994-2009		15,000원
2010	2010 독일통일백서		13,000원
2010	21세기 러시아의 국가전략과 한-러 전략적 동반자관계		10,500원
2010	Russian National Strategy and R.O.K.-Russian Strategic Partnership in the 21st Century		13,500원
2010	NPT 체제와 핵안보		13,000원

연례정세보고서

2008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8~2009	6,000원
2009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9~2010	7,000원
2010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0~2011	7,000원

통일정세분석

비매출

2008-01	2008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정영태, 김영윤, 박영호, 서재진, 임순희, 허문영
2008-02	중국 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결과분석: 지도부 개편을 중심으로	전병곤
2008-03	최근 북한 권력엘리트 변동 분석	전현준
2008-04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8-05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과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분석	배정호
2008-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6차 회의 결과분석	최수영
2008-07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유엔인권이사회 보고서 평가	이금삼, 김수암
2008-08	2단계 비핵화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 전망	최진욱, 박형중
2008-09	남북 이산가족문제: 평가와 향후 정책 방안	임순희
2008-10	상반기('08년 1월~6월) 북한의 대내외 정세 분석	서재진, 정영태, 전현준, 최수영, 최진욱, 임순희, 조정아
2008-11	아스 정권의 출범과 대외전략노선 및 대북전략	배정호
2008-12	한-러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2009-01	2009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최진욱, 전현준, 정영태, 조정아, 최수영, 박영호, 박형중
2009-02	하반기('08년 7월~12월) 북한의 정세 분석	최진욱, 임순희, 전현준, 정영태, 조정아, 최수영
2009-03	북한의 대남 비방 공세의 의도와 전망	최진욱, 전현준, 정영태
2009-04	북한의 제12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결과 분석	전현준
2009-05	2008년 북-중무역의 주요 특징	임강택, 박형중
2009-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 회의 결과 분석	최수영, 정영태
2009-07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2010-01	2010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임강택 외
2010-02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2차 회의 결과 분석	최수영
2010-03	김정일 방중과 중국의 전략외교	배정호, 박영호, 전병곤
2010-04	2010상반기 북한정세 분석 보고서	정영태, 이교덕, 최수영, 임순희, 조정아
2010-05	독일통일 20주년 조망: 독일통일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황병덕
2010-06	야로슬라블 한-러 정상회담 결과 분석	여인곤

2010-07	북한 3대 세습 후계구도 분석 및 정책변화 전망	김진하
2011-01	2011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최진욱 외
2011-02	미·중 정상회담의 의미와 한국의 전략적 고려사항	배정호 외
2011-03	2011년 미·중 정상회담 평가: 동북아 및 한반도에서의 함의	황병덕 외

KINU정책연구시리즈

비매품

2008-01	남북 상생·공영을 위한 비핵·개방·3000 정책의 이론적 체계: 연구	서재진
2008-02	향후 5년 남북관계 주요 환경과 전개 시나리오	박형중, 허문영, 조 민, 전성훈
2008-03	북한의 기상관리 정책의 변화와 남북한 기상협력 방안연구	최은석, 황재준
2009-01	신평화구상 실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	김규륜 외
2009-02(I)	접경지역의 평화시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을 위한 이론적 검토와 사례연구	손기웅 외
2009-02(II)	접경지역의 평화시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I):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을 위한 기존제안 검토	손기웅 외
2009-03	대북정책의 대국민 확산방안	조한범 외
2009-04	통일 예측 시계 구축	박영호, 김지희
2009-05	북핵일지 1955-2009	조 민, 김진하
2009-06	미국 대북방송 연구: 운용실태 및 전략을 중심으로	이원웅
2010-01	한반도 녹색성장을 위한 남북한 산림협력 법적 개선방안 예비연구	이규창
2010-02	2010년 통일예측시계	박영호 외
2010-03	북한 경제개발계획 수립방안 연구: 베트남 사례를 중심으로	임강택 외
2010-04(III)	접경지역의 평화시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II): 정책제안	손기웅 외
2010-04(IV)	접경지역의 평화시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V): 2010년 「코리아 접경포럼」 자료집	손기웅 외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비매품

2008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3권 1호	이금순, 김수암, 임순희
2008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3권 2호	이금순, 김수암
2009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4권 1호	박영호, 이금순, 김수암, 홍우택
2009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4권 2호	박영호, 이금순, 김수암, 홍우택
2010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5권 1호	김국신, 김영윤, 전현준, 이금순, 이규창

월간 북한동향

비매품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1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2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3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4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5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6호	북한연구실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1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2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3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4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5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6호	북한연구센터
2010	월간 북한동향 제4권 제1호	북한연구센터
2010	월간 북한동향 제4권 제2호	북한연구센터
2010	월간 북한동향 제4권 제3호	북한연구센터
2010	월간 북한동향 제4권 제4호	북한연구센터
2010	월간 북한동향 제4권 제5호	북한연구센터

Studies Series

비매품

2008-01	Conceptions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Kim Soo-Am
2008-02	Internal and External Perceptions of the North Korean Army	Jeung Young-Tai
2008-03	PSI and the Korean Position	Cheon Seong-Whun
2008-04	Transformation of the U.S.-Japan Alliance and South Korea's Security Strategy	Kim Kook-Shin, Yeo In-Kon, Kang Han-Koo
2008-05	Changes in North Korea as revealed in the Testimonies of Saetomins	Lee Kyo-Duk, Lim Soon-Hee, Cho Jeong-Ah, Lee Gee-Dong, Lee Young-Hoon
2008-06	Economic Hardship and Regime Sustainability in North Korea	Suh Jae-Jean
2009-01	The Evaluation of Regime Stability in North Korea: Scenario Workshop	Choi Jin-Wook, Kim Kook-Shin, Park Hyeong-Jung, Cheon Hyun-Joon, Cho Jeong-Ah, Cha Moon-Seok, Hyun Sung-Il
2009-02	Developing Inter-Korean Economic Relations for the 'Advancement of the Korean Peninsula'	Lim Kang-Teag, Kim Kyu-Ryoon, Jang Hyung-Soo, Cho Han-Bum, Choi Tae-Uk
2009-03	The Everyday Lives of North Koreans	Cho Jeong-Ah, Suh Jae-Jean, Lim Soon-Hee, Kim Bo-Geun, Park Young-Ja
2009-04	North Korea's Regime Maintenance Policy Since the Kim Jong-il Regime and Prospects for Change	Chon Hyun-Joon, Jeung Young-Tae, Choi Soo-Young, Lee Ki-Dong
2010-01	Strategy for Encouraging North Korean Opening: Basic Direction and Sequential Tasks	Choi Jinwook, Lee Kyo-Duk, Cho Jeong-Ah, Lee Jin-Yeong, Cha Moon-Seok
2010-02	Unification Clock: Predicting Korean Unification	Park Young Ho

2010	2010 Unification Clock: When We See a Unified Korea	Park Young Ho
2010	In Search of New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Kim Kyu-Flyoon

■■ 통일연구원 회원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학술회의의 총서, 협동연구총서, 통일정세분석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구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142-728)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출판정보관리팀 도서회원 담당자(pcm@kinu.or.kr)
- 나) 전화: (02)901-2559, FAX: (02)901-2547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변경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0년도 KINU KOREA - JAPAN 민간전략대화 및 국제적 공동연구

북한의 정치·경제와 한·일 전략적 공조

배정호 편